

2023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



최종보고서

2023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

2024. 7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2023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재 진

— < 연구진 > —

■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 2023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연구주관기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수행기관: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이명헌 교수(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구자: 김진영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상곤 교수(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1
II. 문화재 현황과 보존관리 정책	2
1. 문화재 현황	2
2.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9
3. 문화재 활용 상황	11
III.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 개요 및 평가 필요성	14
1. 사업군 개요	14
2. 세부사업별 현황	17
가. 문화재 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17
나. 문화재 돌봄사업	19
다.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22
라.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	23
마.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28
바.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31
사.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32
아. 궁능방재시스템 구축	35
3. 평가 필요성 분석	36
가. 평가 필요성: 내·외부 지적사항	36
나. 평가방향	38
IV. 평가 개요	40
1. 사업의 논리모형 및 평가범위	40
가. 문화재 보수정비	40
나. 문화재 돌봄사업	40

다.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41
라.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	41
마.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42
바.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42
사.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43
아. 공능방재시스템 구축	43
2. 평가유형 및 평가질문	44
3. 평가모형 및 평가방법	45
가. 정량평가 중 가상가치평가(CVM) 개요	45
나. 정량평가 중 경제적 효과 평가 방법	51
다. 정성평가	61
V.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69
1. 계획평가: 사업설계의 적절성	69
2. 과정평가	70
가. 집행 정도	70
나. 중복지원 문제	84
다. 지원대상 선정 합리화: 문화재 돌봄사업	96
라. 인력배치 효율화: 재난안전관리사업	102
마. 국고보조율 합리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105
바. 공능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개선 방안	108
3.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지불의사(WTP) 금액 추정결과	110
4. 결과평가: 사업별 정량평가	112
가. 분석 자료의 구축	112
나. 분석결과	120
다. 정량평가 결과 요약	153
라.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의 용도별 구성과 정책적 함의	153

VI. 정책제언 요약	157
참고문헌	159
부 록	161
〈부록 1〉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의견조사	161
〈부록 2〉 설문조사 결과 빈도표	166
〈부록 3〉 방재 관련 국가유산청 소관 전통사찰(2023년 9월 기준)	199
〈부록 4〉 국가유산청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종교문화예산 전통사찰보수정비 사업 중복지원 현황	203
〈부록 5〉 안전경비원 배치 현황(2024년)	217
〈부록 6〉 연도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액 및 예산액	223
〈부록 7〉 부문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액 및 예산액 - 1) 보수관리	230
〈부록 8〉 부문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액 및 예산액 - 2) 보존육성	236
〈부록 9〉 부문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액 및 예산액 - 3) 재난방지	242
〈부록 10〉 부문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액 및 예산액 - 4) 예산 교부액	248

표 목차

〈표 Ⅱ-1〉 연도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2
〈표 Ⅱ-2〉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신규지정 건수	3
〈표 Ⅱ-3〉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말소 건수	3
〈표 Ⅱ-4〉 소유자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4
〈표 Ⅱ-5〉 관리자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4
〈표 Ⅱ-6〉 종교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5
〈표 Ⅱ-7〉 시·도지정·등록문화재 현황	6
〈표 Ⅱ-8〉 고도지구 지정 현황(2023년도 기준)	6
〈표 Ⅱ-9〉 세계유산 등재 목록 현황	7
〈표 Ⅱ-10〉 재질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7
〈표 Ⅱ-11〉 건조물문화재 현황	8
〈표 Ⅱ-12〉 건조물문화재 소유자별 현황	9
〈표 Ⅱ-13〉 문화재 보수정비(총액사업) 시도요구 및 예산반영 현황	9
〈표 Ⅱ-14〉 지정유형별 문화재 보수정비(총액사업) 건수 및 투입예산	10
〈표 Ⅱ-15〉 궁·능·원 및 유적관리소 관람객 현황	12
〈표 Ⅲ-1〉 2023년 성과계획서상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의 세부사업의 위치(2023)	14
〈표 Ⅲ-2〉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 세부사업 분류	15
〈표 Ⅲ-3〉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 예산 추이	16
〈표 Ⅲ-4〉 문화재 보수정비(총액사업) 예산 및 집행	18
〈표 Ⅲ-5〉 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예산 및 집행(2023년)	19
〈표 Ⅲ-6〉 문화재 돌봄사업 내역사업별 예산	19
〈표 Ⅲ-7〉 전통사찰 보존 내내역사업별 예산	23
〈표 Ⅲ-8〉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	24
〈표 Ⅲ-9〉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주요 내용	25

〈표 Ⅲ-10〉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사업구성과 예산	29
〈표 Ⅲ-11〉 문화재긴급보수사업 예산 및 집행	32
〈표 Ⅲ-12〉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과 예산	33
〈표 Ⅲ-13〉 공능방재 시스템 구축사업과 예산	35
〈표 Ⅳ-1〉 세부사업별 논리모형(요약)	44
〈표 Ⅳ-2〉 평가 대상 사업 단계별 평가질문과 평가유형	45
〈표 Ⅳ-3〉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예산 및 집행	64
〈표 Ⅳ-4〉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내역사업 지원현황	65
〈표 Ⅳ-5〉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지원” 내역사업 지원현황	65
〈표 Ⅳ-6〉 공능의 문화유산 보유현황	66
〈표 Ⅳ-7〉 서울 시내 궁의 문화재	66
〈표 Ⅳ-8〉 능 문화재 현황	67
〈표 Ⅴ-1〉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총액사업) 예산 및 집행	70
〈표 Ⅴ-2〉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액 규모별 집행률 80% 이하 건수(2023년)	71
〈표 Ⅴ-3〉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지정별 80% 이하 건수(2023년)	71
〈표 Ⅴ-4〉 2023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지정별, 예산액 규모별 집행률 80% 이하 건수와 비율	72
〈표 Ⅴ-5〉 집행률 80% 이하가 될 확률 Probit 계수 추정결과(2023년)	73
〈표 Ⅴ-6〉 문화재 지정유형 및 예산액 규모에 따른 ‘집행률 80%’가 될 확률 (Probit 추정결과에 따름)	73
〈표 Ⅴ-7〉 집행률 회귀분석결과(2023년)	75
〈표 Ⅴ-8〉 2023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지정별, 자연사유별 집행률 80% 이하 건수와 비율	76
〈표 Ⅴ-9〉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의 연도별 지원 내역	77
〈표 Ⅴ-10〉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의 집행률 회귀분석	78
〈표 Ⅴ-11〉 수원화성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련 집행률(2022년)	79
〈표 Ⅴ-12〉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 미집행 사례	80

〈표 V-13〉 문화재 재난 안전관리 집행 부진 사례 중 문화재 보수 정비 관련 예	81
〈표 V-14〉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사업규모 3억원 기준 집행률	81
〈표 V-15〉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지정유형별 예산규모	82
〈표 V-16〉 사적(史蹟) 보수정비 사업 추진 절차 개선안	84
〈표 V-17〉 중복의 정의에 따른 중복 건수	86
〈표 V-18〉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받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수(2011~2023) ..	86
〈표 V-19〉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여부에 따른 보수정비 예산 분포(2011~2022) ..	87
〈표 V-20〉 국가유산청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종교문화예산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중복지원 현황(개요)	89
〈표 V-21〉 사찰단위 문체부, 국가유산청 요사채 지원횟수 분포(2011~2023년)	91
〈표 V-22〉 사찰단위 문체부, 국가유산청 요사채 지원예산(중앙+지방) 분포(2011~2023년) ..	91
〈표 V-23〉 사찰단위 문체부, 국가유산청 공양간 지원횟수 분포(2011~2023년)	92
〈표 V-24〉 사찰단위 문체부, 국가유산청 종무원 지원횟수 분포(2011~2023년)	93
〈표 V-25〉 국가유산청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원대상과 세부지원내용 분류 코드 체계	94
〈표 V-26〉 시도별 문화재 돌봄 대상 문화재의 지정유형	97
〈표 V-27〉 국가지정, 시도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지정 연도별 현황	100
〈표 V-28〉 지역문화재돌봄센터 현황	101
〈표 V-29〉 지역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관련 안전경비원 배치현황	103
〈표 V-30〉 2023년 안전경비원 수범사례	103
〈표 V-31〉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지역 내 주택의 지가 상승 사례	106
〈표 V-32〉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지역과 비교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	107
〈표 V-33〉 공능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연도별·기관별 방재 인력 배치 현황	109
〈표 V-34〉 전국 응답자의 제시금액별 응답 분포	110
〈표 V-35〉 WTP 모형의 추정결과	110
〈표 V-36〉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가구당 월간 WTP의 추정결과	111
〈표 V-37〉 문화재 보수정비의 연간 편익	111
〈표 V-38〉 문화재 보수정비의 총편익 현재가치	112

〈표 V-39〉 자료의 기술 통계량	119
〈표 V-40〉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부문(A)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	121
〈표 V-41〉 문화재 보존육성 사업부문(B)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	121
〈표 V-42〉 문화재 재난방지 사업부문(C)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	122
〈표 V-43〉 문화재 보수정비 내역사업(a1)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	123
〈표 V-44〉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 내역사업(a2)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	123
〈표 V-45〉 고도보존 및 육성 내역사업(b1)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	124
〈표 V-46〉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내역사업(b2)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	124
〈표 V-47〉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내역사업(c1)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	125
〈표 V-48〉 전통사찰방재 내역사업(c2)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	125
〈표 V-49〉 문화재 긴급보수 내역사업(c3)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	126
〈표 V-50〉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부문(A)이 ln조도에 미치는 영향	127
〈표 V-51〉 문화재 보존육성 사업부문(B)이 ln조도에 미치는 영향	127
〈표 V-52〉 문화재 재난방지 사업부문(C)이 ln조도에 미치는 영향	128
〈표 V-53〉 문화재 보수정비 내역사업(a1)이 ln조도에 미치는 영향	129
〈표 V-54〉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 내역사업(a2)이 ln조도에 미치는 영향	130
〈표 V-55〉 고도보존 및 육성 내역사업(b1)이 ln조도에 미치는 영향	131
〈표 V-56〉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내역사업(b2)이 ln조도에 미치는 영향	131
〈표 V-57〉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내역사업(c1)이 ln조도에 미치는 영향	132
〈표 V-58〉 전통사찰방재 내역사업(c2)이 ln조도에 미치는 영향	132
〈표 V-59〉 문화재 긴급보수 내역사업(c3)이 ln조도에 미치는 영향	133
〈표 V-60〉 A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부문이 지역 사업체 수에 미치는 영향	135
〈표 V-61〉 B 문화재 보존육성 사업부문이 지역 사업체 수에 미치는 영향	135
〈표 V-62〉 C 문화재 재난방지 사업부문이 지역 사업체 수에 미치는 영향	136
〈표 V-63〉 a1 문화재 보수정비 내역사업이 지역 사업체 수에 미치는 영향	136
〈표 V-64〉 a2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 내역사업이 지역 사업체 수에 미치는 영향	137
〈표 V-65〉 b1 고도보존 및 육성 내역사업이 지역 사업체 수에 미치는 영향	137

〈표 V-66〉 b2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내역사업이 지역 사업체 수에 미치는 영향	138
〈표 V-67〉 c1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내역사업이 지역 사업체 수에 미치는 영향	138
〈표 V-68〉 c2 전통사찰방재 내역사업이 지역 사업체 수에 미치는 영향	139
〈표 V-69〉 c3 문화재 긴급보수 내역사업이 지역 사업체 수에 미치는 영향	140
〈표 V-70〉 A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부문이 지역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141
〈표 V-71〉 B 문화재 보존육성 사업부문이 지역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141
〈표 V-72〉 C 문화재 재난방지 사업부문이 지역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142
〈표 V-73〉 a1 문화재 보수정비 내역사업이 지역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142
〈표 V-74〉 a2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 내역사업이 지역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143
〈표 V-75〉 b1 고도보존 및 육성 내역사업이 지역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143
〈표 V-76〉 b2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내역사업이 지역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144
〈표 V-77〉 c1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내역사업이 지역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144
〈표 V-78〉 c2 전통사찰방재 내역사업이 지역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145
〈표 V-79〉 c3 문화재 긴급보수 내역사업이 지역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146
〈표 V-80〉 문화재 긴급보수의 문화재 보수정비 비용절감 효과(이원 고정효과)	148
〈표 V-81〉 문화재 긴급보수의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 비용절감 효과(이원 고정효과)	148
〈표 V-82〉 문화재 긴급보수의 고도보존 및 육성 비용절감 효과(이원 고정효과)	148
〈표 V-83〉 문화재 긴급보수의 세계유산 등재·보존 비용절감 효과(이원 고정효과)	149
〈표 V-84〉 문화재 긴급보수의 재난안전관리 비용절감 효과(이원 고정효과)	149
〈표 V-85〉 문화재 긴급보수의 전통사찰방재 비용절감 효과(이원 고정효과)	149
〈표 V-86〉 도구변수 추정의 1단계 추정 결과	150
〈표 V-87〉 문화재 긴급보수의 문화재 보수정비 비용절감 효과(도구변수)	150
〈표 V-88〉 문화재 긴급보수의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 비용절감 효과(도구변수)	151
〈표 V-89〉 문화재 긴급보수의 고도보존 및 육성 비용절감 효과(도구변수)	151
〈표 V-90〉 문화재 긴급보수의 세계유산 등재·보존 비용절감 효과(도구변수)	152
〈표 V-91〉 문화재 긴급보수의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비용절감 효과(도구변수)	152
〈표 V-92〉 문화재 긴급보수의 전통사찰방재 비용절감 효과(도구변수)	152

〈표 V-93〉 문화재 보수정비 세부코드별 예산 현황	154
〈표 V-94〉 문화재 보수정비 세부코드별 예산 비중	154
〈표 V-95〉 국가유산청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코드에 따른 지원내상 구분과 방문객 활용 편의 관련성	155
〈표 VI-1〉 세부사업별 문제점과 정책제언 요약(정성평가)	158

그림 목차

[그림 Ⅲ-1] 문화재 보수정비(일반) 추진절차	18
[그림 Ⅲ-2]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절차	20
[그림 Ⅲ-3] 돌봄지원사업 추진절차	21
[그림 Ⅲ-4] 돌봄지원사업 추진절차(성과교류 및 홍보)	22
[그림 Ⅲ-5] 돌봄지원사업 추진절차(지원센터 운영지원)	22
[그림 Ⅲ-6]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추진절차	25
[그림 Ⅲ-7] 고도역사도시 조성사업 추진절차	27
[그림 Ⅲ-8] 문화재긴급보수사업 추진절차	32
[그림 Ⅲ-9] 문화재 재난방재 시설구축 사업 추진절차	34
[그림 Ⅳ-1]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논리모형	40
[그림 Ⅳ-2] 문화재 돌봄사업 논리모형	41
[그림 Ⅳ-3] 전통종교 문화유산 사업 논리모형	41
[그림 Ⅳ-4] 고도보존 육성 사업 논리모형	42
[그림 Ⅳ-5]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논리모형	42
[그림 Ⅳ-6]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 논리모형	43
[그림 Ⅳ-7]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 논리모형	43
[그림 Ⅳ-8] 궁능방재 시스템 사업 논리모형	43
[그림 Ⅳ-9] 문화재 보수정비의 조건부 가치 추정 연구 절차	46
[그림 Ⅴ-1] 예산액에 따른 집행률 80% 이하 부진이 발생할 확률 추정값(국가등록문화재)	74
[그림 Ⅴ-2] 예산액에 따른 집행률 80% 이하 부진이 발생할 확률 추정값(사적)	74
[그림 Ⅴ-3] 동일한 건물에 대한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례	88
[그림 Ⅴ-4] 지역별 국가지정 돌봄문화재 수와 시도지정 돌봄문화재 수의 관계	98
[그림 Ⅴ-5] 지역별 국가지정 돌봄문화재 수와 비지정 돌봄문화재 수의 관계	99

[그림 V-6] 지역별 시도지정 돌봄문화재 수와 비지정 돌봄문화재 수의 관계	99
[그림 V-7] 돌봄인원 대비 돌봄 문화재 수	102
[그림 V-8] 인공위성 야간조도 사진 비교(1992년, 2008년)	116
[그림 V-9] 국가유산청 문화재정비사업 지원대상 코드에 따른 예산 분류	156
[부록 그림 1] 연도별 보수관리 집행액	223
[부록 그림 2] 연도별 보존육성 집행액	225
[부록 그림 3] 연도별 재난방지 집행액	227
[부록 그림 4] 연도별 문화재 피해 예산 교부액	229
[부록 그림 5] 2011년 보수관리 집행액	230
[부록 그림 6] 2016년 보수관리 집행액	232
[부록 그림 7] 2020년 보수관리 집행액	234
[부록 그림 8] 2011년 보존육성 집행액	236
[부록 그림 9] 2016년 보존육성 집행액	238
[부록 그림 10] 2020년 보존육성 집행액	240
[부록 그림 11] 2011년 재난방지 집행액	242
[부록 그림 12] 2016년 재난방지 집행액	244
[부록 그림 13] 2020년 재난방지 집행액	246
[부록 그림 14] 2011년 문화재 피해 예산 교부액	248
[부록 그림 15] 2016년 문화재 피해 예산 교부액	249
[부록 그림 16] 2020년 문화재 피해 예산 교부액	250

I. 서론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에는 매년 약 6천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 평가는 이 사업군에 속하는 사업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문화재 현황과 보존관리 정책시행 상황을 개관하고(II장), 이 사업군에 속하는 사업들의 내용과 시행현황을 정리한다(III장). 다음으로 평가의 개요를 제시하는데(IV장), 여기에서는 세부사업별로 사업의 논리모형을 구성하고 평가유형과 평가질문을 제시한 후 구체적 평가모형과 평가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그 후 이러한 모형과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며(V장), 이것은 계획과 과정에 대한 정성평가와 문화재 보존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불의사 금액에 대한 정량적 추정결과, 그리고 세부사업별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평가로 나누어 제시할 것이다. 끝으로 평가에서 제시한 정책제언을 종합하여 정리할 것이다(VI장).

II. 문화재 현황과 보존관리 정책

1. 문화재 현황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국가유산청이 지정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기준 총건수는 5,252건이다. 그중 가장 건수가 많은 것은 보물로 2022년 기준 2,351점이며, 다음으로는 국가등록문화재(952건), 천연기념물(475건) 등이다. 총건수는 2018년 대비 2022년까지 467건, 9.8%가 늘어났는데 특히 많이 늘어난 유형은 보물과 국가등록문화재이며, 증가율로 보면 명승도 높은 편이다.

〈표 II-1〉 연도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8~'22 증가	
						건수	비율
국보	336	342	348	350	354	18	5.4
보물	2,146	2,188	2,235	2,293	2,351	205	9.6
사적	505	513	519	521	526	21	4.2
명승	112	113	115	127	131	19	17.0
천연기념물	459	461	463	470	475	16	3.5
국가무형문화재	142	146	149	153	155	13	9.2
국가민속문화재	299	300	303	306	308	9	3.0
소계	3,999	4,063	4,132	4,220	4,300	301	7.5
국가등록문화재	786	843	896	933	952	166	21.1
총계	4,785	4,906	5,028	5,153	5,252	467	9.8

자료: 국가유산청(2023)

신규등록과 말소 현황을 보면 신규등록은 매년 약 120~130건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말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II-2〉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신규지정 건수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보	5	6	7	2	4
보물	44	48	54	60	62
사적	5	8	6	2	5
명승	2	1	3	12	4
천연기념물	2	4	3	7	5
국가무형문화재	4	5	3	4	2
국가민속문화재	2	1	3	3	2
국가등록문화재	62	57	55	39	20
합계	126	130	134	129	104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표 II-3〉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말소 건수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보	-	-	1	-	-
보물	5	6	7	2	4
사적	-	-	-	-	-
명승	-	-	1	-	-
천연기념물	-	2	1	-	-
국가무형문화재	-	1	-	-	-
국가민속문화재	-	-	-	-	-
국가등록문화재	-	-	2	2	1
합계	5	9	12	4	5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문화재 보전, 활용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조건은 문화재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인데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소유 주체는 법인·단체(34.2%)와 국가(27.0%)의 비율이 높으며 다음으로 혼합형태(14.1%)나 개인의 비중(13.3%)도 낮지 않다. 지자체는 7.8%로 상대적으로 낮다.

〈표 11-4〉 소유자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구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단체	개인	해당없음	혼합	합계	
국보	182	3	-	127	42	-	-	354	
보물	778	104	2	1,155	312	-	-	2,351	
사적	96	33	3	39	6	-	349	526	
명승	20	2	-	5	2	-	102	131	
천연기념물	71	49	2	43	30	66	214	475	
국가민속문화재	21	42	-	87	149	-	9	308	
국가등록문화재	207	165	113	286	137	-	44	952	
총계	건수	1,375	398	120	1,742	678	66	718	5,097
	비율(%)	27.0	7.8	2.4	34.2	13.3	1.3	14.1	100.0

자료: 국가유산청(2023)

반면, 관리주체 기준으로 보면 지자체(35.1%)와 법인·단체(34.3%)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관리주체로서 국가(16.7%)와 개인(7.2%)의 비율은 소유 주체로서의 비율보다 뚜렷이 낮아서 결국 이 두 주체 소유의 문화재를 지자체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이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표 11-5〉 관리자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구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단체	개인	해당없음	혼합	합계
국보	133	46	16	148	11	-	-	354
보물	483	416	117	1,205	126	-	4	2,351
사적	47	436	3	39	1	-	-	526
명승	-	130	-	1	-	-	-	131
천연기념물	7	400	-	4	-	60	4	475
국가민속문화재	24	61	5	72	146	-	-	308
국가등록문화재	155	301	134	277	82	-	3	952
총계	건수	849	1,790	275	1,746	366	11	5,097
	비율(%)	16.7	35.1	5.4	34.3	7.2	1.2	0.2

자료: 국가유산청(2023)

종교별 현황을 보면 비종교 문화재가 62.6%로 절대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불교문화재가 32.5%로 높으며, 다른 종교문화재는 미미하다. 이로 인해서 문화재 보존정비라는 국가의 기능 수행에 있어서 국가유산청과 종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의 역할 분담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표 II-6〉 종교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구분	불교	유교	천주교	개신교	단군신앙	기타	비종교	합계	
국보	185	1	-	-	-	-	168	354	
보물	1,357	50	-	-	-	1	943	2,351	
사적	51	40	9	3	-	10	413	526	
명승	5	-	-	-	-	-	126	131	
천연기념물	19	-	-	-	-	-	456	475	
국가민속문화재	5	10	1	-	1	18	273	308	
국가등록문화재	37	5	47	38	1	12	812	952	
총계	건수	1,659	106	57	41	2	41	3,191	5,097
	비율(%)	32.5	2.1	1.1	0.8	0.0	0.8	62.6	100.0

자료: 국가유산청(2023)

중앙정부 기관인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재 유지관리 관련 사업은 국가지정·등록문화재뿐만 아니라, 시·도 지정·등록문화재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도 지정·등록문화재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6,947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건수가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는 경남(1,249건)이다. 인구가 조밀한 특별시, 광역시에는 인구 1만명당 지정 건수가 1건에 못 미치지만, 각 도(道)는 2~4건이다. 도 사이에서도 편차가 작지 않으며, 인구 1만명당 지정 건수는 제주가 4.14건으로 가장 많으며 경남(3.81건), 충북(3.35건), 경북(3.28건) 순으로 높다. 시·도 지정·등록문화재는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의 주요 '수요처'이므로 당해 문화재의 등록 절차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예산 규모의 적정화와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중요하다.

〈표 II-7〉 시·도지정·등록문화재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시도 유형문화재	497	210	88	73	31	58	39	19	333	179	348	206	272	251	496	915	39	4,054	
시도 무형문화재	54	25	17	29	21	25	6	3	70	33	27	55	62	53	48	41	23	592	
시도 기념물	40	52	19	63	24	47	47	11	188	80	138	166	133	197	155	272	128	1,760	
시도 민속문화재	35	19	4	2	9	2	2	-	14	4	20	28	36	42	155	21	82	475	
소계	626	306	128	167	85	132	94	33	605	296	533	455	503	543	854	1249	272	6,881	
시도 등록문화재	19	2	-	8	-	1	-	-	15	-	2	3	7	-	-	-	9	66	
총계	건수	645	308	128	175	85	133	94	33	620	296	535	458	510	543	854	1249	281	6,947
	인구 1만명 당	0.68	0.93	0.54	0.59	0.59	0.92	0.85	0.86	0.46	1.93	3.35	2.16	2.88	2.99	3.28	3.81	4.14	1.35

자료: 국가유산청(2023), 인구는 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

문화재는 특정한 독립된 사물의 형태로, 즉 점(點)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사적(史蹟)과 같이 특정한 지형을 점유한 형태로, 즉 면(面)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같이 높은 수준의 문명이 오래 존재한 지역에서는 유형과 무형의 문화재들이 특정 지구(地區)에 걸쳐서 보다 폭넓게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그 대표적 사례가 고도(古都) 지구이며,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지역은 보존 육성하기 위해 고도 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고도 지구는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로 구분되며 그 면적은 각각 858만㎡ 및 516만㎡, 총 1,373만㎡에 달한다.

〈표 II-8〉 고도지구 지정 현황(2023년도 기준)

(단위: ㎡)

구분	경주	공주	부여	익산	합계
특별보존지구	255.3	267.6	155.0	179.6	857.5
보존육성지구	105.3	156.3	125.3	128.9	515.8
합계	360.6	423.9	280.3	308.5	1,373.3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에 기반하여 저자 작성

정부의 문화재 보존과 활용 정책의 대상 중에는 국가적인 차원은 물론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갖는 문화재가 있다. 그러한 가치를 명시적 인정받은 경우는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이하 '세계유산')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소재 세계유산은 문화유산이 13건, 자연유산이 2건이다. 이 중 문화유산이 국가유산청의 유지관리 사업의 중요한 대상이다.

〈표 II-9〉 세계유산 등재 목록 현황

구분	등재 목록	등재일
문화유산(13건)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1995. 12. 9
	창덕궁, 화성	1997. 12. 6
	경주역사 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2000. 12. 2
	조선왕릉	2009. 6. 30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2010. 7. 31
	남한산성	2014. 6. 25
	백제역사 유적지구	2015. 7. 8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2018. 7. 4
	한국의 서원	2019. 7. 10
자연유산(2건)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2007. 7. 22
	한국의 갯벌	2021. 7. 31
총 15건	-	-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한 구체적 활동은 문화재의 재질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 국보와 보물의 경우 보존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종이(30.5%)와 목조(14.8%)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표 II-10〉 재질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구분	석조	목조	금속	도자	종이	기타	합계
국보	85	37	79	53	69	31	354
보물	538	362	211	142	757	341	2,351
합계	623	399	290	195	826	372	2,705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

문화재 중에서도 건조물은 외기(外氣)에 노출되고, 물리적 크기가 크며, 복잡한 역학적 구조를 가지므로 그 보존정비에 건당 비용이 높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건조물은 크게 석조와 목조로 분류할 수 있는데 화재에 더욱 취약한 목조문화재가 국보와 보물 중 256건이다. 또한 석조와 목조 모두 탐과 사찰처럼 불교 문화재의 비율이 높다.

〈표 II-11〉 건조물문화재 현황

구분	국보	보물	합계	구분	국보	보물	합계	
석조문화재 소계	73	505	578	목조문화재 소계	25	231	256	
탐	석탑	25	161	186	사찰건축	16	101	117
	전탑	1	4	5	궁궐건축	4	20	24
	모전석탑	3	2	5	성곽건축	1	9	10
석불	2	78	80	관아건축	3	9	12	
석비	13	61	74	고가	-	13	13	
승탑	8	54	62	향교	-	22	22	
마애불	7	41	48	서원	-	11	11	
당간지주	1	28	29	누·정·각	-	25	25	
석등	4	21	25	사묘재실	1	18	19	
석교	2	10	12	서당	-	3	3	
귀부 및 이수	-	6	6					
석빙고	-	6	6					
석조	-	6	6					
석불대좌	-	4	4					
석굴	2	-	2					
암각화·각석	2	1	3					
석주	-	2	2					
풍기대·석표·수표	-	4	4					
석종	-	1	1					
석연자·석연대	1	1	2					
첨성대	1	-	1					
노주	-	1	1					
석조불감	-	1	1					
석사자·천인상	-	2	2					
석축·계단	-	4	4					
관천대	-	2	2					
굴뚝	-	2	2					
자격루	1	-	1					
태실	-	2	2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

또한 이러한 국보 및 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소유자 분포를 보면 국가 414건으로 절반에 달하지만 사유(私有)도 401건이며 그중 사찰이 320건으로 많다.

〈표 II-12〉 건조물문화재 소유자별 현황

구분	국가	지자체	사유								합계
			사찰	문중	서원	사립대학	법인·단체	개인	향교	소계	
국보	59	-	39	-	-	-	-	-	-	39	98
보물	355	19	281	27	12	1	2	18	21	362	736
합계	414	19	320	27	12	1	2	18	21	401	834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

2.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보수정비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소유 및 관리 주체로서 지자체가 중요하다. 지자체들은 그곳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국가유산청에 예산지원을 신청하고 있다. 신청건수는 연간 2,000건을 넘으며 그중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2022년 기준 68.7%였다. 한편, 예산기준으로 보면 요구액은 매년 9,000억원 내외이며 실제 반영은 2018년 2,951억원에서 2019년 3,602억원으로 22.0% 증가하였고 2020년 다시 3,933억원으로 9.2% 증가한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 대비 반영률은 2018년 33.9%에서 2022년 42.7%로 증가하였다.

〈표 II-13〉 문화재 보수정비(총액사업) 시도요구 및 예산반영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분	사도 신청		반영		예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청 대비 반영률	전년 대비 증감률
2018	2,047	8,696	1,483	2,951	33.9	3.7
2019	2,097	8,938	1,480	3,602	40.3	22.0
2020	2,201	9,063	1,555	3,933	43.4	9.2
2021	2,606	9,636	1,740	3,970	41.0	0.9
2022	2,728	9,177	1,875	3,915	42.7	-1.4
평균	2,336	9,102	1,627	3,674	40	6.9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문화재 지정유형별로 2018~2022년간 보수정비 사업의 건수와 예산 투입규모를 보면, 우선 건수 측면에서 사적과 보물이 각각 연평균 400건을 넘고, 천연기념물도 400건에 가깝다. 증가율로 보면 국보와 사적이 가장 높는데 국보는 그 절대수가 많지 않다. 한편 예산 투입규모 측면(국비와 지방비 합계)에서 사적이 연평균 3,20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국보와 보물은 1,089억원 규모이다. 성장률 측면에서는 천연기념물, 명승, 국가등록문화재가 60%를 넘을 정도로 높다. 끝으로 보수정비 건당 투입액은 사적이 7.3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국보와 보물이 2.3억원 수준이다.

〈표 11-14〉 지정유형별 문화재 보수정비(총액사업) 건수 및 투입예산

(단위: 건, 천원,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증가율
건수							
국보	46	43	41	45	61	47	32.6
보물	431	429	370	425	459	423	6.5
소계	477	472	411	470	520	470	9.0
사적	357	360	443	476	549	437	53.8
천연기념물	299	307	306	354	356	324	19.1
명승	60	60	73	81	70	69	16.7
소계	359	367	379	435	426	393	18.7
국가민속문화재	164	148	175	172	207	173	26.2
국가등록문화재	134	134	147	187	147	150	9.7
투입금액							
국보, 보물							
국비	65,696,600	66,675,400	77,045,987	81,015,100	85,227,200	75,132,057	29.7
지방비	31,318,123	30,201,738	33,658,274	35,249,384	38,222,514	33,730,007	22.0
소계	97,014,723	96,877,138	110,704,261	116,264,484	123,449,714	108,862,064	27.2
건당 평균	203,385	205,248	269,353	247,371	237,403	231,621	16.7
사적							
국비	175,953,800	230,161,400	238,708,799	246,899,840	221,540,725	222,652,913	25.9
지방비	76,816,771	100,249,458	103,816,744	107,247,303	98,180,301	97,262,115	27.8
소계	252,770,571	330,410,858	342,525,543	354,147,143	319,721,026	319,915,028	26.5
건당 평균	708,041	917,808	773,195	744,007	582,370	732,071	-17.7

〈표 II-14〉의 계속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증가율
천연기념물, 명승							
국비	33,199,732	33,404,520	48,024,103	39,211,200	54,117,750	41,591,461	63.0
지방비	14,236,456	14,319,082	20,581,759	16,919,086	24,253,322	18,061,941	70.4
소계	47,436,188	47,723,602	68,605,862	56,130,286	78,371,072	59,653,402	65.2
건당 평균	132,134	130,037	181,018	129,035	183,970	151,790	39.2
국가민속문화재							
국비	11,642,000	15,016,330	19,224,070	16,997,170	14,949,271	15,565,768	28.4
지방비	5,115,000	6,518,655	8,383,341	7,477,072	6,644,259	6,827,665	29.9
소계	16,757,000	21,534,985	27,607,411	24,474,242	21,593,530	22,393,434	28.9
건당 투입금액	102,177	145,507	157,757	142,292	104,317	129,442	2.1
국가등록문화재							
국비	9,525,500	14,902,350	10,297,041	12,876,690	15,665,054	12,653,327	64.5
지방비	9,525,500	14,902,350	10,297,041	12,876,690	15,665,054	12,653,327	64.5
소계	19,051,000	29,804,700	20,594,082	25,753,380	31,330,108	25,306,654	64.5
건당 투입금액	142,172	222,423	140,096	137,719	213,130	168,711	49.9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문화재 활용 상황

문화재를 당대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직접적 관람이다. 대표적인 관람 대상 문화재인 궁, 릉, 원 및 유적관리소 관할 문화재의 관람객수를 보면 4대 궁 및 종묘의 관람객이 COVID-19 유행 직전 2019년 기준 1,089만명이었으며 왕릉의 관람객이 210만명, 그리고 유적관리소 관할 문화재 관람객수가 153만명이었다. COVID-19 유행기간 동안 관람객수는 왕릉을 제외하고는 크게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궁과 유적관리소 관할 문화재의 관람객수는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특히 COVID-19로 인한 감소는 외국인의 경우 더욱 두드러졌으며 회복세도 내국인에 비해서 약하다.

〈표 II-15〉 공·농·원 및 유적관리소 관람객 현황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4대공 및 종묘	경복궁	유료	2,366,831	2,551,451	515,721	600,599	1,271,944
		무료	2,080,740	2,795,295	503,376	484,589	2,110,659
		계	4,447,571	5,346,746	1,019,097	1,085,188	3,382,603
		외국인	1,022,324	1,471,909	150,729	19,373	218,304
	창덕궁	유료	936,988	960,072	277,946	388,620	691,301
		무료	727,704	824,986	194,929	254,929	495,060
		계	1,664,692	1,785,058	472,875	643,549	1,186,361
		외국인	588,875	546,648	51,665	15,883	141,486
	덕수궁	유료	680,575	654,513	271,278	449,541	620,539
		무료	1,035,759	1,759,083	756,154	1,099,385	1,972,725
		합계	1,716,334	2,413,596	1,027,432	1,548,926	2,593,264
		외국인	344,953	368,796	50,636	17,595	103,138
	창경궁	유료	395,561	400,659	201,644	299,927	447,020
		무료	371,885	473,665	189,671	257,506	440,786
		합계	767,446	874,324	391,315	557,433	887,806
		외국인	76,838	93,717	9,712	6,274	38,368
	종 묘	유료	169,123	163,125	65,568	100,325	145,533
		무료	308,505	302,993	80,809	114,938	141,087
		합계	477,628	466,118	146,377	215,263	286,620
		외국인	66,693	62,928	7,460	3,912	20,985
소 계	유료	4,549,078	4,729,820	1,332,157	1,839,012	3,176,337	
	무료	4,524,593	6,156,022	1,724,939	2,211,347	5,160,317	
	합계	9,073,671	10,885,842	3,057,096	4,050,359	8,336,654	
	외국인	2,099,683	2,543,998	270,202	63,037	522,281	
조선왕릉 지구 관리소	동부지구	유료	120,038	123,629	141,766	164,804	149,852
		무료	186,972	208,607	177,778	197,958	215,784
		합계	307,010	332,236	319,544	362,762	365,636
		외국인	1,112	1,313	272	203	466
	중부지구	유료	247,400	250,765	263,770	307,428	293,963
		무료	468,159	561,869	537,161	594,632	604,480
		합계	715,559	812,634	800,931	902,060	898,443
		외국인	17,750	23,525	3,615	3,025	17,732

〈표 II-15〉의 계속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조선왕릉 지구 관리소	서부지구	유료	379,597	396,582	465,430	574,411	548,374
		무료	492,661	554,467	523,023	566,300	637,445
		합계	872,258	951,049	988,453	1,140,711	1,185,819
		외국인	2,322	1,738	1,062	280	423
	소 계	유료	747,035	770,899	870,966	1,046,643	992,189
		무료	1,147,792	1,325,020	1,237,962	1,358,890	1,457,709
		합계	1,894,827	2,095,919	2,108,928	2,405,533	2,449,898
		외국인	21,184	26,576	4,949	3,508	18,621
유적 관리소	현충사	유료	-	-	-	-	-
		무료	744,972	977,533	409,988	722,156	754,473
		합계	744,972	977,533	409,988	722,156	754,473
		외국인	6,006	6,397	3,013	6,003	4,837
	세종대왕 유적	유료	-	-	53,448	104,049	108,145
		무료	394,319	413,864	166,248	138,924	152,348
		합계	394,319	413,864	219,696	242,973	260,493
		외국인	1,779	1,790	171	56	89
	칠백의총	유료	-	-	-	-	-
		무료	57,810	62,363	48,187	57,994	59,188
		합계	57,810	62,363	48,187	57,994	59,188
		외국인	229	394	116	131	91
	만인의총	유료	-	-	-	-	-
		무료	76,416	80,638	60,864	57,745	43,893
		합계	76,416	80,638	60,864	57,745	43,893
		외국인	486	370	32	4	2
	소 계	유료	-	-	53,448	104,049	108,145
		무료	1,273,517	1,534,398	685,287	976,819	1,009,902
		합계	1,273,517	1,534,398	738,735	1,080,868	1,118,047
		외국인	8,500	8,951	3,332	6,194	5,019
총계	유료	5,296,113	5,500,719	2,256,571	2,989,704	4,276,671	
	무료	6,945,902	9,015,363	3,648,188	4,547,056	7,627,928	
	합계	12,242,015	14,516,159	5,904,759	7,536,760	11,904,599	
	외국인	2,129,367	2,579,525	278,483	72,739	545,921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Ⅲ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 개요 및 평가 필요성

1. 사업군 개요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에는 2024년 기준 예산 체계상 8개의 세부사업이 포함된다. 성과 계획서 체계에 따르면 이 사업들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여러 전략목표와 프로그램에 흩어져 분포한다. 단, 문화재의 보수, 정비, 보존을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들로서 그 목표와 투입의 측면에서 유사성이 높은 사업들이므로 사업군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에서 언급한 8개 세부사업 중 7개가 국가유산청의 사업이며 1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이다. 국가유산청의 사업 7개 중 6개가 속한 전략목표는 ‘문화재 보존관리와 안전의 품질을 혁신하여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킨다’이다. 이 전략목표에 속한 프로그램은 ‘Ⅱ-1 문화재 보존관리’와 ‘Ⅱ-2 문화재 보호’이다. 이 중 Ⅱ-1에 속하는 유지관리 사업군 사업은 ‘문화재 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고도보존 및 육성’ 그리고 ‘문화재 돌봄사업’이다. 또한, Ⅱ-2에 속하는 사업은 ‘문화재 긴급보수’, ‘문화재 재난 안전 관리’, ‘궁능방재시스템 구축’이다. 다른 한편 국가유산청 사업 중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는 ‘Ⅲ-3 문화재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속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중 유일하게 이 사업군에 속하는 세부사업인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조’는 ‘Ⅰ-3 종교문화지원’ 프로그램에 속하는 하부 사업이다.

〈표 Ⅲ-1〉 2023년 성과계획서상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의 세부사업의 위치(2023)

전략목표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국가유산청			
Ⅱ. 문화재 보존관리와 안전의 품질을 혁신하여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킨다.	Ⅱ-1.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가치를 확산시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다.	문화재 보수정비(1)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사업, 보조)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7)	고도보존 및 육성
		문화재 상시보호 및 조사(2)	문화재 돌봄사업

〈표 Ⅲ-1〉의 계속

전략목표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국가유산청			
	Ⅱ-2. 문화재 보호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여 미래세대에 온 전히 전승한다.	국내외 문화재 긴급보호(2)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2)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공능방재시스템 구축
Ⅲ. 문화재 향유 기회와 국제사회 협력 확대를 통 해 미래세대에 문화유산을 계승한다.	Ⅲ-3. 문화재 국제교류 문화재 국제협력 강화로 우리 문화유산의 국제경 쟁력을 강화한다.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5)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문화체육부			
I.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 환경을 조성한다.	I-3. 종교문화 지원 종교문화 지원으로 종교문 화자원을 보존 및 이용 활 성화한다.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주: 단위사업명 괄호 안의 숫자는 세부사업의 개수

자료: 2023년 성과계획서

이 사업군에 속하는 세부사업들은 그 성격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기존 문화재 보존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와 정비를 행하는 ‘문화재 보수관리 부문’이다. 이것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문화자산을 일상적으로 유지관리(maintenance)하는 활동이다. 둘째, 보존가치가 높은 특정한 문화권이나 유산을 정비, 관리하는 ‘보존육성 부문’이다. 이것은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보존과 활용의 가치를 높이는 개발활동(development)으로 볼 수 있다. 셋째는 문화재가 재난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이에 긴급히 대응하거나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재난방지 부문’이다. 이것은 위험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표 Ⅲ-2〉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 세부사업 분류

부문	사업명	사업 내용
문화재 보수 관리	문화재 보수정비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보수·정비
	문화재 돌봄사업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시도지정(등록)문화재 및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상시적 보존관리

〈표 III-2〉의 계속

부문	사업명	사업 내용
문화재 보수관리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전통사찰의 노후·퇴락된 주요 시설물의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보존지원
보존 육성	고도보존 및 육성	4개 고도(경주, 공주, 부여, 익산) 보존육성 및 역사문화권 정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세계유산 16건 등 등재 및 유지 관리
재난 방지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문화재가 재난(풍수해, 화재), 퇴락 및 훼손 등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긴급보수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문화재 재난방지사설 구축 및 유지관리
	공능방재시스템 구축	문화재 방재시스템 운영 및 유지

자료: 저자 작성

이 사업군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예산기준 총 6,753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문화재 보수관리에 5,737억원이 투입되어 85%를 점하고 있고, 문화재 보존육성 부문에 552억원(8.2%), 그리고 재난방지 부문에 464억원(6.9%)이 투입되고 있다. 2019년 이후 이 사업군의 예산은 연평균 약 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부문별로 보면 보수관리 부문은 7.5%, 보존육성 부문은 6.7% 그리고 재난방지 부문 5.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단, 각 부문 성장률은 매년 상당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 보수관리 부문은 2023년과 2024년에 전년 대비 10%를 넘게 증가한 반면, 보존육성 부문은 최근 2년간 각각 약 11% 및 약 7% 감소하였다. 재난방지 부문 예산은 2024년 전년 대비 약 8% 증가하였다.

〈표 III-3〉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부문	담당부처	세부사업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문화재 보수관리	국가유산청	문화재 보수정비	360,060	393,300	397,000	391,500	463,400	517,341
		문화재 돌봄사업	13,535	14,703	16,205	19,286	20,651	18,962
	문체부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25,354	23,842	27,206	27,954	35,944	37,360
	소계		398,949	431,845	440,411	438,740	519,995	573,663
보존 육성	국가유산청	고도보존 및 육성	3,128	5,971	9,588	20,028	19,455	20,161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36,267	44,203	42,702	46,770	39,783	35,052
	소계		39,395	50,174	52,290	66,798	59,238	55,213
재난 방지	국가유산청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4,121	4,121	4,121	4,121	3,710	4,076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18,909	25,835	24,482	25,341	26,606	26,012
		공능방재시스템 구축	11,757	16,137	14,689	15,233	16,464	16,336
	소계		34,787	46,093	43,292	44,695	46,780	46,424
합계			473,131	528,112	535,993	550,233	626,013	675,300

자료: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

2. 세부사업별 현황

가. 문화재 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이 사업의 목적은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보수·정비와 문화재 경관 및 관람환경 개선, 그리고 삼국시대 핵심 문화유산의 보존·정비를 통한 역사성 회복, 개인 사유권 보전 등을 통한 주민과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구축으로 밝혀져 있다.

이 사업은 ‘문화재 보수정비(일반)’와 ‘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재 보수정비(일반)’의 내용은 ‘문화재 수리·원형복원, 문화재 구역 내 발굴조사 및 기록화 작성’, ‘문화재 보존 기반시설 정비, 문화재 안내·관람편의시설 설치’, 그리고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매입, 문화재 보존 기반시설 정비 등’이다. ‘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의 내용은 ‘풍납동 토성, 백제역사유적지구, 신라왕경핵심유적을 대상으로 하여 ‘경역 복원·정비, 성곽·유적 정비, 고분군 조사 및 고증·학술 조사’ 활동과 ‘토지매입, 관람 안내시설 설치, 탐방로 정비 등 관람 편의시설 정비’ 등을 행하는 것이다.

1) 문화재 보수정비(일반)

문화재 보수정비(일반)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유산청은 그 사업의 목적을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보수·정비와 문화재 경관 및 관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으로 밝히고 있다. 사업 시행방식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국비를 보조하는 방식이며 보조율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에 대해서는 70%, 국가등록문화재는 50%, 전시관의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연간 1,705건이 지원되었다.

사업의 추진절차는 지자체가 국가유산청에 사업연도 전년 4월에 예산신청을 하고 이를 반영한 국가유산청의 예산요구안을 반영하여 정부예산안이 9월에 확정되면 이에 근거하여 국가유산청이 각 지자체별로 사업규모를 사전통지하고 12월에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이에 기초하여 국가유산청이 지자체에 확정통지하여 사업이 시행되는 방식이다.

[그림 Ⅲ-1] 문화재 보수정비(일반) 추진절차



자료: 국가유산청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 사업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재 보수정비(총액사업)는 2022년 3,915억원이며, 이는 2016년 대비 28.4% 증가한 것이다. 실집행률은 2016년에 60.4%로 비교적 저조했고 그 후 상승추세이지만 2022년에도 75.3%이다.

<표 Ⅲ-4> 문화재 보수정비(총액사업) 예산 및 집행

(단위: 백만원,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 8월 현재
예산액(a)	305,000	284,500	295,060	360,160	393,300	397,000	391,500	343,400
실집행액(b)	184,310	181,913	201,583	269,188	306,954	301,823	294,779	151,873
실집행률(b/a)	60.4	63.9	68.3	74.7	78.0	76.0	75.3	44.2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이 내역사업은 2023년부터 분리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삼국시대 핵심 문화유산의 보존, 정비를 통해서 역사성을 회복하고 개인 사유권 보전을 통해서 주민과 공존하는 역사문화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혀져 있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은 서울 풍납동 토성, 백제역사유적지구, 그리고 신라 왕경핵심유적지 문화재 39개소가 소재하는 송파구,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경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행주체인 사업에 국비를,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70%, 국가등록문화재 및 목조 문화재의 방충, 방염 사업에 대해서 50%, 전시관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30%의 비율로 보조한다.

2023년 이 사업 예산은 1,200억원 규모이며, 실집행률은 8월 기준 77.3%이다.

〈표 III-5〉 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예산 및 집행(2023년)

(단위: 백만원, %)

구분	합 계	서울 풍납동 토성	백제역사유적지구	신라왕경핵심유적
예산액	120,000	70,000	30,000	20,000
실집행액	92,791	59,473	23,274	10,044
실집행률	77.3%	85.0%	77.6%	50.2%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 돌봄사업은 큰 보수가 아닌 경미한 보수를 적절한 시기에 실행하여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는 취지의 내역사업인 문화재 돌봄사업과 현장에서 돌봄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수준·직무별 역량을 강화를 위한 내역사업인 돌봄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에는 지역사회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이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는 문화재의 수시 점검을 통해 경미한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더 많은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는 문화재를 보유한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찾음으로써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6〉 문화재 돌봄사업 내역사업별 예산

(단위: 백만원, %)

담당부처	내역사업명	예산		
		2021	2022	2023
국가유산청	문화재 돌봄사업	14,430	17,111	17,111
	돌봄 지원사업	1,700	2,100	2,100
	자체 운영비	75	75	75
합계		16,205	19,286	20,651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 돌봄 내역사업은 문화유산 모니터링과 일상관리를 통해 문화유산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람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큰 훼손을 입기 전에 경미한 훼손을 발견하고 수리하는 예방적 관리를 추구한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17개 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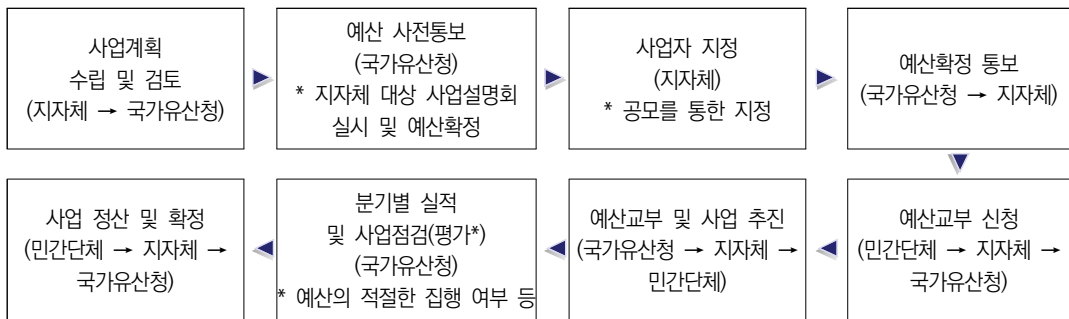
역시도)의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시도지정(등록)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 등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적인 예방관리를 하고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경미한 훼손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사후보수 부담을 절감하는 동시에 문화유산 분야 및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성격도 지닌다.

2023년 기준 총사업 예산은 약 185억원으로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총 9,050개소가 대상이다. 2010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이며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보조율은 50%이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16년 약 106억원에서 2023년 185억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해 왔으며 사업과 관련된 인력의 채용도 증가하였다. 2021년의 채용인원은 총 772명으로 이중 전문인력이 410명이었는데, 2022년의 인원은 총 922명이고 이중 477명이 전문인력이었다. 최근 7년간 평균 실집행률은 98.5%이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국회와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개선을 권고하는 지적이 있다. 2021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문화재 돌봄사업에 여성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과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 시 적절한 인력이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과거 5년간 경기도에 지원한 100억원 사용처 점검 및 예산구조를 포함한 전반적 제도개선을 권고하며 전문모니터링을 위한 전공자 등 전문인력이 없는 지역센터가 많고 전문모니터링 수행실적도 낮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같은 해 감사원은 지역문화재돌봄센터 문화재 모니터링 수행 등에 대한 관리 미흡을 지적하였다. 관리 부실을 고발하는 언론의 지적도 있었다.¹⁾

[그림 III-2]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절차



자료: 국가유산청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 『KBS 대구 방송』, 「세계유산에 시멘트 ‘터지덕지’…이면엔 관피야?」, 2022. 2. 23., https://www.youtube.com/watch?v=8izOpvS73TY&ab_channel=KBSNews(검색일자: 2023. 10. 30.)

2) 돌봄 지원사업

이 사업은 전문실습교육 운영을 통해 돌봄사업 종사자의 수준·직무별 역량 강화와 문화재 돌봄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전국 지역돌봄센터의 안정적 사업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돌봄사업은 실습교육지원과 돌봄사업 성과 교류 및 홍보, 돌봄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세 개의 내내역사업으로 나누어진다.

실습교육지원 부분에서는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 3년간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사업의 실제 운영 주체였는데 2020년 이후 운영주체가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돌봄협회”로 바뀌어 민간위탁 100%로 운영된다. 매년 교육사업 운영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 절차는 국가유산청이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진행된다. 2022년의 집행률은 100%이다.

[그림 III-3] 돌봄지원사업 추진절차



자료: 국가유산청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성과교류 및 홍보에서는 전국 지역돌봄센터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재 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지역돌봄센터 상호간의 연계·협력 지원,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지역돌봄센터 평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라는 기관에 100% 지원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간 내역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다가 2022년 중앙돌봄센터 운영(민간보조사업), 돌봄전문교육(민간위탁) 신설으로 인한 사업체계 조정에 따라 내내역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그림 III-4] 돌봄지원사업 추진절차(성과교류 및 홍보)



자료: 국가유산청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돌봄지원센터 운영지원은 문화재 돌봄사업 관리 지원 및 행정기관과 지역문화재돌봄센터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지원조직에 대한 재정지원이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이다. 사업의 수행은 재단이 맡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7억원이다.

[그림 III-5] 돌봄지원사업 추진절차(지원센터 운영지원)



자료: 국가유산청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²⁾

이 사업의 목적은 전통사찰의 노후된 주요 시설물 보수, 방재시스템 구축·유지보수 및 전통사찰 복원을 지원하여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는 것이다. 현재 전통사찰은 전국에 982개가 존재한다.

이 사업의 내용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방재시스템 구축(전기화재 예측시스템 및 통합관계 시스템 구축)’ 그리고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방재시스템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등이다.

이 사업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304억원이며 그중 236억원이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사용되고 있다.

2)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의 내역사업인 ‘전통사찰 보존’을 중심으로 서술

1) 보수정비 지원

이 사업은 전통사찰의 노후·퇴락된 주요 시설물(법당, 전각 등)의 보수정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형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이며 국고, 지자체, 자부담 비율이 45:45:10의 비율로 정해져 있고, 사찰당 국비 지원액의 한도가 2억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2023년 386개 사찰이 지원을 신청하였고 이 중 131개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지원대상 선정의 기준은 긴급성·시의성 외에도 지역간 안배를 고려하며 호우 및 태풍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찰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이 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사찰과 사찰 내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전기화재예측시스템 및 통합관제시스템(CCTV, 재난센서 등) 구축을 지원하고, 이미 구축된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도에 대한 보조형태로 이루어지며 시스템 구축은 2023년 기준 국비, 지자체, 자부담의 비율이 45:45:10이고 유지보수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50:50으로 부담한다. 2023년 기준 시스템 구축은 43개소에 대해서, 시스템 유지보수는 765개소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표 III-7〉 전통사찰 보존 내내역사업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3년 예산
○전통사찰 보존	30,360
- 전통사찰 보수정비	23,621(131개×180.3백만)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2,734(43개×63백만)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4,005(765개×5.2백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라.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

고도 보존 및 육성사업은 고도기반 구축운영, 고도핵심 유적 정책 운영,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고도 역사도시 조성, 고도탐방거점 조성, 역사문화권 정비 등 6개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업은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고도에 맞는 이미지를 부여하고, 고도를

방문하기에 더 매력적인 곳으로 조성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개개의 내역사업이 아닌 전체 사업의 측면에서 보면 사업의 성과는 고도의 이미지와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더 많은 국민이 찾는 곳이 되어, 국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지역민의 삶이 개선되는 효과라 할 수 있다. 모든 내역사업이 본 심층평가의 대상은 아니다. 6개 내역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 제시한다.

〈표 III-8〉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

(단위: 백만원)

담당부처	내역사업명	예산		
		2021	2022	2023
국가유산청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5,600	4,200	4,200
	고도역사도시 조성	760	4,890	6,276
	고도기반 구축운영	274	376	378
	고도핵심유적정책운영	574	474	774
	고도탐방 거점 조성	2,380	7,088	3,227
	역사문화권 정비	-	3,000	4,600
합계		9,588	20,028	19,455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

1)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이 내역사업은 주거환경·가로경관·역사문화환경 개선을 통한 고도 이미지를 회복하고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신라와 백제의 옛 도읍이었던 지역 내의 지정지구이다. 사업 대상이 되는 4개 고도는 주거환경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이 좋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투입된다.

사업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 가로경관 개선 등 주민 지원 사업과 역사문화 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 지원 사업을 포함한다.

2015~2023년까지 9년간 4개 고도 총 718건에 약 42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었다. 총 718건수는 주거환경개선 346건, 가로경관개선 285건, 역사문화환경 개선 87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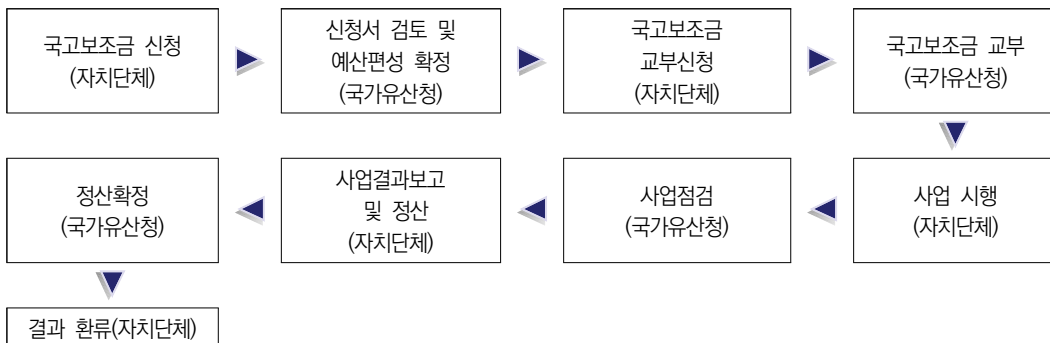
〈표 Ⅲ-9〉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주요 내용

구분		지원 내용	지원 방법
주민 지원	주거 환경 개선	한옥으로 신축·개축·재축·증축·수선	공사비(최대 1.5억원) 주민 시행 시 발굴조사비 지원 및 중요 유물 및 유적 보존지역 매입 정비
		우수건축자산 수선·대수선	공사비(최대 1.3억원) 보조
	가로 경관 개선	전통 담장, 대문, 간판 등 정비	공사비(최대 3천만원) 보조 주민 시행 시 발굴조사비 지원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공사비(총별 최대 3천만원) 보조
지자체	역사문화 환경 개선	전통경관마을, 전통정원, 역사가로, 주차장, 화장실, 주민편익시설 등 조성	지자체 집행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

사업의 추진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신청에 대해 주관 부서인 국가유산청이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사업의 과거 집행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최근 7년간 평균 실적행률은 32.9%에 그치고 있다.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고도육성법 등 시행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 규제 등으로 인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해당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사업 진행에 따른 신청률·집행률 개선 등을 보면, 시행 초기의 부정적 인식은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이후에는 집행률이 50%를 넘어섰다. 집행률이 높아진 데는 예산이 감액된 것도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로 2015년 최초 시행 당시 예산(80억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40억원) 줄어들었으며, 2023년에 추가로 예산이 감액 조정된 바 있다.

[그림 Ⅲ-6]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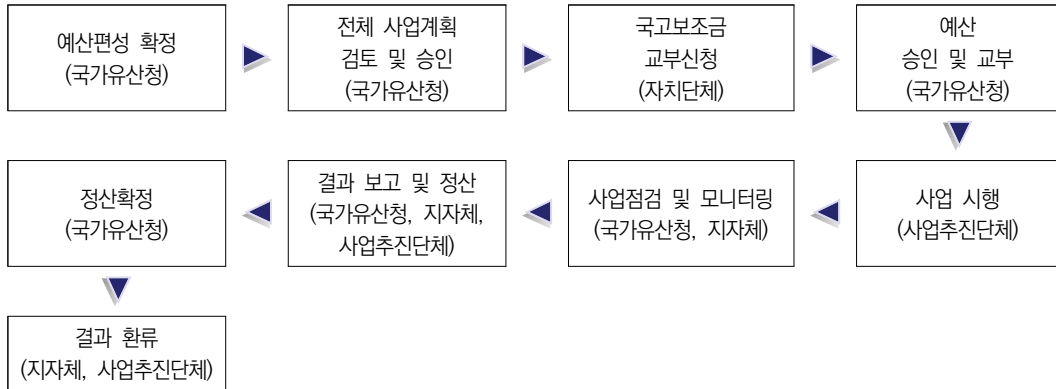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고도역사도시 조성

이 내역사업은 현재 4개 지역의 정비 사업과 고도 주민지원 사업으로 나누어진다. 지역의 정비 사업은 자본보조 사업이며 서동생가터, 대통사 역사유적, 부여 고도, 백제 금마저 지역 등 과거 백제의 영토였던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국고 보조율은 70%이다. 서동생가터 유적정비는 부지면적 137,000㎡의 지역에 4년간(2021~2024년) 국비 총 136억원을 지원하여 서동생가 정비, 마룻지·축실지·용샘 정비, 연꽃원 조성 등이 이루어진다. 대통사 역사유적 정비는 토지매입 23필지(2,991.3㎡), 발굴(면적 2,991.3㎡) 등에 5년간(2023~2027년) 국비 총 70억원을 지원하여 대통사 발굴 성과의 노출 전시, 전통 역사경관 조성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부여 고도 경관개선은 부여읍 성왕로 일원에 4년간(2023~2026년) 국비 총 56억원을 지원하여 한옥회랑, 백제유적정원, 백제 이미지 한식 담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에는 부지면적 43,000㎡의 공간에 백제 왕궁의 주요 전각 5개소를 재현하고 후원을 조성하는 등 6년간(2023~2028년) 국비 총 28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도 주민지원 사업은 고도 지역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와 협력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을 수행하고 고도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주민들의 교육, 체험, 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등 4개 시군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 사업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은 약 1억 6천만원으로 보조율은 50%이다. 재정지원은 2019년부터 이루어졌으며, 4년간 집행률의 평균은 92.3%이다. 2022년에는 100% 집행되었다. 사업 추진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국가유산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자자체의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국가유산청이 검토와 승인을 하고 자자체에서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림 III-7] 고도역사도시 조성사업 추진절차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고도기반 구축운영

내역사업인 고도기반 구축운영은 위원회 운영이나 현상 변경 조사 및 행정보조 인력에 대한 임금 등 정책 운영을 위한 행정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고도보존사업을 위해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 역사문화권정비 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주요 항목으로 구성한다. 여기에 소액의 정책연구비용도 포함된다. 2014년 이후 진행된 사업으로 최근 7년간 평균 실적행률은 90.5%이며, 본 심층평가의 직접적인 검토 대상은 아니다.

4) 고도핵심 유적 정책운영

해당 내역사업은 신라왕경 및 백제왕도의 핵심유적 정책연구 및 경상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라왕경 및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위한 학술대회, 자문위원회 운영 및 홍보 등 정책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이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과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 등 2개의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다. 2014년 시행 이후, 최근 7년간 평균 실적행률은 76.8%이다. 2020년 이후에는 집행률이 90%를 넘고 있다. 본 심층평가의 직접적인 검토 대상은 아니다.

5) 고도탐방 거점 조성

고도탐방 거점 조성 사업은 부여와 경주 등 삼국시대 고도를 해당 지역으로 하여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목적은 고도(古都)의 가치에 대해 통합적·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탐방

객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탐방센터 공사비로 구성된다. 부여 지역의 사업 규모는 부지 8,700㎡, 건축연면적 약 4,000㎡(지상 1층, 한식목구조)이며 4년간 국비 총 13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부터 국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경주 지역의 경우 사업부지 28,048㎡, 건축연면적 약 6,000㎡(지상 2층) 규모로 진행하며 국비 총 139.3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2024년부터 집행 예정인 사업이다. 두 지역 모두 지자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국비 70%가 투입될 예정이다. 본 심층평가의 직접적인 검토 대상은 아니다.

6) 역사문화권 정비

이 내역사업은 9개 역사문화권³⁾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규명하고 체계적인 정비와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주로 문화재 조사연구, 발굴 등을 내용으로 한다. 역사문화권 조사연구에서는 초광역 단위 역사문화권 조성 전략 계획 수립 연구, 역사문화권 DB 및 포털 고도화, 역사문화권 정비 정책 및 제도 마련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를 위해 중요 유적에 대해 발굴 조사비를 지원한다.

역사문화권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제1차 기본계획(2022~2026년)을 시행 중이다. 지자체 자본보조 사업이며 국비 50%가 지원된다. 지자체의 국고 보조금 신청을 받아 국가유산청이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 사업 시행을 지자체가 시행하는 절차로 이행된다. 시행 첫해(2022년)의 평균 실집행 실적은 97%였다.

마.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2004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한국의 문화유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세계유산으로 신규 등재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을 지닌다. 더불어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국제 교류협력 사업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해당 사업의 기대 성과는 한국 문화유산의 세계적인 인지도 제고와 그에 따른 국제 관광객 증가라 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을

3)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지적받은 바 있다.

2023년 기준 9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약 400억원에 이른다. 내역사업 중 연구와 일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심층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내역사업 중 핵심이 되는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지원대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II-10〉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사업구성과 예산

(단위: 백만원, %)

담당부처	내역사업명	예산		
		2021	2022	2023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단일유산)	33,034	23,501	19,251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연속유산)	-	10,894	10,244
	세계유산 홍보지원	6,529	7,919	4,879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센터 운영	600	2,264	2,383
	세계유산 일반관리	503	540	560
	무형유산관리 역량강화	400	400	400
	세계유산 잠정목록연구	336	336	336
	세계유산 관리체계 연구	300	100	100
	유네스코 남북공동등재 국제기구 지원	1,000	1,000	1,000
합계	42,702	46,970	39,783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

1)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단일유산과 연속유산)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10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사업의 대상은 세계유산 중 단일유산과 연속유산으로 나누어진다. 단일유산은 수원화성, 남한산성,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단일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연속유산은 한국의 역사마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한국의 서원, 한국의 갯벌 등 국내 여러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2004부터 시행하는 계속 사업이고, 지역별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는 지자체 자본보조 사업이다. 2022년 사업 규모는 약 344억원이며, 2023년 예산은 295억원으로 감소하였다. 국가유산청에 따

르면 최근 7년간 평균 실집행률은 47.7%로, 토지매입 절차, 설계 변경,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의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2) 세계유산 홍보지원

한국이 보유한 세계유산의 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세계유산 홍보 지원,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 신규 등재유산 홍보 지원, 세계유산 홍보영상 제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계유산 홍보영상 제작은 별도의 내내역사업으로 분리되어 있다. 세계유산 홍보지원 내내역사업은 2022년 69억원에서 2023년 38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세계유산 홍보영상 제작의 예산액은 2023년 기준 10억원이다.

세계유산 홍보지원 내내역사업은 자자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보조율이 50%이다. 실집행률은 85.3%이며, 국학진흥원 전시체험관 건립 사업의 설계 지연 등으로 사업 순연이 발생한 2018년(52.2%)과 예산의 증가가 있었던 2020년(70.9%)을 제외하면 높은 집행률을 보인다. 세계유산 홍보영상 제작 내내역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되었고 용역계약 체결 방식으로 집행되며 평균 실집행률은 97.8%이다.

3) 세계유산 일반관리⁴⁾

이 내역사업은 세계유산 관련 정책 운영과 유네스코 유산 등재 및 보존을 위한 연구 등에 필요한 경상경비 소요 사업이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을 기 보유하여 등록을 추진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잠정목록 연구 지원, 무형유산 지속가능발전 진흥 사업, 유네스코무형유산보호협약 종합성과평가 기반 역량강화 지원, 세계유산 관련 제도연구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한다. 경상경비 사업이므로 본 심층평가의 검토 대상은 아니다.

4) 2004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관련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은 민간보조 100%,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은 지자체에 50%, 무형유산 관리 역량 강화는 민간경상보조 100%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2022년의 예산은 약 14억원이고 7년간의 평균 실집행률은 85%이다. 2004년 이후 세계유산 16건, 잠정목록 13건, 인류무형문화유산 22건, 세계기록유산 18건이 등재되었다.

4)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센터 운영

이 사업은 센터 운영을 통해 전 세계의 유산(1,157건)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 수행을 지향하고 군함도, 사도광산 등 논쟁 중인 유산의 해석·설명에 대응하는 목적을 가진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이며, 해당 센터는 2018년에 유네스코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22년 1월에 개소하였다. 2020년 이후 계속되는 사업이며, 본 심층평가의 검토 대상이 아니다.

5) 세계문화 유산 관련 연구지원 사업들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사업에는 관련 연구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내역사업이 있다. 우선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 사업은 세계유산에 등재 가능성이 있는 잠정목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와 새롭게 등록을 추진 중인 경우 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국고 보조율은 50%이다. ‘무형유산관리 역량강화’ 사업은 무형유산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례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유네스코와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한다. ‘세계유산 관리체계 연구’는 세계유산특별법 제정에 따른 연구 용역비를 담고 있다. ‘유네스코 남북 공동등재 국제기구 지원’ 사업은 남북 공통유산의 등재 가능성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내역사업들은 본 심층평가의 검토 대상은 아니다.

바.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발생 시, 보수비용을 즉시 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보수 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는 등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다.

연평균 50여 건의 문화재 피해에 대한 긴급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100%로 지원한다. 추진 절차는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문화재의 긴급보수 검토 및 현지 조사를 거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그림 III-8] 문화재긴급보수사업 추진절차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23년 예산은 41.2억원이며, 2018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실집행률은 등락이 있으나, 최근 7년간 평균 실집행률이 37.7%로 저조하다.

〈표 III-11〉 문화재긴급보수사업 예산 및 집행

(단위: 백만원,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8월 현재
예산액(a)	8,320	4,579	4,121	4,121	4,121	4,121	4,121	3,710
실집행액(b)	4,107	2,109	739	1,292	1,322	2,523	1,021	303
실집행률(b/a)	49.4	46.7	17.9	31.4	32.1	61.3	24.8	8.6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사.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이 사업은 승례문 화재를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화재 등으로 인한 문화재 재난 상황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사업 대상을 목조문화재에서 동산문화재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소방, 방범을 위한 시설의 확충 등을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시설 설치 이후에는 노후 시설의 개선을 위한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나 경상보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고나 재난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예방하는 것이 직접 성과가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문화재를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여 유발되는 관광객 유입 효과 등도 고려할 수 있다.

〈표 III-12〉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과 예산

(단위: 백만원, %)

담당부처	내역사업명	예산		
		2021	2022	2023
국가유산청	문화재 재난방지 시설 구축	11,500	12,389	12,130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지원	8,608	8,608	10,132
	문화재 재난방지 시설 유지 관리 지원	3,374	3,374	3,374
	문화재 재난안전 활동	1,000	970	970
합계		24,482	25,341	26,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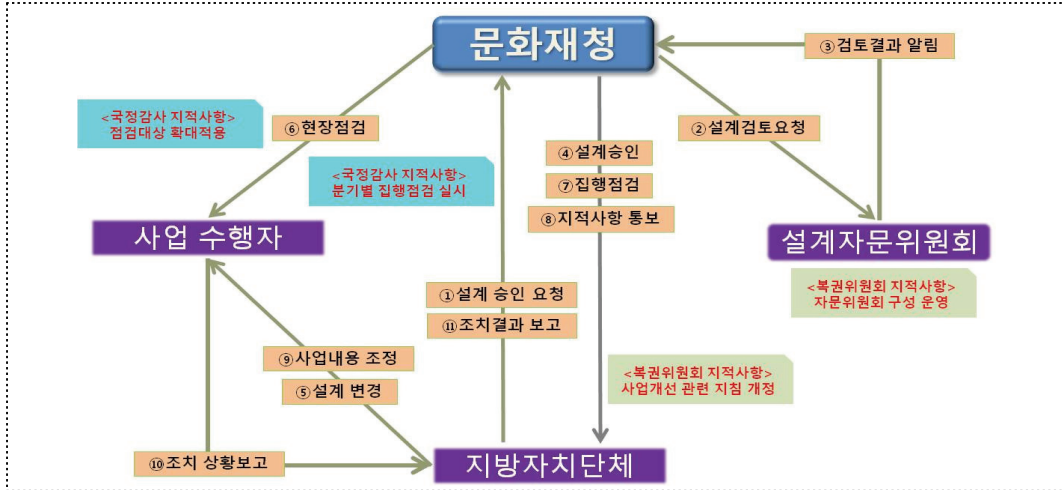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

1) 문화재 재난방지 시설 구축

해당 내역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국가 지정 및 등록 목조 문화재를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석조 및 동산 문화재 등 점차 대상이 확대하였다. 대상 문화재의 소방·방범·전기시설(ICT)·IoT 등 방재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후된 방재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이후 계속 사업으로써 보조율이 70%와 50%인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이다.

최근 7년간 평균 실집행률은 64.7%로 낮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집행이 저조한 이유로 공사 설계승인, 문화재 보수, 토지소유자와 협의 지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사 발주 시 낙찰률(87.7%)에 따른 낙찰차액의 불용 등도 집행률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20년에는 전년도에 65억원에서 128억원으로 크게 예산이 증액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139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III-9] 문화재 재난방재 시설구축 사업 추진절차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

2)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지원

이 사업의 목적은 평상시 중요 문화재 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비상시 초기대응을 통한 재난 피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는 것이다. 방재시설 운영·유지관리 및 문화재 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으로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방재전문 인원을 배치하는 대상은 국보·보물 목조문화재, 민속마을, 중요 재난피해 이력 현장 등이며, 경비원의 업무는 평소 순찰, 화재 등 재난 시 즉각 신고 및 초동 진화 등이다. 2008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보조율은 50%이다. 최근 7년간 평균 실적행률은 92.6%이며, 2023년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도의 86억원에서 101억원으로 증액된 바 있다.

3) 문화재 재난방지 시설 유지 관리 지원

화재에 취약한 국보, 보물 등 국가 지정 목조 문화재에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미 구축된 재난방지 시설(소방·방범·전기 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소방 영역에서 소방안전관리 선임·전문업체 관리용역, 기 구축된 설비의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며, 방범 영역에서 전문업체 관리용역, 기 구축된 설비의 유지보수 등을, 전기시설 관련하여 점검 수수료 지급, 기 구축된 설비의 유지보수 등을 실행하고 있다. 2010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이며 보조율은 70%이다.

최근 7년간 평균 실집행률 83.5%로 연도별 실집행률 간 차이는 크지 않다. 집행 부진 원인으로 유지관리 용역(전기, 소방, 방범)의 낙찰차액에 따른 불용, 재난방지시설의 고장을 대비한 예비비 등이 있다. 2023년 543개소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4) 문화재 재난안전 활동

이 내역사업의 사업목적은 문화재 방재교육 및 모니터링(방재인식 강화 및 방재시설 가동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방재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방재의 날 및 안전한국훈련 행사 개최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있다. 민간 경상보조 사업이며, 최근 7년간 평균 실집행률은 93.0%이다.

아. 공능방재시스템 구축

공능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네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에서는 공과 능에 속한 국가지정문화재 등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에 방재 인력과 시설을 배치하고 운영한다.

〈표 III-13〉 공능방재 시스템 구축사업과 예산

(단위: 백만원, %)

담당부처	내역사업명	예산		
		2021	2022	2023
국가유산청	방재인력 운영	10,191	11,193	11,691
국가유산청	방재시스템 운영	2,341	2,618	2,618
국가유산청	방재시스템 개선	2,157	1,422	1,222
국가유산청	소방시설 성능시험 및 개선	-	-	933
합계		14,689	15,233	16,464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

1) 방재인력 운영

이 내역사업의 목적은 공·능·유적기관의 국가지정문화재 등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방재 인력 배치 및 운영에 있다. 2005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며 국가유산청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다. 2016년에서 2022년 사이에 예산은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최근 7년간

평균 실적행률은 96.3%이다.

2) 방재시스템 운영유지

사업의 목적은 궁·능·유적기관의 국가 지정문화재 등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방재시스템 운영 및 유지이다. 2005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2016년 이후 예산액에는 큰 변동이 없으며 2023년 예산은 약 26억원이다. 최근 7년간 평균 실적행률은 93.9%이다.

3) 방재시스템 개선

사업목적은 궁·능·유적기관의 방재시스템 개선, 보안을 통해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제고하는 것이다. 2005년부터 계속된 사업이며 2020년 예산액이 44억원까지 이르렀다 감소하여 2023년 예산은 약 12억원이다. 2018년 이후의 평균 실적행률은 98.1%이다.

4) 소방시설 성능시험 및 개선

사업목적은 궁·능·유적기관의 노후 소방시설 성능시험 및 설비 개선을 통해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람객 안전을 제고하는 것으로 궁능에 설치된 노후 소방시설에 대한 성능시험 및 설비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3에 신설된 사업으로 약 9억 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3. 평가 필요성 분석

가. 평가 필요성: 내·외부 지적사항

이하에서는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의 평가 필요성을 예산 측면의 중요성, 지금까지의 평가 상황, 집행률, 그리고 국회, 감사원 등의 지적 등을 통해서 파악한다.

첫째, 이 사업군에 속하는 사업 중 국가유산청 담당 사업의 예산규모는 2023년 기준 약 5,900억원으로 국가유산청 전체 예산의 50.0%를 차지한다. 그만큼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조사·연구 및 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대통령령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 3조)하는 국가유산청 전체의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산 측면의 가장 비중이 높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1962년부터 시작된 이래로 비교적 긴 정책 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술적 연구로 개별적인 문화재에 대해서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연구들은 적지 않으나 정부가 행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 보수, 정비를 위한 재정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포괄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⁵⁾

또한 이 사업군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세부사업들별로 효과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밝히고 그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연구도 찾기 어렵다. 이 평가에서는 아래에서 언급하는 문제점들을 포함하여 세부사업 단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 평가대상 주제는 IV장 ‘3절 평가모형 및 평가방법’에서 상술할 것이다.

둘째, 이 사업군에 속하는 많은 세부사업들의 집행률이 만성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예산 규모 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경우 실질 집행률이 75%에 그치고 있으며,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도 최근 5개년 평균 실질 집행률이 34% 수준에 불과하다. ‘고도보존 및 육성’ 사업,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도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국가유산청은 문화재 보수 작업의 특성상 장기간 소요, 지자체 매칭 예산의 미편성 등을 사유로 들고 있다. 과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이런 요인들에 의한 것인지, 또는 이 사업군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충분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은 아니지를 점검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회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해당 사업군에 속하는 사업의 지원 범위, 대상 선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우선, 국회예산정책처는 결산 분석을 통해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범위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2017년 및 2018년 분석에서 총액계상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풍납동 토성정비사업, 고도보존육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별도 사업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해당 지적사항은 예산편성에 반영되어 대상이 분명한 사업들 몇 가지는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분리되었다. 그러한 정비가 적절한지,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보수정비와 연관성이 낮은 사업, 예컨대 탐방로 정비, 관람편의시설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2018년 결산에 대한 위원회별 분석보고서에서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에서 문화재 보수의 긴급성에 부

5) 2023년 11월 6일 기준 국내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KISS에 ‘문화재’와 ‘가치’를 제목에 모두 포함한 자료는 148건이지만 정부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으로 다룬 논문은 없으며 대부분이 개별적 문화재의 가치를 다룬 논문이다.

합하지 않게 예방적 측면의 사업을 선정하여 집행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국고 보조율이 최대 70%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달리, 기 발생한 훼손에 대한 긴급 대응을 위하여 100%의 국고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방적 사업을 긴급보수사업으로 지원한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에서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감사원은 2019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복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첫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음에도 “그 조사 결과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D~F 등급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원하지 않는 반면, 관할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경우 정기조사 등급이 양호한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수리 필요성보다 신청 여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2014년 7월 국가유산청이 마련한 ‘국고보조사업 예산 검토절차 개선 방안’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신청사업에 대하여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평가대상을 사업신청 건수 대비 비율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함으로써 일부 사업을 평가위원회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 평가방향

평가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행할 것이다.

효과성은 평가대상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할 것이다. 경제적 효과는 ‘개념적’으로는 보존가치와 활용가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 평가에서 정량적 성과평가는 비교적 단기에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여 측정 가능한 활용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한편, 보존가치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장기에 걸쳐 나타나므로 단기나 중기에 걸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보존가치를 활용가치로부터 명확히 분리하여 측정하기보다 현세대가 정부가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재정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불의사가 있는지를 가상가치평가법(CVM)을 통해서 측정한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동일한 문화재 보존 및 효과를 달성하면서 재원을 절감하거나, 동일한 재원을 투입하면서 더 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의 재설계 또는 재원의 재배분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이 사업군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국가유산청의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 또는 국가유산청과 다른 부처의 문화재 또는 지역경제 관련 재정사업 간의 중복이 없는지를 점검할 것이다.

IV. 평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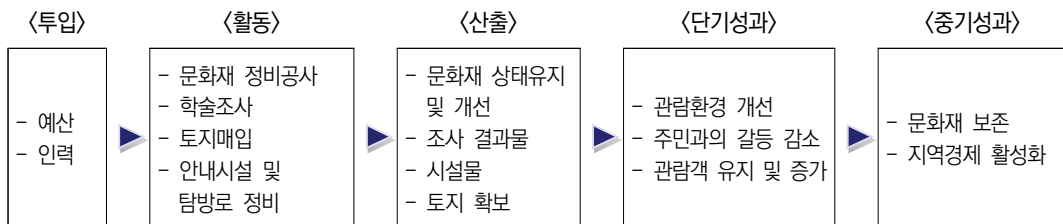
1. 사업의 논리모형 및 평가범위

재정사업 평가를 위해서는 그 사업의 투입에서부터 산출-성과-단기성과-중기성과에 이르는 논리적 연쇄의 파악이 필요하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논리 모형은 부처가 제시하는 정책 목표를 참고하되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 검토 결과와 평가의 주 관심사가 경제적 효과 평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가. 문화재 보수정비

이 사업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문화재 정비공사, 학술조사, 토지매입, 안내시설 정비 등의 활동을 행함으로써 문화재 상태를 유지하고 개선하고, 조사결과물, 시설물, 토지 확보 등의 산출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관람환경 개선, 갈등 감소, 관람객 유지 및 증가를 기대하고, 중기적으로는 문화재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를 얻고자 한다.

[그림 IV-1]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논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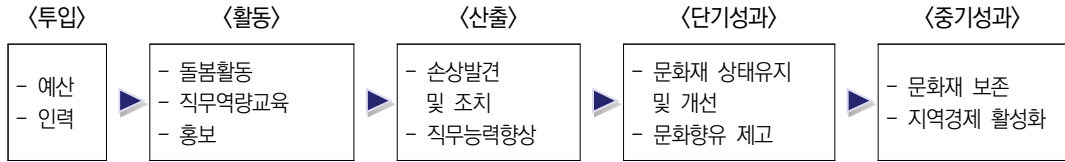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나. 문화재 돌봄사업

이 사업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문화재 돌봄활동, 직무역량 강화 활동, 홍보 등을 행함으로써 문화재 손상 조기 발견과 초동 조치, 그리고 직무능력이라는 산출을 얻고자 한

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문화재 상태를 유지 및 개선하고 지역민과 국민의 문화향유 제고를 달성하고, 중기적으로는 문화재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를 얻고자 한다.

[그림 IV-2] 문화재 돌봄사업 논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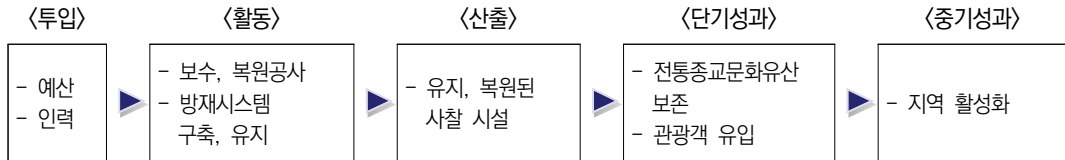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다.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이 사업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전통종교문화를 보수하고 복원하며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함으로써 사찰 시설을 유지 복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전통종교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광객 유입 효과를 거두고자 하며, 중기적으로는 지역 활성화라는 성과를 얻고자 한다.

[그림 IV-3] 전통종교 문화유산 사업 논리모형



자료: 저자 작성

라.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

이 사업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고도보존 관련 정책 운용 및 연구활동, 환경개선공사, 주민참여활동, 조사연구, 발굴 등을 행함으로써 조사결과, 학술지식 축적, 환경개선시설물 및 발굴물이라는 산출을 얻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고도의 매력을 높이고 주민생활을 개선하며, 중기적으로는 문화재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그림 IV-4] 고도보존 육성 사업 논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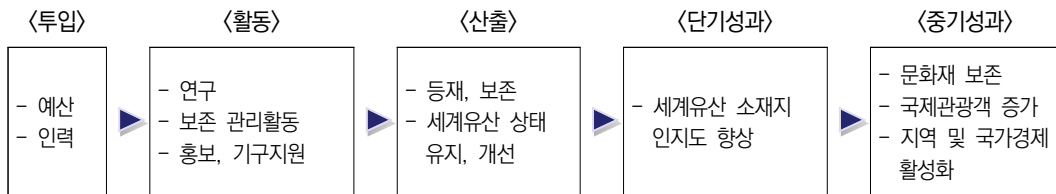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마.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이 사업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세계유산 관련 연구, 보존 관리 및 홍보 활동을 행하고 관련 국제기구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문화재의 세계유산 등재 및 세계유산의 보존상태를 유지하고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세계유산 소재지의 인지도를 향상하고 장기적으로는 문화재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국제관광객을 증가시키고 지역 및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그림 IV-5]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논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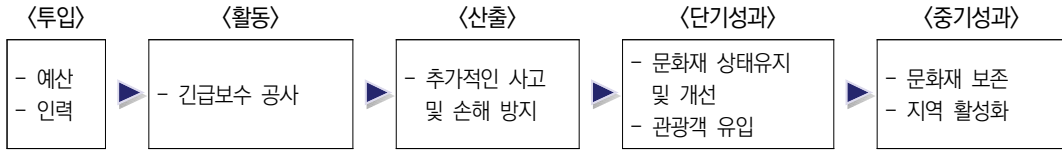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바.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이 사업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자연재해 등으로 손상된 문화재를 긴급 보수하여 추가적 사고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문화재 상태를 유지 및 개선하고 관광객 유입을 달성하고, 중기적으로는 문화재 보존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림 IV-6]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 논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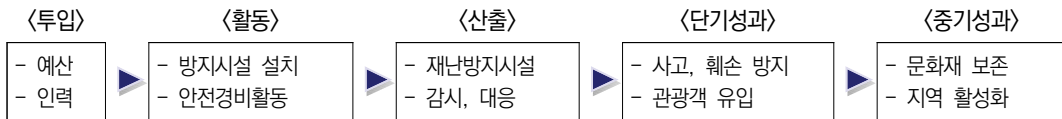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사.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이 사업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문화재 재난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경비 활동을 행함으로써 재난방지사설을 확보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나 사태를 감시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사고 및 훼손을 방지하고 관광객 유입을 달성하고, 중기적으로는 문화재 보존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그림 IV-7]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 논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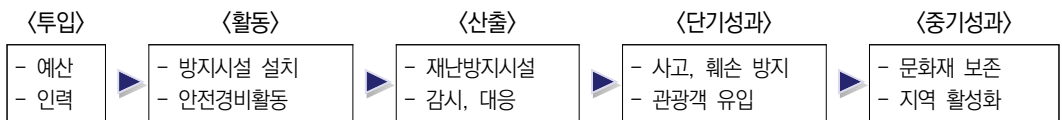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아. 궁능방재시스템 구축

이 사업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궁과 능에 재난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경비 활동을 행함으로써 재난방지사설을 확보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나 사태를 감시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사고 및 훼손을 방지하고 관광객 유입을 달성하고, 중기적으로는 문화재 보존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그림 IV-8] 궁능방재 시스템 사업 논리모형



자료: 저자 작성

이상에서 세부사업별로 제시한 논리모형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세부사업의 투입은 모두 예산과 인력으로 동일하다. 산출요소의 경우 문화재 보수관리 부문은 주로 문화재의 상태, 시설물 등이며 문화재 보존육성 부문은 조사결과, 학술지식, 발굴물, 등재 등으로 다양한 편이고, 문화재 재난방지 부문은 추가적 손해 방지 및 재난방시설 및 위험 요인에 대한 감시와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기적인 사업성과의 경우 모두 문화재의 보존과 지역 또는 국가 경제의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표 IV-1〉 세부사업별 논리모형(요약)

사업부문	세부사업	시작 연도	'23년 규모 (억원)	지원대상	투입 요소	산출요소	성과
문화재 보수관리	문화재 보수정비	1962	4,634	문화재소유자 지방자치단체	예산 인력	문화재상태 시설물 토지확보	문화재보존 지역경제활성화
	문화재 돌봄	2010	207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예산 인력	손상발견조치 직무능력향상	문화재보존 지역경제활성화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	1997	359	종교시설 지방자치단체	예산 인력	유지, 복원된 시설	문화재보존 지역경제활성화
문화재 보존육성	고도보존 및 육성	2014*	195	직접사업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예산 인력	조사결과 학술지식 시설물, 발굴물	문화재보존 지역경제활성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2004	398	직접사업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예산 인력	등재, 보존 유산상태	문화재보존 국가·지역 경제활성화
문화재 재난방지	문화재 긴급보수	2004	37	지방자치단체	예산 인력	추가적 사고, 손해 방지	문화재보존 지역경제활성화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2007	266	지방자치단체	예산 인력	재난방시설 감시, 대응	문화재보존 지역경제활성화
	궁능방재시스템 구축	2005	165	직접사업	예산 인력	재난방시설 감시, 대응	문화재보존 지역경제활성화

주: 내역사업에 따라서 연도가 다름
자료: 저자 작성

2. 평가유형 및 평가질문

결과에 대해서는 후술할 바와 같이 3개 사업부문별로 계량모형 추정을 통해서 중기적인 성과가 달성되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과정에 대해서는 사업의 계획과 집행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당초 계획대로 사업활동이 집행되었는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산출성과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 평가는 세부사업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들이 이질적일 경우에는 내역사업 단위로 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부처의 사업설명 문건과 실적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과 평가질문의 성격에 따라서 정성 또는 정량평가를 할 것이다.

〈표 IV-2〉 평가 대상 사업 단계별 평가질문과 평가유형

평가단계	평가질문	평가유형
결과평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중기성과가 달성되었는가?	계량분석
과정평가	사업의 계획과 집행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정성
	당초 계획대로 사업 활동이 집행되었는가?	정량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산출성과가 달성되었는가?	정성, 정량

자료: 저자 작성

3. 평가모형 및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크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누어진다. 정량평가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평가대상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활용가치 측정과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불의사 측정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이 중 지불의사, 즉 문화재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지출을 위해 현세대가 부담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가상가치평가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다른 한편, 문화재의 활용가치 측정을 위해서는 이중차분법을 통해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평가에 사용된 방법론을 설명하고 정성평가와 관련하여 세부사업별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할 것인지를 상술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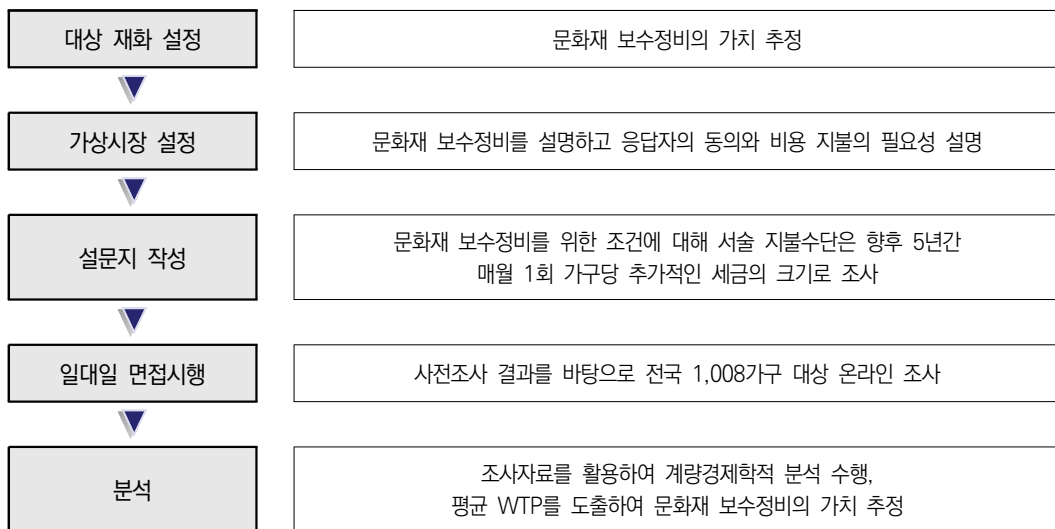
가. 정량평가 중 가상가치평가(CVM) 개요

1) 실증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 해양대기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자 한다. 미국 해양대기국에서 제시한 조건부 가

치측정법 연구의 주요 지침에 대한 본 연구의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러 설문조사 방법 중에서 해양대기국의 지침에 따라 일대일 개별적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과대 측정될 가능성이 있는 수용의사(WTA: willingness to accept)보다는 지불의사(WTP: willingness to pay)를 측정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제시값에 대해서 응답자가 “예/아니오”로 응답할 수 있는 유인일치적인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질문을 수행하였다. 또한 사업에 의한 편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묘사하였으며, 제시 값에 대해서 응답자의 소득 제한이나 소비의 제약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제로 적용한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연구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9] 문화재 보수정비의 조건부 가치 추정 연구 절차



자료: 저자 작성

조건부 가치측정법에 따른 조사는 먼저 응답대상자들에게 제공할 가상시장(contingent market), 즉 가상적 상황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설문 작성 절차는 다음 그림에 도시되어 있으며, 각각의 절차에 대해 본 연구에서 행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대상 재화 선정 및 시나리오 작성

설문조사는 문화재 보수정비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 조사,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설문, 사회경제적 질문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본격적인 설문조사 단계인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지불의사 설문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 재화와 이에 대한 조건부 시장을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불의사에 관한 핵심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응답자에게 조건부 시장의 일반적 상황을 제시하면서, 대상 재화에 대한 인지도와 견해를 유도하였고, 그다음 단계로 문화재 보수정비의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⁶⁾

나) 지불수단 선택

조건부 시장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응답자가 밝히고자 하는 지불의사를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불수단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실성 있는 지불수단으로 시장을 설정하는 것은 응답자가 진정한 가치를 밝힐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 가상적 상황을 좀 더 현실화시킨다는 점, 또 의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밀접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정 지불수단을 결정할 때는, 첫째, 평가하고자 하는 재화와의 관련 정도, 둘째, 응답자의 결정을 단순화할 수 있는 정도, 셋째, 여러 가지 편의를 제거할 수 있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본 평가에서는 가구당 추가적인 세금을 통한 문화재 보수정비라는 지불수단을 제시하였으며, 지불 방식은 향후 5년간 매월 지불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다) 지불의사 유도방법

본 평가는 지불의사 유도 방법으로 응답자의 대답을 용이하게 하여 응답률을 높이고, 출발점 편이나 설문조사원 편이에 의한 영향이 적으며, 비합리적 지불의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면서도 응답자의 전략적 행위를 줄일 수 있는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하였다.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단일경계, 이중경계, 1.5경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평가에서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하되, 분석은 단일경계 양분선택모형을 활용하였다.

한 번의 질문만 하는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모형은 응답이 쉬운 반면에 통계적으로 효용성이 낮으므로 많은 표본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두 번에 걸쳐 지불금액이 제시되는데, 두 번째 제시금액은 첫 번째 제시금액에 대해 '예'라고 대답한 경우 첫 번째 제시금액의 2배가 되며,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첫 번째 제시금액의

6) 부록 1에 보인 바와 같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군을 시행하는 부처,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목표, 그리고 세부 사업 명을 설문대상에게 제시하였다. 통상적으로 WTP 측정을 위해서는 비시장재에 대한 이미지를 설문자가 구체적으로 갖도록 보기카드를 시각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이는 평가대상 사업의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 그러한 가운데 구체적 사례를 보여주는 시각적 자료는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 전체에 대한 지불의사를 생각하게 하는 데에 오히려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1/2이 된다. 이중경계 모형에서 응답자들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본인의 의사가 ‘아니오’에도 설문주체의 주제나 면접원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라고 응답하는 승락의 문제 (compliance problem)와 반복된 질문에 귀찮아서 무조건 ‘아니오’를 응답하는 거부 문제(reject problem)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즉, 이중경계모형은 단일경계모형에 비해 통계적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편의를 초래하는 등 지불의사가 다소 왜곡되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2) 추정모형

추정모형을 설명함에 앞서 본 평가 수행에 참고한 ‘2015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집’에 따른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추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 1원도 지불의사가 없는 지불거부자를 식별한다. 두 번째, 지불거부자를 제외한 응답자료만을 대상으로 WTP를 추정한다. 세 번째, 추정 모형에서 로그함수 형태를 적용하며, WTP 대푯값은 median WTP를 활용한다. 네 번째, 추정된 median WTP에 다시 (1-지불거부율), 즉 ((전체 응답자수-지불거부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를 곱해 최종적인 대푯값 WTP를 추정한다.

가) 확률효용모형

문화재 보수정비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편익을 추정하기 위하여 Hanemann의 확률효용모형을 사용하였다. Hanemann이 제시한 확률효용모형은 예산 제약하에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고전학파의 경제이론에 근거하고 있어 이론적 정치성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응답자가 자신의 효용함수를 정확하게 알고, 주어진 화폐소득과 개인의 특성들에 근거하여 공공재의 수준 변화에 대해 느끼는 효용은 간접효용함수($v(j, y; s)$, y : 소득, s : 개인의 관찰 가능한 특성들)로 표현된다. 그러나 연구자에게는 응답자가 문화재 보수정비와 같은 공공서비스 공급수준의 변화를 선택 또는 거부하는데 있어 관찰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확률적 요소를 갖게 된다.

$$u(j, y; s) = v(j, y; s) + \epsilon_j, \quad j = 0, 1 \quad (1)$$

응답자가 “문화재 보수정비를 건립하기 위해 A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응답하는 경우,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u(1, y - A; s) \geq u(0, y; s) \quad (1-1)$$

즉, 사업시행 이전에 누렸던 효용보다 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으로 얻는 효용이 더 커짐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v(1, y - A; s) + \epsilon_1 \geq v(0, y; s) + \epsilon_0$ 로 나타낼 수 있고, 변형하면 식(2)와 같은 효용격차함수로 나타난다.

$$\Delta v = v(1, y - A; s) - v(0, y; s) \geq \epsilon_0 - \epsilon_1 = \eta \quad (2)$$

여기서 1과 0은 각각 사업 시행 후와 시행 전의 상태를 나타내며, η 는 $\epsilon_0 - \epsilon_1$ 이며 효용격차의 분포를 정형화하기 위한 확률변수(stochastic variable)이다. 각 응답자는 사업시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간접효용의 증가분(Δv)이 양(+)이면 “예”라고 답하고 제시금액의 지불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개인의 효용을 증가시킬 것이므로 응답자가 “예” 응답을 할 확률은 다음 식(3)과 같다.

$$\Pr(\text{Yes}) = \Pr(\Delta v \geq \eta) = F_\eta(\Delta v) \quad (3)$$

여기서 $F_\eta(\cdot)$ 는 확률변수 η 의 누적분포함수이다. 응답자가 실제로 지불의사질문에 대해 “예”라는 응답을 하였다면 확률변수인 WTP, 즉 C 에 대하여 $\Pr(\text{Yes}) = \Pr(A \leq C) = 1 - G_C(A)$ 임을 의미하므로 η 의 누적분포함수는 다음 식(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G_C(\cdot)$ 는 확률변수 C 의 누적분포함수이며, A 는 역시 제시된 금액(bid price)이다.

$$F_\eta(\Delta v) = 1 - G_C(A) \quad (4)$$

Hanemann(1984)에 의하면 이 같은 결과는 확률효용이론(Random Utility Theory)의 차원에서 효용극대화 응답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 WTP 추정모형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실증연구에서 응답자들에게 미리 설정된 제시금액에 대해 지불의사가 있는지 예/아니오를 묻는 양분선택형 질문법이 널리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단일경계 양분선택형과 이중경계 양분선택형으로 나뉜다.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측정 모형은 한 번에 걸쳐 제시된 금액에 대하여 ‘예’, ‘아니오’의 응답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WTP 질문으로부터 얻어진 각 응답자의 이변량 응답(binary response)은 개인의 효용극대화(utility maximization)를 위한 선택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평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개선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12)에 근거하여 단일경계모형을 적용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여 부득이 이중경계모형을 적용하였다.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은 응답자에게 본 사업으로 기대되는 편익의 변화를 위한 제시금액의 지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묻게 된다. 이때 효용극대화 문제에 직면한 각 응답자 $i = 1, \dots, N$ 는 제시금액(A_i)을 지불할 지 여부에 대해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하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시금액에 대하여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이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A_i^H)에 대하여 지불의사를 묻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이의 1/2에 해당하는 금액(A_i^L)에 대하여 지불의사를 묻게 된다.

$$I^{YY} = 1 \text{ (} i\text{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예-예' 일 경우)} \quad (5)$$

$$I^{YN} = 1 \text{ (} i\text{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예-아니오' 일 경우)}$$

$$I^{NY} = 1 \text{ (} i\text{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예' 일 경우)}$$

$$I^{NN} = 0 \text{ (} i\text{번째 응답자의 응답이 '아니오-아니오' 일 경우)}$$

위 식의 (5)는 괄호안의 내용이 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이며,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응답자 N 가구의 표본을 가정할 경우, i 번째 응답자의 응답결과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로그-우도함수를 구성할 수 있다.

$$\ln L = \sum_{i=1}^N \left\{ \begin{aligned} &I_i^{YY} \ln [1 - G_C(A_i^H)] + I_i^{YN} \ln [G_C(A_i^H) - G_C(A_i)] \\ &+ I_i^{NY} \ln [G_C(A_i) - G_C(A_i^L)] + I_i^{NN} \ln G_C(A_i^L) \end{aligned} \right\} \quad (6)$$

식(6)의 $G_c(\cdot)$ 를 선행연구들의 관례를 따라 로지스틱분포를 가정하면 $G_c(A) = [1 + \exp(\alpha - \beta \ln A)]^{-1}$ 로 정형화할 수 있다. 그리고 WTP 중앙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TP = \exp\left(\frac{\alpha}{\beta}\right) \quad (7)$$

여기서 a 는 상수이고, b 는 제시금액에 대한 계수이다. 또한 최종적인 WTP는 추정된 median WTP에 다시 (1-지불거부율), 즉 ((전체 응답자수-지불거부 응답자수)/전체 응답자수)를 곱해 산정한다.

나. 정량평가 중 경제적 효과 평가 방법

1) 경제적 효과 평가 개요

가)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의 효과

앞서 살펴보았듯이,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은 크게 보수관리 부문, 보존육성 부문 그리고 재난방재 사업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수관리 부문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문화재 돌봄(문화재기금) 사업, 그리고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문화부)을 포함하고 있다. 보존육성 부문은 고도보존 및 육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재난방재 부문은 문화재 긴급보수(문화재기금), 문화재 재난안전(문화재기금), 공능방재시스템(문화재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재정사업의 효과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창출되는 ‘부가가치’(value-added)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효과는 ‘그 사업에 참여한 참여자(기업이나 지역)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성과와 만약 동일한 참여자가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성과와의 차이’를 말한다(Holland, 1986; Heckman et al., 1997; Angrist & Krueger, 1999). 이와 같이 정의되는 ‘부가가치’로서 효과의 개념은 ‘반사실’(counterfactual)의 개

념에 기초하는데, 여기서 반사실이라 함은 사업의 참여자가 '만약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얻었을 잠재적인 성과(potential outcome)'를 말하며, 반사실과 실제 성과와 차이가 효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군의 효과란 해당 지자체에 동 사업군의 재정 투입을 했을 경우의 경제 성과와 만약 재정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의 경제 성과와 차이로 볼 수 있다.

문화재 유지보수의 목적은 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하는데 있다. 따라서 재정사업으로서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군의 목적은 크게 보존과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보존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추진 후 평가 가능한 목표이고 활용은 상대적으로 단기에 나타나는 효과이다. 다만, 개별 문화재에 국한하여 보존과 활용을 측정할 수도 있지만, 어떤 문화재에 대한 보수유지 사업의 경제 효과가 해당 문화재뿐만 아니라 소재하고 있는 지역 전체에 영향(spillover effect)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제 효과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심층평가는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의 효과를 문화재의 보존보다는 지역의 경제적 성과에 초점을 둔다. 즉 문화재의 유지보수에 따른 활용에 중점을 두고 개별 문화재가 아닌 지역수준으로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동 사업의 경제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존의 성과가 없다는 의미가 아님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나) 내역사업의 경제적 성과의 측정

한편, 문화재 유지보수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를 결정해야 한다. 성과지표란 사업이 실제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성과지표는 몇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재정사업심층평가 지침, KDI; HM Treasury et al., 2001).

첫째, 바람직한 성과지표는 해당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한다(관련성, relevance). 둘째, 성과지표는 바람직하지 않거나 낭비적인 행위를 촉발하지 말아야 한다(왜곡된 유인(perverse incentives)의 회피). 셋째, 성과지표는 해당 조직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과를 측정해야 하며, 성과의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영향파악 가능성, attributable). 넷째, 자료가 일관된 방식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쉽게 이해되고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명확성, well-defined). 다섯째, 성과지표는 빈번하게 측정됨으로써 사업 진행상황의 파악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빠른 시간 내에 생산됨으로써 자료로서의 유용성을 가져야 한다(적시성, timely). 여섯째, 성과지표는 당초 원하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야 하며, 성과의 변화를 민감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신뢰성, reliable). 일곱째, 성과지표는 현재의 성과를 과거의 성과나 다른 사업의 성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비교 가능성, comparable). 마지막으로 적절한 과정을 거쳐 성과지표가 측정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분명한 근거자료를 구비해야 한다(검증 가능성, verifiable).

앞서 설명하듯이 본 연구는 개별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가 소재한 시군구(region) 수준에서 분석을 한다. 그 이유는 개별 문화재 유지보수액은 시군구에 포함된 지점(site)으로 사업 예산의 효과가 해당 시군구 단위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spillover effect).

시군구 단위에서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데 관광객 수는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측정지표이다. 그러나 관광객은 지역민이 아니며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지 않는 등 몇 가지 이유로 인해, 관광객 수는 성과지표로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첫째, 관광객은 도시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돈을 쓰지만 세금을 내지 않아 지방세 확보에 기여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 정부는 교육, 인프라, 공공 안전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객 수입에 의존할 수 없다. 둘째, 과도한 관광객 증가는 지역 주민과 기업을 대체할 수 있다. 어떤 지역이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면 임대료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여 지역 주민과 기업이 머물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의 다양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관광객은 도시의 자원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많은 관광객은 교통 시스템과 공공장소 등 도시의 인프라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는 교통 혼잡, 공해 및 기타 문제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관광객 수가 도시 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는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해 인구 과밀, 오염, 도시의 역사적인 건물 훼손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도시에서 생활하고 일하기가 어려워졌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단기 임대 주택의 증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를 옮기고 저렴한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는 HBO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으나, 도시 인프라에 부담을 주고 상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 내 재정사업의 특정 목표가 관광객 유치 증가라 할지라도 이 지표는 지역의 궁극적인 성장지표(고용, 인적자본, 소득 등)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양날의

칼이므로 궁극적인 성과지표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용과 지역 소득은 도시의 장기적인 경제 건전성을 나타내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이다. 고용 시장이 강하고 임금 수준이 높은 도시는 지역 세수에 기여하고 지역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주민을 유치하고 유지한다. 이는 더 큰 경제 성장과 번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이러한 점에서 Glaeser(2011)의 주장은 많은 도시가 과잉 관광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특히 적절하다. 도시 계획가와 정책 입안자는 고용과 지역 소득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관광객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객은 지역민이 아니고 지역 경제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 수보다는 지역의 인적자본, 고용, 그리고 소득 측면에서 지역의 경제 성장을 분석해야 한다(Glaeser, 2011; 박상곤, 2023).

기존 지역 정책에 대한 경제적 성과는 주로 사업체 수, 고용량 및 실업률, 빈곤율 및 소득, 주택 가격이나 임대료, 그리고 인구 구성의 변화 및 인적 자본 수준 등이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량(Neumark and Kolko, 2010; Ham et al., 2011; Freedman, 2013; Busso, Gregory, and Kline, 2013), 인구 대비 고용률(Hanson, 2009; Ham et al., 2011), 실업률(Ham et al., 2011), 사업체 수(Neumark and Kolko, 2010; Busso, Gregory, and Kline, 2013) 등을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빈곤율(Hanson, 2009; Reynolds and Rohlin, 2015), 평균(중위) 소득(Ham et al., 2011; Busso, Gregory, and Kline, 2013; Reynolds and Rohlin, 2015) 또한 실증 분석의 주요 성과 변수로 사용된다. 이와 더불어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지역의 평균(중위) 주택 가격이나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도 사용되고 있다.(Hanson, 2009; Freedman, 2013; Busso, Gregory, and Kline, 2013; Reynolds and Rohlin, 2015). 뿐만 아니라 인구 구성의 변화 및 인적 자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고학력자의 비중(25세 이상 대졸자 인구 비중) 등의 결과 변수도 사용되고 있다(Reynolds and Rohlin, 2015).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산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체 수가 늘어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사업체 수는 변하지 않은 채로 내부적인 활성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만약 지역 간에 산업구조가 상이하면 이들을 이용하여 지역 간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동일 지역 내에서 시간에 걸친 변화를 고려할 때에도, 만약 시간에 걸쳐 산업구조가 변한다면 사업체 수는 지역경제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체 수 변수보다는 소득 등 양적인 단위로 경제 상태를 측정하면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한편, 사업으로 인한 인적자본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업 추진으로 인해 유입된 관광객들은 관광투자를 만들고 관광투자에 따른 지역 내 편의시설 확충은 일상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고도의 숙련된 근로자를 지역으로 유입시킨다는 증거도 있다(Carlino and Saiz, 2019). 따라서 지역 내 다양한 어메니티(관광객 편의시설) 투자가 고속화된 근로자를 유인할 수 있는지(Glaeser, 2011)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성과지표들 중에서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의 경제적 성과는 지역소득, 고용 그리고 인적자원으로 정하고 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지역소득은 인공위성 조도와 전력판매량을 통해 분석하고, 고용은 지역의 취업자 수로, 인적자원은 고학력자의 비중(25세 이상 대졸자 인구 비중)으로 분석한다.

2) 식별전략: 이중차분법을 활용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군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평가모형은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으로,⁷⁾ 이 방법은 처치집단의 처치 전후 차분 값과 통제집단의 처치 전후 차분 값을 한 번 더 차분하는 방법을 통해 인과효과 추정치를 계산한다. 이중차분법에 대한 구체적인 국내 안내서로 강창희·박상곤·이환웅 著(2023) 안내서를 참조할 수 있는데,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Card(1990)와 Card and Krueger(1994)에 의해 이중차분법의 아이디어가 경제학계에 소개된 이후, 이중차분법은 지난 30여 년 동안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 온 인과효과 추정법이다. 이중차분법은 처치 집단의 차분 값과 통제집단의 차분 값을 단순히 한 번 더 차분하는 매우 직관적이고 간단한 추정법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매우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이중차분법은 경제학계를 넘어 제반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매우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0년 이전까지 이중차분법은 크게 단순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었다. 단순형 이중차분법은 (2×2) 표에 기반해 수치들을 실제로 이중차분함으로써 처치의 인과효과를 구하는 추정법이다. 일반형 이중차분법은 집단이 3개 이상, 시점이 3개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이중차분법으로서, 수치들을 실제로 이중 차분하지는 않고 패널 자료에 대해 2원

7) 아래 일반형 이중차분법에 대한 설명에서 밝히듯이 이 평가의 데이터 구조에서는 패널 이원고정효과 모형과 일치하게 된다.

고정효과(Two-way fixed effects, TWFE) 모형을 적용해 인과효과를 구하는 추정법이다. 통상적으로 이 추정법은 패널 고정효과 추정법이라는 이름 대신 일반형 이중차분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다. 2020년대 초반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기존 2개 유형의 이중차분법에 강건형이라는 제3의 유형이 추가되었다. 최근 이중차분법 연구자들은 처치가 집단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되어 지속되는 경우(순차 지속형, Staggered adoption) 패널 2원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구한 처치효과 추정치가 인과효과를 적절히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강건형 이중차분법은 일반형 이중차분법의 이와 같은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추정법이다. 이중차분법이 적용되는 상황은 대체로 단순형보다는 일반형의 경우가 훨씬 더 흔하기 때문에, 2원 고정효과 모형의 결함 가능성은 연구자들에게 이중차분법의 적용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을 환기시킨다. 이원 고정효과 모형이 부적절한 상황에서는 강건형 이중차분법을 사용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강건형 이중차분법은 이중차분법의 표준 모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강창희·박상곤·이환웅, 2023).

본 심층평가는 기존의 단순형, 일반형과 더불어 최근 개발되고 있는 강건형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군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가) 단순형 이중차분법 모형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군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이중차분법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가장 단순한 두 기간 두 지역에 대한 이중차분 추정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별도의 인용이 없는 한 여기서는 강창희 외(2023)의 안내서를 기반으로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군에 대한 이중차분법 모형을 응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우리는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군의 효과를 개별 문화재 수준이 아닌 시군구 지역수준에서 추정하기 때문에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이 추진된 지역을 처치지역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을 통제지역이라 가정한다.

$$Y_{it} = \beta_0 + \delta_0 Post_t + \beta_1 TR_i + \delta_1 (TR_i \cdot Post_t) + u_{it} \quad (8)$$

위 식에서 Y_{it} 는 지역 i 의 시점 t 현재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군의 성과변수 값을 표시한다. 우리의 평가에서 지역 i 는 시군구($i = 1, 2, \dots, N$)이고, 시점 t 는 2개 조사 시점($t = 1, 2$)을 의미한다. $Post_t$ 는 시점 t 가 처치(즉 사업 추진) 이전 시점이면 0, 이후 시점이면 1을

취하는 더미변수이다. TR_i 는 지역 i 가 처치를 받았으면 1, 처치를 받지 않았으면 0을 취하는 더미변수이다. $TR_i \cdot Post_t$ 는 교차항으로서 $TR_i = 1$ 과 $Post_t = 1$ 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만 1을 취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0을 취하는 더미변수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TR_i = 1$ 이고 $Post_t = 1$ 이면 $TR_i \cdot Post_t = 1$ 이고 나머지 조합은 모두 0일 것이다. 즉 처치가 0과 1을 갖는 조합에서는 곱이므로 표시할 수 있지만 처치가 사업비와 같은 금액일 경우에는 $TR_i = 1$ 이고 $Post_t = 1$ 이면 $TR_i \cdot Post_t = \text{“사업비”}$ 가 된다.

지역 i 의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 투입이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과 같이 무작위로 결정되어 TR_i 와 $Post_t$ 가 모두 외생성을 만족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의 관계가 성립한다. 여기서 CT 는 통제지역을 의미한다.

- Ⓐ $M_{TR,1} \equiv E[Y_{it} \mid TR_i = 1, Post_t = 1] = \beta_0 + \delta_0 + \beta_1 + \delta_1$
- Ⓑ $M_{TR,0} \equiv E[Y_{it} \mid TR_i = 1, Post_t = 0] = \beta_0 + \beta_1$
- Ⓒ $M_{CT,1} \equiv E[Y_{it} \mid TR_i = 0, Post_t = 1] = \beta_0 + \delta_0$
- Ⓓ $M_{CT,0} \equiv E[Y_{it} \mid TR_i = 0, Post_t = 0] = \beta_0$
- Ⓔ $DID = (M_{TR,1} - M_{TR,0}) - (M_{CT,1} - M_{CT,0}) = (\delta_0 + \delta_1) - \delta_0 = \delta_1$

이중차분 모수는 $(M_{TR,1} - M_{TR,0}) - (M_{CT,1} - M_{CT,0})$ 이고 이는 식 (8)의 δ_1 에 해당하며, 즉 회귀분석을 이용해 식 (8)을 추정하는 경우 OLS 추정치 $\hat{\delta}_1$ 이 바로 이중차분 추정치이다. 이중차분 추정치는 ‘처치집단에 미치는 평균 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s on the Treated, ATT)’의 추정치로서 해석된다.

식 (8)에서 설명변수 TR_i 와 $Post_t$ 가 모두 더미변수인 경우, $\hat{\delta}_1 = [(\bar{Y}_{TR,1} - \bar{Y}_{TR,0}) - (\bar{Y}_{CTA,1} - \bar{Y}_{CT,0})]$ 이라는 산술적 관계가 성립한다.

- Ⓐ $\delta_0 = M_{TR,1} - M_{CT,0}$
- Ⓑ $\beta_1 = M_{TR,0} - M_{CT,0}$
- Ⓒ $\beta_0 = M_{TR,0}$

따라서 δ_0 는 시간효과의 모수이고, β_1 는 지역효과의 모수이고, β_0 는 $M_{CT,0}$ 이다.

식 (9)와 같이 식 (8)에 개체 특성변수 벡터 X_{i0} 를 추가하더라도 δ_0 , β_0 , β_1 의 해석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δ_1 은 여전히 이중차분 모수로 해석할 수 있다.

$$Y_{it} = \beta_0 + \delta_0 Post_t + \beta_1 TR_i + \delta_1 (TR_i \cdot Post_t) + \beta_2 X_{i0} + \epsilon_{it} \quad (9)$$

식 (9)에서 사용한 개체 특성변수 벡터 X_{i0} 은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군 사업이 적용되기 “이전” 시점에 측정된 값을 사용한다. 그에 따라 X_{i0} 은 시점 t 에 따라 변동하지 않고, 처치 적용 이후 시점에 측정된 값들은 처치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X_{it} 를 사용하지 않고 X_{i0} 를 사용한다.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군 사업들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두 지역이 아닌 많은 시군구에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위의 단순형 이중차분법을 일반형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나) 일반형 이중차분법 모형

이제 처치 더미변수 d_{it} 를 $d_{it} \equiv TR_i \cdot Post_t$ 와 같이 정의하고, d_{it} 는 $TR_i = 1$ 와 $Post_t = 1$ 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에만 1을 취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0을 취한다. 여기서 식 (8)은 다음 식과 같이 쓸 수 있다.

$$Y_{it} = \beta_0 + \delta_0 Post_t + \beta_1 TR_i + \delta_1 d_{it} + u_{it} \quad (10)$$

식 (10)은 식 (8)을 다른 변수로 표현한 식에 불과하므로, δ_1 은 여전히 이중차분 모수 $\delta_1 = (M_{TR,1} - M_{TR,0}) - (M_{CT,1} - M_{CT,0})$ 이다.

식 (10)은 지역이 2개(TR, CT)이고 시점이 2개($t = 1, 2$)인 경우에 대해 정의되었다. 이 식 (10)을 지역(또는 집단)이 3개 이상이고 시점이 3개 이상인 경우로까지 확장하면 다음과 같다.

$$Y_{it} = \beta_0 + \sum_{s=1}^T \delta_0^s \cdot 1(t = s) + \sum_{g=1}^N \beta_1^g \cdot 1(G_i = g) + \delta_1 d_{it} + u_{it} \quad (11)$$

이 식에서 $1(\cdot)$ 는 지표함수로서 괄호 안이 참이면 1, 거짓이면 0을 취하며, $1(t=s)$ 는 시점 s 에 따라 T 개의 더미변수를 생성하고, δ_0^s ($s=1, \dots, T$)는 시점 0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점 효과 모수이다. $1(G_i=g)$ 는 $g=1, \dots, N$ 에 따라 N 개의 더미변수를 생성하고, β_1^g ($g=1, \dots, N$)는 지역 1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역 효과 모수이다.

식 (8) 혹은 식 (9)로 표현되는 이중차분법은 ‘단순형’이라고 부르고, 식 (11)로 표현되는 이중차분법은 ‘일반형’이라고 부른다. 식 (11)의 추정에서는 실제로 이중차분을 하지는 않지만, 식 (11)의 확장형이라는 의미에서 식 (11)을 (일반형) 이중차분 추정식이라고도 부른다. 전통적인 통계모형의 용어를 사용하면, 식 (11)은 시점 고정효과와 지역 고정효과를 포함하고 있는 이원 고정효과(Two-way Fixed Effects, TWFE) 모형이다(강창희 외, 2023).

만약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군 사업의 처치 자격 및 처치가 지역별로 외생적인 방식으로 순차 적용된 경우, 시점 고정효과, 지역 고정효과, d_{it} 는 모두 외생성을 만족한다면, 식 (11)의 핵심 모수 δ_1 은 아래와 같이 ATT로서 해석될 수 있다.

$$\begin{aligned} \delta_1 &= E[Y_{it} \mid d_{it} = 1] - E[Y_{it} \mid d_{it} = 0] \\ &= E[Y_{it}(1) \mid d_{it} = 1] - E[Y_{it}(0) \mid d_{it} = 0] \\ &= E[Y_{it}(1) - Y_{it}(0) \mid d_{it} = 1] + \{E[Y_{it}(0) \mid d_{it} = 1] - E[Y_{it}(0) \mid d_{it} = 0]\} \\ &= ATT \end{aligned}$$

식 (11)을 좀 더 간단한 일반형 이중차분법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Y_{it} = \alpha + \tau_t + g_i + \gamma d_{it} + u_{it} \quad (12)$$

위 식에서 τ_t 는 (시점 0을 기준으로 한) 시점 고정효과($t=1, 2, \dots, T$), g_i 는 (지역 1을 기준으로 한) 지역 고정효과($i=2, 3, \dots, G$)를 표시한다. 이 식에서 평균 처치효과 모수는 γ 이다. 식 (12)는 통상적인 패널 고정효과 추정법을 적용해 추정할 수 있다. 식 (12)의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군 처치변수 d_{it} 는 처치 자격 및 처치 적용 여부를 표시하는 더미변수이다. 그러나 d_{it} 가 반드시 더미변수일 필요는 없다. d_{it} 가 연속형 변수로서 처치 강도, 즉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군 사업비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gamma = \Delta E(Y_{it}) / \Delta d_{it}$ 이고 γ 은

처치 강도, 즉 사업비 d_{it} 가 1단위 증가할 때 변동하는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군의 성과에 대한 기댓값 $E(Y_{it})$ 의 단위 수, 즉 한계효과(marginal effect)의 모수로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군의 내역사업(총 8개)은 크게 세 개의 부문(보수정비 부문, 보존육성 부문, 재난방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보수관리 부문: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 돌봄(문화재기금),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문화부)
- ② 보존육성 부문: 고도보존 및 육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 ③ 재난방지 부문: 문화재 긴급보수(문화재기금), 문화재 재난안전관리(문화재기금), 궁능 방재시스템(문화재기금)

본 심층평가에서는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군의 효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 개의 부문 사업으로 구분하여 식 (13)과 같이 부문별 사업군 효과를 추정한다.

$$Y_{it1} = \alpha_1 + \tau_{t1} + g_{i1} + \gamma_1 d_{it1} + u_{it1} \quad (13)$$

$$Y_{it2} = \alpha_2 + \tau_{t2} + g_{i2} + \gamma_2 d_{it2} + u_{it2}$$

$$Y_{it3} = \alpha_3 + \tau_{t3} + g_{i3} + \gamma_3 d_{it3} + u_{it3}$$

따라서 식 (13)에서 보수관리 부문 사업의 성과는 γ_1 이고, 보존육성 부문 사업의 성과는 γ_2 이고, 마지막으로 재난방지 부문 사업의 성과는 γ_3 이다.

실제 분석에서는 통제변수인 지역별 인구가 포함되나 편의상 수식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한편, 담당자 인터뷰에 따르면 해당 연도 사업비를 투입하더라도 해당 문화재 유지보수가 해당 연도에 완료되지 않고 최소 1~5년 후에 완료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당해 연도 사업비가 당해 연도의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면 식 (14)와 같다.

$$Y_{it+k} = \alpha + \tau_t + g_i + \rho d_{it} + u_{it} \quad (14)$$

$k = 0, 1, 2, 3, 4$ 은 내역사업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적인지를 포착한다. 해당 연도의 성과 변수의 차이는 전년 대비 해당 연도의 잔존 효과이다.

다. 정성평가

1) 문화재 보수정비

해당 세부사업에 대해 첫째,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둘째, 보수 대상 문화재의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 사업의 집행률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80%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사업부처는 주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의 배정 부진, 둘째는 문화재 정비 사업의 속성상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설계나 공기의 변경 필요, 셋째는 대상이 되는 사업대상 문화재 및 그것이 자리한 토지 등과 관련된 소유권 조정의 문제 등이다.

질적 평가에서는 먼저 이러한 사유들이 과연 사업의 집행에 장애가 되고 있는지, 그 외에 다른 장애 요인은 없는지를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를 완화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대상 선정의 조건을 강화하여 사업 개수와 예산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과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다른 한편, 한정된 예산으로 보수정비를 행하는 상황에서 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화재 중에서 사업 대상을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정 절차에 관하여 외부의 여러 지적 사항이 있었다. 질적 평가에서는 사업의 여러 단계에서 선정 절차에 대해서 규정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러한 규정들이 합리적인지, 그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2) 문화재 돌봄

이 사업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의 초점 중 하나로 지역 간 편차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역 간 편차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돌봄 대상의 수와 분포에서 보이는 지역 간 차이이다. 문화재 수의 지역 간 차이는 역사적 배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 분포에서 보이는 지역 간 차이가 아니라 상대적인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돌봄 대상 문화재는 국가지정과 시도지정,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로 나뉘는데, 이런 대상 문화재의 분포에는 지역 간 상대적인 편차가 존재한다. 이런 편차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조율의 문제도 생각해 볼 것이다.

한편, 문화재 돌봄사업의 가장 중요한 투입 요소는 인력이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돌봄인력이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산 측면에서도 이 사업은 사업 총예산의 60%가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 문화재 훼손 방지와 경미한 손상의 발견 및 적절한 조치에는 전문성이 있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한편 인력을 조직하고 업무를 부여하는 등 기관의 효율적 운영 사항도 사업의 성과를 좌우할 요소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돌봄 문화재 수에 대비하여 지역 간 인력 배치의 편차도 살펴본다.

3)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이 집행하고 있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중복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중복 사항이 확인된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사업을 조정함으로써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해당 세부사업은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시설의 보존·관리 경비를 보조(제19조)하고 있다. 반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51조를 근거로 하여 국가지정 및 국가등록 문화재의 보수·정비와 문화재 경관 및 관람환경 개선 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

이 같이 두 사업은 근거법과 지원 대상이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통사찰은 문화재를 소유, 관리하는 주체인 경우가 많고, 문화재가 물리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곳이자 관람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업의 대상은 실제적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대상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구체적 지원 대상이 물리적으로 중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의 성격이 문화재와 관련된 시설 등의 보수와 정비를 지원하는 것인 바 유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사업 간 역할을 조정·명확하게 함으로써 지원 대상 사찰과 사업 소관 부처의 정책시행 비용(implementation cost)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 관리 주체 입장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보존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 평가에서 해당 두 사업 간 상기 언급한 유사성, 중복성이 실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조정을 통해서 정책시행 비용 절감과 문화재 보존 및 관리 효과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이익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4) 고도보존 및 육성

고도보존 및 육성 사업에 대한 정성평가는 고도 이미지 찾기와 고도역사도시 조성 사업 등 두 내역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고도역사도시 조성 사업은 최근에 시작된 지자체 자본보조금 사업으로, 2023년 전후로 시작 한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않다. 다만, 향후 4~6년간 토지매입, 발굴조사, 설계비, 공사비 등 집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타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과 같이 저조한 집행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반해, 높은 집행률을 유지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문화재 보수 사업의 분석 결과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주된 평가 대상이 되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고도(古都)의 환경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 지원사업이다. 해당 예산은 주로 전통 한옥의 신축, 개축, 수선이나 담장, 대문, 간판 등의 정비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투입된다. 동 사업의 특징으로 우선 집행률이 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주택을 개량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사업 대상물의 소유자인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저조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즉, 주민의 이 사업에 대한 이해나 참여 의지가 낮은 것이 집행률 저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이후의 집행률이 상승하기는 했으나, 이는 예산의 감축에 기인한 바가 크다. 따라서 정성평가와 정책제안은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 사업추진 기관의 노력 등으로 집행률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국고보조 필요성 및 보조율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업의 혜택이 지역사회에도 귀속되지만 사업에 참여한 개인에게도 귀속되는 성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4개의 사업 대상 지역별 개인 귀속 정도의 편차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별 보조율 차등에 대해 검토해야 할 근거가 된다.

5)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사업은 관련 연구활동 등 일부를 제외하고 사업 내용의 대부분이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 대상 문화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뿐이다. 실제로 해당 세부사업에 포함된 여러 내역사업 중 하나인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유사하게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 이후 집행률이 60%를 넘은 해가 없었으며, 7년간 평균 집행률도 50%를 넘지 않는 등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유산청은 토지매입 절차, 설계변경 절차,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집행 이전의 행정 절차에서 발생한 지연으로 인한 집행 부진 등을 낮은 집행률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사업의 내용과 집행률이 부진한 원인이 모두 문화재 보수관리사업과 유사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조치가 이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특징을 고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유사한 통계분석을 실시한다. 즉, 사업규모와 그 외에 집행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변수들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집행률 제고 방안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표 IV-3〉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예산 및 집행

(단위: 백만원,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 8월
예산액	24,300	21,194	19,692	31,232	34,686	33,034	34,395	29,495
실집행액	19,057	14,497	11,441	14,804	17,795	17,350	9,220	1,509
실집행률	78.4	68.4	58.1	47.4	51.3	52.5	26.8	5.1
지원 개소수	6개소	6개소	6개소	7개소	9개소	9개소	10개소	10개소
지원지역	수원시 등 10개 시군	수원시 등 11개 시군	수원시 등 8개 시군	수원시 등 14개 시군	수원시 등 18개 시군	수원시 등 18개 시군	수원시 등 18개 시군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6) 문화재 긴급보수

해당 세부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34%에 불과한 집행률 저조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 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부터 문화재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예산의 완전한 소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나치게 낮은 집행률은 긴급보수 수요가 과다 예측되거나, 그 집행이 제도와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의도한 것처럼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확인을 중심으로 예산 규모의 조정 또는 긴급보수와 관련된 절차와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다.

7)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이 사업의 특징은 인력과 시설의 결합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하는 성격을 지닌다. 내역사업의 구성도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지원사업과 문화재 재난방지 시설 구축, 그리고 시설의 유지관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IV-4>와 <표 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구축 내역사업과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지원 내역사업은 유사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6년 기준 인력에 투입된 예산 금액과 시설 구축에 투입되는 예산 금액은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이후 인력 예산의 경우 지원 장소와 지원 인력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3년에는 약 101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시설 구축의 경우 지원 개소와 지원 단가의 증감이 규칙적이지 않으나 2020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이후 100억원을 넘는 수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력에 대한 지원보다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약간 더 강화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시설의 증가는 재난방지의 성과를 높이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평가는 합리적인 시설-인력 결합 체계 구축의 모색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표 IV-4〉 “문화재 재난방지사설 구축” 내역사업 지원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 8월
예산액	5,795	7,483	7,483	6,483	12,833	10,180	10,702	12,130
지원 개소수	170	142	191	140	211	118	178	139
지원단가	48.7	75.3	56.0	66.2	86.9	123.2	85.9	124.7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V-5〉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지원” 내역사업 지원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 8월
예산액	5,801	5,868	6,663	7,117	7,608	8,608	8,608	10,132
지원 개소수	146	149	150	158	159	169	168	189
지원단가	79.5	78.8	88.8	90.1	95.7	101.9	102.5	107.2
지원인력	373	440	455	535	539	582	574	634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8) 공능방재시스템 구축

이 사업은 내용상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사업의 대상이 공과 능으로 한정되는 정도의 차이점을 보인다.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과 공능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간 주요 차이점은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대상인 문화재의 경우 별도로 상주하는 소유·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가 많은 편이나, 공능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대상은 소유 관리 주체가 국가로 한정되는 점이다. 실제로 표에서 보듯이 공과 능을 포함한 사적 36곳에, 국보 6곳, 보물 37곳 및 천연기념물 6종 등을 포함, 총 89점의 국가 소유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궁의 경우 문화재들이 비교적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지만 능의 경우는 넓은 영역에 문화재가 산재해 있다는 특징도 있다. 이런 특징을 고려하여 주로 시설의 관리 측면에서 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

〈표 IV-6〉 궁능의 문화유산 보유현황

구분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송례문	종묘	사직단	소계	세종 유적	동부 유적	중부 유적	서부 유적	소계	합계
국보	2	1	0	1	1	1	0	6	0	0	0	0	0	6
보물	9	11	2	7	0	1	1	31	1	4	1	0	6	37
사적	2	1	1	1	0	1	1	7	1	11	7	10	29	36
천연기념물	0	4	9	0	0	0	0	4	1	0	0	1	2	6
등록	0	2	0	1	0	0	0	3	0	0	1	0	1	4
합계	13	19	3	10	1	3	2	51	3	15	9	11	38	89

자료: 송창영·구원희(2022), 「공능문화재 방재환경 관리 실태조사 연구 - 4대 궁궐 및 조선왕릉을 중심으로 -」, p. 59

〈표 IV-7〉 서울 시내 궁의 문화재

구분	사적	국보	보물	등록문화재	천연기념물
경복궁	경복궁(117호), 서울육상궁(149호)	근정전(223호) 경회루(224호)	자경전(809호), 자경전십장생굴독(810호), 아미산굴독(811호), 근정문 및 행각(812호), 풍기대(847호), 사정전(1759호), 수정전(1760호), 향원정(1761호), 흥천사명 동종(1460호)	-	-
창덕궁	창덕궁(122호)	인정전(225호)	돈화문(383호), 인정문(813호), 선정전(814호), 희정당(815호), 대조전(816호), 구 선원전(817호), 금천교(1762호), 부용정(1763호), 낙선재(1764호), 주합루(1769호), 연경당(1770호)	경훈각 조일선관도(244호), 경훈각 삼선관파도(245호)	향나무(194호), 다래나무(251호), 뽕나무(471호), 회화나무군(472호)

〈표 IV-7〉의 계속

구분	사적	국보	보물	등록문화재	천연기념물
덕수궁	덕수궁(124호)	-	중화전 및 중화문(819호), 함녕전(820호)	-	-
창경궁	창경궁(123호)	명정전 (226호)	홍화문(384호), 명정문 및 행각(385호), 옥천교(386호), 통명전(818호), 풍기대(846호), 관천대(851호), 팔각칠층석탑(1119호)	-	-
송례문	-	송례문 (1호)	-	-	-
종묘	종묘(125호)	-	영녕전(821호)	-	-
사직단	사직단(121호)	-	사직단 대문(177호)	-	-

자료: 송창영·구원희(2022)

〈표 IV-8〉 능 문화재 현황

구분	지정번호	세부내역	관리 기관
구리 동구릉	사적 193	건원릉(1대 태조), 현릉(5대 문종과 현덕왕후), 목릉(4대 선조와 의인왕후·인목왕후), 휘릉(16대 인조비 장렬왕후), 승릉(18대 현종과 명성왕후), 혜릉(20대 경종비 단의왕후), 원릉(21대 영조와 정순왕후), 수릉(추존 문조와 신정왕후), 경릉(24대 헌종과 효현왕후·효정왕후)	동부 지구 관리소
남양주 순강원	사적 356	순강원(추존 원종 생모 인빈), 의창군묘(14대 선조 왕자 의창군, 양천군부인 허씨)	
구리 명빈묘	사적 364	명빈묘(3대 태종 후궁 명빈)	
남양주 광릉	사적 197	광릉(7대 세조와 정희왕후)	
남양주 휘경원	사적 360	휘경원(23대 순조 생모 유비)	
남양주 영빈묘	사적 367	영빈묘(19대 숙종 후궁 영빈)	
남양주 흥릉과 유릉	사적 207	흥릉(대한제국 1대 고종과 명성황후), 유릉(대한제국 2대 순종과 순명황후·순정황후), 영원(의민황태자와 황태자비), 회인원(황세손 이구), 의친왕묘, 덕해옹주묘, 귀인장씨묘, 광화당묘, 삼축당묘, 수관당, 수인당묘	
남양주 사릉	사적 209	사릉(6대 단종비 정순왕후)	
남양주 광해군묘	사적 363	광해군묘(15대 광해군과 문성군부인)	
남양주 성묘	사적 365	성묘(15대 광해군 생모 공빈)	
남양주 안빈묘	사적 366	안빈묘(17대 효종 후궁 안빈)	

〈표 IV-8〉의 계속

구분	지정번호	세부내역	관리 기관
서울 태릉과 강릉	사적 201	태릉(11대 중종비 문정왕후), 강릉(13대 명종과 인순왕후)	중부 지구 관리소
서울 연산군묘	사적 362	연산군묘 (10대 연산군과 거창군부인 및 태종 후궁 의정궁주, 연산군 딸과 사위)	
서울 정릉	사적 208	정릉(1대 태조비 신덕황후)	
서울 의릉	사적 204	의릉(20대 경종과 선의왕후)	
서울 영취원과 송인원	사적 361	영취원(의민황태자 생모 황귀비), 송인원(이진 원손)	
서울 선릉과 정릉	사적 199	선릉(9대 성종과 정현왕후), 정릉(11대 중종)	
서울 현릉과 인릉	사적 194	현릉(3대 태종과 원경왕후), 인릉(23대 순조와 순원황후)	
고양 서오릉	사적 198	경릉(추존 덕종과 소혜왕후), 창릉(8대 예종과 안순왕후), 명릉(19대 숙종과 인현왕후·인원왕후), 익릉(19대 숙종비 인경왕후), 홍릉(21대 영조비 정성왕후), 순창원(13대 명종 장남 순회세자와 공회빈), 수경원(추존 장조 생모 영빈), 대빈묘(20대 경종 생모 옥산부대빈)	서부 지구 관리소
양주 은릉	사적 210	은릉(11대 중종비 단경왕후)	
파주 장릉	사적 203	장릉(16대 인조와 인열왕후)	
파주 소령원	사적 358	소령원(21대 영조 생모 숙빈)	
파주 수길원	사적 359	수길원(추존 진종 생모 정빈)	
광명 영화원	사적 3567	영화원(16대 인조 장남 소현세자빈 민회빈)	세종대왕 유적 관리소
고양 서삼릉	사적 200	희릉(11대 중종비 장경왕후), 효릉(12대 인종과 인성왕후), 예릉(25대 철종과 철인황후), 소경원(16대 인조 장남 소현세자), 의령원(추존 장조 장남 의소세손), 효창원(22대 정조 장남 문효세자), 회묘(10대 연산군 생모 폐비윤씨), 왕자·왕녀·후궁묘 45기, 경선군묘·경혜옹주묘 2기	
화성 용릉과 건릉	사적 206	용릉(추존 장조와 헌경황후), 건릉(22대 정조와 효의황후)	
파주 삼릉	사적 205	공릉(8대 예종비 장순왕후), 순릉(9대 성종비 공혜왕후), 영릉(추존 진종과 효순황후)	
김포 장릉	사적 202	장릉(추존 원종과 인현왕후)	
여주 영릉과 영릉	사적 195	영릉(4대 세종과 소헌왕후), 영릉(17대 효종과 인선왕후)	
영월 장릉	사적 196	장릉(6대 단종)	
삼척 준경묘·영경묘	사적 524	준경묘(태조 5대 조부 양무장군공), 영경묘(태조 5대 조모 양무장군공비)	기타

자료: 송창영·구원희(2022)

V.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1. 계획평가: 사업설계의 적절성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사업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고 있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고 제도 설계와 예산 측면에서의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지자체 부담 비용의 배정(지방의회 심의 등) 지연, 문화재 보수공사의 특성상 사전 예측 불가한 설계변경 및 공기(工期) 연장, 그리고 토지 보상 등 소유권 조정 문제이다.

그중 예기치 못한 설계변경에 대한 대처 방안은 이미 사업비 3억원 이상인 경우 2019년부터 설계와 시공을 예산단계에서 분리하여 설계가 완료된 경우에만 시공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리 시행의 기준을 3억원보다 더 낮추거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사업의 경우 대상만 다를 뿐,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과 유사한 이유로 집행률 저조한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토지매입 절차, 설계변경,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지연을 지적하고 있다. 뒤에서 살펴볼 문화재 보수 사업에 대한 분석은 이 사업의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의 모색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집행률과 관련하여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과 대비되어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에서 보이는 특징도 통계분석을 통해 찾아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사업과 국가유산청이 시행하고 있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중복 가능성이 있다. 2023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통사찰은 982개인데 그중 국가지정 문화재(국보, 보물)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은 269개로 27%에 달한다.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침 등을 통해 국가유산청의 보수정비 사업과 중복이 없도록 정하고 이를 점검하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이 보수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의 경우 이러한 중복 지원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15년부터 방재 관련 사업의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조계종이 ‘문화재 방재시설 예산 중복지원 방지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사찰단위로 그 시행 대상을 구분하였다. 당시 방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해서는 국보,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를 보유한 전통사찰 69개소와 전통사찰 자체가 사적, 명승으로 지정된 사찰 4개소가 국가유산청 담당으로 구분되었다. 그 후 국가유산청 담당 전통사찰의 숫자가 증가하여 2023년 기준으로 90개소, 즉 전통사찰 중 9%가 국가유산청 소관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역할분담 방식을 방재 이외 다른 영역으로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 절에서 사업집행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 중복성 정도를 분석할 것이다.

2. 과정평가

가. 집행 정도

1) 집행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률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표 V-1〉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총액사업) 예산 및 집행

(단위: 백만원,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예산액(a)	305,000	284,500	295,060	360,160	393,300	397,000	391,500	343,400
실집행액(b)	184,310	181,913	201,583	269,188	306,954	301,823	294,779	249,318
실집행률(b/a)	60.4	63.9	68.3	74.7	78.0	76.0	75.3	72.6

주: '23년 세부사업 기준 실집행률 77.4%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집행률은 예산액 규모와 문화재 유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분석은 집행률이 80% 이하로 집행 부진 현상이 발생하는 확률과 집행률 자체라는 두 개의 변수에 집중하여 행한다.

첫째, 집행률 80% 이하로 집행 부진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요인을 분석해 본다.

아래의 <표 V-2>는 2023년 예산액(국비와 지방의 합) 규모에 따라서 80% 이하의 집행률을 보인 지자체 수준 사업의 개수를 보여준다. 80% 이하의 집행률을 보인 사업의 개수는 538개이며 이것은 전체 1,892개의 개별사업 대비 그 비율이 28.4%이다. 예산액 1억원 이하인 사업에서는 그 비율이 16.9%에 불과하지만 1억~2억원 규모는 33.4%이며, 2억원 이상의 사업에서는 그 비율이 40%를 넘는다.

<표 V-2>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액 규모별 집행률 80% 이하 건수(2023년)

집행률	예산	1억원 이하	1억~2억원	2억~3억원	3억~5억원	5억~10억원	10억원 초과	합계
80% 이하 건수		165	103	80	75	63	52	538
비율(%)		16.9	33.4	42.8	44.9	42.6	50.5	28.4
80% 초과 건수		814	205	107	92	85	51	1,354
합계 건수		979	308	187	167	148	103	1,892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또한, 문화재 지정유형별로 집행률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집행률이 낮은 유형은 국가등록문화재(48.4%)와 사적(35.0%) 등이다.

<표 V-3>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지정별 80% 이하 건수(2023년)

집행률	예산	국가 민속 문화재	국보	국가 등록 문화재	명승	보물	사적	천연 기념물	합계
80% 이하 건수		52	20	60	25	117	206	58	538
비율(%)		25.9	34.5	48.4	24.0	26.4	35.0	15.5	28.4
80% 초과 건수		149	38	64	79	326	382	316	1,354
합계 건수		203	58	124	104	448	590	375	1,892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예산규모와 지정 유형을 조합해 보면 지정 유형에 따라서 집행률이 80% 이하인 사업이 많이 나타나는 예산규모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경향은 유지된다.

〈표 V-4〉 2023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지정별, 예산액 규모별 집행률 80% 이하 건수와 비율

구분	1억원 이하	1억~2억원	2억~3억원	3억~5억원	5억~10억원	10억원 초과	합계
전체 건수							
국가민속	133	27	15	9	4	3	201
국보	27	9	11	5	6	6	58
국가등록	62	29	9	12	9	3	124
명승	49	28	9	8	7	3	104
보물	175	74	64	46	60	24	443
사적	261	92	60	60	54	61	588
천연기념	278	49	19	17	8	3	374
합계	979	308	187	167	148	103	1,892
집행률 80% 이하 건수							
국가민속	22	7	5	14	1	3	52
국보	6	3	4	1	3	3	20
국가등록	18	16	6	10	8	2	60
명승	7	6	5	2	5	0	25
보물	35	23	24	13	14	8	117
사적	51	36	26	29	28	36	206
천연기념	26	12	10	6	4	0	58
합계	165	103	80	75	63	52	538
집행률 80% 이하 건수의 비율(%)							
국가민속	16.5	25.9	33.3	155.6	25.0	100.0	25.9
국보	22.2	33.3	36.4	20.0	50.0	50.0	34.5
국가등록	29.0	55.2	66.7	83.3	88.9	66.7	48.4
명승	14.3	21.4	55.6	25.0	71.4	0.0	24.0
보물	20.0	31.1	37.5	28.3	23.3	33.3	26.4
사적	19.5	39.1	43.3	48.3	51.9	59.0	35.0
천연기념	9.4	24.5	52.6	35.3	50.0	0.0	15.5
합계	16.9	33.4	42.8	44.9	42.6	50.5	28.4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상에서 설명한 두 요인이 집행률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집행률이 80% 이하가 될 확률에 대한 Probit 모형을 추정하였다. 여기서 집행률 80% 이하 여부에 관심을 두는 것은 정책당국이 이 수준을 집행률 부진의 기준으로 보고, 아래에서 상술

하는 바와 같이 별도의 집행 부진 사유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Probit 모형은 이처럼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이 ‘~이다/아니다’의 양분 형태로 나타날 때 그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모형이다.

모형의 추정결과 예산액이 1억원 증가하면 z 값을 0.0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국가등록문화재는 집행률 80% 이하가 될 확률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보와 사적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역시 그러한 확률을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robit 모형 추정결과의 의미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특정한 지정유형과 예산액 규모에 대해서 이 모형이 예측해(predicted)주는 집행률 80% 이하가 될 확률을 보자. 이 확률은 $\Phi(z)$ 로 계산되는 데 Φ 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함수이고 z는 표에 보인 각 셀별 지정형태 및 예산규모에 Probit 모형추정에서 얻은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예컨대 예산액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면, 지정 형태별로 차이는 있으나 집행률이 80% 이하가 될 확률을 0.6~0.8%p 낮추는 효과가 있고, 2억원에서 0.5억원으로 낮춘다면 0.9~1.1%p 낮추는 효과가 있다.

〈표 V-5〉 집행률 80% 이하가 될 확률 Probit 계수 추정결과(2023년)

변수	계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예산액(억원)	.0215468 ***	.0046249	.0124822	.0306115
d등록	.7048207 ***	.1200086	.4696082	.9400331
d사적	.3164603 ***	.0674048	.1843493	.4485712
_cons	-.7868294 ***	.0419141	-.8689795	-.7046793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V-6〉 문화재 지정유형 및 예산액 규모에 따른 ‘집행률 80%’가 될 확률
(Probit 추정결과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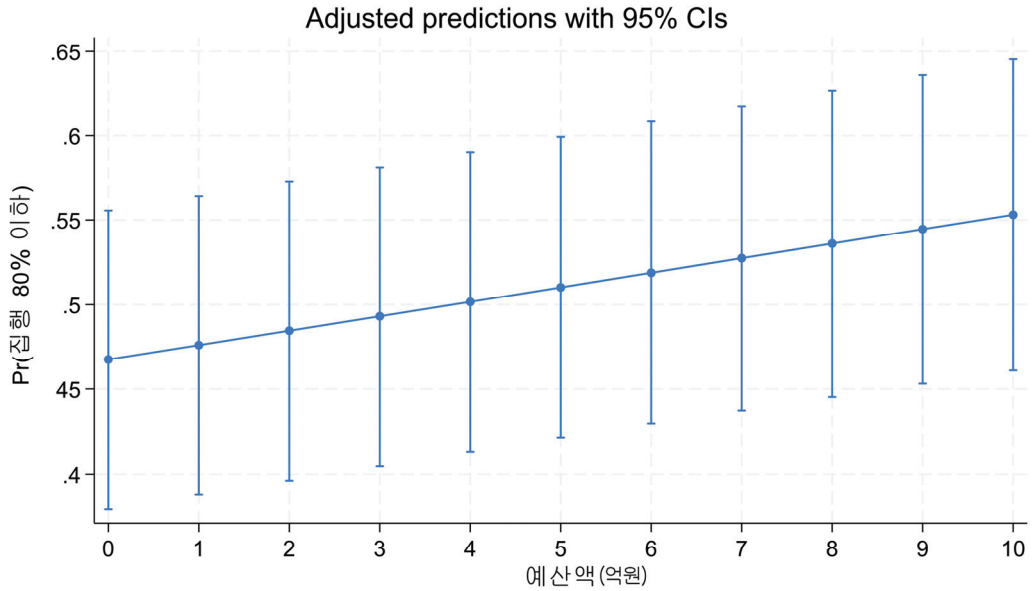
(단위: %)

예산액(억원)	0.5	1	2	3	4	5	10
등록	47.2	47.6	48.4	49.3	50.2	51.0	55.3
사적	32.3	32.7	33.5	34.2	35.0	35.8	39.9
기타	21.9	22.2	22.9	23.5	24.2	24.9	28.4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V-1] 예산액에 따른 집행률 80% 이하 부진이 발생할 확률 추정값(국가등록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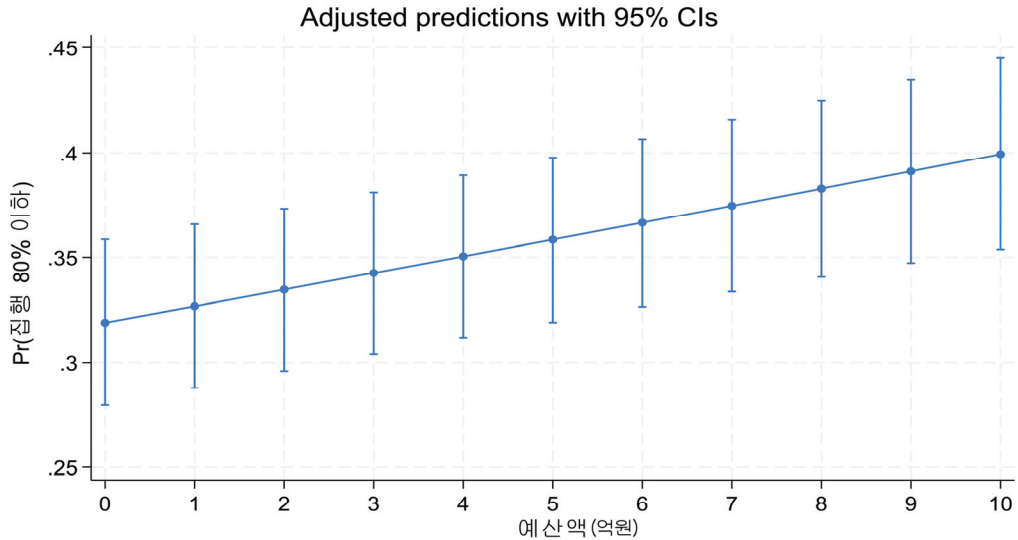
2023년 Probit 모형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V-2] 예산액에 따른 집행률 80% 이하 부진이 발생할 확률 추정값(사적)

2023년 Probit 모형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둘째, 집행률 자체를 예산규모와 문화재 지정유형에 대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면 예산액의 1억원 증가는 집행률을 0.3%p 감소시키고, 국가등록문화재는 집행률을 11%p 감소시키고, 사적은 6%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 집행률 회귀분석결과(2023년)

변수	계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예산액(억원)	-.0031362 ***	.0010665	-.005228	-.0010445
d등록	-.1088542 ***	.0280168	-.1638012	-.0539071
d사적	-.0584256 ***	.0150958	-.0880318	-.0288195
_cons	.8097152 ***	.0089235	.7922142	.8272162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상의 통계분석 결과 사업비 규모와 집행률 간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나, 사업비 규모가 크면 집행률이 하락한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과연 집행률 부진 사유가 무엇인지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정유형별로 집행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저조한 집행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국가유산청이 집행률이 80% 이하인 개별 사업에 대해서 제공한 집행 부진 사유를 분석해 본다. 사유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관계전문가 자문 이행에 따른 지연’으로 전체 사업의 8.9%, 집행률 80% 이하인 사업의 1/3이 이에 해당되었다. 상기 비율은 특히 국가등록문화재 중 25%나 된다. 다음으로 자주 발생하는 사유는 ‘소유자 변심(주변 민원, 소송 등 포함)’으로 전체 사업의 5%이며, 다음으로는 ‘계약체결 지연, 절대공기 부족’과 ‘낙찰차액,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으로 그 비율이 각각 3.5% 및 3.2%이다. 반면, ‘지방비 편성 지연’은 1%에 불과하다. 사업담당자들과 면담 결과에 따르면, 사업지연의 중대한 사유인 ‘관계전문가 자문 이행’ 절차는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문화재의 구조상 문제에 대한 대처, 새로운 문화재의 발굴 또는 존재 가능성 등으로 인한 설계 변경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8〉 2023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지정별, 지연사유별 집행률 80% 이하 건수와 비율

구분	국민	국보	등록	명승	보물	사적	천기	합계
건수								
80% 이하	52	20	60	25	117	206	58	538
사유 명시 없음	-	2	-	1	2	3	-	8
낙찰차액보험정산	4	-	10	3	17	21	5	60
소유자_행정	-	-	-	-	1	-	1	-
소유자 변심	6	4	8	6	20	42	9	95
자연재해	1	-	-	-	1	4	6	-
전년도이월	8	1	5	5	26	4	49	-
전문가_전년	-	1	-	-	-	-	1	-
전문가자문	22	5	25	5	39	66	7	169
지방비 지연	1	-	3	2	4	5	4	19
체결지연/공기부족	4	4	7	2	19	17	14	67
행정절차유관기관	4	2	1	4	9	14	6	40
현장여건	2	1	1	2	2	10	5	23
80% 이상	149	38	64	79	326	382	316	1,354
합계	201	58	124	104	443	588	374	1,892
비율(%)								
80% 이하	25.9	34.5	48.4	24.0	26.4	35.0	15.5	28.4
사유명시 없음	0.0	3.4	0.0	1.0	0.5	0.5	0.0	0.4
낙찰차액보험정산	2.0	0.0	8.1	2.9	3.8	3.6	1.3	3.2
소유자_행정	0.0	0.0	0.0	0.0	0.2	0.0	0.3	0.0
소유자 변심	3.0	6.9	6.5	5.8	4.5	7.1	2.4	5.0
자연재해	0.5	0.0	0.0	0.0	0.2	0.7	1.6	0.0
전년도이월	4.0	1.7	4.0	4.8	5.9	0.7	13.1	0.0
전문가_전년	0.0	1.7	0.0	0.0	0.0	0.0	0.3	0.0
전문가 자문	10.9	8.6	20.2	4.8	8.8	11.2	1.9	8.9
지방비 지연	0.5	0.0	2.4	1.9	0.9	0.9	1.1	1.0
체결지연/공기부족	2.0	6.9	5.6	1.9	4.3	2.9	3.7	3.5
행정절차유관기관	2.0	3.4	0.8	3.8	2.0	2.4	1.6	2.1
현장여건	1.0	1.7	0.8	1.9	0.5	1.7	1.3	1.2
80% 이상	74.1	65.5	51.6	76.0	73.6	65.0	84.5	71.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

다음으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의 집행률에 대해 분석해 보자.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 이후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 자료에는 2011년 이후 지원된 685개의 지원내역에 대해 세계유산이 소속된 지역, 각 세부 사업당 지원액수, 그리고 집행률 등의 변수가 포함된다. 이 자료를 토대로 집행률에 대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에 나타난 연도별 지원내역은 <표 V-9>와 같다. 지원지역은 시군구 단위의 지원 지역 수⁸⁾를 의미한다. 지원지역은 2011년의 6곳에서 2022년의 20곳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원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지원 건수당 평균 지원액은 지원받는 장소가 늘어나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2011년에는 지원 건수당 평균 지원액이 20억원에 가까웠지만 2020년 이후에는 5~6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표 V-9>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의 연도별 지원 내역

연도	지원 지역 수	지원 건수	지원 총액 (억원)	평균 지원액 (억원)	평균 집행률
2011	6	19	378.4	19.9132	95.2%
2012	3	13	153.3	11.7931	89.5%
2013	8	44	462.6	10.5132	83.8%
2014	8	30	384.3	12.811	83.8%
2015	6	62	402.4	6.49032	90.8%
2016	11	48	347.1	7.23214	82.9%
2017	9	27	317.8	11.7693	95.2%
2018	8	37	284.6	7.90472	89.8%
2019	14	58	452.3	7.79818	82.6%
2020	17	95	482.2	5.07618	87.1%
2021	18	86	482.4	5.60983	82.9%
2022	20	96	497.7	5.18418	58.0%
2023	18	70	421.8	5.94024	29.6%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 자료를 토대로 집행률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지원금액(억원)과 함께 두 가지 변수를 추가하였다. 우선 각 연도에서 해당 지역에게 지원된 건수를 설명

8) 본문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의 단위는 시군구이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는 일관된 자료를 얻기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합하여 한 지역으로 삼았다.

변수로 삼았다. 예를 들어 2023년에 경주시는 14건의 지원을 받았고 제주도는 11건, 안동시는 7건의 지원을 받았다. 이를 설명변수로 삼은 이유는 한 지역이 여러 건의 지원을 받을 때 그 지역의 평균 집행률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다음으로 각 지역이 처음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을 때 해당 연도에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를 형성하였다. 이는 최초의 지원을 받는 지역이 새롭게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집행 과정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해 집행이 저조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이상의 회귀분석은 2020년 이후에 대해서 실행하였다. 2020년 이후로 표본을 한정된 것은 이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축적되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다는 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당 평균 지원액이 2020년 이후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한편 이 회귀분석은 연도별 더미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8월까지의 집행률 자료만 있는 2023년도의 자료도 포함하게 되며, 포함 여부가 분석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표 V-10〉은 집행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원금액만을 설명변수로 예산 1억원 증가당 약 0.27% 집행률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앞서 살펴본 문화재 보수 예산에 대한 분석과도 상응하고 있다. 한편 지역별 사업 수와 지역의 첫 참여 여부라는 두 변수는 집행률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 변수가 추가되더라도 2020년 이후에서 보이는 예산 금액과 집행률 사이의 관계는 큰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

〈표 V-10〉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의 집행률 회귀분석

구분	(1)	(2)
예산 금액	-0.00265*** (0.00102)	-0.00255** (0.00103)
지역별 사업 수	-	-0.00105 (0.00387)
첫 참여	-	0.0795 (0.0621)
연도더미	○	○
관측치 수	348	348
결정계수	0.378	0.382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상에서 간단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예산금액과 집행률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는데, 2022년의 부진한 집행률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례분석이 필요하다. 2022년의 자료를 살펴보면 이 해의 집행률이 낮아지는 주요 원인이 수원화성 지구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수원화성은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사업 중에서도 매우 비중이 큰 지역이다.

〈표 V-11〉은 수원 화성과 다른 지역의 집행률 차이와 함께 수원 화성과 관련한 세부 영역별 집행률을 제시하고 있다. 2022년 수원화성 지구의 전체 집행률은 1.6%로 다른 문화재의 집행률 70.6%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관련 예산을 토지매입, 해체보수, 실측조사, 발굴조사, 주변복원정비 공사 등으로 영역을 구분해 볼 때도 모든 영역에서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국회에서 증액이 이루어진 토지매입과 실측조사 영역은 집행이 전혀되지 않거나 예산액 대비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렇게 집행률이 특별히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토지매입이나 조사 등 행정 절차상 집행률이 낮아질 요인을 가진 영역에서는 증액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어할 수 있도록 심의 과정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문화재 관련 예산의 경우는 심의과정에서 집행률이라는 요소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수원화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V-11〉 수원화성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련 집행률(2022년)

(단위: 백만원)

구분	국비	집행액	집행률	비고
수원화성	14,753	234	1.6%	-
토지매입	8,529	14	0.2%	국회증액 +1150
해체보수	36	-	0.0%	-
실측조사	350	-	0.0%	국회증액 +350
발굴조사	420	4	1.0%	-
주변 복원정비공사	5,418	216	4.0%	-
그 외 문화재	19,642	13,862	70.6%	-
합계	34,395	14,096	41.0%	-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은 방재인력에 대한 보수와 방재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투입하

는데, 주로 시설과 관련한 부분에서 집행률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방재인프라 구축의 경우에는 7년 평균 실집행률이 64.7%로 낮다. 평균이 낮은 이유가 특정 연도의 집행률이 크게 낮았기 때문이 아니고 매년 비교적 낮은 집행률이 반복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집행 부진은 문화재 보수와 관련한 예산 전반에 걸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 사업도 해당 문화재 주변에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소유자와 협의에 따른 지연이나 관련 부처 간 협의에 따른 지연, 그리고 공사 지연 등 집행 부진 및 이월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원인들이 인해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회에서 증액되는 경우 대응하는 지방비 확보가 늦어짐에 따라 예산이 늦게 배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상의 미집행 사례와 구체적인 이유는 <표 V-12>에 정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사업의 추진 절차상 문화재 보수가 이루어진 이후에 방재인프라가 구축되므로 집행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아래 표에 제시한 사례와 유사한 사례는 더 찾을 수 있다.

<표 V-12>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 미집행 사례

미집행 사유 범주	사례	구체적인 이유
소유자와 협의 지연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 (소방, 전기, 방법)	협의 지연에 따른 설계 지연 (360,030천원)
관계부서 협의 등 지연	광양 중흥산성 삼층석탑 (방법, 소방)	불법건축물 협의에 따른 지연 (265,300천원)
이월 발생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소방)	사찰 내 행사에 따른 지연 (206,500천원)
지방비 확보 지연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22. 12월 국회 증액된 사업으로 지방비 확보(5월)가 늦어짐에 따라 전체 공정 지연
보수공사 연계로 인한 구축사업 지연	서산 문수사 금동여래좌상 복장유물 (소방)	공양간(보수정비) 건립 사업 이후 추진함에 따라 지연 (210,000천원)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

<표 V-13>은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 내의 집행 부진 사례 중 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모두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대상이 동시에 재난안전관리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재난안전관리 사업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이후에 집행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상 집행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목조문화재가 신규 지정될 경우,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특성상 화재 방지를 위해 방재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최우선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중복편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사유로 발생하는 집행률 부진은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V-13〉 문화재 재난 안전관리 집행 부진 사례 중 문화재 보수 정비 관련 예

(단위: 백만원)

신규 지정 목조문화재	재난안전관리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206	0	0%	84	83	98.8%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63	32	50.8%	33	30	90.9%
의성 고운사 연수전	35	5	14.3%	1,342	1,026	76.5%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구체적으로는 사업 편성단계에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재난안전관리 사업 간에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목조문화재가 신규 지정되는 경우, 사업 편성 전에 부서 간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방식을 통해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집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규모가 적을수록 집행률이 높고, 또한 ‘전문가 자문 이행’이 집행을 늦추는 주된 요인이므로 가급적 보수정비 공사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이미 2020년부터 집행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규모 3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⁹⁾ 3억원을 기준으로 사업을 분류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3억원 미만 사업의 집행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14〉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사업규모 3억원 기준 집행률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3억원 이상	62.0%	65.9%	68.2%	66.2%
3억원 미만	77.0%	79.0%	77.7%	78.3%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9) 사업담당자 면담결과 이러한 분리가 집행률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계와 시공 분리추진의 기준이 되는 사업비 규모를 2억원이나 1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의 <표 V-5>에서 보았듯이 ‘예산액’ 기준 1억원을 기준으로 집행률 80% 이하가 되는 비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집행률이 특히 부진한 문화재 유형, 즉 국가등록문화재와 사적은 예산 편성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이래 지정유형별 투입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률을 고려한 유형 간 재원의 재배분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적 부분의 예산규모 비율이 63%에서 59%로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반면 국가등록문화재의 경우 2022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 2023년 다소 주춤하기는 했지만, 예산규모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V-15>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지정유형별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국보	11,905,110 (2.8%)	8,546,650 (2.2%)	9,696,810 (2.4%)	13,799,736 (3.0%)
보물	67,123,977 (16.0%)	72,525,700 (18.3%)	78,928,890 (19.5%)	97,127,779 (21.1%)
사적	263,207,299 (62.7%)	247,076,740 (62.2%)	229,531,400 (56.8%)	272,822,340 (59.3%)
천연	27,141,432 (6.5%)	22,909,100 (5.8%)	25,624,100 (6.3%)	23,626,954 (5.1%)
명승	21,027,571 (5.0%)	16,062,350 (4.0%)	27,089,300 (6.7%)	22,168,429 (4.8%)
국가민속	19,351,570 (4.6%)	17,002,770 (4.3%)	16,383,206 (4.1%)	18,863,486 (4.1%)
등록	10,243,041 (2.4%)	12,876,690 (3.2%)	16,623,094 (4.1%)	11,961,876 (2.6%)
합계	420,000,000 (100%)	397,000,000 (100%)	403,876,800 (100%)	460,370,600 (100%)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셋째, 국가등록문화재의 경우 ‘전문가 자문 이행’으로 인해 집행률이 떨어지는 비율이 20.2%로 매우 높아 설계단계에서 자문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여 그 반영 방법을 명확히 한

후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등록문화재는 ‘기존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제작, 형성된 지 50년이 경과한 것으로 주로 개항기 이후의 문화유산 중에서 그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¹⁰⁾’이다. 따라서 이미 국보나 보물 등 형성된지 오래된 문화재에 비해서 그 문화적 가치나 적절한 보존의 방법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 축적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문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안이 대두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국가등록문화재 관련 구체적인 표준 수리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산청은 등록문화재 표준시방서를 2010년에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이 아래 예시에 보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만 기술한 정도이고, 구체적인 사례나 방법 등이 부재하다. 이로 인해 자문 및 설계변경 단계에서 수리지침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사문화되어 있으며, 전문가 자문에 상당시간이 소요되어 집행 부진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전문가 자문으로 인한 집행 부진을 줄이기 위해서는 등록문화재 표준시방서를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개선하여, 설계변경 단계 등에 수리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10년 근대건축물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예시 (p114)〉

□ 기와 해체방법

- ㄱ. 기와 해체는 지붕하중이 분산되도록 전후좌우 균형있게 해체한다.
- ㄴ. 망와 등 중요 기와는 먼저 해체한다.
- ㄷ. 지붕마루는 추녀마루, 내림마루, 용마루 순서로 해체하고 바닥기와는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해체한다.
- ㄹ. 기와는 손상되지 않도록 해체한다.
- ㅁ. 고정못 또는 결속선으로 고정된 기와는 먼저 고정못, 결속선을 해체한 후 해체하며 지붕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다섯째, 사적(事蹟) 관련 소유자 변심으로 인하여 집행 부진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감정평가를 사업진행에 선행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적은 소유자 변심으로 인한 집행 부진 발생 비율이 7.1%에 달한다. 이는 사적이 면(面)단위 문화재이기 때문에 사업진행을 위해서 토지매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때 그 매입가격을 놓고 토지소유자와 지자체 간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지자체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매입 동의를 받고, 사업예산을 신

10)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75368&bbsId=BBSMSTR_1045&mn=NS_03_09_01

청하고 배정받았으나, 그 후 감정평가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토지소유자의 예상보다 낮으면 토지소유자가 토지매각 동의를 번복하게 되어, 해당연도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사업예산은 집행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표에 보인 바와 같이 사업 예산 신청 전에 감정평가를 먼저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16〉 사적(史蹟) 보수정비 사업 추진 절차 개선안

변경 전(기준)	변경 후(개선안)
공시지가 기준으로 사업 예산 신청	감정평가 시행
↓	↓
사업 예산 배정 및 감정평가 시행	토지소유자 토지매매 여부 결정
↓	↓
토지소유자 토지매매 여부 결정	본사업 예산 신청 및 배정

자료: 저자 작성

여섯째, 사업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재난안전관리 사업과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단계부터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문화재에 대해 상기 두 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다.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목조문화재에 우선적으로 편성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 목조문화재가 문화재 보수사업 대상이기도 한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 순서가 보수사업에서 재난안전관리 사업 순으로 진행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집행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 간 연계가 필요하며, 특히 목조문화재가 신규 지정될 경우, 사업예산 편성 전에 부서 간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나. 중복지원 문제

1) 중복지원 현황 분석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 사찰에 대한 지원과 문체부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사업은 지원대상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

중복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업군과 관련한 ‘중복(重複)’의 뜻을 명확히 한다.

첫째, 가장 넓은 의미의 중복은 동일한 사찰에 대한 지원 가능성이다.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그 관람의 편의를 위한 시설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그 대상 중에 사찰이 포함된다. 문체부 전통문화유산보존 중 전통사찰 보존 사업은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의상 ‘국가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들’은 두 사업의 중복 지원대상이 된다.

둘째, ‘국가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들 중에서도 실제로 두 부처의 사업으로부터 모두 지원을 받은 사찰은 보다 구체적인 중복 사례가 된다. 국가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들 중에서도 어느 한 부처의 사업만을 지원받은 경우에 이 정의에서는 중복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두 부처의 지원이 동일 사찰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사업별 대상 구분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이루어진다면 사찰단위의 중복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셋째, 위의 둘째 정의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그 사찰 내 동일한 문화재나 부속건물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사찰은 보통 여러 채의 부속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동일한 사찰에 두 부처의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동일한 부속건물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더욱 두드러진 중복사례가 된다. 반면, 예컨대 어떤 사찰에 소재한 지정문화재의 보수가 국가유산청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다른 부속건물 보수가 문체부의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세 번째 정의에 따르면 중복이 아니다.

넷째, 동일한 사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가와 무관하게 사찰을 구성하는 요소 중 동일한 성격의 건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이다. 사찰은 보통 직접적 종교적 기능이 있거나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물¹¹⁾과 그곳에 기거하는 승려들의 생활이나 사찰의 사무와 관련된 부속 건물¹²⁾로 구성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참조).¹³⁾ 사찰 내에서 용도가 동일한 사찰 구성 요소(예: 요사채, 공양간, 종무원 등)에 대해서 두 부처가 지원을 한다면, 동일한 사찰 여부와 무관하게, 이 역시 두 부처 사업이 기능상 중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복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에 대한 두 사업의 사업 내용과 지원예산 규모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두 사업 중 어느 하나라도 지원 받은 사찰 267개에 관한 자료이다.

11) 불전(대웅전, 미륵전, 약사전, 팔상전, 응진전, 원통전, 관음전, 문수전, 명부전, 칠성각, 산신각, 독성각 등), 강당(설법이나 법요의식이 행해지는 건물), 승당(승려들의 좌선, 정진이 이루어지는 곳), 산문(일주문, 천황문, 불이문) 등

12) 요사채(기숙사) 또는 승방(僧房), 공양간 또는 주고(廚庫)(주방 및 식당), 종무원(사찰의 사무소) 등

13)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9782>

이 자료에 상기 설명한 중복의 정의를 적용하면 중복 건수는 아래에 보인 바와 같다. 검토 기간 두 부처 사업 중 어느 하나라도 지원받은 사찰의 숫자는 267개이며, 두 부처의 사업 대상으로 모두 지원받은 사찰은 162개, 동일 사찰 내 동일 부속건물에 대한 지원은 56건이었다. 끝으로 구체적 사찰 단위 중복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사찰의 구성 요소에 대해 두 부처가 모두 지원한 사례로서 요사채, 공양간, 종무원에 대한 지원 건수를 살펴본 결과 요사채의 경우 두 부처 사업의 지원 건을 합하여 128건, 공양간의 경우 두 부처의 지원 건을 합하여 91건, 종무원의 경우 두 부처의 지원 건을 합하여 27건이 있었다.

〈표 V-17〉 중복의 정의에 따른 중복 건수

구분	중복의 정의		중복 건수	비율(%)
1	국가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		267	100
2	동일한 사찰에 대해서		162	61
3	동일한 사찰 내 동일한 부속건물에 대해서		56	21
4	동일한 사찰 구성요소에 대해서(예시)	요사채	128	47
		공양간	90	34
		종무원	27	10

자료: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 중에서 특히 두 번째 정의, 즉 동일 사찰에 중복 지원하는 경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사찰 수준에서 두 사업은 상당히 중복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 기간 국가유산청의 지원과 문체부의 지원을 모두 받은 사찰이 162개로 확인되며, 이것은 ‘모집단’, 즉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두 기관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지원받은 사찰 267개의 60.7%에 달한다.

〈표 V-18〉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받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수(2011~2023)

국가유산청	문체부			합계
		없음	있음	
없음		-	30	30
있음		75	162	237
합계		75	192	267

자료: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V-19〉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여부에 따른 보수정비 예산 분포(2011~2022)

(단위: 백만원)

두 기관 예산 합계(지방비 포함)			
국가유산청	문체부	없음	있음
없음		-	14,640
있음		212,470	806,645
합계		212,470	821,285
국가유산청 사업 예산(지방비 포함)			
국가유산청	문체부	없음	있음
없음		-	0
있음		212,470	734,456
합계		212,470	734,456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예산(지방비 포함)			
국가유산청	문체부	없음	있음
없음		-	14,640
있음		0	72,189
합계		0	86,829

자료: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둘째, ‘모집단’에 지원된 예산 중 중복 지원받은 사찰에 지원된 예산의 비율이 높다. 1조 337억원 중 8,066억원, 즉 78%가 중복지원을 받은 사찰에 지원되었다. 이것은 모집단 중 중복지원 받은 사찰의 비율 61%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이다. 따라서 중복 지원 받은 사찰의 평균 지원액은 49.8억원으로 모집단의 평균 지원액 13년간 38.7억원에 비해서 29% 많다.

셋째, 국가유산청의 지원만을 보면 중복지원을 받는 사찰에 지원되는 예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받은 237개 사찰 중 중복지원을 받은 사찰 162개의 비율은 68%이다. 반면, 국가유산청의 지원액 9,469억원 중 중복 지원받은 사찰에 지원된 액수는 7,345억원으로 78%이다.

넷째,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은 중복지원을 받는 사찰과 그렇지 않은 사찰에 대체로 사찰수에 비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은 사찰 192개 중 중복 지원받은 사찰 162개의 비율은 84.4%이며, 예산 기준으로 보면 83.1%(722억원/868억원)로 비슷하다.¹⁴⁾

14) 셋째와 넷째 분석은 중복 문제 완화를 위한 조정을 하려 할 때 어느 부처의 업무조정 부담이 많을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다.

이상은 사찰수준에서의 중복양상을 살핀 것이다. 다음으로 앞에서 설명한 세 번째 정의에 따라서 사찰 내부에서 세부적으로 지원대상 건물과 작업의 내용을 비교해보더라도 두 사업 사이에 중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래의 표는 동일한 사찰 내에서 두 사업이 동일한 세부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들을 모은 것이다. 이때 ‘동일한 세부시설’이란 물리적으로 동일 사찰의 구성 부분(예: 대웅전), 또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시설인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동일한 용도인 것은 분명한 시설(예: 요사채)이다.

예컨대 모(某) 사찰의 경우는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지붕보수는 국가유산청 사업의 지원을 받고, 내부보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다.

동일한 세부시설이라 하더라도 같은 해에 두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사업시행 주체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연도를 달리하여 동일한 세부시설에 대한 지원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분명히 확인된다. 동일 대상(예: 요사채)에 대해 연도를 달리하여 예컨대 한 사업에서 단청을, 다른 사업에서 기와교체나 내부 수리를 하는 경우가 관찰된다.

두 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세부시설은 요사채, 공양간 등이며 두 사업이 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보수 작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축을 위한 설계는 국가유산청의 사업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외 시공, 개축, 보수, 기와교체 등은 두 사업 모두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림 V-3] 동일한 건물에 대한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례



자료: 저자 직접 촬영(경남 표충사, 2024. 1. 15.)

〈표 V-20〉 국가유산청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종교문화예산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중복지원 현황(개요)

번호	지역	기초	사찰	중복지원대상
1	서울	성북구	경국사	요사채, 극락보전
2		성북구	흥천사	삼각선원
3	대구	동구	동화사	설법전
4	인천	강화군	전등사	향로전
5		강화군	정수사	석축정비
6	광주	동구	증심사	적목당
7	대전	대덕구	비래사	배수로정비
8	경기	가평군	현등사	극락전
9		평택시	심복사	향림당
10		여주시	신록사	삼성각
11	충북	영동군	반야사	선원
12		옥천군	용암사	요사채
13	충남	공주시	갑사	대웅전
14		논산시	관촉사	대웅전
15		공주시	동학사	요사채
16		논산시	쌍계사	대웅전, 범종각
17		부여군	무량사	향적당
18		당진시	영탑사	산신각
19	전북	김제시	금당사	극락전
20		김제시	금산사	상서전, 화장실, 종무원숙소
21		부안군	내소사	서래선림
22		고창군	문수사	만세루
23		완주군	정수사	극락전
24	전남	고흥군	능가사	관풍료
25		나주시	다보사	천불전
26		나주시	죽림사	선방
27		순천시	송광사	선열당
28		순천시	정혜사	요사채
29		화순군	만연사	요사채
30		화순군	쌍봉사	요사채
31		구례군	연곡사	일주문
32		순천시	정혜사	요사채

〈표 V-20〉의 계속

번호	지역	기초	사찰	중복지원대상	
33	전남	나주시	죽림사	선방	
34		구례군	화엄사	금정암 원통전	
35	경북	경산시	경흥사	요사채	
36		의성군	고운사	단청	
37		안동시	광흥사	배수로 정비	
38		청송군	대전사	회연당 보수	
39		영천시	봉림사	설법전	
40		문경시	봉암사	남훈루	
41		청도군	운문사	칠성각	
42		영천시	은해사	요사채	
43		문경시	봉암사	남훈루	
44		김천시	직지사	사천왕문	
45		예천군	한천사	선방	
46		영주시	흑석사	석축, 배수로 정비	
47		경남	창녕군	관룡사	요사채
48			산청군	대원사	명부전
49	양산시		미타암	요사채, 석굴법당	
50	하동군		쌍계사	화장실	
51	고성군		옥천사	공양간	
52	밀양시		표충사	원통당, 공양간	
53	합천군		해인사	요사채	
54	강원	인제군	백담사	만해교육관, 범종루, 법화실	
55		홍천군	수타사	흥회루	
56		정선군	정암사	목우당	

자료: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끝으로, 앞에서 설명한 네 번째 정의에 따라 사찰 내 동일 구성요소에 대한 두 부처의 지원 현황을 요사채, 공양간, 그리고 중무원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사채의 경우, 2011~2023년 기간 중 자료에 파악된 267개 사찰 중에서 두 부처 중 어느 쪽에서라도 지원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찰은 128개(=267-139)이다. 그중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받은 사찰은 77개(=267-190),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원을 받은 사찰은

68개(=267-199)이다. 이 중 두 기관 모두로부터 받은 사찰은 17개로 267개 사찰 중 6.4%, 한 번이라도 지원받은 사찰 128개 중 13.3%이다.

〈표 V-21〉 사찰단위 문체부, 국가유산청 요사채 지원횟수 분포(2011~2023년)

(단위: 사찰 개수)

문체부 지원횟수 국가유산청 지원횟수	0	1	2	3	합계
0	139	34	16	1	190
1	38	9	0	0	47
2	11	5	0	0	16
3	6	1	0	0	7
4	5	1	0	0	6
9	0	0	1	0	1
합계	199	50	17	1	267

자료: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예산 측면에서 보면 2011~2023년 기간 중 요사채 지원을 받은 128개 사찰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요사채 관련 지원예산 총액은 718억원이며 그중 국가유산청 사업 관련 예산은 531억원으로 74%이다. 그중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사찰에 대한 지원금액은 165억원으로 두 기관 사업 관련 예산 총액 718억원의 30.0%이다. 이 중에서 중복지원 받은 사찰에 대한 국가유산청 사업 관련 예산은 125.5억원으로 요사채 지원 국가유산청 사업 관련 예산 531억원의 23.6%이다.

〈표 V-22〉 사찰단위 문체부, 국가유산청 요사채 지원예산(중앙+지방) 분포(2011~2023년)

(단위: 백만원)

두 기관 사업 합계					
문체부 지원횟수 국가유산청 지원횟수	0	1	2	3	합계
0	0	6,908	7,041	780	14,729
1	16,358	4,530	0	0	20,888
2	8,030	4,970	0	0	13,000
3	7,664	1,392	0	0	9,056
4	8,449	1,530	0	0	9,979
9	0	0	4,100	0	4,100
합계	40,501	19,330	11,141	780	71,752

〈표 V-22〉의 계속

국가유산청 사업					
문체부 지원횟수 국가유산청 지원횟수	0	1	2	3	합계
0	0	0	0	0	0
1	16,358	3,310	0	0	19,668
2	8,030	3,670	0	0	11,700
3	7,664	942	0	0	8,606
4	8,449	1,290	0	0	9,739
9	0	0	3,340	0	3,340
합계	40,501	9,212	3,340	0	53,053

주: 반올림으로 합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둘째, 공양간의 경우, 2011~2023년 기간 중 자료에 파악된 267개 사찰 중에서 두 부처 중 어느 쪽에서라도 지원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찰은 90개(=267-177)이다. 그중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받은 사찰은 70개(=267-197), 문화관광체육부의 지원을 받은 사찰은 27개(=267-240)이다. 이 중 두 기관 모두로부터 받은 사찰은 5개로 267개 사찰 중 1.9%, 한번이라도 지원받은 사찰 90개 중 5.6%이다.

〈표 V-23〉 사찰단위 문체부, 국가유산청 공양간 지원횟수 분포(2011~2023년)

(단위: 사찰 개수)

문체부 지원횟수 국가유산청 지원횟수	0	1	2	합계
0	177	18	2	197
1	31	3	0	34
2	22	1	1	24
3	9	0	0	9
4	2	0	0	2
5	2	0	0	2
합계	240	22	3	267

자료: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셋째, 종무원의 경우, 2011~2022년 기간 중 자료에 파악된 267개 사찰 중에서 두 부처 중 어느 쪽에서라도 지원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찰은 27개(=267-240)이다. 그중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받은 사찰은 19개(=267-248),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은 사찰은 9개

(=267-258)이다. 이 중 두 기관 모두로부터 받은 사찰은 1개이다.

〈표 V-24〉 사찰단위 문체부, 국가유산청 종무원 지원횟수 분포(2011~2023년)

(단위: 사찰 개수)

국가유산청 지원횟수 \ 문체부 지원횟수	0	1	합계
0	240	8	248
1	8	1	9
2	5	0	5
3	5	0	5
합계	258	9	267

자료: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러한 중복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두 가지 큰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동일 사찰 내 동일 시설물에 대한 중복지원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관별 소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관련성 등에 대한 기관 간 견해 차이 및 사업별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한 상호 긴밀한 협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문화재 직접 관련성 또는 공공의 이용가능성(문화재 향유 등) 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이는 시설 유형(요사채, 공양간 등)에서도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중복지원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는 점이다.

2) 중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이상과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두 사업 사이의 중복성을 낮추고 사찰 문화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수정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사찰 내 문화재 및 그 문화재와 관련이 높은 시설물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청이 지원하고, 그 밖의 시설물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사찰시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종교시설(불전·강당·승당·종루·산문 등)의 경우,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문화재를 보호·수장하고 있는 시설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등(단, 구체적인 구역의 범주·범위는 부처 간 상호 협의 필요) 내 시설 등 문화재와 연관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지원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종교시설로 보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별 대상 시설을 구분하는 방안은 중복지원 문제를 해소하면서, 국고보조율 및 자부담 등을 현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별 대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여전히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방안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이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상기 제시한 원칙을 기반으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별 명확한 시설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관련 지침 및 지원계획 등에 반영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표 V-25〉 국가유산청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원대상과 세부지원내용 분류 코드 체계

지원대상	세부 지원내용
① 당해 문화재 수리	가. 문화재의 전체 복원
	나. 문화재의 부분 복원
	다. 목조문화재의 전체 해체 보수
	라. 목조문화재의 도리이상 해체 보수
	마. 목조문화재의 번와 보수 등 '다 ~ 라' 이외의 보수
	바. 석조문화재의 전체 해체 보수
	사. 석조문화재의 부분 해체 보수
	아. '다 ~ 사' 이외의 문화재 보수
	자. 문화재의 보존처리, 훈증 등
	차. 고가옥 초기이영잇기
	카. 천연기념물(동물) 증식·복원·혈통보존·표본·박제, 사육, 도래지·번식지·서식지(먹이터) 조성 및 정비 등
	타. 천연기념물(식물) 생육환경 개선(상처치료, 병충해방제, 수관정리, 지지대 설치, 모니터링 등), 후계목 육성, 수림지 복원 등
	파. 천연기념물(지질) 오염 제거, 주요 생성물 보존처리 등 원형보존, 분포도 작성(측량)
	하. 수중생태계 변화상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오염물질 제거 등 수중정화사업
② 토지·건물 매입	가. 토지 매입
	나. 건물 매입(국보, 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에 한함)
	다. 지장물 매입 및 정비
③ 발굴조사	가. 지표조사
	나. 시굴조사 및 시굴지(유구 포함) 정비
	다. 발굴조사 및 발굴지(유구 포함) 정비
④ 문화재 보호 시설 및 조치	가. 문화재 보호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제작
	나. 문화재 수장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국보·보물·등록문화재 중 동산 문화재, 사적,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에 한함)
	다. 목조건축물의 방충방염, 방부제 도포
	라. 내진 등 문화재 재해 방지 등의 조치(제5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은 제외)

〈표 V-25〉의 계속

지원대상	세부 지원내용
⑤ 문화재 기록화 및 연구	가. 정밀실측(3D 스캔 포함)
	나. 단청·벽화 기록화 등
	다. 종합정비계획 수립
	라. 정밀안전진단(정기계측 등 모니터링 포함), 보존상태 진단
	마. 허용기준 마련 및 조정
	바. 문화재구역 조정
	사. 문화재의 가치 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및 시설 건립
⑥ 문화재 관리시설	가. 관리소, 안내소, 경비소 등의 설치 및 정비
⑦ 문화재 관람편의시설	가. 진입로(소방도로 포함), 탐방로 정비
	나. 화장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다. 휴게시설의 설치 및 정비
	라. 주차장의 설치 및 정비
	마. 안내판(표지판)의 설치 및 정비
⑧ 문화재 부대시설	가. 석축(옹벽) 설치 및 정비
	나. 담장 설치 및 정비
	다. 배수시설 설치 및 정비
	라. 지반 개량 등 정비
	마. 보호책(경계책) 설치 및 정비
	바. 연지, 호소, 하천 정비
⑨ 문화재 가치 증진	가. 유물전시관 등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보수
	나. 영인본, 모사도, 복제품 등 제작(단순 소장 목적이 아닌 공공을 위한 활용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함)
	다. 문화재 전체를 인식하기 위한 모형 제작(면단위 문화재에 한함)
	라. 문화재구역 내 문화재 활용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의 재현
	마. 공공을 위한 활용 목적(전시관, 역사관 등)으로 하는 기존 건물의 내부시설의 정비
⑩ 문화재 경관정비	가. 문화재구역 내 수목 정비 및 예초
	나. 문화재구역 내 경관불량 건축물과 시설물의 철거정비 및 민묘의 이장
	다. 문화재 경관조명
	라. 경관 포인트(조망점 등) 조성 및 경관저해물 제거
	마. 문화재구역 내 역사성이 있거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의 보수
	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1구역) 내 문화재와의 관련성과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로 문화재 보존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물의 보수정비(국보, 보물에 한함)
	사. 민속마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공공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보수 등과 저잣거리 조성 및 정비(국가민속문화재 중 민속마을에 한함)
	아. '가 ~ 사' 이외의 사업으로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개선 및 조성을 위한 사업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

다. 지원대상 선정 합리화: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 돌봄사업의 대상은 지정유형 기준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으로 나누어진다. 국가지정문화재에는 국보와 보물, 사적과 천연기념물 외에도 국가등록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등이 포함된다. 시도지정문화재에는 시도기념물, 시도등록문화재, 시도문화재자료, 시도민속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등이 포함된다. 비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외로 선택된 문화재이다. 비지정 문화재의 가치가 국가나 시도가 지정한 문화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지만, 지정되는 절차에 있어서는 명백한 차이가 난다.

일반적인 문화재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은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¹⁵⁾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첫 번째 단계에서 문화유산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및 국가무형유산(보유단체 포함) 보유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한다. 다음 단계에서 사전 조사 신청을 접수한 도·시·군·구청 등에서는 국가유산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국가유산청에서는 문화유산위원, 문화유산전문위원, 기타 관계전문가 등 관계전문가에게 조사를 요청하여, 해당 전문가들이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에 제출한다. 그다음 단계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다. 국가유산청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에 보내며, 지정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지정된다. 마지막 단계는 지정 결과의 통지로, 국가유산청에서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지정통지를 하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및 국가무형유산보유자에게 지정통지를 한다.

시도의 문화재 지정도 유사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우선 도내의 시와 군에서 지정 관련 신청자료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도로 전달한다. 다음 단계에서 신청 문화재에 대한 현지 조사 및 타당성조사가 진행된다. 이때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이 현지 조사를 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지정 관련 1차 예비 심사(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고 도보에 공고(예고)된다. 가결된 건에 대해서는 지정 목록으로 확정되고(지정 예고 고시) 부결된 건

15) 이 내용은 아래의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https://www.nrich.go.kr:9165/seoul/boardView.do?menuIdx=1563&bbscd=35&bbs_idx=41940&gubun=1

은 절차가 종료되어, 시군에 통보된다. 지정된 예비 목록에 대해서는 30일간 관련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문화재 지정 확정을 위한 2차 심의(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 및 인정되고 도보로 고시된다.

비지정 문화재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각 지역의 문화재 돌봄센터가 지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V-26>은 시도별 문화재 돌봄 대상 문화재의 지정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문화재 돌봄대상 문화재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가 21.5%, 시도지정문화재가 51.0%, 비지정문화재는 27.5%에 달한다. 그런데, 각 시도별로 비지정 문화재의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비지정 문화재는 3개소로 전체 돌봄대상 문화재의 3%에 불과하지만, 세종시의 경우는 비지정 문화재의 비중이 71%에 이른다.

〈표 V-26〉 시도별 문화재 돌봄 대상 문화재의 지정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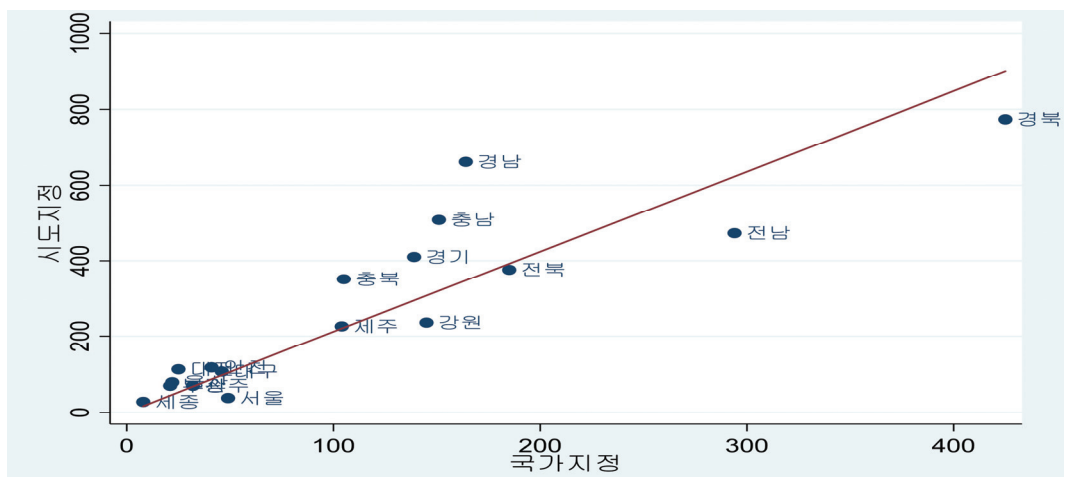
지역	국가지정		시도지정		비지정		계
	개소	비중	개소	비중	개소	비중	
서울	49	54.4%	38	42.2%	3	3.3%	90
부산	21	15.2%	70	50.7%	47	34.1%	138
대구	46	13.3%	107	31.0%	192	55.7%	345
인천	41	13.9%	118	40.0%	136	46.1%	295
광주	32	15.5%	70	33.8%	105	50.7%	207
대전	25	12.1%	113	54.9%	68	33.0%	206
울산	22	13.8%	79	49.7%	58	36.5%	159
세종	8	6.5%	28	22.6%	88	71.0%	124
경기	139	17.2%	410	50.8%	258	32.0%	807
강원	145	23.8%	236	38.8%	227	37.3%	608
충북	105	16.8%	351	56.3%	168	26.9%	624
충남	151	17.4%	508	58.7%	207	23.9%	866
전북	185	24.5%	376	49.7%	195	25.8%	756
전남	294	30.6%	473	49.3%	193	20.1%	960
경북	425	29.6%	774	16.6%	239	16.6%	1,438
경남	164	19.1%	662	77.2%	32	3.7%	858
제주	104	16.7%	226	36.4%	291	46.9%	621
계	1,956	21.5%	4,639	51.0%	2,507	27.5%	9,102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지역별 비지정 문화재의 과소 여부에 대해 자료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자. 각 지역의 돌봄 문화재 수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지역이 있으므로 단순히 비지정문화재의 수가 많다는 것만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이하에서는 문화재 보유에서 보이는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하여 돌봄 대상이 되는 비지정문화재 수 보유의 상대적 차이에 대해 살펴본다.

[그림 V-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지역별로 돌봄 대상이 되는 국가지정문화재 수와 시도지정 문화재 수는 대체로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많은 지역이 시도지정문화재 또한 많은 현상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추세를 근거로 판단해 보면 대체로 도 지역에 비해서 시 지역이 돌봄대상 국가지정문화재에 비해 돌봄대상 시도문화재 수가 적은 편이다. 하지만 도 지역 내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도지정 문화재 수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V-4] 지역별 국가지정 돌봄문화재 수와 시도지정 돌봄문화재 수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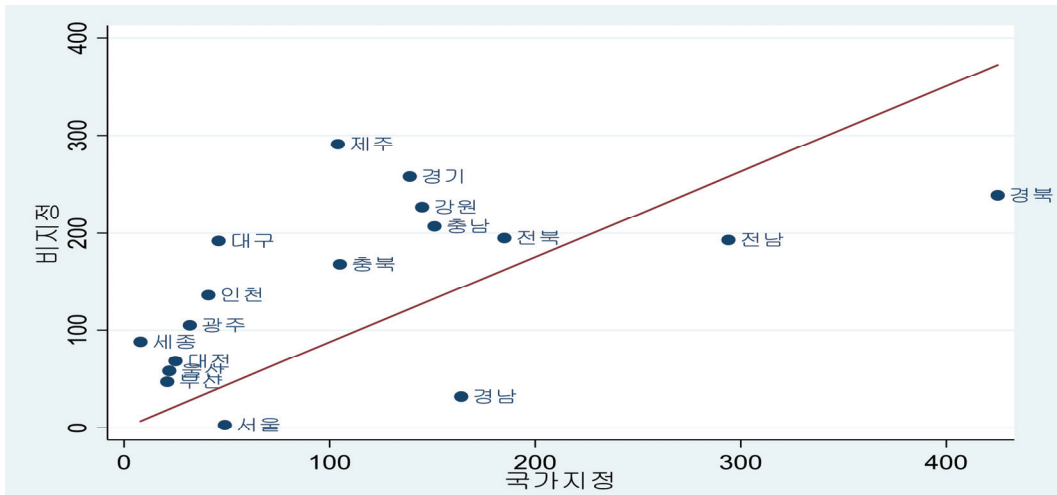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런 관계를 고려할 때 지역별 돌봄 대상 비지정 문화재 수 역시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 문화재 수와 비례관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데이터에서 그런 관계가 확인된다. 추세를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1점당 0.88점의 비지정 문화재가, 시도지정문화재 1점당 0.39점의 비지정 문화재가 존재한다.¹⁶⁾ 이런

16) 이런 추세는 상수항을 포함하지 않는 통상회귀분석(OLS)을 통해 구할 수 있다. 그림에서 추세를 보여주는 선은 회귀식에서 도출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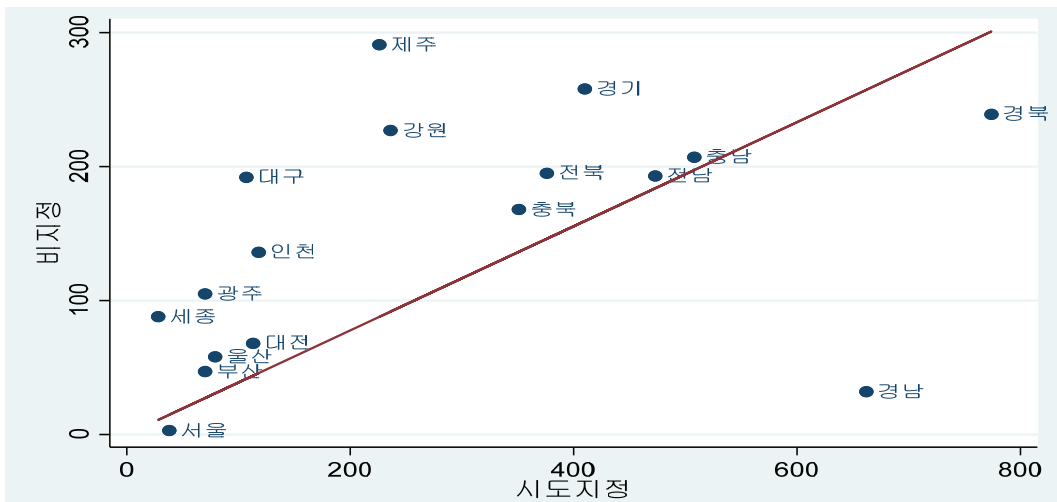
추세를 구할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지정 문화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수의 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지역이 보유한 국가지정이나 시도지정 문화재에 비해 비지정 문화재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에서 보이는 추세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비지정 돌봄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V-5] 지역별 국가지정 돌봄문화재 수와 비지정 돌봄문화재 수의 관계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V-6] 지역별 시도지정 돌봄문화재 수와 비지정 돌봄문화재 수의 관계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상에서 살펴본 지역별 문화재 분포는 돌봄사업의 국고보조율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상식적으로 돌봄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국가지정 문화재의 비중에 비례하는 것이 타당하리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기준에 따르면 지역별 보조율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는 필요 이상으로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현시점의 문화재 분포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의 각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국고보조율을 결정한다면 국가지정문화재의 선정 건수, 관리면적 및 투입인력 등의 비중을 고려하여 보조율을 인하하는 것이 현재의 50%보다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도지정 문화재나 비지정 문화재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지역이 돌봄 문화재의 지정을 남발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돌봄대상이 되는 비지정 문화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V-27>에서도 나타나듯이 2014년 이후 비지정 문화재의 증가는 국가지정이나 시도지정 문화재 수의 증가율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예를 들어 2015~2023년 사이 시도지정 문화재의 연평균 증가율은 3.2%인데 반해 비지정문화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5.8%에 달한다.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 돌봄 문화재 대상의 지정에 있어 국가나 시도지정 문화재와 같은 지정된 절차가 없다는 사실이 비지정 문화재 수의 증가와 함께 동 비중의 지역별 편차를 낳는 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돌봄 대상이 되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나 시도지정 문화재는 엄격한 문화재 지정절차가 있지만, 같은 돌봄대상 문화재라도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는 지역돌봄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실정이다. 국가나 시도가 지정하지 않은 돌봄 대상 문화재 선정에서는 해당 지역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지정을 위한 표준적인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V-27〉 국가지정, 시도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지정 연도별 현황

(단위: 개)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가	1,318	1,345	1,186	1,428	1,709	1,807	1,862	1,900	1,944	1,956
(증가율)	-	2.0%	-11.8%	20.4%	19.7%	5.7%	3.0%	2.0%	2.3%	0.6%
시도	3,498	3,628	3,587	3,671	3,621	3,891	4,129	4,368	4,529	4,639
(증가율)	-	3.7%	-1.1%	2.3%	-1.4%	7.5%	6.1%	5.8%	3.7%	2.4%
비지정	702	853	1,235	1,462	1,718	1,889	2,135	2,397	2,574	2,507
(증가율)	-	21.5%	44.8%	18.4%	17.5%	10.0%	13.0%	12.3%	7.4%	-2.6%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음으로 문화재 돌봄사업의 돌봄 인원에 대해 생각해 보자. 문화재 돌봄사업은 전국의 4,639개의 장소를 23개 지역센터 돌봄센터에서 820명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 중 약 70%에 해당하는 567명의 인원이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건설기술자, 행정사, 그리고 그 외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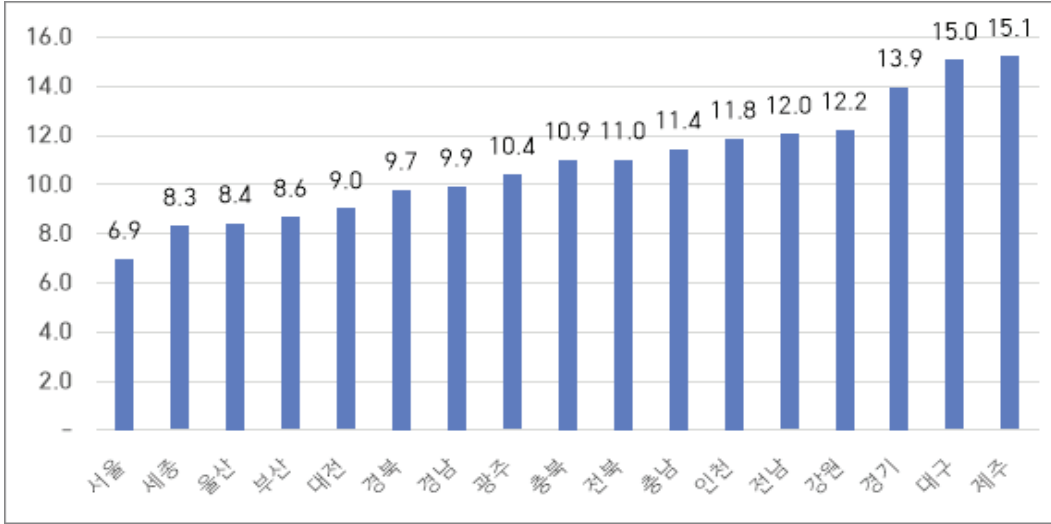
전국 평균으로는 1인당 약 11개소의 문화재를 돌보고 있는데, 1인당 평균 돌봄 문화재 수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의 7개소에서 제주의 13개소에 이르기까지 지역 별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지역의 문화재 분포 현황, 혹은 밀집도에 따라 돌봄 인원당 문화재 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지역 간 편차는 지역 간 문화재 분포의 차이로만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표 V-28〉 지역문화재돌봄센터 현황

지역	세부지역	센터명	인원	전문인력
서울	종로구	(특)문화유산국민신탁	13	10
부산	-	(사)부산문화재기술원	16	9
대구	-	(사)대구문화유산	23	16
인천	-	(사)인천문화재보존사업단	25	12
광주	-	(사)대동문화재단	20	18
대전	-	(사)백제문화원	23	18
울산	-	(재)울산연구원	19	15
세종	-	(사)우리문화유산연구원	15	12
경기	-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58	47
강원	-	(재)강원문화재연구소	50	43
충북	-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57	39
충남	동남권	(사)한옥체험업협회	37	28
	서북권	(사)충남문화재기술원	39	25
전북	동부	(재)문화재아웃리치연구소	34	16
	서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35	28
전남	-	(사)문화재예방관리센터	80	71
경북	북부	(사)한문화유산	58	38
	남부	(사)신라문화원	59	35
	서부	(사)교남문화유산	31	18
경남	동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43	30
	서부	(사)경상문화재돌봄협회	44	15
제주	문화유산	(재)제주문화진흥재단	18	9
	자연유산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23	15
계			820	567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

[그림 V-7] 돌봄인원 대비 돌봄 문화재 수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라. 인력배치 효율화: 재난안전관리사업

문화재 돌봄,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공능방재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에서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보상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서는 인력배치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2023년에는 문화재 돌봄에 820명, 재난안전관리에 634명이, 공능방재시스템 구축 353명이 배치되어 있다. 2023년 기준으로 문화재 돌봄 내역사업의 64%에 해당하는 117억 원가량이 인건비이며,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101억 32,000만원 씩 총 202억 64,000만원이 인건비인데 이는 전체 예산의 76%에 해당한다. 공능방재시스템 구축의 경우에도 전체 예산의 71%인 117억원이 방재 인력 운영 내역사업에 쓰이고 있다.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대상은 문화재 중에서 일부에 해당한다. <표 V-29>는 지역별로 안전 경비원이 배치된 장소와 안전 경비원의 수, 그리고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총예산을 2023년과 2024년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사이 전국의 안전경비원 배치 장소 수나 총 경비원의 수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지역별로 몇 군데 증가한 곳과 감소한 곳이 있을 뿐이다.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예산은 약 5% 증가하였는데, 이는 1인당 지원액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2023년의 1인당 예산은 3,196.2만원이며 2024년의 1인당 예산은 3,371.6만원이다.

〈표 V-29〉 지역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관련 안전경비원 배치현황

지역	2023년			2024년		
	개소	인원	예산(천원)	개소	인원(명)	예산(천원)
서울	4	26	830,960	4	26	876,564
부산	4	14	447,440	4	14	471,996
대구	8	25	799,000	8	25	842,850
인천	3	8	255,680	3	8	269,712
대전	1	3	97,240	1	3	102,466
울산	2	4	127,840	2	4	134,856
세종	1	4	127,840	1	4	134,856
경기	16	44	1,406,240	14	38	1,281,132
강원	10	34	1,086,640	10	34	1,146,276
충북	5	13	415,480	5	13	438,282
충남	14	46	1,470,160	14	47	1,584,558
전북	21	69	2,205,240	21	67	2,258,838
전남	22	71	2,269,160	22	67	2,258,838
경북	60	197	6,296,120	61	205	6,911,370
경남	15	67	2,141,320	16	70	2,359,980
제주	3	9	287,640	3	9	303,426
계	189	634	20,264,000	189	634	21,376,000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

실제로 이러한 안전요원의 배치가 긴급한 상황에서 더 큰 재난을 막는 몇 건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표 V-30〉은 2023년에 있었던 5건의 안전경비원의 수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유사한 사례가 2022년 7건, 2021년 6건, 2020년 11건, 2019년 1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빈발하지는 않지만, 안전을 위한 장치가 설치되지 않고 주변에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상황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표 V-30〉 2023년 안전경비원 수범사례

발생일시	장 소	대응유형	피해상황	모범 활동내용
12. 12.	예천 용문사 (사찰음식 체험관)	화재 발생 시 초동대응	- 용문사 문향재(사찰음식체험 관) 화재 발생	- 문향재(사찰음식체험관)에서 발생한 화재를 순찰 중에 발견, 신속한 초기 진압과 상황 보고를 통하여 피해 최소화

〈표 V-30〉의 계속

발생일시	장 소	대응유형	피해상황	모범 활동내용
11. 15.	신흥사 극락보전	문화재 주변 야생동물 출현에 대한 대응	- 야간에 노루가 극락보전 주 변에 출현하여 문화유산 훼손 및 관람객 위해가 우려 되는 상황	- 극락보전 주변 가로등과 불빛등 추가 설치 - 야생동물 출몰 빈도를 줄여 문화재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7. 18.	금산사 미륵전	풍수해 발생 시 비상대응	- 집중호우로 인한 미륵전 좌 측면 지붕 수막새 기와 2장 탈락	- 집중호우를 예의주시하고 문화유산 순찰 및 점검 활동 강화 - 미륵전 지붕수막새 기와 탈락 최초 신고
2. 19.	안동 의성김씨 종택 인근	화재 발생 시 초동대응	- 종택 인근 주택 뒤뜰 장작 더미에서 발화	- 안전경비원(2명)은 화재 발견 즉시 비치된 소화기 5대 및 수돗물 이용 하여 주불 초기 진화 - 또한 신속한 신고 후 출동한 소방대와 화재 진압 협력 - 화재 초기 진압으로 종택에 소재한 문화 재 피해 사전 예방
1. 25.	신흥사 중흥교 앞	화재 발생 시 초동대응	- 탐방객이 버린 담배꽂초로 인해 수목(고목나무)에 화 재 발생	- 고목나무 화재 발생 후 초기 진압으로 피해상황 없음 - 상황 발생 직후 CCTV로 확인, 용의자 신변 확보 및 조치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

더 자세한 2024년의 재난안전관리 사업 대상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이 목록에서 눈에 띄는 점은 사찰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목록을 살펴보면 2024년 현재 전체 재난안전관리 사업 대상 189개소 중 약 60%에 해당하는 112개소가 문화재 소유자가 상주하는 사찰이나 향교에 소재해 있다. 이렇게 문화재 주변에 문화재 소유자가 상주하는 경우라면 적절한 시설의 설치와 안전요원과 관리주체 간 협력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록에서도 보듯이 많은 경우 안전관리원 4인이 주야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근처에 안전관리원 외의 상주 인원이 있는 문화재의 경우는 모니터링 설비를 보완하여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방재시설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하는 등 방재인력과 상주인력 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를 갖추어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한 방재인력의 배치는 문화재 소유자의 상주 여부, 소방시설 등 입지 요건에 따른 초기대응 시간, 소방·방범시설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 상태, 해당 문화재의 활용 현황 등을 종합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 국고보조율 합리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의 삼국시대 고도 지역에서 진행되는 보존 및 육성 사업은 상당 부분 고도문화재와 관련된 토지매입, 발굴, 복원, 정비와 관련된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인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과 구분되는 이 사업의 특징적인 내용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50%이다. 사업 도입 당시 70%였던 보조율에서 낮아졌다. 이런 국고보조율의 하락은 사업의 이득이 주로 지역사회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보조율과 함께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사업의 혜택이 자치단체라는 공공의 이익으로도 귀속되지만 사업에 참여한 개개의 자산 소유주에게도 귀속된다는 점이다. 즉, 사업의 결과 생활환경과 옛 유적지로서 지역의 이미지가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개인 주택의 가격 상승 또한 기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업의 혜택이 지역사회 못지 않게 개별 자산의 소유자에게도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점은 지가에 대한 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⁷⁾

우선 이 사업의 직접 대상이 되는 지역의 지가부터 살펴보자. <표 V-31>은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특정 지번에 대해 사업이 진행된 2015년 이후의 지가 상승률을 도출한 자료이다. 각 지번은 고도지구 내에 속한 주택지역에서 선별하였다. 4개의 지역에서 사업 대상인 고도지구 내 두 개의 지번을 선택하고 2010년 이후 공시지가의 증가율을 구한 것이다. 한편 지가 상승률의 평균값은 사업이 시작된 2015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모든 주택의 지가 상승률을 구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제한된 정보로부터도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4개 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큰 편차이다. 예를 들어 경주의 경우 경주 전체의 주택가격 상승률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이지만 다른 지역의 지가 상승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실제로 뒤에서도 확인되겠지만 공주, 부여, 익산 지역 주택의 경우 시나 군의 평균 상승률과 비슷하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지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간 차이는 국고보조금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의 효과가 개인에게 귀속되며, 더 나아가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 국고보조금이라는 형태로 일괄되게 모든 지역에게 지원되는

17) 지가에 대한 분석이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가 분석의 의미는 ①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혜택이 지역적으로 매우 제한이 되어 있으리라는 점 ② 그 혜택에 있어 지역 간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다.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15년 이전과 이후의 지가 상승률에서 보이는 차이다. 경주는 2015년 이후와 이전의 지가 상승률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공주는 이전과 이후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지만 경주만큼 큰 차이는 아니다. 한편 부여나 익산 지역은 2015년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경주와 공주 지역에서 보이는 사업 전후의 평균 지가 상승의 원인이 고도 이미지 사업에 있는지를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업의 효과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즉, 지가 상승률에서 보이는 지역 간 차이가 이 사업에 따른 차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재정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동일한 지원이 정당인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사실은 이러한 지가의 변화는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내에서도 지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사업의 영향을 받는 고도지역 내에서도 사업이 주는 혜택의 크기는 가구별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가구가 받는 혜택의 크기가 다름에도 같은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지원 방식이 아니다. 특히 가능하면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고지원의 정당성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표 V-31〉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지역 내 주택의 지가 상승 사례

연도	경주		공주		부여		익산	
	A지번	B지번	C지번	D지번	E지번	F지번	I지번	J지번
2011	2.1%	-6.3%	-0.6%	-1.5%	0.0%	0.0%	-1.2%	0.8%
2012	0.0%	0.7%	0.3%	-2.5%	-1.9%	0.0%	0.9%	-0.4%
2013	0.0%	-2.7%	-11.3%	2.6%	4.5%	3.3%	-1.0%	0.2%
2014	0.2%	9.9%	-0.4%	2.7%	2.0%	3.2%	3.7%	4.3%
2015	7.9%	8.4%	0.7%	4.8%	3.9%	5.5%	4.9%	7.1%
2016	14.9%	10.1%	-1.8%	2.8%	3.7%	3.7%	8.5%	6.0%
2017	3.7%	7.8%	4.8%	10.0%	5.4%	1.4%	2.5%	4.5%
2018	13.5%	7.7%	8.4%	3.0%	2.0%	2.8%	4.2%	3.1%
2019	19.2%	20.4%	8.1%	6.8%	2.2%	2.7%	5.0%	3.8%
2020	11.4%	21.8%	2.4%	3.9%	1.1%	2.7%	-0.3%	2.2%
2021	24.1%	26.8%	2.6%	3.3%	5.5%	5.5%	3.7%	1.7%
2022	19.1%	18.7%	2.8%	3.0%	5.4%	4.3%	5.2%	0.0%
2023	-2.2%	-1.7%	-5.3%	-2.3%	-6.2%	-6.8%	-3.3%	-2.7%

〈표 V-31〉의 계속

연도	경주		공주		부여		익산	
	A지번	B지번	C지번	D지번	E지번	F지번	I지번	J지번
평균	8.8%	9.4%	0.8%	2.8%	2.1%	2.2%	2.5%	8.8%
2020년 이후 평균	13.0%	14.0%	2.8%	3.8%	2.4%	2.0%	3.2%	2.3%
2020년 이전 평균	2.1%	2.0%	-2.2%	1.2%	1.7%	2.4%	1.4%	2.4%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한편, 이 사업의 외부성이 지역 바깥으로 크게 확대되지는 않으리라는 사실도 지가 상승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V-32〉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지역과 같은 도에 속하는 다른 지역(비교지역)들 사이의 주택용도 지가의 상승률을 계산하여 제시하고 있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이 진행되는 경주, 공주, 부여, 익산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을 각각 경상북도 시 지역, 충청남도 시 지역, 충청남도 군 지역, 전라북도 시 지역과 비교하고 있다. 이 비교를 통해 당해 사업이 시작된 2015년 이후 네 개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그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의 다른 지역(비교 지역)에 비해 특별히 높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경주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경주 전체의 지가 상승률과 위에서 살펴본 사업 진행 지역의 지가 상승률 간 차이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다른 사업 지역의 경우, 사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 내 지가 상승률은 동일 시 또는 군의 지가 상승률, 또는 해당 시군이 속한 광역시도의 다른 시나 군 지역의 지가 상승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사업의 영향이 해당 시나 군 안에서도 넓은 지역으로 퍼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표 V-32〉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지역과 비교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

연도	경북 시지역	경주	충남 시지역	공주	충남 군지역	부여	전북 시지역	익산시
2015	3.5%	3.0%	2.9%	1.5%	1.4%	3.5%	2.0%	1.4%
2016	3.3%	3.4%	2.2%	1.8%	2.1%	1.7%	3.0%	1.9%
2017	3.2%	2.7%	2.6%	2.5%	2.1%	2.3%	2.6%	1.8%
2018	3.4%	3.2%	4.3%	1.8%	3.4%	3.1%	3.9%	4.5%
2019	3.0%	3.5%	2.2%	2.6%	2.6%	2.9%	2.9%	4.2%
2020	2.4%	3.4%	1.2%	2.0%	1.7%	3.0%	2.6%	3.5%
2021	1.8%	2.2%	2.1%	2.7%	2.1%	2.8%	2.6%	2.7%
2022	2.3%	2.4%	2.8%	3.8%	2.8%	2.8%	2.9%	2.7%
2023	1.4%	1.5%	1.5%	1.2%	1.6%	1.2%	2.0%	1.6%
평균	2.9%	3.0%	2.5%	2.3%	2.3%	2.8%	2.8%	2.8%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이렇게 사업의 영향범위가 특정지역에 국한되고 사업대상 지역별, 가구별 혜택의 정도에 차이가 나는 사업이라면, 중장기적으로 국고보조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이 사업이 국가 인지도를 높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 참여가 저조하여 과거의 집행률이 낮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의 보조금이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일종의 마중물로서 기능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조율 자체를 낮추는 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사업이 일정 단계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예컨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주택의 공사가 50% 이상이 마친 단계라면 이후 자치단체의 재원과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원으로 분담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경우 추가적인 이점으로 집행률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초기단계에서 주민들의 참여 저조로 집행이 부진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만약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국고 보조가 축소·중단된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이 낮아지기 전에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이끌 수도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성격상 보조율을 낮추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일괄적으로 보조율을 낮추는 방식 외에도 사업의 진행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바. 공능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의 개선 방안

〈표 V-33〉은 최근 4년간의 공능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인원 배치 현황을 정리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인력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는데, 2023년의 인력 1인당 약 예산은 3,314만원으로 재난안전 관리사업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즉, 공능방재시스템 구축사업과 재난안전 관리사업은 대상 문화재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사업의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현재 4대 궁궐은 사각지대 없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각종 소방시설과 방재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지만 조선왕릉의 경우는 산속에 있는 경우가 많아 산불의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 특히 관리면적이 넓고 산으로 둘러싸인 경우가 많은 조선왕릉의 경우는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넓은 면적을 체계적으

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방재시설을 확충하고 모니터링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화재 카메라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상황실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투입 인력 대비 방재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궁궐의 경우도 방재시설 노후화가 진행되어 교체와 보수가 요구된다. 또한 왕릉에서는 화재 수신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차가 출동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노후화된 방재 제품이나 외산 제품을 국산 제품으로 교체하고, 외산 제품의 경우 부품 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¹⁹⁾ 시설 강화와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방재 효과를 높이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은 재난방지 사업처럼 궁능방재시스템 사업에도 적용된다.

〈표 V-33〉 궁능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연도별·기관별 방재 인력 배치 현황

기관명(소재지)	2020	2021	2022	2023
경복궁관리소(서울 종로구)	41	42	44	46
창덕궁관리소(서울 종로구)	22	23	25	26
덕수궁관리소(서울 종로구)	50	51	54	54
창경궁관리소(서울 종로구)	22	24	26	27
종묘관리소(서울 종로구)	17	21	21	20
세종대왕유적관리소(경기도 여주시)	14	17	17	17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경기도 구리시)	40	46	52	52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서울시 노원구)	41	42	51	52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경기도 고양시)	41	41	45	45
현충사관리소(충남 아산시)	8	8	8	8
칠백의총관리소(충남 금산군)	6	6	6	6
합계	302	321	349	353

주: 각 왕릉관리소의 담당 문화재는 다음과 같다.

*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동구릉(경기 구리), 순강원·광릉·취경원·홍릉·유릉·사릉(경기 남양주)

*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태릉·강릉(서울 노원구), 정릉·의릉(서울 성북구), 영취원(서울동대문구), 선릉, 정릉(서울 강남구), 현릉·인릉(서울 서초구)

*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서오릉(경기 고양), 양주오릉(경기 양주), 소령원(경기 파주), 파주장릉(경기 파주), 서삼릉(경기 고양), 용릉과 건릉(경기 화성), 파주삼릉(경기 파주), 김포장릉(경기 김포)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

18) 송창영·구원희, 「궁능문화재 방재환경 관리 실태조사 연구 - 4대 궁궐 및 조선왕릉을 중심으로 -」,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7(1), 2022, pp. 55~64

19) 위의 연구에서는 일부 외산 제품이 고장 시 수리 시 5~6개월이나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고장 수리로 인해 모니터링에서 긴 시간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 연구는 사전에 확보가능한 제품을 목록화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국내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지불의사(WTP) 금액 추정결과

지불의사 금액 추정을 위한 설문은 앞의 IV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번에 걸쳐서 제시금액을 제시하는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분석을 위한 최종적인 응답자료는 제시금액에 대하여 '예'라고 응답한 경우와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응답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1.7%는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제시금액에 대하여 지불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V-34〉 전국 응답자의 제시금액별 응답 분포

제시금액 (원)	예-예		예-아니오		아니오-예		아니오-아니오				계
	빈도수 (가구)	비율 (%)	빈도수 (가구)	비율 (%)	빈도수 (가구)	비율 (%)	지불의사있음		지불의사없음		
							빈도수 (가구)	비율 (%)	빈도수 (가구)	비율 (%)	
1,000	54	26.9%	48	23.9%	21	10.4%	7	3.5%	71	35.3%	201
2,000	45	22.3%	46	22.8%	23	11.4%	14	6.9%	74	36.6%	202
3,000	23	11.3%	48	23.6%	16	7.9%	19	9.4%	97	47.8%	203
4,000	21	10.5%	46	23.0%	23	11.5%	22	11.0%	88	44.0%	200
5,000	32	15.8%	42	20.8%	18	8.9%	20	9.9%	90	44.6%	202
계	175	17.4%	230	22.8%	101	10.0%	82	8.1%	420	41.7%	1008

WTP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문화재 보수정비의 가치에 대한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35〉 WTP 모형의 추정결과

모 수	추정계수(t-통계량)
상수(α)	2.0842(17.65)**
$\ln(A)$ 의 계수(β)	1.6428(21.55)**

주: **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실증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위 추정결과를 적용하여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가구당 WTP의 중앙값을 추정한 후 다시 (1-지불거부율), 즉 ((전체 응답자수-지불거부 응답자수)/ 전체 응답자수)를 곱하여 추정된 최종적인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가구당 월평균 WTP

결과를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가구당 WTP는 월 2,060.3원으로 나타났다.

〈표 V-36〉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가구당 월간 WTP의 추정결과

WTP	t-통계량
2,060.3원 [1,882.2~2,261.95원]	21.52**

주: 1: **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을 의미함

2: 괄호 []안의 값은 95% 신뢰구간이며, 이 값은 Krinsky and Robb(1986) 및 Park et al.(1991)이 제안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이 기법은 먼저 추정된 모수 추정치를 평균으로 하고 이 추정치에 대한 분산행렬을 분산으로 하는 다변량 정규분포로부터 개별 모수값들을 5,000회 반복하여 추출하고 이 값들을 이용하여 5,000개의 WTP를 계산함. 마지막으로 5,000개의 WTP값들을 크기 순으로 나열한 후, 분포의 양끝에서 2.5%를 제외하고 남은 값들의 범위를 구해 95% 신뢰구간을 산정함

3: t-통계량은 델타법(Delta-method)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음. 델타법이란 x 라는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x 의 특정 함수 $f(x)$ 의 분산은

$$Var[f(x)] = \left[\frac{\partial f(x)}{\partial(x)} \right]' Var(x) \left[\frac{\partial f(x)}{\partial(x)} \right] \text{을 만족함을 의미}$$

이렇게 추정된 가구당 연간 WTP 추정치에 설문 시점의 전국 가구수와 12개월을 곱해 주면 문화재 보수정비의 연간 총편익을 측정할 수 있다. 통계청 홈페이지의 통계데이터베이스인 KOSIS의 2023년 장래 추계 가구수를 활용하였다. 중앙값 WTP를 활용한 연간 편익은 연간 약 5,398억원으로 계산되었다.

〈표 V-37〉 문화재 보수정비의 연간 편익

WTP(원/가구당)	연	가구수(가구)	총편익(억원)
2,060.3	12개월	21,833,527	5,398.0

한편 본 연구의 할인율은 4.5%이며 설문 시에 추가적인 세금의 지불기간은 5년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설문 시점부터 5년간 총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약 23,697.2억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V-38〉 문화재 보수정비의 총편익 현재가치

(단위: 억원)

연도	편익
1차년도	5,165.6
2차년도	4,943.1
3차년도	4,730.3
4차년도	4,526.6
5차년도	4,331.7
총편익	23,697.2

4. 결과평가: 사업별 정량평가

가. 분석 자료의 구축

문화재 보수 사업군의 효과성 분석은 각 시·군·구별로 보수사업에 투입된 재원이 그 지역의 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군·구 단위로 수집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들이 지역 경제(소득, 사업체 수,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다. 분석 자료는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성과변수들(지역소득, 인공위성 조도, 사업체 수, 고용 수)과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집행예산인 정책 변수 그리고 통제변수로 해당 지역의 인구가 포함되어 있다.

1) 성과변수의 선택

일반적으로 문화재는 특정 지역의 고유한 역사, 전통,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지역 자산으로, 지역 방문객과 관광객 모두를 끌어모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자산은 지역사회 의 자부심과 연속성을 상징하며,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 에게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고취시킨다. 경제적으로는 입장료, 가이드 투어, 관련 문화 활동 등의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는 다시 다양한 지역 사업들과 서비스를 지원한다(Throsby, 2001; UNESCO, 2013; Richards, 2018). 문화유산에 대한 투자는 문화 소비 측면뿐만 아니라 고용 및 소득 증가 측면에서도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Bowitz and Ibenholt, K.(2009)는 노르 웨이의 Roros 마을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는 이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관광이 전체 고

용 및 소득에 약 7%를 기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문화재는 지역의 방문객과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는 지역의 자산으로 볼 수 있다.

문화재는 지역 경제의 자산으로 기능하여 방문객과 관광객(이하 방문객으로 칭한다) 모두를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면 지역의 경제는 활성화될 것이다. 이는 기업이 마치 자산을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영업 시간을 유지하고 연장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즉 각 자치단체가 그 지역이 과거로부터 이어받은 문화재를 그 지역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일종의 자본 재고로 간주하고 그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 문화재라는 지역 특화 자본의 운영 시간은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 방문자 방문을 생성하고 결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재 유지 및 보수는 지역 자산의 유지 및 보존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고, 이런 투자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이거나 혹은 긍정적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수익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잘 관리된 문화재는 더 많은 방문객 참여를 유도하여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출과 산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재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재정 투입은 지역의 경제에 양의 영향을 주거나 최소한 0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본 심층평가에서 문화재 유지보수의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성은 실제로 자료를 통해 0 이상의 양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만약 실증 분석 결과 정책변수의 계수가 0일 경우, 우리는 지역 자산인 문화재의 유지보수로 방문객의 소비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방문객의 소비를 유지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다만, 우리는 실증분석에서 방문객 수와 그들의 지출액을 성과변수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통상적으로 지역 수준에서 방문객 지역의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경로는 문화재 유지보수로 방문객이 늘어나면 지출액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한 소비에 대해 공급하기 위한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내 소득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군의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데 방문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광객은 지역민이 아니고 지역 경제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최근 우려하고 있는 과잉관광(over tourism)은 과도한 방문객 증가가 지역 주민과 지역 내 기존 기업을 대체할 수 있다. 어떤 지역이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면 임대료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여 지역 주민과 기업이 머물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의 다양성 상실

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관광객은 도시의 자원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많은 관광객은 교통 시스템과 공공장소 등 도시의 인프라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비록 지역 내 관광투자의 특정목표가 관광객 유치 증가라 할지라도 이 지표는 지역의 궁극적인 성장지표(지역 소득 및 고용 등)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양날의 칼이므로 궁극적인 성과지표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박상곤, 2023). 또한 자료 가용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시군구별 관광객수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실제적인 문제도 있다. 이런 점에서 관광객 수 자체보다는 그들이 지역경제에 기여한 바를 측정하여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관광객 수가 아닌 지역의 인적자본, 고용, 그리고 소득 측면에서 지역의 경제 성장을 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Glaeser, 2011).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심층평가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지역 소득(Ham et al., 2011; Busso, Gregory, and Kline, 2013; Reynolds and Rohlin, 2015), 지역 사업체 수(Neumark and Kolko, 2010; Busso, Gregory, and Kline, 2013), 지역 고용(Neumark and Kolko, 2010; Ham et al., 2011; Freedman, 2013; Busso, Gregory, and Kline, 2013; Hanson, 2009; Ham et al., 2011; Ham et al., 2011)을 성과변수로 사용한다.

사업체 수나 취업자 수의 변화로 효과를 측정할 수도 있겠으나, 이 지표 역시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산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체 수가 늘어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사업체 수는 변하지 않은 채로 기존 사업체 내부에서 활성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만약 시군구 간 산업구조가 상이하면 이들을 이용하여 지역 간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동일 지역 내에서 시간에 걸친 변화를 고려할 때에도, 만약 시간에 걸쳐 산업구조가 변한다면 사업체 수는 지역경제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취업자 수의 경우도 지역 활성화의 효과는 취업자의 수가 아니라 기존 취업자의 작업시간 증가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사업체 수나 취업자 수보다는 지역의 소득으로 경제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 궁극적인 효과를 파악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는 점에서(박상곤, 2023), 본 심층평가에서 주된 성과변수는 지역 소득 변수이고, 사업체 수 및 취업자 수는 보조 성과변수로 활용한다.

가) 지역 소득과 지역 소득의 대리변수로서 인공위성 조도

문화재 보수유지 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 소득(GRDP)과 같이 지역 경제 상태를 직접 나타낼 수 있는 경제 지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지역 소득 통계는 광역지자체 수준에서는 1985년부터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본 심층 평가의 분석 수준인 시군구 단위의 지역 소득은 2010년부터 일부 시군구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모든 시군구에서의 생산은 2015년부터이다. 예를 들어, 서울과 충남은 현재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지역 소득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 대전, 울산, 경북의 경우 2015년부터 지역 소득 통계가 제공되고 있다. 경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역 소득 통계가 제공된다. 많은 부분이 누락된 지역 소득 통계를 분석에 사용할 경우 분석의 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득은 지역 경제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통계라는 점에서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 성과변수로 지역 소득을 우선 분석하지만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실증 분석은 제한적일 것이며 해석도 그에 따라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본 심층 평가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성 조명을 지역 소득의 대리 변수로 사용한다. 최근에는 지역 소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으며, 특히 인공위성으로 측정한 야간조도(夜間照度) 정보를 지역 소득의 대리 지표로 사용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는 1992년부터 수집되었다.

현재 인공위성 야간조도를 사용한 연구(Elvidge et al., 1997; Doll et al., 2000; Elvidge et al., 2001; Chen and Nordhaus, 2011; Henderson et al., 2012; Sutton et al., 2007; Zhao et al., 2011; Yue et al., 2014; Michalopoulos and Papaioannou, 2013; 김규철, 2017; 2020)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²⁰⁾

특히 Henderson et al.(2012)는 야간 조명의 변화가 GDP 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경제 성장을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였다. Henderson et al.(2012)은 소득에 대한 조도의 탄력성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의 경우 1에 가깝게 나타났다. 고소득 국가의 조명-GDP 관계는 구조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소득 국가에 대해 구조적 연습을 반복하기에는 표본이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온라인 부록에서 언급했듯이 부록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제한된 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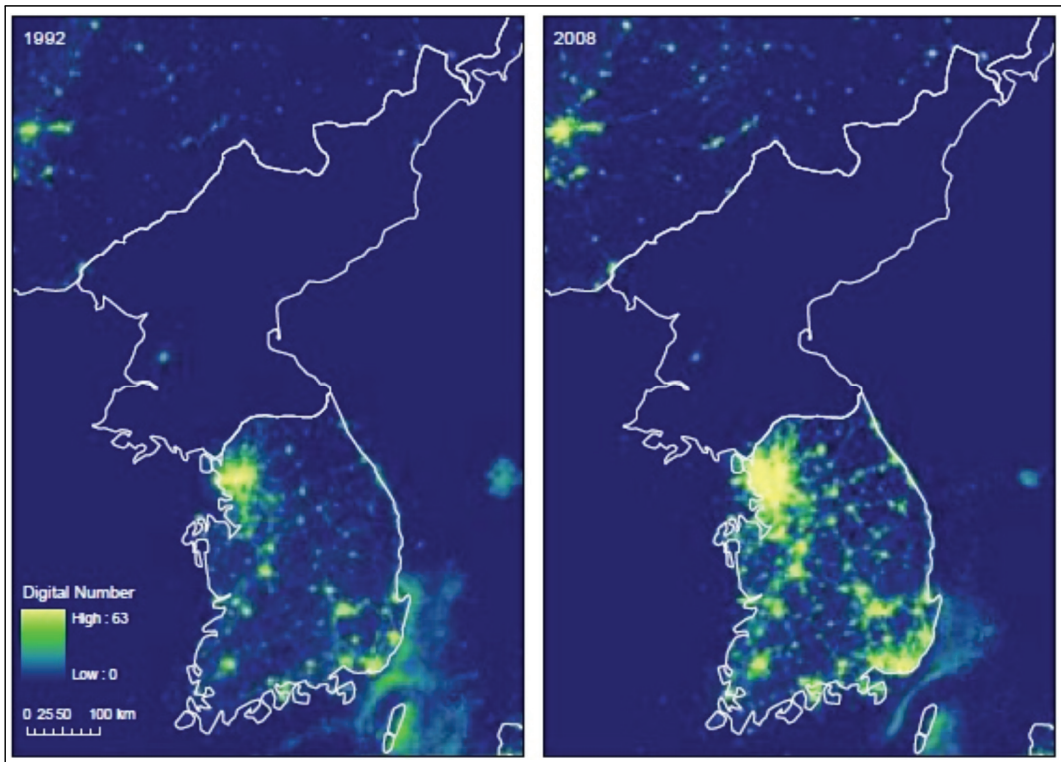
20) 자세한 내용은 김규철(2020)을 참조할 수 있다.

의 경우 표준 야간 조도 데이터에 대한 실제 조도의 추정 탄성치는 1에 가깝다. 이는 GDP에 대한 실제 조도의 탄력성이 1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하고 있다.²¹⁾

Michalopoulos and Papaioannou(2013) 및 Lee(2018)은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지역 경제 성과의 대리 변수로 사용했으며, 김규철(2017)은 위성을 통해 측정된 야간조도 데이터를 구축하여 북한 주민의 후생을 추정하였다.

본 심층 평가에서는 시군구별로 연간 평균 야간조도 값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 DMSP 및 VIIRS(Li et al., 2020)에서 조정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군구별 평균 조도 값을 계산한다. 위성 조도에 대한 이해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박상곤, 2023).

[그림 V-8] 인공위성 야간조도 사진 비교(1992년, 2008년)



자료: Henderson et al.(2012: p. 1002) 그림 2

21) 한국과 같이 도시화된 선진국에서 조도가 지역소득의 작은 변화에 충분히 민감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데이터상으로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역소득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는 1960년대 중반부터 인공위성을 통해 야간 빛 사진 자료를 모아, 1992년부터 국방 기상 인공위성 프로그램 운영시스템(Defense Meteorological Satellite Program/Operational Linescan System, DMSP/OLS)의 야간 조명(Nighttime light, NTL)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2013년부터 더 이상 수집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국가 극궤도 파트너십 위성의 가시 적외선 영상 라디오미터 제품군(Visible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 VIIRS)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야간 빛 자료를 모아 제공하고 있다. 이 두 자료는 지역적 규모에서 사회경제 활동을 모니터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DMSP(1992~2013년)와 VIIRS(2012~2018년)의 야간조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DMSP와 VIIRS 간의 심각한 불일치로 인해 NTL 관측의 시간에 따른 연속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Li et al.(2020)은 DMSP 데이터의 상호 보정된 NTL 관측과 VIIRS 데이터의 시뮬레이션된 DMSP와 유사한 NTL 관측을 조화시켜 시계열적으로 조정된 NTL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Li et al.(2020)의 야간조도 시계열 데이터(1992~2018년)는 일관된 시간적 추세를 보여준다. 앞서 인공위성 야간조도의 측정방식과 선행연구들을 고려하면 시군구별 야간조도 자료는 분석 기간 내 시군구별 경제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Ahn et al.(2020)에 따르면 위성조도의 1인당 소득의 예측력(R^2)은 76.03%로 나타나고 있다.

본 심층평가의 실증분석을 위해 원 데이터(<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7-020-0510-y>)를 활용하여 2020년까지 DMSP와 VIIRS를 일치시킨 자료를 만들어 시군구별 평균 조도를 구했다.

어떤 시군구의 야간조도와 GRDP 사이에 일정한 함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어떤 지역 내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 투입이 해당 지역의 야간조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으로써 그것이 지역의 GRDP에 미친 영향 또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박상곤(2023)의 논리 전개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²⁾

예를 들어, A지역의 연간 인공위성 평균 야간조도(x)와 1인당 지역 소득(y) 사이에 ' $y = \beta_0 + \beta_1 x$ '의 관계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아래에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해 A지역 내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이 A지역의 야간조도에 미친 영향률에 대한 추정치 $\hat{\alpha}_{1t} = dx/x_t$ 를 구한다. $y = \beta_0 + \beta_1 x$ '의 관계식으로부터 A지역 내 사업비 투입이 A지역의

22) 지역경제활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조도를 사용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 실증적 근거는 박상곤(2024)을 참조

1인당 지역 소득에 미친 영향률의 추정치는 $dy/y_t = \beta_1 \cdot dx/y_t = \beta_1 \cdot dx/x_t \cdot x_t/y_t = \beta_1 \cdot \hat{\alpha}_{1t} \cdot x_t/y_t$ 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 식에서 dy/y_t 는 1인당 지역 소득의 변동률, $dx/x_t (= \hat{\alpha}_{1t})$ 는 야간조도의 변동률, x_t/y_t 는 [야간조도/1인당 지역 소득] 비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산출한 x_t/y_t 의 값을 이용한다.

나) 지역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해 연도별로 시군구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인 고용규모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는 1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로서, 본 자료를 이용해 각 사업체의 총종업원 수와 사업체별 종업원 수를 지역별로 합산하여, 전국 시군구별 총 고용규모를 추계할 수 있다. 지역별 고용규모를 연도별로 추계하여 지역단위 패널자료를 구성하였다.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에는 사업체가 속한 산업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지역의 산업별로 고용규모를 세분할 수도 있으나, 본 심층평가에서는 총 고용규모를 분석에 활용한다.

2) 기초통계량

〈표 V-39〉는 앞서 구성한 주요 변수들의 2010년 이후 관측된 기초 통계량이다. 성과변수로 지역 소득은 전체 관측된 자료의 평균이 6,165,110백만원이고 표준편차가 9,250,104백만원이다. 인공위성 조도는 빛이 없는 0부터 가장 밝은 조도인 최대 63의 값을 갖는데, 전체 자료의 평균은 30.61이다. 사업체 수는 평균 16,397개이고 종사자 수는 평균 90,064명이다.

지역 소득 통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 소득 자료는 시군구별로 누락된 정보가 많다. 야간조도의 관측치는 2,282개로 문화재 사업 집행금액 변수들과 동일하지만, 지역 소득은 1,878개로 야간조도의 관측치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또한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야간 조도는 0의 값을 가지는 관측치가 단 두 건에 불과하여 로그 변환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

〈표 V-39〉 자료의 기술 통계량

구 분	변수명	단위	관측치	평균치	표준편차
성과변수	지역 내 총생산	백만원	1,878	6,165,110	9,250,104
	인공위성 조도	0~63	2,282	30.61	21.13
	사업체 수	개	2,282	16,397.05	15,660.26
	종사자 수	명	2,282	90,064.43	98,852.02
정책변수	A 문화재 보수관리(a1+a2)	천원	2,282	1,185,934.00	4,330,309.00
	a1 문화재 보수정비	천원	2,282	1,090,803.00	4,322,208.00
	a2 전통중교문화 유산보존	천원	2,282	95,131.42	157,397.20
	B 문화재 보존육성(b1+b2)	천원	2,282	149,553.90	1,158,604.00
	b1 고도보존 및 육성	천원	2,282	10,885.77	132,750.70
	b2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천원	2,282	138,668.10	1,138,108.00
	C 문화재 재난방지(c1+c2+c3)	천원	2,282	125,820.80	188,554.10
	c1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천원	2,282	48,205.60	102,572.70
	c2 전통사찰방재	천원	2,282	68,754.93	128,595.80
c3 문화재 긴급보수	천원	2,282	8,860.30	39,507.49	
통제변수	인구(pop)	명	2,282	216,373.80	211,867.80

주: 접두 문자 A, B, C는 각각 사업부문인 문화재 보수관리, 문화재 보존육성, 문화재 재난방지를 의미한다
 소문자 a, b, c는 각각 해당 내역사업을 의미한다

주요 정책변수인 재정 투입액은 다음과 같다.

[문화재 보수정비 내역사업(a1)]의 2010년 이후 시군구별 연평균 재정 투입액은 1,090,803천 원이고 표준편차가 4,322,208천원임을 고려할 때 시군구별 투입액에 변동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중교문화 유산보존 내역사업(a2)]의 평균은 95,131천원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내역사업(a1)]의 약 8.7% 규모로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이 두 개의 내역사업을 합한 사업부문이 [문화재 보수관리(A=a1+a2)] 사업 부문이다. 문화재 돌봄 사업(a3)의 경우 분석단위 인 시군구 단위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고도보존 및 육성(b1)]의 2010년 이후 시군구별 연평균 재정 투입액은 10,886천원이고 표준편차가 132,751천원임을 고려할 때 시군구별 투입액에 변동이 크다.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b2)]의 평균은 138,668천원으로 [고도보존 및 육성(b1)] 평균 집행액보다 약 12.7배 크다. 이 두 개의 내역사업을 합한 사업부문이 [문화재 보존육성(B=b1+b2)] 사업 부문이다.

[문화재 재난안전관리(c1)]의 2010년 이후 시군구별 연평균 재정 투입액은 48,206천원

이고 표준편차가 102,573천원임을 고려할 때 시군구별 투입액에 변동이 크다. [전통사찰 방재(c2)]의 2010년 이후 시군구별 연평균 재정 투입액은 68,755천원이고 표준편차가 128,596천원임을 고려할 때 [문화재 재난안전관리(c1)]와 마찬가지로 시군구별 투입액에 변동이 크다. [문화재 긴급보수(c3)]의 평균은 8,860천원으로 다른 내역사업들에 비해 시군구별 연평균 예산이 그리 크지 않다.

통제 변수로 사용되는 시군구별 인구는 전체 기간 중 평균이 216,374명이다.

나. 분석결과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각 지역별 인구를 통제된 상태에서 사업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보다 정확하게 사업예산 1% 증가가 지역 1인당 소득을 몇 % 증가시키는지 추정한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예산투입 이후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집행률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실제 예산투입이 결정된 이후라도 보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보수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제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도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 이점을 고려하여 분석은 예산투입 시점과 해당 시점의 소득뿐 아니라 예산 투입 이후 4년이 지난 시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까지 추정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또한 각 사업의 이질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주요 설명 변수인 예산액의 경우, 각 사업이나 내역사업으로 나누어 그 효과를 추정하기도 할 것이다.

효과를 보여줄 종속변수로는 지역소득(GRDP, 지역소득의 대리변수로 활용할 인공위성 조도, 사업체 수, 취업자 수 등을 이용한다.

1)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

가) 사업 부문별 분석

〈표 V-40〉은 성과변수를 지역 소득으로 하여 식 (14)를 추정한 결과이다. 〈표 V-40〉의 (1)열은 당해 연도의 지역 소득(Y_{it})을 종속변수로 추정한 결과이고, (2)열은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부문의 재정 투입 1년 후의 지역 소득(Y_{it+1})을, (3)열은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부문의 재정 투입 2년 후의 지역 소득(Y_{it+2})을, (4)열은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부문의 재정 투입 3년 후의 지역 소득(Y_{it+3})을, 그리고 마지막 (5)열은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부

문의 재정 투입 4년 후의 지역 소득(Y_{it+4})을 성과변수로 하고 있다. 이어지는 표들도 해당 연도의 성과변수를 나타낸다.

〈표 V-40〉의 (1)열부터 (5)열의 추정치에 따르면,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부문의 재정 투입은 지역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V-40〉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부문(A)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3 (0.0006)	0.0006 (0.0006)	-0.0001 (0.0006)	0.0008 (0.0009)	0.0006 (0.0008)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9966 1,878	0.9968 1,735	0.9971 1,592	0.9973 1,449	0.9976 1,30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142개, 2015~2019년 사이에는 228개, 2020년에는 170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41〉의 (1)열부터 (5)열의 추정치는 문화재 보존육성 사업부문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이 추정치들에 앞서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부문과 마찬가지로 문화재 보존육성 사업부문의 재정 투입은 지역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V-41〉 문화재 보존육성 사업부문(B)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3 (0.0012)	-0.0007 (0.0009)	-0.0009 (0.0008)	-0.0016* (0.0007)	-0.0017 (0.0011)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9966 1,878	0.9968 1,735	0.9971 1,592	0.9974 1,449	0.9976 1,30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142개, 2015~2019년 사이에는 228개, 2020년에는 170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42〉의 (1)열부터 (5)열의 추정치는 문화재 재난방지 사업부문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이 추정치들은 대체로 0을 기각하지 않는다. 문화재 재난방지 사업부문의 재정 투입도 지역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V-42〉 문화재 재난방지 사업부문(C)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7 (0.0005)	-.00102* (0.0005)	-0.0007 (0.0005)	0.0001 (0.0005)	0.0001 (0.0005)
통제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지역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0.9966	0.9968	0.9971	0.9973	0.9976
N	1,878	1,735	1,592	1,449	1,30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142개, 2015~2019년 사이에는 228개, 2020년에는 170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나) 내역사업별 분석

앞선 장에서 사업의 내역들과 자료의 기술 통계량에서 보듯이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군의 내역사업들은 내역사업의 내용과 실행예산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질적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내역사업들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내역사업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분석한다.

이전 결과분석 표와 마찬가지로 아래의 표들도 해당 내역사업들의 집행액을 정책변수로 하고 성과변수를 지역 소득으로 하여 식 (13)을 추정한 결과이다.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모든 결과분석 표의 (1)열은 당해 연도의 성과변수(Y_{it})를 종속변수로 추정한 결과이고, (2)열은 해당 사업의 재정 투입 1년 후의 성과 변수(Y_{it+1})를, (3)열은 해당 사업의 재정 투입 2년 후의 성과변수(Y_{it+2})를, (4)열은 해당 사업의 재정 투입 3년 후의 성과변수(Y_{it+3})를, 그리고 마지막 (5)열은 해당 사업의 재정 투입 4년 후의 성과변수(Y_{it+4})를 나타낸다.

〈표 V-43〉의 (1)열부터 (5)열의 추정치는 식 (12)를 추정한 결과로 문화재 보수정비 내역사업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추정치들은 대체로 0을 기각하지 않는다. 앞선 사업부문 표본의 결과와 유사하게, 문화재 보수정비 내역사업의 재정 투입도 지역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V-43〉 문화재 보수정비 내역사업(a1)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5 (0.0007)	0.0001 (0.0007)	0.0007 (0.0007)	0.0013 (0.0009)	0.0005 (0.0007)
통제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지역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0.9966	0.9968	0.9971	0.9974	0.9976
N	1,878	1,735	1,592	1,449	1,30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142개, 2015~2019년 사이에는 228개, 2020년에는 170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44〉는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 내역사업만을 대상으로 식 (12)를 추정한 결과이다. (1)열부터 (5)열의 추정치는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 내역사업이 지역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V-44〉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 내역사업(a2)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4 (0.0003)	0.0002 (0.0003)	-0.0004 (0.0004)	0.0002 (0.0005)	0.0005 (0.0004)
통제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지역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0.9966	0.9968	0.9971	0.9973	0.9976
N	1,878	1,735	1,592	1,449	1,30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142개, 2015~2019년 사이에는 228개, 2020년에는 170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45〉는 고도보존 및 육성 내역사업만을 대상으로 식 (12)를 추정한 결과이다. (1)열부터 (5)열의 추정치를 보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고도보존 및 육성 내역사업이 지역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

〈표 V-45〉 고도보존 및 육성 내역사업(b1)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22 (0.0016)	-0.0011 (0.0014)	-0.0015 (0.0014)	-0.0017 (0.0017)	-0.0030 (0.0026)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9966 1,878	0.9968 1,735	0.9971 1,592	0.9973 1,449	0.9976 1,30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142개, 2015~2019년 사이에는 228개, 2020년에는 170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46〉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내역사업만을 대상으로 식 (12)를 추정한 결과이다. (1)열부터 (5)열의 추정치를 보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내역사업이 지역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

〈표 V-46〉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내역사업(b2)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2 (0.0012)	-0.0008 (0.0009)	-0.0010 (0.0008)	-0.0017* (0.0007)	-0.0016 (0.0012)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9966 1,878	0.9968 1,735	0.9971 1,592	0.9974 1,449	0.9976 1,30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142개, 2015~2019년 사이에는 228개, 2020년에는 170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47〉은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내역사업만을 대상으로 식 (12)를 추정한 결과이다. (1)열부터 (5)열의 추정치를 보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내역사업이 지역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

〈표 V-47〉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내역사업(c1)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6 (0.0011)	0.0003 (0.0010)	0.0001 (0.0009)	-0.0001 (0.0006)	-0.0001 (0.0009)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9966 1,878	0.9968 1,735	0.9971 1,592	0.9973 1,449	0.9976 1,30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142개, 2015~2019년 사이에는 228개, 2020년에는 170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48〉는 전통사찰방재 내역사업만을 대상으로 식 (12)를 추정한 결과이다. (1)열부터 (5)열의 추정치를 보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전통사찰방재 내역사업이 지역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

〈표 V-48〉 전통사찰방재 내역사업(c2)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4 (0.0004)	-0.0005 (0.0004)	-0.0003 (0.0003)	0.0004 (0.0004)	0.0006 (0.0004)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9966 1,878	0.9968 1,735	0.9971 1,592	0.9973 1,449	0.9976 1,30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142개, 2015~2019년 사이에는 228개, 2020년에는 170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49〉은 문화재 긴급보수 내역사업만을 대상으로 식 (12)를 추정한 결과이다. (1)열부터 (5)열의 추정치는 문화재 긴급보수 내역사업이 지역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V-49〉 문화재 긴급보수 내역사업(c3)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3 (0.0004)	-0.0006 (0.0005)	-0.0006 (0.0005)	0.0001 (0.0005)	0.0006 (0.0005)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9966 1,878	0.9968 1,735	0.9971 1,592	0.9973 1,449	0.9976 1,30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142개, 2015~2019년 사이에는 228개, 2020년에는 170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2) 지역 소득의 대리변수인 인공위성 조도에 미치는 영향

앞서 자료의 구축에서 우리는 시군구별 연도별 지역 소득 통계의 누락 문제로 적절한 통계분석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지역 소득을 논리적으로나 함수적으로 매우 잘 설명할 수 있는 인공위성 조도를 적절한 종속변수로 소개하였다. 인공위성 조도를 활용할 경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모든 시군구의 연도별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로그 변환한 인공위성 야간조도 관측치는 총 2,280개로 이전에 사용한 지역 내 총생산의 관측치 1,878개보다 많다. 또한 앞에서 사용한 지역 내 총생산과 달리 2015년 이전 관측치와 2020년 관측치도 227개 지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부문 및 내역사업들의 단기 효과뿐만 아니라 중장기 효과도 존재한다면 적절히 식별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래의 분석은 지역 소득 대신 인공위성 조도를 이용하여 식 (13)에 대한 부문별 성과평가와 식 (12)에 대한 내역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이다.

가) 사업 부문별 분석

지역 소득에 대한 분석결과 표와 마찬가지로 아래의 표들도 해당 사업부문 및 내역사업들의 집행액을 정책변수로 하고 성과변수를 로그 조도로 하여 식 (13)을 추정한 결과이다.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모든 결과분석 표의 (1)열은 당해 연도의 성과변수(Y_{it})를 종속변수로 추정한 결과이고, (2)열은 해당 사업의 재정 투입 1년 후의 성과 변수(Y_{it+1})를, (3)열

은 해당 사업의 재정 투입 2년 후의 성과변수(Y_{it+2})를, (4)열은 해당 사업의 재정 투입 3년 후의 성과변수(Y_{it+3})를, 그리고 마지막 (5)열은 해당 사업의 재정 투입 4년 후의 성과변수(Y_{it+4})를 나타낸다.

〈표 V-50〉의 (1)열부터 (5)열의 추정치는 식 (12)를 추정한 결과로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부문이 로그 조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추정치들은 대체로 0을 기각하지 않는다.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부문의 재정투입도 로그 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V-50〉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부문(A)이 ln조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17* (0.0008)	-0.0013 (0.0007)	-0.0002 (0.0010)	0.0021 (0.0019)	0.0002 (0.0010)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9706 2,280	0.969 2,051	0.9664 1,822	0.9637 1,593	0.9585 1,364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19년 사이에는 229개, 2020년에는 227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51〉의 (1)열부터 (5)열의 추정치는 문화재 보존육성 사업부문(B)이 ln조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추정치들은 대체로 0을 기각하지 않는다. 재정사업 투입 3년 후 조도가 10% 유의 수준에서 약 0.7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가 경제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아 보인다. 문화재 보존육성 사업부문의 재정 투입도 로그 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V-51〉 문화재 보존육성 사업부문(B)이 ln조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2 (0.0015)	0.0006 (0.0020)	0.0030 (0.0025)	0.0075* (0.0031)	0.0084 (0.0045)

〈표 V-51〉의 계속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통제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지역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0.9706	0.969	0.9664	0.9639	0.9588
N	2,280	2,051	1,822	1,593	1,364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19년 사이에는 229개, 2020년에는 227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52〉의 (1)열부터 (5)열의 추정치는 문화재 재난방지 사업부문(C)이 ln조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추정치들은 대체로 0을 기각하지 않는다. 당해 연도와 2년 후에 약 0.2% 정도의 조도 감소가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문화재 재난방지 사업부문의 재정 투입도 로그 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V-52〉 문화재 재난방지 사업부문(C)이 ln조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20** (0.0006)	0.0013 (0.0015)	-0.0019* (0.0008)	-0.0014 (0.0009)	-0.0009 (0.0008)
통제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지역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0.9707	0.969	0.9665	0.9637	0.9585
N	2,280	2,051	1,822	1,593	1,364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19년 사이에는 229개, 2020년에는 227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나) 내역사업별 분석

사업의 내역들과 자료의 기술 통계량 그리고 앞선 분석에서 보듯이 문화재 유지보수 사업군의 내역사업들은 내역사업의 내용과 실행예산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질적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이러한 내역사업들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내역사업이 로그 조도에 미치는 영

향을 개별적으로 분석한다.

이전 결과분석 표와 마찬가지로 아래의 표들도 해당 내역사업들의 집행액을 정책변수로 하고 성과변수를 지역 소득으로 하여 식 (13)을 추정한 결과이다.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모든 결과분석 표의 (1)열은 당해 연도의 성과변수(Y_{it})를 종속변수로 추정한 결과이고, (2)열은 해당 사업의 재정 투입 1년 후의 성과 변수(Y_{it+1})를, (3)열은 해당 사업의 재정 투입 2년 후의 성과변수(Y_{it+2})를, (4)열은 해당 사업의 재정 투입 3년 후의 성과변수(Y_{it+3})를, 그리고 마지막 (5)열은 해당 사업의 재정 투입 4년 후의 성과변수(Y_{it+4})를 나타낸다.

〈표 V-53〉의 (1)열부터 (5)열의 추정치는 식 (13)을 추정한 결과로 문화재 보수정비 내역사업이 로그 조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추정치들은 대체로 0을 기각하지 않는다. 앞선 사업부문 표본의 결과와 유사하게, 문화재 보수정비 내역사업의 재정 투입도 로그 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V-53〉 문화재 보수정비 내역사업(a1)이 ln조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18 (0.0010)	-0.0016 (0.0009)	0.0036 (0.0027)	0.0018 (0.0021)	-0.0003 (0.0011)
통제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지역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0.9706	0.969	0.9666	0.9637	0.9585
N	2,280	2,051	1,822	1,593	1,364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19년 사이에는 229개, 2020년에는 227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54〉의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 내역사업이 로그 조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추정치들은 대체로 0을 기각하지 않는다. 앞선 사업부문 표본의 결과와 유사하게,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 내역사업의 재정 투입도 로그 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표 V-54〉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 내역사업(a2)이 ln조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7 (0.0007)	-0.0005 (0.0006)	-0.0019 (0.0010)	0.0011 (0.0008)	0.0005 (0.0011)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0.9706	0.969	0.9665	0.9637	0.9585
N	2,280	2,051	1,822	1,593	1,364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19년 사이에는 229개, 2020년에는 227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55〉의 고도보존 및 육성 내역사업이 로그 조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는 앞선 결과와는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첫째, 당해 연도의 로그 조도에는 음의 영향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유의미해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다른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 재정 투입은 통상적으로 당해 연도 후반부터 투입되어 2~3년간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당해 연도의 분석결과는 대체적으로 0이어야 한다. 둘째, 고도보존 및 육성 내역사업 재정 투입 2년 후에 약 0.63%, 3년 후에 1.1%, 그리고 4년 후에 1.1%의 조도가 증가한다.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셋째, 이러한 효과는 재정 투입 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고도보존 및 육성 내역사업의 재정 투입도 로그 조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는 점점 커진다. 앞선 결과와 달리, 고도보존 및 육성 내역사업이 지역 성장에 효과를 주는 이유는 고도보존 및 육성 내역사업이 지역의 각종 시설을 직접 조성하고 개선하는 사업이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보존과 수리가 기존 문화재라는 지역 자산의 유지와 관련된 사업이라면 고도보존 및 육성 사업은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소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가능성이 다른 문화재 관련 사업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선행적인 추론이 실제 통계분석으로부터 확인되고 있다.

〈표 V-55〉 고도보존 및 육성 내역사업(b1)이 ln조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19* (0.0009)	0.0014 (0.0012)	0.0063*** (0.0013)	0.0109*** (0.0015)	0.0113*** (0.0017)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9706 2,280	0.969 2,051	0.9664 1,822	0.9638 1,593	0.9586 1,364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19년 사이에는 229개, 2020년에는 227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56〉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내역사업이 로그 조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내역사업 재정 투입 3년 후에 약 0.73%의 조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도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설의 증가가 포함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표 V-56〉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내역사업(b2)이 ln조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5 (0.0015)	0.0009 (0.0021)	0.0031 (0.0025)	0.0073* (0.0032)	0.0085 (0.0047)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9706 2,280	0.969 2,051	0.9664 1,822	0.9639 1,593	0.9587 1,364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19년 사이에는 229개, 2020년에는 227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57〉의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내역사업이 로그 조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내역사업 재정 투입 1년 후에 약 0.51%의 조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년 이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V-57〉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내역사업(c1)이 ln조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3 (0.0020)	0.0051* (0.0022)	0.0048 (0.0026)	0.0008 (0.0025)	0.0002 (0.0030)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9706 2,280	0.9692 2,051	0.9666 1,822	0.9637 1,593	0.9585 1,364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19년 사이에는 229개, 2020년에는 227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58〉의 전통사찰방재 내역사업이 로그 조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추정치들은 대체로 0을 기각하지 않는다. 앞선 사업부문 표본의 결과와 유사하게, 전통사찰방재 내역사업의 재정 투입도 로그 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사업시행 후 4년째되는 해에는 미약하나마 소득 증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표 V-58〉 전통사찰방재 내역사업(c2)이 ln조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10 (0.0007)	0.0008 (0.0007)	-0.0010 (0.0013)	0.0008 (0.0009)	0.0016** (0.0006)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9706 2,280	0.969 2,051	0.9664 1,822	0.9637 1,593	0.9586 1,364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19년 사이에는 229개, 2020년에는 227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59〉 문화재 긴급보수 내역사업(c3)이 ln조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16 (0.0009)	0.00003 (0.0007)	-0.0005 (0.0009)	-0.0013 (0.0016)	0.0004 (0.0010)
통제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지역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0.9706	0.969	0.9664	0.9637	0.9585
N	2,280	2,051	1,822	1,593	1,364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19년 사이에는 229개, 2020년에는 227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다) 분석결과의 요약

〈표 V-50〉~〈표 V-52〉의 인공위성 조도를 사용한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 부문별 실증 분석 결과도 대부분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영과 구별할 수 없었으며 유의하게 추정된 계수도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은 동시에 크기가 매우 작았다. 앞에서 지역 내 총생산을 분석한 결과와 연장선에서 생각한다면, 문화재 사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지역 내의 긍정적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질적인 효과가 존재하는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들의 단순 집계(aggregation) 자체만으로도 성과평가 분석에서 그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공위성 조도를 사용하는 개별 사업에 대한 분석을 검토하여야 한다.

부문별 사업과는 달리, 〈표 V-53〉~〈표 V-59〉에서 세부 내역사업을 사용한 분석 결과는 일부 내역사업들의 성과는 통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²³⁾ 예를 들어, 고도보존 및 육성 사업은 사업투입 2차년도(Y_{it+2}) 이후부터 사업의 영향이 나타나는데 시간 경과에 따라서 그 영향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추정된 계수는 사업 2년 경과 시 약 0.0063, 3년 경과 시 약 0.0109, 4년 경과 시에는 약 0.0113로 점차 영향이 증대하고 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 계수의 크기 또한 사업 집행액의 1% 증가가 약 0.6~1.1% 수준의 야간 조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합리적인 결과이다. 즉 문화재 보존으로 관광객 유치, 지역

23) 모든 세부사업에 대해서 상이한 종속변수로 분석하였으나, 본문에서는 가장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인공위성 조도를 사용한 정량평가 결과를 기술하고, 나머지는 부록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경제 활성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 집행액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비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 효과가 첫 해가 아니라 사업이 어느 정도 경과한 이후에 나타난다는 점도 상식에 부합한다. 통계적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는 하지만 세계유산 등재·보존이나 전통사찰방재와 같은 사업에서도 기간 경과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는 문화재 내역사업의 이질적인 긍정적 영향이 집계에 의해 상쇄되었다는 추론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앞에서 본 것처럼 지역 내 총생산은 이러한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기술 통계량 및 부문별 성과평가 결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 내 총생산은 인공위성 조도에 비해서 관측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시차를 둔 분석에서 전체 관측치가 더욱 감소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공위성 조도와는 달리 지역 내 총생산의 성과변수 사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역시 강건하지 못하다고 보인다. 그에 비하여 인공위성 조도를 사용한 내역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종속변수의 시차를 변화시켜도 계수의 방향이나 크기 변화 등이 모두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3) 사업체 수에 미친 영향

가) 사업 부문별 분석

〈표 V-60〉은 성과변수를 사업체 수로 하여 식 (13)을 추정한 결과이다. 사업체 수를 사용한 분석에서도 조도를 사용한 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표 V-60〉의 (1)열은 당해 연도의 사업체 수(Y_{it})를 종속변수로 추정한 결과이고, (2)열은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부문의 재정 투입 1년 후의 사업체 수(Y_{it+1})를, (3)열은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부문의 재정 투입 2년 후의 사업체 수(Y_{it+2})를, (4)열은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부문의 재정 투입 3년 후의 사업체 수(Y_{it+3})를, 그리고 마지막 (5)열은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부문의 재정 투입 4년 후의 사업체 수(Y_{it+4})를 성과변수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표 V-60〉부터 〈표 V-68〉까지 동일하다. 〈표 V-60〉의 (1)열부터 (5)열의 추정치에 따르면,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부문의 재정 투입은 사업체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V-60〉 A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부문이 지역 사업체 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5 (0.0004)	-0.0008 (0.0004)	-0.0001 (0.0004)	-0.0003 (0.0005)	0.0002 (0.0006)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9977 2,282	0.9971 2,282	0.9971 2,053	0.997 1,824	0.9969 1,59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20년 사이에는 229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61〉의 (2)-(3)열에서는 문화재 보존육성 사업 부문이 사업체 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 외의 열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실제 영향이 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표 V-61〉 B 문화재 보존육성 사업부문이 지역 사업체 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12 (0.0008)	0.0020* (0.0008)	0.0016* (0.0008)	0.0016 (0.0011)	0.0014 (0.0010)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9977 2,282	0.9971 2,282	0.9971 2,053	0.997 1,824	0.9969 1,59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20년 사이에는 229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62〉는 (2)-(3)열에서 문화재 재난방지 사업 부문이 사업체 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유의하

였으며 계수의 크기도 작아 부정적 효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 외의 열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V-62〉 C 문화재 재난방지 사업부문이 지역 사업체 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5 (0.0003)	-0.0009* (0.0004)	-0.0009* (0.0004)	-0.0005 (0.0004)	-0.0004 (0.0004)
통제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지역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0.9977	0.9971	0.9971	0.997	0.9969
N	2,282	2,282	2,053	1,824	1,59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20년 사이에는 229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나) 내역사업별 분석

〈표 V-63〉부터는 내역사업별로 사업체 수에 미친 영향을 추정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표 V-63〉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지역의 사업체 수 증가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모든 열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사업이 사업체 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표 V-63〉 a1 문화재 보수정비 내역사업이 지역 사업체 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5 (0.0004)	-0.0007 (0.0004)	-0.0005 (0.0005)	-0.0004 (0.0005)	-0.0001 (0.0006)
통제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지역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0.9977	0.9971	0.9971	0.997	0.9969
N	2,282	2,282	2,053	1,824	1,59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20년 사이에는 229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64〉는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 사업이 사업체 수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마찬가지로, (1)~(5)의 모든 열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 사업은 사업체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표 V-64〉 a2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 내역사업이 지역 사업체 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1 (0.0002)	-0.0004 (0.0002)	-0.0001 (0.0003)	-0.0002 (0.0003)	-0.0004 (0.0003)
통제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지역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0.9977	0.9971	0.9971	0.997	0.9969
N	2,282	2,282	2,053	1,824	1,59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20년 사이에는 229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65〉는 고도보존 및 육성 사업이 사업체 수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앞선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열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며, 해당 사업은 사업체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표 V-65〉 b1 고도보존 및 육성 내역사업이 지역 사업체 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12 (0.0011)	0.0018 (0.0010)	0.0021 (0.0013)	0.0026 (0.0017)	0.0031 (0.0027)
통제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지역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0.9977	0.9971	0.9971	0.997	0.9969
N	2,282	2,282	2,053	1,824	1,59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20년 사이에는 229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66〉은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가 지역의 사업체 수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2)~(3)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10% 수준에서만 유의하였다. 그 외의 열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이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이 사업체 수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러한 관계를 입증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V-66〉 b2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내역사업이 지역 사업체 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13 (0.0008)	0.0020* (0.0008)	0.0016* (0.0008)	0.0016 (0.0012)	0.0014 (0.0011)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9977 2,282	0.9971 2,282	0.9971 2,053	0.997 1,824	0.9969 1,59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20년 사이에는 229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67〉은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이 지역 사업체 수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모든 열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며, 따라서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은 지역 사업체 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V-67〉 c1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내역사업이 지역 사업체 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5 (0.0006)	-0.0008 (0.0007)	-0.0007 (0.0006)	-0.0004 (0.0007)	-0.0011 (0.0009)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9977 2,282	0.9971 2,282	0.9971 2,053	0.997 1,824	0.9969 1,59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20년 사이에는 229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68〉은 전통사찰방재 사업이 지역 사업체 수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모든 열의 결과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전통사찰방재 사업도 지역 사업체 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표 V-68〉 c2 전통사찰방재 내역사업이 지역 사업체 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2 (0.0002)	0.0003 (0.0003)	0.0002 (0.0003)	0.0005 (0.0003)	0.0005 (0.0003)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0.9977	0.9971	0.9971	0.997	0.9969
N	2,282	2,282	2,053	1,824	1,59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20년 사이에는 229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69〉는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이 지역의 사업체 수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다. (1)~(5)열의 결과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비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앞에서 분석한 동일 부문의 내역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문화재 긴급보수 역시 지역 사업체 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업부문으로 분석한 결과와 달리, 문화재 재난방지 사업부문에 속한 모든 내역사업들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앞선 사업부문의 분석 결과에서는 문화재 재난방지와 보존육성에서 상반된 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사업 대상 지역의 재난 발생과 관련성이 존재할 수 있다.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해당 피해로 사업체의 수가 감소할 개연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역사업 분석 결과는 문화재 재난방지 사업부문의 내역사업은 지역의 사업체 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지지하고 있다.

〈표 V-69〉 c3 문화재 긴급보수 내역사업이 지역 사업체 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0 (0.0003)	-0.0001 (0.0004)	0.0001 (0.0004)	0.0002 (0.0004)	0.0004 (0.0005)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0.9977	0.997	0.9971	0.997	0.9969
N	2,282	2,282	2,053	1,824	1,59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20년 사이에는 229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4) 취업자 수에 미친 영향

가) 사업 부문별 분석

〈표 V-70〉은 성과변수를 사업체 수로 하여 식 (13)을 추정한 결과이다.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표 V-70〉의 (1)열은 당해 연도의 지역 취업자 수(Y_{it})를 종속변수로 추정한 결과이고, (2)열은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부문의 재정 투입 1년 후의 취업자 수(Y_{it+1})를, (3)열은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부문의 재정 투입 2년 후의 취업자 수(Y_{it+2})를, (4)열은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부문의 재정 투입 3년 후의 취업자 수(Y_{it+3})를, 그리고 마지막 (5)열은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부문의 재정 투입 4년 후의 취업자 수(Y_{it+4})를 성과변수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표 V-70〉부터 〈표 V-79〉까지 동일하다. 〈표 V-70〉의 (1)열부터 (5)열의 추정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문화재 보수관리 부문에서 지역의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표 V-70〉 A 문화재 보수관리 사업부문이 지역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5 (0.0003)	-0.0007 (0.0004)	-0.0007 (0.0004)	-0.0001 (0.0005)	-0.0001 (0.0005)
통제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지역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0.9981	0.9978	0.9979	0.998	0.9981
N	2,282	2,282	2,053	1,824	1,59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20년 사이에는 229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71〉의 (1)열부터 (5)열의 추정치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문화재 보존육성 사업 역시 지역의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표 V-71〉 B 문화재 보존육성 사업부문이 지역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8 (0.0009)	0.0010 (0.0009)	0.0006 (0.0008)	0.0005 (0.0012)	0.0007 (0.0012)
통제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지역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0.9981	0.9978	0.9979	0.998	0.9981
N	2,282	2,282	2,053	1,824	1,59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20년 사이에는 229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72〉에서는 (3)열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음의 계수가 보고되었으며, 그 외의 열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문화재 재난방지 사업부문에서의 지출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던 취업자가 재정 투입의 종료 이후로 줄어든 결과일 가능성도 있으나 10% 수준에서만 유의하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려운 결과이다.

〈표 V-72〉 C 문화재 재난방지 사업부문이 지역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7 (0.0003)	-0.0007 (0.0004)	-0.0009* (0.0004)	-0.0006 (0.0004)	-0.0006 (0.0004)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9981 2,282	0.9978 2,282	0.9979 2,053	0.998 1,824	0.9981 1,59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20년 사이에는 229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나) 내역사업별 분석

〈표 V-73〉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지역 취업자 수에 미친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모든 열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취업자 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표 V-73〉 a1 문화재 보수정비 내역사업이 지역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4 (0.0004)	-0.0003 (0.0004)	-0.0005 (0.0003)	0.0000 (0.0004)	-0.0001 (0.0005)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9981 2,282	0.9978 2,282	0.9979 2,053	0.998 1,824	0.9981 1,59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20년 사이에는 229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74〉는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 사업이 지역의 취업자 수에 미친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1)열과 (2)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가 보고되고 있으며, 나머지 열에

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1)열과 (2)열의 추정 결과도 10% 수준에서 유의하므로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 사업으로 인한 일시적 취업자 수 감소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V-74〉 a2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 내역사업이 지역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4* (0.0002)	-0.0004* (0.0002)	-0.0004 (0.0003)	-0.0001 (0.0003)	-0.0004 (0.0003)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9981 2,282	0.9978 2,282	0.9979 2,053	0.998 1,824	0.9981 1,59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20년 사이에는 229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75〉은 고도보존 및 육성 사업이 지역 취업자 수에 미친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1)~(5)의 모든 열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업은 지역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표 V-75〉 b1 고도보존 및 육성 내역사업이 지역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3 (0.0017)	-0.0003 (0.0019)	-0.0001 (0.0021)	0.0005 (0.0023)	0.0010 (0.0026)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9981 2,282	0.9978 2,282	0.9979 2,053	0.998 1,824	0.9981 1,59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20년 사이에는 229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76〉은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내역사업이 지역 취업자 수에 미친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1)~(5)의 모든 열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업은 지역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표 V-76〉 b2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내역사업이 지역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8 (0.0009)	0.0010 (0.0009)	0.0006 (0.0009)	0.0006 (0.0012)	0.0006 (0.0012)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9981 2,282	0.9978 2,282	0.9979 2,053	0.998 1,824	0.9981 1,59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20년 사이에는 229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77〉은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이 취업자 수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다. 모든 열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므로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업 역시 지역의 취업자 수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표 V-77〉 c1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내역사업이 지역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2 (0.0006)	0.0002 (0.0007)	0.0003 (0.0008)	0.0005 (0.0007)	0.0006 (0.0008)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9981 2,282	0.9978 2,282	0.9979 2,053	0.998 1,824	0.9981 1,59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20년 사이에는 229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표 V-78〉은 전통사찰방재 사업이 취업자 수 증가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다. (1)~(3)열까지의 결과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으나 (4)열과 (5)열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계수도 양으로 추정되었다. 전통사찰방재는 다른 사업들에 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사업내역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 후반부에 일시적인 취업자 수의 증가를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앞선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10% 수준에서만 유의하기 때문에 취업자 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V-78〉 c2 전통사찰방재 내역사업이 지역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1 (0.0003)	0.0003 (0.0003)	0.0004 (0.0003)	0.0006* (0.0003)	0.0006* (0.0003)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0.9981	0.9978	0.9979	0.998	0.9981
N	2,282	2,282	2,053	1,824	1,59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20년 사이에는 229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열의 관측치 수와 같다.

마지막으로 〈표 V-79〉은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이 취업자 수 증가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다.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은 (3)열에서만 유의한 음의 계수가 추정되었으며 나머지 열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또한 (3)열의 결과도 10% 수준에서만 유의하였다. 따라서 앞에서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이 특정한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V-79〉 c3 문화재 긴급보수 내역사업이 지역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04 (0.0003)	-0.0004 (0.0003)	-0.0007* (0.0003)	-0.0002 (0.0004)	-0.0004 (0.0004)
통제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지역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0.9981	0.9978	0.9979	0.998	0.9981
N	2,282	2,282	2,053	1,824	1,595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종속변수는 2011~2014년 사이에 각각 227개, 2015~2020년 사이에는 229개 존재하고 있다. 종속변수의 총관측치는 1명의 관측치 수와 같다.

사업체 수나 취업자 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은 비유의하였고 유의한 경우에도 계수의 크기는 매우 작았다. 그러나 이는 문화재 사업의 긍정적인 영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보다, 문화재 사업의 지출 규모가 신규 창업이나 고용을 창출하기에는 상당히 작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문화재 사업의 특성상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시적인 매출의 증가보다 일시적인 매출의 증가 발생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고, 이는 신규 고용보다는 근로시간 증대 등으로 대응할 개연성이 상당히 때문이다.

따라서 인공위성 조도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역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이 실존한다고 하더라도 그 크기가 지역에 추가적인 고용을 증대시키기에는 미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재 유지보수 재정 투입이 없었을 경우 해당 지역의 평균 고용량이 2라고 해보자. 해당 지역의 문화재가 방문객을 유입하는 중요한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 혹은 관광 매력물이라 하자. 문화재 재정 투입으로 문화재의 가동시간이 유지 혹은 길어지면, 방문객 유입은 늘어나 지역 소비는 늘어나지만 추가 유입된 방문객의 소비를 공급하기 위한 노동력은 기존 노동력으로 충분하여 일정 수준까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규 사업체의 증가가 없었기 때문에 신규 고용의 창출이 없었다는 결과는 상호 일관적이다. 따라서 사업체 수나 취업자 수를 사용한 분석 결과도 인공위성 조도를 분석한 결과와 배치되지 않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분석에서 문화재 사업의 영향이 영과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은 문화재 사업의

성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보다, 사업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에 포함된 대다수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보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긍정적이고 장기적인 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이 혼재하여 서로 영향이 상쇄되었다고 보인다. 크게 지역의 문화재 스톡(stock)을 현상태로 유지시키는 사업과 증대시키는 사업이 혼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 내역사업을 분석하였을 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이 드러나는 한편, 대다수의 사업에서는 계수를 영과 구분할 수 없는 결과가 반복된다고 보인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에 근거한다면, 화재 보수관리 등으로 인한 지역 내의 추가적인 긍정적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보수관리 사업의 특성상 상당한 하자가 있는 문화재부터 우선적으로 보수관리 지출이 집행될 개연성이 높다. 문화재가 현상태를 유지하여야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관광객의 수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보수관리 사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효과가 부재하다는 분석 결과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보수관리 사업의 특성상, 보수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부 기간에는 문화재의 관람이나 개방이 불가하기 때문에 미미한 음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해당 내역사업에서 일부 음으로 추정된 계수들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결과들로 보인다. 한편, 신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고도보존 및 육성 사업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사업의 긍정적인 영향도 나타나고 그 크기도 커졌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격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잘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5) 재정 투입의 장기적 비용절감 효과(계량)

가) 이원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한 장기적 비용절감 효과

추가적으로 문화재 긴급보수로 인한 문화재 사업의 비용절감이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앞에서의 분석이 종속변수로 인공위성 조도, 사업체 수 등을 사용하였고 여러 사업의 지출액이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면, 여기서는 관심변수는 문화재 긴급보수액으로 고정되고 종속변수로 그 외의 문화재 내역사업을 설정하여 문화재 긴급보수가 다른 문화재 내역사업의 비용을 절감시키는지 이원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하의 <표 V-80>~<표 V-85>에서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표의 모든 시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긴급보수로 인한 장기적인 비용절감 효과는 없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도구변수 추정을 실시하였다.

〈표 V-80〉 문화재 긴급보수의 문화재 보수정비 비용절감 효과(이원 고정효과)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135 (0.0135)	0.0303 (0.0175)	0.0287 (0.0214)	0.0288 (0.0168)	0.0242 (0.0146)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7264 2,282	0.7214 2,282	0.7178 2,282	0.7264 2,281	0.7369 2,052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표 V-81〉 문화재 긴급보수의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 비용절감 효과(이원 고정효과)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256 (0.0323)	0.0513 (0.0356)	-0.0007 (0.0329)	-0.0168 (0.0332)	0.0756 (0.0316)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3601 2,282	0.3451 2,282	0.3334 2,282	0.3251 2,281	0.3198 2,052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표 V-82〉 문화재 긴급보수의 고도보존 및 육성 비용절감 효과(이원 고정효과)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61 (0.0006)	-0.0059 (0.0051)	-0.0020 (0.0049)	-0.0024 (0.0049)	-0.0048 (0.0038)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5047 2,282	0.6126 2,282	0.7204 2,282	0.8296 2,281	0.9331 2,052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표 V-83〉 문화재 긴급보수의 세계유산 등재·보존 비용절감 효과(이원 고정효과)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079 (0.0140)	-0.0121 (0.0147)	-0.0143 (0.0156)	0.0091 (0.0159)	0.0218 (0.0153)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6867 2,282	0.7019 2,282	0.6860 2,282	0.6829 2,281	0.7021 2,052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표 V-84〉 문화재 긴급보수의 재난안전관리 비용절감 효과(이원 고정효과)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235 (0.0163)	0.0014 (0.0157)	-0.0036 (0.0184)	0.0058 (0.0182)	0.0184 (0.0187)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8070 2,282	0.8098 2,282	0.8183 2,282	0.7662 2,281	0.7632 2,052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표 V-85〉 문화재 긴급보수의 전통사찰방재 비용절감 효과(이원 고정효과)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457 (0.0261)	0.0163 (0.0276)	0.0194 (0.0241)	-0.0108 (0.0233)	0.0037 (0.0243)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N	0.5087 2,282	0.5210 2,282	0.5584 2,282	0.5932 2,281	0.6321 2,052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나) 도구변수로 추정된 장기적 비용절감 효과

건물피해액과 총이재민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도구변수 추정을 시도하였다. 두 변수는 재해의 범위, 피해 정도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도 완전하게 외생적이라는 점에서 도구변수로 활용 가능하다. <표 V-86>은 1단계 도구변수 추정 결과 및 관련한 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원 고정효과 모형에서 추정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표 V-86>~<표 V-91>의 도구변수 추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문화재 긴급보수의 장기적인 예산 절감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긴급보수는 일상적인 보수에 비해 시급하고 피해가 큰 보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비용소모를 저감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는 상식적이라 볼 수 있으며 이원 고정효과 모형, 도구변수 추정 모두 이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강건하다고 볼 수 있다.

<표 V-86> 도구변수 추정의 1단계 추정 결과

종속변수: $\ln(c3)$

구분	회귀계수	군집화 표준 오차	t값
건물피해액 t	-6.63e-08***	2.37e-08	-2.80
건물피해액 t-1	-6.10e-08***	2.32e-08	-2.63
건물피해액 t-2	-5.66e-08***	1.86e-08	-3.04
총이재민수 t	0.0007	0.0006	1.19
총이재민수 t-1	0.0001	0.0007	0.18
총이재민수 t-2	0.0002	0.0002	-0.91
Kleibergen-Paap rk LM 통계량	5.71 (0.457)	-	-
Kleibergen-Paap Wald rk F 통계량	8.07	-	-
관측치	1828	-	-

주: 일단계 추정에서도 지역더미와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해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 LM 통계량의 괄호 안은 p값이다.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를 t값과 같이 보고한다.

<표 V-87> 문화재 긴급보수의 문화재 보수정비 비용절감 효과(도구변수)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2319 (0.3748)	0.1374 (0.3514)	0.0535 (0.4031)	-1.5480 (1.0230)	0.5382 (0.3664)
통제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지역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표 V-87〉의 계속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조정된 R^2	0.7026	0.7080	0.7242	0.0565	0.6773
N	1,828	1,828	1,828	1,827	1,598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표 V-88〉 문화재 긴급보수의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 비용절감 효과(도구변수)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1.3090 (0.8000)	0.3760 (0.7651)	-1.0130 (1.0650)	-1.2400 (1.1580)	-0.9903 (0.5643)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0.1532	0.2995	0.0001	0.1499	0.0566
N	1,828	1,828	1,828	1,827	1,598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표 V-89〉 문화재 긴급보수의 고도보존 및 육성 비용절감 효과(도구변수)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0416 (0.0384)	0.0471 (0.0382)	0.0244 (0.0203)	0.0073 (0.0059)	-0.0024 (0.0056)
통제변수 지역고정효과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0.6345	0.7743	0.9231	0.9967	0.9984
N	1,828	1,828	1,828	1,827	1,598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표 V-90〉 문화재 긴급보수의 세계유산 등재·보존 비용절감 효과(도구변수)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2563 (0.3863)	-0.2260 (0.3989)	0.1510 (0.1487)	0.1666 (0.1265)	0.1212 (0.1824)
통제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지역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0.6440	0.6959	0.7054	0.6936	0.7022
N	1,828	1,828	1,828	1,827	1,598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표 V-91〉 문화재 긴급보수의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비용절감 효과(도구변수)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6518 (0.6821)	-0.4456 (0.4752)	-0.1292 (0.2955)	-0.8558 (0.5446)	0.2047 (0.3043)
통제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지역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0.6536	0.7620	0.8329	0.5142	0.7413
N	1,828	1,828	1,828	1,827	1,598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표 V-92〉 문화재 긴급보수의 전통사찰방재 비용절감 효과(도구변수)

구분	(1) Y_{it}	(2) Y_{it+1}	(3) Y_{it+2}	(4) Y_{it+3}	(5) Y_{it+4}
추정치 (표준오차)	0.6241 (0.4897)	0.6404 (0.5041)	0.4169 (0.4212)	0.5633 (0.4963)	-0.0508 (0.4152)
통제변수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지역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고정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조정된 R^2	0.3730	0.4321	0.5808	0.5492	0.6870
N	1,828	1,828	1,828	1,827	1,598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다.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의 모든 회귀분석에 지역더미, 연도더미, 통제변수,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면 절약을 위하여 계수의 보고는 생략하였다.

다. 정량평가 결과 요약

정량평가 분석에서 도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체적으로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 사업들은 그 성격이나 영향이 이질적이므로 전체에 대한 평가보다 내역사업별로 정량평가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보수정비 및 재난방지 관련 사업은 신규 관광객 유입보다 훼손·노후시설 보수로 전과 동일한 방문객 유입 유지를 가능케 하는 것이 효과라고 해석 가능하다. 즉, 문화재 보수유지 관련 예산이 지역의 1인당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는 사업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보수정비로 인한 문화재의 방문객 유입 능력의 지속적 유지(하락 방지)로 볼 수 있다. 일부에서 나타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는 크기가 매우 작으므로, 실제 보수가 일어나는 기간 문화재 관람·개방의 금지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셋째, 따라서 문화재 보수정비 및 재난방지라는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비유의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정량평가에서 감안할 필요가 있다. 비유하자면, 사내에서 아무 보안 이슈가 없다는 것은 보안부서의 업무가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해당 부서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증거일 수 있다.

넷째, 반면, 유지보수를 넘어서는 문화재 보존육성은 긍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업 경과에 따라 잘 나타나고 계수의 크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보존육성 부문 세부사업 집행액 1% 증가가 약 0.6~1.1% 수준의 야간조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효과의 방향성이나 크기가 모두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다섯째, 긴급 보수의 보수관리 비용저감 효과와 관련해서는, 이원 고정효과 모형, 도구변수 추정 모두에서 긴급 보수의 장기적인 문화재 보수관리 비용저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수가 일시적 보수일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라.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의 용도별 구성과 정책적 함의

국가유산청은 2020년부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지원을 받는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 성격을 ‘지원대상’과 ‘세부지원내용’에 따라서 코드를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0개 종류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부지원내용은 총 56가지 종류이다(상세한 분류체계는 <부록> 참조).

문화재 보수정비 세부코드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약 4,200억원에서 2023년 약 4,634억원이다.

〈표 V-93〉 문화재 보수정비 세부코드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세부코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 당해문화재수리	72,216,629	69,339,790	78,930,910	86,653,737
2 토지건물매입	236,790,200	189,896,385	165,690,334	167,043,292
3 발굴조사	22,591,110	17,437,220	22,649,100	29,415,909
4 문화재보호시설 및 조치	23,611,894	22,924,460	20,676,930	33,195,215
5 문화재기록화 및 연구	12,142,673	14,137,100	16,640,270	18,108,970
6 문화재관리시설	2,234,322	5,967,120	18,000,280	19,792,030
7 문화재관람편의시설	15,191,323	22,113,940	19,364,686	23,272,133
8 문화재부대시설	11,182,259	14,095,235	17,499,441	30,156,912
9 문화재 가치증진	4,122,600	9,136,020	10,545,744	7,562,110
10 문화재 경관정비	19,916,990	31,952,730	34,002,305	48,199,692
합계	420,000,000	397,000,000	404,000,000	463,400,000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문화재 보수정비 세부코드별 예산을 비중으로 살펴보면, 주로 당해문화재수리 및 토지건물매입으로 지출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예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표 V-94〉 문화재 보수정비 세부코드별 예산 비중

(단위: %)

세부코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 당해문화재수리	45.86	41.85	40.70	40.30
2 토지건물매입	5.84	5.70	5.35	5.43
3 발굴조사	4.56	4.05	4.40	4.17
4 문화재보호시설 및 조치	6.62	5.70	3.07	3.37
5 문화재기록화 및 연구	10.60	12.83	11.02	9.90
6 문화재관리시설	0.96	1.71	3.82	4.22
7 문화재관람편의시설	6.55	5.93	5.99	6.03
8 문화재부대시설	6.42	7.41	8.11	8.74
9 문화재 가치증진	1.61	2.91	2.12	1.81
10 문화재 경관정비	10.98	11.92	15.42	16.03
합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를 방문객 활용 편의 관련성으로 재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분류 체계상 '지원대상' 10개 종류 중 '당해 문화재 수리', '토지·건물 매입', '발굴 및 기록·보호시설조치'를 제외한 것들, 즉 '문화재 관리시설', '문화재 관람편의시설', '문화재 부대시설', '문화재 가치증진', '문화재 경관정비' 등은 문화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중 '문화재 관리시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문화재 방문객의 활용 편의를 높이는 시설들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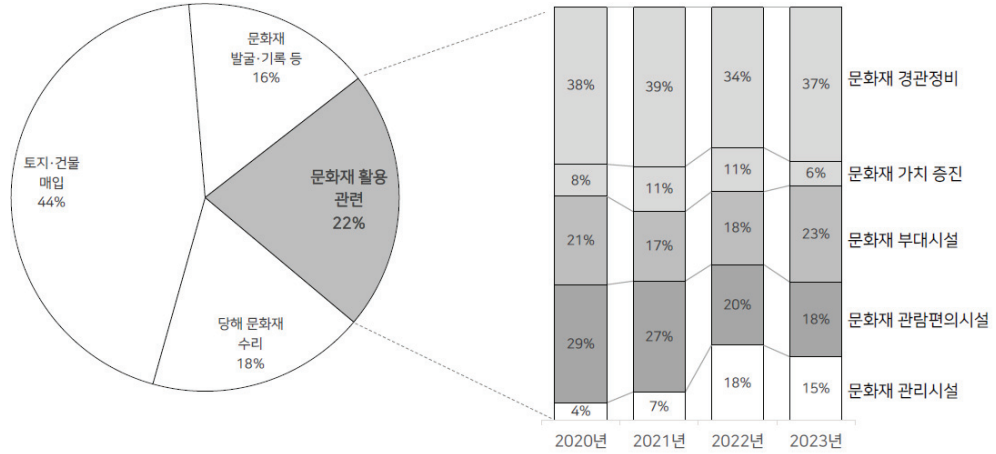
〈표 V-95〉 국가유산청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코드에 따른 지원대상 구분과 방문객 활용 편의 관련성

지원대상	방문객 활용 편의 관련성
① 당해 문화재 수리	x
② 토지·건물 매입	x
③ 발굴조사	x
④ 문화재 보호 시설 및 조치	x
⑤ 문화재 기록화 및 연구	x
⑥ 문화재 관리시설	o
⑦ 문화재 관람편의시설	o
⑧ 문화재 부대시설	o
⑨ 문화재 가치 증진	o
⑩ 문화재 경관정비	o

자료: 국가유산청 제공 전산자료. '관련성'은 연구진 판단에 의함

이 같은 '문화재 활용 관련' 예산의 비율은 2020년부터 2023년에 걸쳐 30%에 달하며 그것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문화재 경관정비'와 '문화재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문화재 활용 관련 예산은 2020년 26.5%, 2021년 29.9%, 2022년 35.5% 그리고 2023년 27.8%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V-9] 국가유산청 문화재정비사업 지원대상 코드에 따른 예산 분류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런데 앞의 통계적 분석에서 본 바에 따르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지역의 경제적 활동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 ‘문화재 활용 관련’ 예산의 효과성은 낮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범주에 속하는 예산의 비중은 낮추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VI 정책제언 요약

이 장에서는 앞의 심층평가 결과에서 확인된 사업별 문제와 그에 대해서 제시한 정책제언을 요약한다.

첫째, 정량평가 중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대한 가상가치평가(CVM) 조사에서는 지불의사액(WTP) 액수가 연간 5,398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평가대상 사업군의 2023년 기준 예산규모의 약 86%에 이르는 것이다. 이것은 사업군의 예산규모가 국민의 지불의사에 비해서 아주 과도한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둘째, 정량평가 중 경제적 활용가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결론은 문화재의 현상태를 유지하는 보수관리 및 재난방지 사업들의 경제적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일부 보존육성 사업에서 시행 후 몇 년의 시차를 두고 그 경제적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여기서 얻어지는 정책적 시사점은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군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 그 효과성이 높지 않다고 확인된 ‘문화재 활용 관련’ 예산의 비중을 낮추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세부사업 단위에서 정성적 평가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관련 정책 제언은 아래의 표에 정리한 바와 같다. 특히 예산의 대부분을 점하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서는 낮은 집행률이 문제가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사업규모를 작은 단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더욱 강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긴급보수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저조한 집행률과 문화재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적정 예산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유산청이 행하는 보수정비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행하는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사업은 사찰단위나 그 지원내용 면에서 상당한 중복이 관찰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보존과 관련성을 중심으로 지정문화재가 소재한 사찰 내 시설별 소관 부처를 정하되, 사전 협의 등을 통해 부처별 지원대상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시행의 대상으로 국가가 아닌 지방이 지정하는 문화재의 선정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업의 혜택이 자산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향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고보조율을 하향 조정하고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VI-1〉 세부사업별 문제점과 정책제언 요약(정성평가)

사업명	문제점	정책제언
문화재 보수정비	- 집행률이 낮음	- 공사단계 세분화: 설계와 시공 분리 기준이 되는 사업비 기준 하향 (3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문화재 유형에 따른 집행률 제고방안 · 등록문화재: 설계단계 수리지침이 될 표준시방서를 구체적 사례와 시공방법 위주로 개정 · 사적문화재: 예산 신청 전 토지 감정평가를 우선 시행하고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사업 지침 개정
문화재 돌봄사업	- 시도(비지정)문화재의 돌봄 대상, 돌봄 인력 1인당 관리 건수 등 지역간 편차 (비효율적 지역 존재 가능성)	- 사업대상 국가문화재 비율(21.5%)과 국고보조율(50%) 불균형 해소 · 1안: 비지정문화재 수를 축소 · 2안: 현행 국고보조율 50%를 문화재 건수 및 관리 면적 등 비중을 고려하여 인하 - 지자체의 돌봄 문화재 선정을 위한 표준지침 마련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중복	- 부처 간 역할 구분 명확화 · 국가문화재 보유 전통사찰에 대해 문화재와 관련성 중심으로 국가 유산청이 담당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해 문체부가 지원 ·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상시설 세부기준(안)을 마련
고도보존 및 육성	- 사업 혜택이 지역사회와 자산 소유자에게 귀속될 가능성	- 단기적으로 국고보조를 인하 또는 졸업제 등 추진 · 1안: 보조율 인하(단, 최근 보조율 인하조치에 따른 효과 등을 확인한 후 추가 인하 검토) · 2안: 졸업제를 도입하여 사업진행의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 지자체 사업으로 이관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 예산규모 클수록 집행률 낮아짐	- 공사단계 세분화: 설계와 시공 분리 기준이 되는 사업비 기준 하향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 관리주체가 상주하는 경우 인력 활용의 비효율성	- 인력배치 효율성 제고: 소유·관리자의 상주 유무, 초기 대응 여건, 문화재 특성 및 현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 선정 및 운영
궁능방재시스템 구축	- 방재시설 노후화 - 능의 경우 산불에 취약	- 방재시설 노후화 정밀점검을 통하여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하고, 부품별 목록화를 통해 외산품목 재고 파악 및 국산품으로 대체 가능성 검토 - 산불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 확충, 모니터링 강화

참고문헌

- 강창희·박상곤, 「대체로 해롭지 않은 이중차분법」, 근간.
- 강창희·박상곤·이환웅, 「이중차분법의 최근 동향(조세·재정제도 분석 관련 방법론의 학습 및 활용 7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 고영선·김정호,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침』, 제2판, 한국개발연구원, 2006.
- 박상곤, 『관광특구의 지정효과 분석: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
- _____, 『지역관광사업의 성과평가 방법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
- Angrist, J. D., & Krueger, A. B., “Empirical strategies in labor economics,” *In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3, Elsevier, 1999, pp. 1277~1366.
- Bowitz, E., & Ibenholt, K., “Economic impacts of cultural heritage—Research and perspectives,”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10(1), 2009, pp. 1~8.
- Brown, J., & Hay-Edie, T., *Engaging Local Communities in Stewardship of World Heritage: A methodology based on the COMPACT experience*, Vol. 40. UNESCO. 2014.
- Busso, M., Gregory, J., and Kline, P., “Assessing the incidence and efficiency of a prominent place based policy,” *American Economic Review*, 103(2), 2013, pp. 897~947.
- Card, D., “The impact of the Mariel boatlift on the Miami labor market,” *Ilr Review*, 43(2), 1990, pp. 245~257.
- Card, D., & Krueger, A. B.,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4(4), 1994, p. 772.
- Carlino, G. A., and Saiz, A., “Beautiful city: Leisure amenities and urban growth,” *Journal of Regional Science*, 59(3), 2019, pp. 369~408.
- Freedman, M., “Targeted business incentives and local labor markets,” *Journal of Human resources*, 48(2), 2013, pp. 311~344.
- Glaeser, E., *Triumph of the city: How urban spaces make us human*, Pan Macmillan, 2011.

- Ham, J. C., Swenson, C., İmrohoroğlu, A., and Song, H., "Government programs can improve local labor markets: Evidence from state enterprise zones, federal empowerment zones and federal enterprise commun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5(7-8), 2011, pp. 779~797.
- Hanson, A., "Local employment, poverty, and property value effects of geographically-targeted tax incentives: An instrumental variables approach,"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9(6), 2009, pp. 721~731.
- Heckman, J. J., Ichimura, H., & Todd, P. E., "Matching as an econometric evaluation estimator: Evidence from evaluating a job training programme,"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64(4), 1997, pp. 605~654.
- Henderson, J. Vernon, Adam Storeygard and David N. Weil, "Measuring Economic Growth from Outer Space." *American Economic Review*, 102(2), 2012, pp. 994~1028.
- Holland, P. W., "Statistics and causal inference,"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1(396), 1986, pp. 945~960.
- Neumark, D., and Kolko, J., "Do enterprise zones create jobs? Evidence from California's enterprise zone program," *Journal of Urban Economics*, 68(1), 2010, pp. 1~19.
- Reynolds, C. L., and Rohlin, S. M., "The effects of location-based tax policies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Evidence from the federal empowerment zone program," *Journal of Urban Economics*, 88, 2015, pp. 1~15.
- Richards, G., "Cultural tourism: A review of recent research and trends,"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36, 2018, pp. 12~21.
- Throsby, D., *Economics and cul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Treasury, H. M. S., "Cabinet Office, National Audit Office, Audit Commission,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Choosing the right FABRIC: a framework for performance information*, London: TSO, 2001.

부 록

〈부록 1〉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등 약 4,300여 개 대상에 대하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시]

주관기관	프로그램		세부사업
국가유산청	II-1.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가치 확산 및 국민의 자긍심 향상	문화재 보수정비 고도보존 및 육성 문화재 돌봄사업
	II-2. 문화재보호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여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공능방재시스템 구축
	III-3. 문화재 국제교류	문화재 국제협력 강화로 우리 문화유산의 국제경쟁력 강화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문화체육부	I-3. 종교문화지원	종교문화 지원으로 종교문화자원 보존 및 이용 활성화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며, 자원 마련을 위해서는 가구별로 향후 5년 간 세금의 추가 인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추가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가구 수가 많아진다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우며, 이로 인한 문화재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본 설문에서는 귀하의 가구가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서 기꺼이 부담하고자 하는 세금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 수행기관

인천대학교

■ 수행기관

(주)한국데이터연구소 양병곤 대리(070-4012-3885)

Screening Questions

[로직 : 1960~2005이 아닐 경우 조사 탈락]

SQ1. 귀하께서 태어나신 연도를 기입해주시시오. [오픈]

출생연도	()년
------	------

[로직 : 쿼터 오버 시 조사 탈락]

SQ2.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단수]

- | | |
|---------|------|
| ① 서울 | ⑨ 강원 |
| ② 부산 | ⑩ 충북 |
| ③ 대구 | ⑪ 충남 |
| ④ 인천 | ⑫ 전북 |
| ⑤ 광주 | ⑬ 전남 |
| ⑥ 대전/세종 | ⑭ 경북 |
| ⑦ 울산 | ⑮ 경남 |
| ⑧ 경기 | ⑯ 제주 |

[로직 : 쿼터 오버 시 조사 탈락]

[로직 : 1 이상 입력 가능]

SQ3. 귀하의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말씀해주세요. [오픈]

※ **가구원**은 한 주택에 살면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 내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가구원 수	()명
-------	------

[로직 : SQ3 > 1]

SQ3-1. 귀하께서는 가구주입니까? [단수]

※ **가구주**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는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 | |
|-------|---------|
| ① 그렇다 | → 문1 |
| ② 아니다 | → SQ3-2 |

[로직 : SQ3 > 1]

SQ3-2.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주부입니까? [단수]

- | | |
|-------|--------|
| ① 그렇다 | → 문1 |
| ② 아니다 | → 조사탈락 |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지불의향 조사

[로직 : 문1 to 문1-5 상단에 노출]

※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귀하 가구의 소득은 제한되어 있고, 그 소득은 여러 용도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 ② 정부가 해야하는 공공사업은 문화재 보수정비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 ③ 귀하의 가구가 내는 지불의사액의 용도는 문화재의 보수정비에 한정된 것이며, 문화재 자체에 대한 가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로직 : 문1 to 문1-5 상단에 노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시]

주관기관	프로그램		세부사업
국가유산청	II-1. 문화재보존관리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가치 확산 및 국민의 자긍심 향상	문화재 보수정비
			고도보존 및 육성
			문화재 돌봄사업
	II-2. 문화재보호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여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궁능방재시스템 구축
III-3. 문화재 국제교류	문화재 국제협력 강화로 우리 문화유산의 국제경쟁력 강화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문화체육부	I-3. 종교문화지원	종교문화 지원으로 종교문화자원 보존 및 이용 활성화	전통종교문화 유산보존

[제시금액 :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중 임의의 금액 제시], [제시한 금액의
빈도는 동일해야 함]

문1. 귀하 가구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위해 향후 5년간 매월 [로직 : 제시금액]원의 세금을 추가
로 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단수]

- ① 있다 → 문1-1
- ② 없다 → 문1-2

문1-1. 그렇다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위해 향후 5년간 매월 [로직 : 제시금액의 2배]원의 세금을
추가로 지불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단수]

- ① 있다 → 문1-4
- ② 없다 → 문1-4

문1-2. 그렇다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위해 향후 5년간 매월 [로직 : 제시금액의 1/2배]원의 세금을 추가로 지불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단수]

- ① 있다 → 문1-4
- ② 없다 → 문1-3

문1-3. 그렇다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위해 세금을 지불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단수]

- ① 세금 지불 의향이 있다 → 문1-4
- ② 세금 지불 의향이 없다 → DQ1

문1-4. 그렇다면, 귀하의 가구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월 추가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세금의 최대금액은 얼마입니까? [오픈]

향후 5년 동안 매월	()원
--------------------	----------

문1-5. 앞서 응답하신 귀하의 가구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위해 지불하겠다는 금액이 실제 어느 정도 확실하십니까? [척도]

매우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확실한 편이다	매우 확실하다
①	②	③	④	⑤

응답자 일반 현황

DQ1. 귀하께서 성별은 무엇입니까? [단수]

- ① 남성
- ② 여성

DQ2.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단수]

- ①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 ② 대학교 재학/졸업
- ③ 대학교 재학/졸업

DQ3. 귀하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단수]

- | | |
|-----------------------|-------------------------|
| ① 100만원 이하 | ⑦ 60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
| ②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⑧ 700만원 초과 ~ 800만원 이하 |
| ③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 ⑨ 800만원 초과 ~ 900만원 이하 |
| ④ 300만원 초과 ~ 400만원 이하 | ⑩ 9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
| ⑤ 4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⑪ 1,000만원 초과 |
| ⑥ 5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 |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설문조사 결과 빈도표

[SQ1] 응답자 현황

〈표 1〉 응답자 현황

Base=전체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비율
전 체		(1,008)	100.0
제시 금액	천원	(201)	19.9
	이천원	(202)	20.0
	삼천원	(203)	20.1
	사천원	(200)	19.8
	오천원	(202)	20.0
성별	남성	(509)	50.5
	여성	(499)	49.5
연령대	20대	(58)	5.8
	30대	(201)	19.9
	40대	(284)	28.2
	50대	(353)	35.0
	60대	(112)	11.1
거주지	수도권	(370)	36.7
	충청/강원권	(195)	19.3
	호남/제주권	(176)	17.5
	경상권	(267)	26.5
가구원 수	1명	(306)	30.4
	2명	(277)	27.5
	3명	(215)	21.3
	4명 이상	(210)	20.8
최종 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192)	19.0
	대학교 재학/졸업	(661)	65.6
	대학원 재학/졸업	(155)	15.4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25)	12.4
	200만~400만원 이하	(375)	37.2
	400만~600만원 이하	(277)	27.5
	600만~800만원 이하	(115)	11.4
	800만원 초과	(116)	11.5

[문1] 귀하 가구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위해 향후 5년간 매월 [제시금액]원의 세금을 추가로 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표 2〉 매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제시 금액x1] 지불 의향(제시 금액 1천원)

Base=제시 금액 1천원 응답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 체		(201)	50.7	49.3
성별	남성	(104)	51.0	49.0
	여성	(97)	50.5	49.5
연령대	20대	(14)	28.6	71.4
	30대	(41)	53.7	46.3
	40대	(54)	44.4	55.6
	50대	(70)	57.1	42.9
	60대	(22)	54.5	45.5
거주지	수도권	(74)	50.0	50.0
	충청/강원권	(39)	59.0	41.0
	호남/제주권	(35)	60.0	40.0
	경상권	(53)	39.6	60.4
가구원 수	1명	(61)	44.3	55.7
	2명	(55)	45.5	54.5
	3명	(43)	55.8	44.2
	4명 이상	(42)	61.9	38.1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41)	48.8	51.2
	대학교 재학/졸업	(131)	47.3	52.7
	대학원 재학/졸업	(29)	69.0	31.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30)	43.3	56.7
	200만~400만원 이하	(69)	47.8	52.2
	400만~600만원 이하	(50)	46.0	54.0
	600만~800만원 이하	(23)	60.9	39.1
	800만원 초과	(29)	65.5	34.5

〈표 3〉 매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제시 금액×1] 지불 의향(제시 금액 2천원)

Base=제시 금액 2천원 응답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 체		(202)	45.0	55.0
성별	남성	(99)	49.5	50.5
	여성	(103)	40.8	59.2
연령대	20대	(15)	53.3	46.7
	30대	(36)	41.7	58.3
	40대	(57)	43.9	56.1
	50대	(68)	41.2	58.8
	60대	(26)	57.7	42.3
거주지	수도권	(74)	50.0	50.0
	충청/강원권	(39)	38.5	61.5
	호남/제주권	(35)	37.1	62.9
	경상권	(54)	48.1	51.9
가구원 수	1명	(61)	34.4	65.6
	2명	(56)	51.8	48.2
	3명	(43)	44.2	55.8
	4명 이상	(42)	52.4	47.6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30)	40.0	60.0
	대학교 재학/졸업	(134)	49.3	50.7
	대학원 재학/졸업	(38)	34.2	65.8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8)	22.2	77.8
	200만~400만원 이하	(91)	45.1	54.9
	400만~600만원 이하	(54)	53.7	46.3
	600만~800만원 이하	(17)	35.3	64.7
	800만원 초과	(22)	50.0	50.0

〈표 4〉 매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제시 금액×1] 지불 의향(제시 금액 3천원)

Base=제시 금액 3천원 응답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 체		(203)	35.0	65.0
성별	남성	(106)	31.1	68.9
	여성	(97)	39.2	60.8
연령대	20대	(10)	40.0	60.0
	30대	(35)	40.0	60.0
	40대	(51)	19.6	80.4
	50대	(78)	39.7	60.3
	60대	(29)	41.4	58.6
거주지	수도권	(75)	37.3	62.7
	충청/강원권	(39)	35.9	64.1
	호남/제주권	(35)	37.1	62.9
	경상권	(54)	29.6	70.4
가구원 수	1명	(63)	28.6	71.4
	2명	(55)	32.7	67.3
	3명	(43)	32.6	67.4
	4명 이상	(42)	50.0	5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35)	25.7	74.3
	대학교 재학/졸업	(146)	37.0	63.0
	대학원 재학/졸업	(22)	36.4	63.6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27)	18.5	81.5
	200만~400만원 이하	(73)	32.9	67.1
	400만~600만원 이하	(57)	29.8	70.2
	600만~800만원 이하	(25)	52.0	48.0
	800만원 초과	(21)	57.1	42.9

〈표 5〉 매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제시 금액x1] 지불(제시 금액 4천원)

Base=제시 금액 4천원 응답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 체		(200)	33.5	66.5
성별	남성	(104)	30.8	69.2
	여성	(96)	36.5	63.5
연령대	20대	(8)	25.0	75.0
	30대	(49)	34.7	65.3
	40대	(58)	27.6	72.4
	50대	(71)	33.8	66.2
	60대	(14)	57.1	42.9
거주지	수도권	(73)	37.0	63.0
	충청/강원권	(39)	23.1	76.9
	호남/제주권	(35)	37.1	62.9
	경상권	(53)	34.0	66.0
가구원 수	1명	(60)	25.0	75.0
	2명	(55)	41.8	58.2
	3명	(43)	25.6	74.4
	4명 이상	(42)	42.9	57.1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40)	27.5	72.5
	대학교 재학/졸업	(131)	33.6	66.4
	대학원 재학/졸업	(29)	41.4	58.6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5)	26.7	73.3
	200만~400만원 이하	(73)	31.5	68.5
	400만~600만원 이하	(63)	31.7	68.3
	600만~800만원 이하	(30)	30.0	70.0
	800만원 초과	(19)	57.9	42.1

〈표 6〉 매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제시 금액x1] 지불(제시 금액 5천원)

Base=제시 금액 5천원 응답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 체		(202)	36.6	63.4
성별	남성	(96)	43.8	56.3
	여성	(106)	30.2	69.8
연령대	20대	(11)	18.2	81.8
	30대	(40)	47.5	52.5
	40대	(64)	32.8	67.2
	50대	(66)	28.8	71.2
	60대	(21)	61.9	38.1
거주지	수도권	(74)	33.8	66.2
	충청/강원권	(39)	41.0	59.0
	호남/제주권	(36)	41.7	58.3
	경상권	(53)	34.0	66.0
가구원 수	1명	(61)	39.3	60.7
	2명	(56)	30.4	69.6
	3명	(43)	41.9	58.1
	4명 이상	(42)	35.7	64.3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46)	34.8	65.2
	대학교 재학/졸업	(119)	36.1	63.9
	대학원 재학/졸업	(37)	40.5	59.5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35)	31.4	68.6
	200만~400만원 이하	(69)	30.4	69.6
	400만~600만원 이하	(53)	47.2	52.8
	600만~800만원 이하	(20)	45.0	55.0
	800만원 초과	(25)	32.0	68.0

[문1-1] 그렇다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위해 향후 5년간 매월 [제시금액의 2배]원의 세금을 추가로 지불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표 7〉 매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제시 금액x2] 지불 의향(제시 금액 1천원)

Base=제시 금액 1천원 & 제시 금액 1배 지출 의향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 체		(102)	52.9	47.1
성별	남성	(53)	64.2	35.8
	여성	(49)	40.8	59.2
연령대	20대	(4)	25.0	75.0
	30대	(22)	50.0	50.0
	40대	(24)	62.5	37.5
	50대	(40)	45.0	55.0
	60대	(12)	75.0	25.0
거주지	수도권	(37)	54.1	45.9
	충청/강원권	(23)	47.8	52.2
	호남/제주권	(21)	61.9	38.1
	경상권	(21)	47.6	52.4
가구원 수	1명	(27)	44.4	55.6
	2명	(25)	56.0	44.0
	3명	(24)	58.3	41.7
	4명 이상	(26)	53.8	46.2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20)	45.0	55.0
	대학교 재학/졸업	(62)	46.8	53.2
	대학원 재학/졸업	(20)	80.0	2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3)	61.5	38.5
	200만~400만원 이하	(33)	42.4	57.6
	400만~600만원 이하	(23)	60.9	39.1
	600만~800만원 이하	(14)	42.9	57.1
	800만원 초과	(19)	63.2	36.8

〈표 8〉 매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제시 금액x2] 지불 의향(제시 금액 2천원)

Base=제시 금액 2천원 & 제시 금액 1배 지출 의향자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있 다	없 다
전 체		(91)	49.5	50.5
성 별	남 성	(49)	67.3	32.7
	여 성	(42)	28.6	71.4
연 령 대	20대	(8)	37.5	62.5
	30대	(15)	40.0	60.0
	40대	(25)	64.0	36.0
	50대	(28)	42.9	57.1
	60대	(15)	53.3	46.7
거 주 지	수도권	(37)	56.8	43.2
	충청/강원권	(15)	46.7	53.3
	호남/제주권	(13)	38.5	61.5
	경상권	(26)	46.2	53.8
가 구 원 수	1명	(21)	38.1	61.9
	2명	(29)	55.2	44.8
	3명	(19)	57.9	42.1
	4명 이상	(22)	45.5	54.5
최 종 학 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12)	33.3	66.7
	대학교 재학/졸업	(66)	48.5	51.5
	대학원 재학/졸업	(13)	69.2	30.8
월 평 균 소 득	200만원 이하	(4)	50.0	50.0
	200만~400만원 이하	(41)	46.3	53.7
	400만~600만원 이하	(29)	44.8	55.2
	600만~800만원 이하	(6)	50.0	50.0
	800만원 초과	(11)	72.7	27.3

〈표 9〉 매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제시 금액x2] 지불 의향(제시 금액 3천원)

Base=제시 금액 3천원 & 제시 금액 1배 지출 의향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 체		(71)	32.4	67.6
성별	남성	(33)	39.4	60.6
	여성	(38)	26.3	73.7
연령대	20대	(4)	50.0	50.0
	30대	(14)	28.6	71.4
	40대	(10)	50.0	50.0
	50대	(31)	35.5	64.5
	60대	(12)	8.3	91.7
거주지	수도권	(28)	32.1	67.9
	충청/강원권	(14)	35.7	64.3
	호남/제주권	(13)	38.5	61.5
	경상권	(16)	25.0	75.0
가구원 수	1명	(18)	44.4	55.6
	2명	(18)	11.1	88.9
	3명	(14)	35.7	64.3
	4명 이상	(21)	38.1	61.9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9)	44.4	55.6
	대학교 재학/졸업	(54)	29.6	70.4
	대학원 재학/졸업	(8)	37.5	62.5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5)	40.0	60.0
	200만~400만원 이하	(24)	25.0	75.0
	400만~600만원 이하	(17)	29.4	70.6
	600만~800만원 이하	(13)	46.2	53.8
	800만원 초과	(12)	33.3	66.7

〈표 10〉 매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제시 금액x2] 지불 의향(제시 금액 4천원)

Base=제시 금액 4천원 & 제시 금액 1배 지출 의향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 체		(67)	31.3	68.7
성별	남성	(32)	37.5	62.5
	여성	(35)	25.7	74.3
연령대	20대	(2)	100.0	-
	30대	(17)	17.6	82.4
	40대	(16)	31.3	68.8
	50대	(24)	33.3	66.7
	60대	(8)	37.5	62.5
거주지	수도권	(27)	37.0	63.0
	충청/강원권	(9)	33.3	66.7
	호남/제주권	(13)	30.8	69.2
	경상권	(18)	22.2	77.8
가구원 수	1명	(15)	26.7	73.3
	2명	(23)	21.7	78.3
	3명	(11)	45.5	54.5
	4명 이상	(18)	38.9	61.1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11)	27.3	72.7
	대학교 재학/졸업	(44)	29.5	70.5
	대학원 재학/졸업	(12)	41.7	58.3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4)	50.0	50.0
	200만~400만원 이하	(23)	30.4	69.6
	400만~600만원 이하	(20)	15.0	85.0
	600만~800만원 이하	(9)	44.4	55.6
	800만원 초과	(11)	45.5	54.5

〈표 11〉 매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제시 금액x2] 지불 의향(제시 금액 5천원)

Base=제시 금액 5천원 & 제시 금액 1배 지출 의향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 체		(74)	43.2	56.8
성별	남성	(42)	50.0	50.0
	여성	(32)	34.4	65.6
연령대	20대	(2)	50.0	50.0
	30대	(19)	42.1	57.9
	40대	(21)	23.8	76.2
	50대	(19)	47.4	52.6
	60대	(13)	69.2	30.8
거주지	수도권	(25)	44.0	56.0
	충청/강원권	(16)	43.8	56.3
	호남/제주권	(15)	53.3	46.7
	경상권	(18)	33.3	66.7
가구원 수	1명	(24)	45.8	54.2
	2명	(17)	52.9	47.1
	3명	(18)	33.3	66.7
	4명 이상	(15)	40.0	6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16)	31.3	68.8
	대학교 재학/졸업	(43)	39.5	60.5
	대학원 재학/졸업	(15)	66.7	33.3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1)	36.4	63.6
	200만~400만원 이하	(21)	42.9	57.1
	400만~600만원 이하	(25)	44.0	56.0
	600만~800만원 이하	(9)	66.7	33.3
	800만원 초과	(8)	25.0	75.0

[문1-2] 그렇다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위해 향후 5년간 매월 [제시금액의 1/2배]원의 세금을 추가로 지불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표 12〉 매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제시 금액x0.5] 지불 의향(제시 금액 1천원)

Base=제시 금액 1천원 & 제시 금액 1배 지출 미의향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 체		(99)	21.2	78.8
성별	남성	(51)	13.7	86.3
	여성	(48)	29.2	70.8
연령대	20대	(10)	10.0	90.0
	30대	(19)	15.8	84.2
	40대	(30)	30.0	70.0
	50대	(30)	20.0	80.0
	60대	(10)	20.0	80.0
거주지	수도권	(37)	13.5	86.5
	충청/강원권	(16)	18.8	81.3
	호남/제주권	(14)	21.4	78.6
	경상권	(32)	31.3	68.8
가구원 수	1명	(34)	26.5	73.5
	2명	(30)	16.7	83.3
	3명	(19)	26.3	73.7
	4명 이상	(16)	12.5	87.5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21)	28.6	71.4
	대학교 재학/졸업	(69)	21.7	78.3
	대학원 재학/졸업	(9)	-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7)	17.6	82.4
	200만~400만원 이하	(36)	22.2	77.8
	400만~600만원 이하	(27)	18.5	81.5
	600만~800만원 이하	(9)	33.3	66.7
	800만원 초과	(10)	20.0	80.0

〈표 13〉 매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제시 금액×0.5] 지불 의향(제시 금액 2천원)

Base=제시 금액 2천원 & 제시 금액 1배 지출 미의향자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있 다	없 다
전 체		(111)	20.7	79.3
성 별	남 성	(50)	20.0	80.0
	여 성	(61)	21.3	78.7
연 령 대	20대	(7)	28.6	71.4
	30대	(21)	9.5	90.5
	40대	(32)	15.6	84.4
	50대	(40)	27.5	72.5
	60대	(11)	27.3	72.7
거 주 지	수도권	(37)	18.9	81.1
	충청/강원권	(24)	20.8	79.2
	호남/제주권	(22)	13.6	86.4
	경상권	(28)	28.6	71.4
가 구 원 수	1명	(40)	12.5	87.5
	2명	(27)	18.5	81.5
	3명	(24)	37.5	62.5
	4명 이상	(20)	20.0	80.0
최 종 학 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18)	22.2	77.8
	대학교 재학/졸업	(68)	20.6	79.4
	대학원 재학/졸업	(25)	20.0	80.0
월 평 균 소 득	200만원 이하	(14)	14.3	85.7
	200만~400만원 이하	(50)	22.0	78.0
	400만~600만원 이하	(25)	24.0	76.0
	600만~800만원 이하	(11)	27.3	72.7
	800만원 초과	(11)	9.1	90.9

〈표 14〉 매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제시 금액×0.5] 지불 의향(제시 금액 3천원)

Base=제시 금액 3천원 & 제시 금액 1배 지출 미의향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 체		(132)	12.1	87.9
성별	남성	(73)	13.7	86.3
	여성	(59)	10.2	89.8
연령대	20대	(6)	16.7	83.3
	30대	(21)	4.8	95.2
	40대	(41)	4.9	95.1
	50대	(47)	17.0	83.0
	60대	(17)	23.5	76.5
거주지	수도권	(47)	12.8	87.2
	충청/강원권	(25)	16.0	84.0
	호남/제주권	(22)	18.2	81.8
	경상권	(38)	5.3	94.7
가구원 수	1명	(45)	11.1	88.9
	2명	(37)	16.2	83.8
	3명	(29)	10.3	89.7
	4명 이상	(21)	9.5	90.5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26)	19.2	80.8
	대학교 재학/졸업	(92)	9.8	90.2
	대학원 재학/졸업	(14)	14.3	85.7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22)	4.5	95.5
	200만~400만원 이하	(49)	22.4	77.6
	400만~600만원 이하	(40)	7.5	92.5
	600만~800만원 이하	(12)	8.3	91.7
	800만원 초과	(9)	-	100.0

〈표 15〉 매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제시 금액×0.5] 지불 의향(제시 금액 4천원)

Base=제시 금액 4천원 & 제시 금액 1배 지출 미의향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 체		(133)	17.3	82.7
성별	남성	(72)	16.7	83.3
	여성	(61)	18.0	82.0
연령대	20대	(6)	-	100.0
	30대	(32)	25.0	75.0
	40대	(42)	9.5	90.5
	50대	(47)	17.0	83.0
	60대	(6)	50.0	50.0
거주지	수도권	(46)	17.4	82.6
	충청/강원권	(30)	20.0	80.0
	호남/제주권	(22)	18.2	81.8
	경상권	(35)	14.3	85.7
가구원 수	1명	(45)	8.9	91.1
	2명	(32)	18.8	81.3
	3명	(32)	31.3	68.8
	4명 이상	(24)	12.5	87.5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29)	20.7	79.3
	대학교 재학/졸업	(87)	17.2	82.8
	대학원 재학/졸업	(17)	11.8	88.2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1)	18.2	81.8
	200만~400만원 이하	(50)	18.0	82.0
	400만~600만원 이하	(43)	14.0	86.0
	600만~800만원 이하	(21)	19.0	81.0
	800만원 초과	(8)	25.0	75.0

〈표 16〉 매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제시 금액×0.5] 지불 의향(제시 금액 5천원)

Base=제시 금액 5천원 & 제시 금액 1배 지출 미의향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 체		(128)	14.1	85.9
성별	남성	(54)	9.3	90.7
	여성	(74)	17.6	82.4
연령대	20대	(9)	22.2	77.8
	30대	(21)	9.5	90.5
	40대	(43)	14.0	86.0
	50대	(47)	14.9	85.1
	60대	(8)	12.5	87.5
거주지	수도권	(49)	20.4	79.6
	충청/강원권	(23)	8.7	91.3
	호남/제주권	(21)	14.3	85.7
	경상권	(35)	8.6	91.4
가구원 수	1명	(37)	10.8	89.2
	2명	(39)	15.4	84.6
	3명	(25)	4.0	96.0
	4명 이상	(27)	25.9	74.1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30)	16.7	83.3
	대학교 재학/졸업	(76)	9.2	90.8
	대학원 재학/졸업	(22)	27.3	72.7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24)	16.7	83.3
	200만~400만원 이하	(48)	14.6	85.4
	400만~600만원 이하	(28)	10.7	89.3
	600만~800만원 이하	(11)	9.1	90.9
	800만원 초과	(17)	17.6	82.4

[문1-3] 그렇다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위해 세금을 지불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표 17〉 매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세금 지불 의향(제시 금액 1천원)

Base=제시 금액 1천원 & 제시 금액 0.5/2배 지출 미의향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세금 지불 의향 있다	세금 지불 의향 없다
전 체		(78)	9.0	91.0
성별	남성	(44)	9.1	90.9
	여성	(34)	8.8	91.2
연령대	20대	(9)	-	100.0
	30대	(16)	12.5	87.5
	40대	(21)	9.5	90.5
	50대	(24)	4.2	95.8
	60대	(8)	25.0	75.0
거주지	수도권	(32)	6.3	93.8
	충청/강원권	(13)	15.4	84.6
	호남/제주권	(11)	27.3	72.7
	경상권	(22)	-	100.0
가구원 수	1명	(25)	16.0	84.0
	2명	(25)	8.0	92.0
	3명	(14)	-	100.0
	4명 이상	(14)	7.1	92.9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15)	13.3	86.7
	대학교 재학/졸업	(54)	9.3	90.7
	대학원 재학/졸업	(9)	-	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4)	14.3	85.7
	200만~400만원 이하	(28)	10.7	89.3
	400만~600만원 이하	(22)	4.5	95.5
	600만~800만원 이하	(6)	-	100.0
	800만원 초과	(8)	12.5	87.5

〈표 18〉 매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세금 지불 의향(제시 금액 2천원)

Base=제시 금액 2천원 & 제시 금액 0.5/2배 지출 미의향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세금 지불 의향 있다	세금 지불 의향 없다
전 체		(88)	15.9	84.1
성별	남성	(40)	12.5	87.5
	여성	(48)	18.8	81.3
연령대	20대	(5)	20.0	80.0
	30대	(19)	10.5	89.5
	40대	(27)	18.5	81.5
	50대	(29)	17.2	82.8
	60대	(8)	12.5	87.5
거주지	수도권	(30)	16.7	83.3
	충청/강원권	(19)	21.1	78.9
	호남/제주권	(19)	21.1	78.9
	경상권	(20)	5.0	95.0
가구원 수	1명	(35)	11.4	88.6
	2명	(22)	22.7	77.3
	3명	(15)	26.7	73.3
	4명 이상	(16)	6.3	93.8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14)	7.1	92.9
	대학교 재학/졸업	(54)	13.0	87.0
	대학원 재학/졸업	(20)	30.0	7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2)	8.3	91.7
	200만~400만원 이하	(39)	12.8	87.2
	400만~600만원 이하	(19)	15.8	84.2
	600만~800만원 이하	(8)	37.5	62.5
	800만원 초과	(10)	20.0	80.0

〈표 19〉 매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세금 지불 의향(제시 금액 3천원)

Base=제시 금액 3천원 & 제시 금액 0.5/2배 지출 미의향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세금 지불 의향 있다	세금 지불 의향 없다
전 체		(116)	16.4	83.6
성별	남성	(63)	14.3	85.7
	여성	(53)	18.9	81.1
연령대	20대	(5)	60.0	40.0
	30대	(20)	15.0	85.0
	40대	(39)	17.9	82.1
	50대	(39)	12.8	87.2
	60대	(13)	7.7	92.3
거주지	수도권	(41)	7.3	92.7
	충청/강원권	(21)	19.0	81.0
	호남/제주권	(18)	22.2	77.8
	경상권	(36)	22.2	77.8
가구원 수	1명	(40)	17.5	82.5
	2명	(31)	12.9	87.1
	3명	(26)	7.7	92.3
	4명 이상	(19)	31.6	68.4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21)	9.5	90.5
	대학교 재학/졸업	(83)	18.1	81.9
	대학원 재학/졸업	(12)	16.7	83.3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21)	23.8	76.2
	200만~400만원 이하	(38)	18.4	81.6
	400만~600만원 이하	(37)	13.5	86.5
	600만~800만원 이하	(11)	18.2	81.8
	800만원 초과	(9)	-	100.0

〈표 20〉 매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세금 지불 의향(제시 금액 4천원)

Base=제시 금액 4천원 & 제시 금액 0.5/2배 지출 미의향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세금 지불 의향 있다	세금 지불 의향 없다
전 체		(110)	20.0	80.0
성별	남성	(60)	20.0	80.0
	여성	(50)	20.0	80.0
연령대	20대	(6)	33.3	66.7
	30대	(24)	25.0	75.0
	40대	(38)	13.2	86.8
	50대	(39)	23.1	76.9
	60대	(3)	-	100.0
거주지	수도권	(38)	18.4	81.6
	충청/강원권	(24)	20.8	79.2
	호남/제주권	(18)	5.6	94.4
	경상권	(30)	30.0	70.0
가구원 수	1명	(41)	14.6	85.4
	2명	(26)	34.6	65.4
	3명	(22)	27.3	72.7
	4명 이상	(21)	4.8	95.2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23)	13.0	87.0
	대학교 재학/졸업	(72)	20.8	79.2
	대학원 재학/졸업	(15)	26.7	73.3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9)	-	100.0
	200만~400만원 이하	(41)	24.4	75.6
	400만~600만원 이하	(37)	21.6	78.4
	600만~800만원 이하	(17)	17.6	82.4
	800만원 초과	(6)	16.7	83.3

〈표 21〉 매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세금 지불 의향(제시 금액 5천원)

Base=제시 금액 5천원 & 제시 금액 0.5/2배 지출 미의향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세금 지불 의향 있다	세금 지불 의향 없다
전 체		(110)	18.2	81.8
성별	남성	(49)	20.4	79.6
	여성	(61)	16.4	83.6
연령대	20대	(7)	-	100.0
	30대	(19)	26.3	73.7
	40대	(37)	18.9	81.1
	50대	(40)	17.5	82.5
	60대	(7)	14.3	85.7
거주지	수도권	(39)	12.8	87.2
	충청/강원권	(21)	19.0	81.0
	호남/제주권	(18)	22.2	77.8
	경상권	(32)	21.9	78.1
가구원 수	1명	(33)	27.3	72.7
	2명	(33)	15.2	84.8
	3명	(24)	8.3	91.7
	4명 이상	(20)	20.0	8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25)	20.0	80.0
	대학교 재학/졸업	(69)	17.4	82.6
	대학원 재학/졸업	(16)	18.8	81.3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20)	15.0	85.0
	200만~400만원 이하	(41)	17.1	82.9
	400만~600만원 이하	(25)	20.0	80.0
	600만~800만원 이하	(10)	20.0	80.0
	800만원 초과	(14)	21.4	78.6

[문1-4] 그렇다면, 귀하의 가구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월 추가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세금의 최대금액은 얼마입니까?

〈표 22〉 매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지불 의향이 있는 최대 금액(제시 금액 1천원)

Base=제시 금액 1천원 & 지출 의향자

(단위: 명, 원)

구 분		사례 수	최대 세금 지불 의향액 평균
전 체		(130)	11,015
성별	남성	(64)	20,170
	여성	(66)	2,138
연령대	20대	(5)	1,200
	30대	(27)	3,530
	40대	(35)	3,780
	50대	(47)	3,077
	60대	(16)	65,862
거주지	수도권	(44)	4,000
	충청/강원권	(28)	3,989
	호남/제주권	(27)	40,159
	경상권	(31)	1,935
가구원 수	1명	(40)	2,025
	2명	(32)	3,994
	3명	(29)	3,797
	4명 이상	(29)	38,383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28)	1,682
	대학교 재학/졸업	(82)	2,548
	대학원 재학/졸업	(20)	58,8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8)	2,267
	200만~400만원 이하	(44)	1,964
	400만~600만원 이하	(29)	5,338
	600만~800만원 이하	(17)	3,029
	800만원 초과	(22)	49,932

〈표 23〉 매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지불 의향이 있는 최대 금액(제시 금액 2천원)

Base=제시 금액 2천원 & 지출 의향자

(단위: 명, 원)

구 분		사례 수	최대 세금 지불 의향액 평균
전 체		(128)	6,048
성별	남성	(64)	5,790
	여성	(64)	6,307
연령대	20대	(11)	24,864
	30대	(19)	3,263
	40대	(35)	3,889
	50대	(44)	2,911
	60대	(19)	9,184
거주지	수도권	(49)	8,733
	충청/강원권	(24)	2,942
	호남/제주권	(20)	3,008
	경상권	(35)	6,157
가구원 수	1명	(30)	2,448
	2명	(39)	6,336
	3명	(32)	3,724
	4명 이상	(27)	12,389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17)	8,018
	대학교 재학/졸업	(87)	6,382
	대학원 재학/졸업	(24)	3,443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7)	2,514
	200만~400만원 이하	(57)	9,190
	400만~600만원 이하	(38)	3,625
	600만~800만원 이하	(12)	3,083
	800만원 초과	(14)	4,143

〈표 24〉 매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지불 의향이 있는 최대 금액(제시 금액 3천원)

Base=제시 금액 3천원 & 지출 의향자

(단위: 명, 원)

구 분		사례 수	최대 세금 지불 의향액 평균
전 체		(106)	4,955
성별	남성	(52)	5,223
	여성	(54)	4,696
연령대	20대	(8)	3,300
	30대	(18)	4,117
	40대	(19)	5,947
	50대	(44)	5,800
	60대	(17)	3,324
거주지	수도권	(37)	5,381
	충청/강원권	(22)	5,091
	호남/제주권	(21)	6,076
	경상권	(26)	3,327
가구원 수	1명	(30)	5,550
	2명	(28)	3,561
	3명	(19)	4,711
	4명 이상	(29)	5,845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16)	4,750
	대학교 재학/졸업	(78)	4,382
	대학원 재학/졸업	(12)	8,950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1)	7,718
	200만~400만원 이하	(42)	3,233
	400만~600만원 이하	(25)	4,460
	600만~800만원 이하	(16)	5,125
	800만원 초과	(12)	9,250

〈표 25〉 매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지불 의향이 있는 최대 금액(제시 금액 4천원)

Base=제시 금액 4천원 & 지출 의향자

(단위: 명, 원)

구 분		사 례 수	최대 세금 지불 의향액 평균
전 체		(112)	4,585
성별	남성	(56)	4,993
	여성	(56)	4,177
연령대	20대	(4)	4,675
	30대	(31)	4,139
	40대	(25)	5,220
	50대	(41)	4,317
	60대	(11)	5,364
거주지	수도권	(42)	5,145
	충청/강원권	(20)	3,765
	호남/제주권	(18)	4,917
	경상권	(32)	4,175
가구원 수	1명	(25)	4,108
	2명	(38)	4,258
	3명	(27)	3,907
	4명 이상	(22)	6,523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20)	3,975
	대학교 재학/졸업	(74)	4,655
	대학원 재학/졸업	(18)	4,972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6)	4,933
	200만~400만원 이하	(42)	4,312
	400만~600만원 이하	(34)	3,685
	600만~800만원 이하	(16)	5,906
	800만원 초과	(14)	5,929

〈표 26〉 매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지불 의향이 있는 최대 금액(제시 금액 5천원)

Base=제시 금액 5천원 & 지출 의향자

(단위: 명, 원)

구 분		사 례 수	최대 세금 지불 의향액 평균
전 체		(112)	9,697
성별	남성	(57)	10,393
	여성	(55)	8,977
연령대	20대	(4)	5,125
	30대	(26)	7,335
	40대	(34)	12,700
	50대	(33)	7,442
	60대	(15)	13,167
거주지	수도권	(40)	9,743
	충청/강원권	(22)	12,396
	호남/제주권	(22)	8,027
	경상권	(28)	8,825
가구원 수	1명	(37)	14,130
	2명	(28)	7,321
	3명	(21)	7,167
	4명 이상	(26)	7,992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26)	5,792
	대학교 재학/졸업	(62)	11,108
	대학원 재학/졸업	(24)	10,283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8)	15,289
	200만~400만원 이하	(35)	5,875
	400만~600만원 이하	(33)	11,051
	600만~800만원 이하	(12)	11,375
	800만원 초과	(14)	7,436

〈표 27〉 매월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을 위해 지불 의향이 있는 최대 금액(전체)

Base=지출 의향자

(단위: 명, 원)

구 분		사례 수	최대 세금 지불 의향액 평균
전 체		(588)	7,366
제시 금액	천원	(130)	11,015
	이천원	(128)	6,048
	삼천원	(106)	4,955
	사천원	(112)	4,585
	오천원	(112)	9,697
성별	남성	(293)	9,574
	여성	(295)	5,173
연령대	20대	(32)	10,784
	30대	(121)	4,549
	40대	(148)	6,376
	50대	(209)	4,548
	60대	(78)	19,760
거주지	수도권	(212)	6,645
	충청/강원권	(116)	5,537
	호남/제주권	(108)	14,233
	경상권	(152)	4,886
가구원 수	1명	(162)	5,842
	2명	(165)	5,099
	3명	(128)	4,490
	4명 이상	(133)	14,8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107)	4,575
	대학교 재학/졸업	(383)	5,585
	대학원 재학/졸업	(98)	17,371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60)	7,469
	200만~400만원 이하	(220)	5,149
	400만~600만원 이하	(159)	5,623
	600만~800만원 이하	(73)	5,500
	800만원 초과	(76)	19,139

[문1-5] 앞서 응답하신 귀하의 가구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위해 지불하겠다는 금액이 실제로 어느 정도 확실하십니까?

〈표 28〉 최대 지불 의향 금액의 확실 정도(기준금액 1천원)

Base=제시 금액 1천원 & 지출 의향자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 수	매우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확실한 편이다	매우 확실하다	평균
전 체		(130)	-	7.7	37.7	39.2	15.4	3.62
성별	남성	(64)	-	4.7	34.4	42.2	18.8	3.75
	여성	(66)	-	10.6	40.9	36.4	12.1	3.50
연령대	20대	(5)	-	20.0	20.0	60.0	-	3.40
	30대	(27)	-	7.4	37.0	37.0	18.5	3.67
	40대	(35)	-	5.7	40.0	40.0	14.3	3.63
	50대	(47)	-	8.5	38.3	38.3	14.9	3.60
	60대	(16)	-	6.3	37.5	37.5	18.8	3.69
거주지	수도권	(44)	-	6.8	38.6	34.1	20.5	3.68
	충청/강원권	(28)	-	7.1	25.0	53.6	14.3	3.75
	호남/제주권	(27)	-	3.7	48.1	29.6	18.5	3.63
	경상권	(31)	-	12.9	38.7	41.9	6.5	3.42
가구원 수	1명	(40)	-	10.0	32.5	40.0	17.5	3.65
	2명	(32)	-	9.4	43.8	40.6	6.3	3.44
	3명	(29)	-	6.9	41.4	41.4	10.3	3.55
	4명 이상	(29)	-	3.4	34.5	34.5	27.6	3.86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28)	-	7.1	50.0	39.3	3.6	3.39
	대학교 재학/졸업	(82)	-	8.5	40.2	39.0	12.2	3.55
	대학원 재학/졸업	(20)	-	5.0	10.0	40.0	45.0	4.25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8)	-	11.1	44.4	44.4	-	3.33
	200만~400만원 이하	(44)	-	6.8	31.8	38.6	22.7	3.77
	400만~600만원 이하	(29)	-	6.9	44.8	24.1	24.1	3.66
	600만~800만원 이하	(17)	-	5.9	41.2	52.9	-	3.47
	800만원 초과	(22)	-	9.1	31.8	45.5	13.6	3.64

〈표 29〉 최대 지불 의향 금액의 확실 정도(기준금액 2천원)

Base=제시 금액 2천원 & 지출 의향자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 수	매우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확실한 편이다	매우 확실하다	평균
전 체		(128)	-	4.7	35.9	46.9	12.5	3.67
성별	남성	(64)	-	-	35.9	48.4	15.6	3.80
	여성	(64)	-	9.4	35.9	45.3	9.4	3.55
연령대	20대	(11)	-	-	36.4	54.5	9.1	3.73
	30대	(19)	-	-	36.8	47.4	15.8	3.79
	40대	(35)	-	8.6	25.7	48.6	17.1	3.74
	50대	(44)	-	4.5	36.4	50.0	9.1	3.64
	60대	(19)	-	5.3	52.6	31.6	10.5	3.47
거주지	수도권	(49)	-	2.0	36.7	46.9	14.3	3.73
	충청/강원권	(24)	-	12.5	25.0	45.8	16.7	3.67
	호남/제주권	(20)	-	-	45.0	45.0	10.0	3.65
	경상권	(35)	-	5.7	37.1	48.6	8.6	3.60
가구원 수	1명	(30)	-	3.3	33.3	50.0	13.3	3.73
	2명	(39)	-	5.1	46.2	38.5	10.3	3.54
	3명	(32)	-	6.3	25.0	53.1	15.6	3.78
	4명 이상	(27)	-	3.7	37.0	48.1	11.1	3.67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17)	-	5.9	35.3	58.8	-	3.53
	대학교 재학/졸업	(87)	-	3.4	32.2	49.4	14.9	3.76
	대학원 재학/졸업	(24)	-	8.3	50.0	29.2	12.5	3.46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7)	-	14.3	28.6	42.9	14.3	3.57
	200만~400만원 이하	(57)	-	1.8	31.6	56.1	10.5	3.75
	400만~600만원 이하	(38)	-	2.6	42.1	47.4	7.9	3.61
	600만~800만원 이하	(12)	-	16.7	25.0	25.0	33.3	3.75
	800만원 초과	(14)	-	7.1	50.0	28.6	14.3	3.50

〈표 30〉 최대 지불 의향 금액의 확실 정도(기준금액 3천원)

Base=제시 금액 3천원 & 지출 의향자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 수	매우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확실한 편이다	매우 확실하다	평균
전 체		(106)	1.9	8.5	29.2	51.9	8.5	3.57
성별	남성	(52)	1.9	7.7	34.6	46.2	9.6	3.54
	여성	(54)	1.9	9.3	24.1	57.4	7.4	3.59
연령대	20대	(8)	-	12.5	37.5	50.0	-	3.38
	30대	(18)	-	-	44.4	44.4	11.1	3.67
	40대	(19)	5.3	5.3	26.3	52.6	10.5	3.58
	50대	(44)	2.3	11.4	22.7	54.5	9.1	3.57
	60대	(17)	-	11.8	29.4	52.9	5.9	3.53
거주지	수도권	(37)	-	10.8	27.0	56.8	5.4	3.57
	충청/강원권	(22)	4.5	4.5	22.7	63.6	4.5	3.59
	호남/제주권	(21)	4.8	9.5	28.6	42.9	14.3	3.52
	경상권	(26)	-	7.7	38.5	42.3	11.5	3.58
가구원 수	1명	(30)	-	3.3	30.0	53.3	13.3	3.77
	2명	(28)	-	17.9	28.6	46.4	7.1	3.43
	3명	(19)	-	10.5	36.8	52.6	-	3.42
	4명 이상	(29)	6.9	3.4	24.1	55.2	10.3	3.59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16)	-	6.3	12.5	81.3	-	3.75
	대학교 재학/졸업	(78)	1.3	10.3	33.3	46.2	9.0	3.51
	대학원 재학/졸업	(12)	8.3	-	25.0	50.0	16.7	3.67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1)	-	-	27.3	45.5	27.3	4.00
	200만~400만원 이하	(42)	2.4	9.5	35.7	45.2	7.1	3.45
	400만~600만원 이하	(25)	4.0	12.0	12.0	72.0	-	3.52
	600만~800만원 이하	(16)	-	6.3	37.5	43.8	12.5	3.63
	800만원 초과	(12)	-	8.3	33.3	50.0	8.3	3.58

〈표 31〉 최대 지불 의향 금액의 확실 정도(기준금액 4천원)

Base=제시 금액 4천원 & 지출 의향자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 수	매우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확실한 편이다	매우 확실하다	평균
전 체		(112)	-	9.8	32.1	46.4	11.6	3.60
성별	남성	(56)	-	5.4	35.7	44.6	14.3	3.68
	여성	(56)	-	14.3	28.6	48.2	8.9	3.52
연령대	20대	(4)	-	-	25.0	50.0	25.0	4.00
	30대	(31)	-	16.1	35.5	41.9	6.5	3.39
	40대	(25)	-	8.0	36.0	40.0	16.0	3.64
	50대	(41)	-	7.3	29.3	48.8	14.6	3.71
	60대	(11)	-	9.1	27.3	63.6	-	3.55
거주지	수도권	(42)	-	9.5	31.0	52.4	7.1	3.57
	충청/강원권	(20)	-	10.0	30.0	50.0	10.0	3.60
	호남/제주권	(18)	-	5.6	50.0	38.9	5.6	3.44
	경상권	(32)	-	12.5	25.0	40.6	21.9	3.72
가구원 수	1명	(25)	-	4.0	48.0	40.0	8.0	3.52
	2명	(38)	-	10.5	34.2	47.4	7.9	3.53
	3명	(27)	-	11.1	14.8	59.3	14.8	3.78
	4명 이상	(22)	-	13.6	31.8	36.4	18.2	3.59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20)	-	5.0	40.0	45.0	10.0	3.60
	대학교 재학/졸업	(74)	-	10.8	31.1	45.9	12.2	3.59
	대학원 재학/졸업	(18)	-	11.1	27.8	50.0	11.1	3.61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6)	-	-	83.3	16.7	-	3.17
	200만~400만원 이하	(42)	-	9.5	33.3	45.2	11.9	3.60
	400만~600만원 이하	(34)	-	8.8	26.5	52.9	11.8	3.68
	600만~800만원 이하	(16)	-	12.5	31.3	50.0	6.3	3.50
	800만원 초과	(14)	-	14.3	21.4	42.9	21.4	3.71

〈표 32〉 최대 지불 의향 금액의 확실 정도(기준금액 5천원)

Base=제시 금액 5천원 & 지출 의향자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 수	매우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확실한 편이다	매우 확실하다	평균
전 체		(112)	0.9	4.5	40.2	43.8	10.7	3.59
성별	남성	(57)	-	1.8	40.4	43.9	14.0	3.70
	여성	(55)	1.8	7.3	40.0	43.6	7.3	3.47
연령대	20대	(4)	-	25.0	50.0	25.0	-	3.00
	30대	(26)	-	3.8	38.5	42.3	15.4	3.69
	40대	(34)	-	2.9	44.1	41.2	11.8	3.62
	50대	(33)	3.0	6.1	42.4	42.4	6.1	3.42
	60대	(15)	-	-	26.7	60.0	13.3	3.87
거주지	수도권	(40)	2.5	5.0	45.0	37.5	10.0	3.48
	충청/강원권	(22)	-	9.1	50.0	27.3	13.6	3.45
	호남/제주권	(22)	-	-	31.8	54.5	13.6	3.82
	경상권	(28)	-	3.6	32.1	57.1	7.1	3.68
가구원 수	1명	(37)	-	-	56.8	35.1	8.1	3.51
	2명	(28)	-	10.7	28.6	46.4	14.3	3.64
	3명	(21)	-	4.8	38.1	47.6	9.5	3.62
	4명 이상	(26)	3.8	3.8	30.8	50.0	11.5	3.62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26)	-	3.8	42.3	46.2	7.7	3.58
	대학교 재학/졸업	(62)	1.6	3.2	40.3	45.2	9.7	3.58
	대학원 재학/졸업	(24)	-	8.3	37.5	37.5	16.7	3.63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8)	-	5.6	61.1	27.8	5.6	3.33
	200만~400만원 이하	(35)	-	2.9	40.0	42.9	14.3	3.69
	400만~600만원 이하	(33)	-	3.0	42.4	42.4	12.1	3.64
	600만~800만원 이하	(12)	-	8.3	33.3	50.0	8.3	3.58
	800만원 초과	(14)	7.1	7.1	14.3	64.3	7.1	3.57

〈표 33〉 최대 지불 의향 금액의 확실 정도(전체)

Base=지출 의향자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 수	매우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확실한 편이다	매우 확실하다	평균	
전 체	(588)	0.5	7.0	35.2	45.4	11.9	3.61	
제시 금액	천원	(130)	11,015	7.7	37.7	39.2	15.4	3.62
	이천원	(128)	6,048	4.7	35.9	46.9	12.5	3.67
	삼천원	(106)	4,955	8.5	29.2	51.9	8.5	3.57
	사천원	(112)	4,585	9.8	32.1	46.4	11.6	3.60
	오천원	(112)	9,697	4.5	40.2	43.8	10.7	3.59
성별	남성	(293)	0.3	3.8	36.2	45.1	14.7	3.70
	여성	(295)	0.7	10.2	34.2	45.8	9.2	3.53
연령대	20대	(32)	-	9.4	34.4	50.0	6.3	3.53
	30대	(121)	-	6.6	38.0	42.1	13.2	3.62
	40대	(148)	0.7	6.1	35.1	43.9	14.2	3.65
	50대	(209)	1.0	7.7	33.5	46.9	11.0	3.59
	60대	(78)	-	6.4	35.9	47.4	10.3	3.62
거주지	수도권	(212)	0.5	6.6	35.8	45.3	11.8	3.61
	충청/강원권	(116)	0.9	8.6	30.2	48.3	12.1	3.62
	호남/제주권	(108)	0.9	3.7	40.7	41.7	13.0	3.62
	경상권	(152)	-	8.6	34.2	46.1	11.2	3.60
가구원 수	1명	(162)	-	4.3	40.1	43.2	12.3	3.64
	2명	(165)	-	10.3	37.0	43.6	9.1	3.52
	3명	(128)	-	7.8	30.5	50.8	10.9	3.65
	4명 이상	(133)	2.3	5.3	31.6	45.1	15.8	3.67
최종학력	고등학교 재학/졸업 이하	(107)	-	5.6	38.3	51.4	4.7	3.55
	대학교 재학/졸업	(383)	0.5	7.3	35.2	45.2	11.7	3.60
	대학원 재학/졸업	(98)	1.0	7.1	31.6	39.8	20.4	3.71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60)	-	6.7	48.3	36.7	8.3	3.47
	200만~400만원 이하	(220)	0.5	5.9	34.1	46.4	13.2	3.66
	400만~600만원 이하	(159)	0.6	6.3	34.6	47.2	11.3	3.62
	600만~800만원 이하	(73)	-	9.6	34.2	45.2	11.0	3.58
	800만원 초과	(76)	1.3	9.2	30.3	46.1	13.2	3.61

〈부록 3〉 방재 관련 국가유산청 소관 전통사찰(2023년 9월 기준)

연번	시도	시군구	사찰명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비고
1	부산	금정	범어사	보물	434	부산 범어사 대웅전	
				보물	1461	부산 범어사 조계문	
2	부산	기장	장안사	보물	1771	기장 장안사 대웅전	
3	부산	사상	운수사	보물	1896	사상 운수사 대웅전	
4	대구	동구	복지장사	보물	805	대구 복지장사 대웅전	
5	대구	동구	동화사	보물	1563	대구 동화사 대웅전	
				보물	2132	대구 동화사 극락전	'21.07.22.
				보물	2133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21.07.22.
				보물	2204	대구 동화사 봉황문	'22.12.28.
6	대구	동구	파계사	보물	1850	대구 파계사 원통전	
7	인천	강화	정수사	보물	161	강화 정수사 법당	
8	인천	강화	전등사	보물	178	강화 전등사 대웅전	
				보물	179	강화 전등사 약사전	
9	경기	안성	석남사	보물	823	안성 석남사 영산전	
10	경기	안성	청룡사	보물	824	안성 청룡사 대웅전	
11	경기	안성	칠장사	보물	2036	안성 칠장사 대웅전	
12	경기	화성	용주사	보물	1942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13	경기	여주	신륵사	보물	180	여주 신륵사 조사당	
14	경기	성남	봉국사	보물	2207	성남 봉국사 대광명전	'22.12.28.
15	강원	춘천	청평사	보물	164	춘천 청평사 회전문	명승
16	강원	양양	낙산사	사적	495	양양 낙산사 일원	사적
17	강원	양양	홍련암	명승	27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	명승
18	강원	속초	신흥사	보물	1981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19	강원	평창	월정사	보물	1995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20	충북	보은	법주사	국보	55	보은 법주사 팔상전	사적 및 명승
				보물	915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보물	916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	
21	충북	청원	안심사	보물	664	청원 안심사 대웅전	
22	충남	공주	마곡사	보물	800	공주 마곡사 영산전	

연번	시도	시군구	사찰명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비고
				보물	801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보물	802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23	충남	공주	신원사	보물	1293	공주 계룡산 종약단	
24	충남	공주	갑사	보물	2120	공주 갑사 대웅전	
25	충남	논산	쌍계사	보물	408	논산 쌍계사 대웅전	
26	충남	부여	무량사	보물	356	부여 무량사 극락전	
27	충남	서산	개심사	보물	143	서산 개심사 대웅전	
28	충남	예산	수덕사	국보	49	예산 수덕사 대웅전	
29	충남	청양	장곡사	보물	162	청양 장곡사 상 대웅전	
				보물	181	청양 장곡사 하 대웅전	
30	충남	홍성	고산사	보물	399	홍성 고산사 대웅전	
31	전북	고창	선운사	보물	290	고창 선운사 대웅전	
				보물	2065	고창 선운사 만세루	
32	전북	고창	선운사 참당암	보물	803	고창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	
33	전북	김제	금산사	국보	62	김제 금산사 미륵전	사적
				보물	827	김제 금산사 대장전	
34	전북	김제	귀신사	보물	826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35	전북	부안	내소사	보물	291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36	전북	부안	개암사	보물	292	부안 개암사 대웅전	
37	전북	완주	위봉사	보물	608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	
38	전북	완주	화암사	보물	662	완주 화암사 우화루	
				국보	316	완주 화암사 극락전	
39	전북	완주	송광사	보물	1243	완주 송광사 대웅전	
				보물	1244	완주 송광사 종루	
40	전북	익산	송림사	보물	825	익산 송림사 보광전	
41	전북	남원	실상사	사적	309	남원 실상사	사적
42	전남	강진	무위사	국보	13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43	전남	강진	백련사	보물	2220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	'23.6.26.
44	전남	고흥	능가사	보물	1307	고흥 능가사 대웅전	
45	전남	구례	천은사	보물	2024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보물	2203	구례 천은사 일주문	'22.12.28.
46	전남	구례	화엄사	국보	67	구례 화엄사 각황전	사적 및 명승

연번	시도	시군구	사찰명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비고
				보물	299	구례 화엄사 대웅전	
47	전남	나주	불회사	보물	1310	나주 불회사 대웅전	
48	전남	순천	송광사	국보	56	순천 송광사 국사전	사적 및 명승
				보물	263	순천 송광사 하사당	
				보물	302	순천 송광사 약사전	
				보물	303	순천 송광사 영산전	
49	전남	순천	정혜사	보물	804	순천 정혜사 대웅전	
50	전남	순천	선암사	보물	1311	순천 선암사 대웅전	사적 및 명승
				보물	2201	순천 선암사 일주문	'22.12.28.
51	전남	여수	흥국사	보물	396	여수 흥국사 대웅전	
52	전남	영광	불갑사	보물	830	영광 불갑사 대웅전	
53	전남	영암	도갑사	국보	50	영암 도갑사 해탈문	
54	전남	해남	미황사	보물	1183	해남 미황사 웅진당	명승
				보물	947	해남 미황사 대웅전	
55	전남	해남	대흥사	보물	1807	해남 대흥사 천불전	사적 및 명승
56	전남	화순	운주사	사적	312	화순 운주사지	사적
57	경북	경산	환성사	보물	562	경산 환성사 대웅전	
58	경북	경주	기림사	보물	833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59	경북	경주	불국사	보물	1744	경주 불국사 대웅전	사적
60	경북	김천	직지사	보물	1576	김천 직지사 대웅전	
				보물	1574	문경 봉암사 극락전	
61	경북	문경	봉암사	보물	2202	문경 봉암사 봉황문	'22.12.28.
				국보	15	안동 봉정사 극락전	
62	경북	안동	봉정사	보물	311	안동 봉정사 대웅전	
				보물	448	안동 봉정사 화엄강당	
				보물	449	안동 봉정사 고금당	
				보물	242	안동 개목사 원통전	
63	경북	안동	개목사	보물	242	안동 개목사 원통전	
64	경북	안동	봉황사	보물	2068	안동 봉황사 대웅전	'20.06.25.
65	경북	영주	부석사	국보	18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19	영주 부석사 조사당	
				보물	2183	영주 부석사 안양루	'22.10.31.
				보물	2184	영주 부석사 범종각	'22.10.31.

연번	시도	시군구	사찰명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비고
66	경북	영주	성혈사	보물	832	영주 성혈사 나한전	
67	경북	예천	용문사	보물	145	예천 용문사 대장전	
68	경북	울진	불영사	보물	730	울진 불영사 응진전	명승
				보물	1201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	
69	경북	영천	은해사	국보	14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70	경북	영천	은해사	보물	790	영천 은해사 백음암 극락전	
71	경북	의성	대곡사	보물	1831	의성 대곡사 대웅전	
				보물	2121	의성 대곡사 범종루	
72	경북	의성	고운사	보물	2078	의성 고운사 연수전	
73	경북	청도	대비사	보물	834	청도 대비사 대웅전	
74	경북	청도	운문사	보물	835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75	경북	청도	대적사	보물	836	청도 대적사 극락전	
76	경북	청송	대전사	보물	1570	청송 대전사 보광전	
77	경북	청송	보광사	보물	1840	청송 보광사 극락전	
78	경북	칠곡	송림사	보물	2131	칠곡 송림사 대웅전	
79	경북	포항	보경사	보물	1868	포항 보경사 적광전	
80	경북	구미	대둔사	보물	1945	구미 대둔사 대웅전	
81	경남	남해	용문사	보물	1849	남해 용문사 대웅전	
82	경남	산청	울곡사	보물	374	산청 울곡사 대웅전	
83	경남	양산	통도사	국보	290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보물	1826	양산 통도사 영산전	
				보물	1827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	
84	경남	양산	신흥사	보물	1120	양산 신흥사 대광전	
85	경남	창녕	관룡사	보물	146	창녕 관룡사 약사전	
				보물	212	창녕 관룡사 대웅전	
86	경남	하동	쌍계사	보물	500	하동 쌍계사 대웅전	
87	경남	합천	해인사	국보	52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사적 및 명승
88	경남	합천	해인사홍제암	보물	1300	합천 해인사 홍제암	
89	경남	고성	옥천사	보물	2205	고성 옥천사 자방루	'22.12.28.
90	세종		비암사	보물	2119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	

〈부록 4〉 국가유산청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종교문화예산 전통사찰보수정비 사업 중복지원 현황

(단위: 천원)

사찰 ID	부처	연도	사업명(종목, 문화재명)	사업내용	국비	지방비		
서울-경국사	문체부	2011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오사채 해체보수	35,000	35,000		
		2019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극락보전 외 지붕 기와고르기	60,000	60,000		
	국가 유산청	2018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서울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극락보전과 명부전의 기단 및 배수로 정비	14,700	6,300	
		2019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서울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극락보전 주변 석축 및 계단, 배수로 정비	210,000	90,000	
		2020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서울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극락보전 주변 석축 및 배수로 공사	371,000	159,000	
		2021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서울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극락보전 배면 보수 및 배수로 정비	77,000	33,000	
		2015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서울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오사채 등 5등 단청보수	280,000	120,000	
		2022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서울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노진, 연화대, 삼각선원 단청공사	135,000	120,000	
	서울-흥천사	국가 유산청	2018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삼각선원 건립 및 부지조성(석축, 담장, 배수로 공사)	490,000	210,000
			2021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삼각선원 건립공사	84,000	36,000

사찰 ID	부처	연도	사업명(종목, 문화재명)		사업내용	국비	지방비
대구-동화사	문체부	2020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설법전 번외 보수	140,000	140,000
	국가 유산청	2011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1563	대구동화사대웅전	15,000	15,000
인천-전등사	문체부	2019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향로전 보수정비	120,000	120,000
	국가 유산청	2022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향로전 전통 단청공사	203,000	87,000
인천-정수사	문체부	2020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석축 및 주변정비 공사	64,000	64,000
	국가	2014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61호	석축 및 진입로 정비	700,000	300,000
	유산청	2019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61호	석축, 배수로 정비	21,000	9,000
광주-증심사	문체부	2020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적묵당 단청 및 담장공사	60,000	60,000
	국가	2017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131	적묵당 해체보수 설계	52,500	22,500
	유산청	2018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31호	적묵당 해체보수 공사비	420,000	180,000
대전-비래사	문체부	2020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요사채 배면 배수로 및 방수공사, 삼성각기단 및 배면석축 정비	100,000	100,000
	국가 유산청	2020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829호	대적광전 주변 보수정비 (대적광전 활주, 계단 석축, 배수로 정비)	67,200	28,800

사찰 ID	부처	연도	사업명(종목, 문화재명)		사업내용	국비	지방비
경기-현등사	문체부	2011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극락전 보수	50,000	50,000
		2018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793호	기평 현등사 동종	112,000	48,000
	국가 유산청	2020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793호	기평 현등사 동종	77,000	33,000
		2022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극락보전 해체보수 공사	462,000	198,000
경기-심복사	국가 유산청	2016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항림당 단청	30,000	30,000
		2015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565호	대적광전, 항림당, 산신각 방염도포	7,000	7,000
충북-반야사	국가 유산청	2016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선원보수	180,000	180,000
		2016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1371호	선원 개축 배수로정비	399,000	171,000
충북-용암사	국가 유산청	2018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요사채 및 옹공당 단청	90,000	90,000
		2016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1338호	용암사 요사채 지붕정비사업	399,000	171,000
충남-감사	국가 유산청	2014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대웅전주변정비공사	60,000	60,000
		2021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국보 제298호	대웅전 및 보장각 배면 배수로 정비 진해당축면석축보수	70,000	30,000

사찰 ID	부처	연도	사업명(종목, 문화재명)		사업내용	국비	지방비
충남-관촉사	문체부	2015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대웅전 지붕보수	90,000	90,000
	국가 유산청	2014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232호	논산 관촉사 석등	105,000	45,000
충남-동학사	문체부	2019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일주문 보수, 오사채(실상료) 지붕 및 단청 보수	70,000	70,000
	국가 유산청	2016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1719호	대웅전 보수, 오사채(회암체) 보수, 강설전 전면 계단 보수	420,000	180,000
충남-쌍계사	문체부	2011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대웅전 보수	20,000	20,000
		2019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범종각 단청	70,000	70,000
	국가 유산청	2016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408호	논산 쌍계사 대웅전	365,400	156,600
		2022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논산 쌍계사 대웅전	35,000	15,000
2022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논산 쌍계사 대웅전	대웅전 벽체 정밀안전진단	560,000	240,000	
충남-무량사	문체부	2019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향적당 및 적묵당 단청	120,000	120,000
	국가 유산청	2011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356	향적당 보수	400,000	171,429
충남-영탑사	문체부	2011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산신각, 인법당, 강설당 단청	45,000	45,000
	국가 유산청	2017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409	유리광전 및 산신각 앞 계단 및 석축보수, 경내 진입로 기반공사 대상구역(L=120m) 내법면조정, 석축쌓기, 배수로 설치 등	280,000	120,000

사찰 ID	부처	연도	사업명(종목, 문화재명)	사업내용	국비	지방비	
전북-금당사	문체부	2015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극락전, 삼성각, 지장전 단청	70,000	70,000	
	국가 유산청	2013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266호	금당사괘불탱	189,000	81,000	
전북-금산사	문체부	2015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세심당 및 사찰음식관 단청	100,000	100,000	
		2019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종무소, 화장실, 종무원숙소 보수(리모델링)	160,000	160,000	
		2017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서래선원 및 상서전 단청	200,000	200,000	
	국가 유산청	2020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사적 제496호	사천영문, 상서전, 일주문 기와 보수	35,000	15,000
		2020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사적 제496호	화장실 보수 설계	21,000	9,000
		2020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사적 제496호	종무원숙소 지붕 보수	56,000	24,000
		2020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사적 제496호	화장실(보현당 측면) 지붕 보수	59,500	25,500
		2020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사적 제496호	화장실(형적당 배면) 지붕 보수	35,000	15,000
		2021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사적 제496호	기존 화장실 개축	361,900	155,100
		2014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29호	석탑 진입로 및 주변 석축 정비 요사채 및 화장실지붕반외보수	168,000	72,000
전북-내소사	문체부	2013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서래선림 해체 보수	80,000	80,000	
	국가 유산청	2014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291호	서래선림 보수	420,000	180,000	
전북-문수사	문체부	2021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만세루 단청공사	112,500	90,000	
	국가 유산청	2017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1918	고창 문수사 무조석기어래신불좌상	300,000	128,571	

사찰 ID	부처	연도	사업명(종목, 문화재명)		사업내용	국비	지방비
진북-정수사	문체부	2012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극락전 단청	50,000	50,000
	국가 유산청	2022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28,000	12,000
전남-능가사	문체부	2012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관공로 해체보수	90,000	90,000
	국가 유산청	2015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307호	고흥 능가사 대웅전	140,000	60,000
전남-다보사	문체부	2012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천불단 단청	50,000	70,000
	국가 유산청	2019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천불전 단청	70,000	70,000
	국가 유산청	2019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343호	다보사괘불탱	35,000	15,000
	국가 유산청	2020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343호	다보사괘불탱	350,000	150,000
전남-죽림사	문체부	2014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염화실 및 선방 단청	50,000	50,000
	국가 유산청	2018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279호	죽림사세존괘불탱	175,000	75,000
전남-송광사	문체부	2022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선열당 보수정비	216,000	192,000
	국가 유산청	2015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사적 제506호	선열당 지붕 보수	140,000	60,000

사찰 ID	부처	연도	사업명(종목, 문화재명)		사업내용	국비	지방비
전남-정혜사	문체부	2015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요사채 보수	70,000	70,000
	문체부	2013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요사채 해체보수	80,000	80,000
	국가 유산청	2022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순천 정혜사 대웅전	35,000	15,000
전남-만연사	문체부	2011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요사채 단청	30,000	30,000
	국가 유산청	2020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345호	만연사괘불탱	122,500	52,500
전남-쌍봉사	문체부	2011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요사채 단청	15,000	15,000
	국가 유산청	2015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국보 제57호	화순 쌍봉사 칠감선사탑	210,000	90,000
전남-연곡사	문체부	2020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일주문 건립	200,000	200,000
	국가 유산청	2012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국보 제63호	구례 연곡사 동 승탑	140,000	60,000
전남-정혜사	문체부	2015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요사채 보수	70,000	70,000
	문체부	2013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요사채 해체보수	80,000	80,000
	국가 유산청	2022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순천 정혜사 대웅전	35,000	15,000

사찰 ID	부처	연도	사업명(종목, 문화제명)		사업내용	국비	지방비
전남-죽림사	문체부	2014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연화실 및 선방 단청	50,000	50,000
	국가 유산청	2018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279호	죽림사세존괘불탱	175,000	75,000
전남-화엄사	문체부	2013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금정암 원통진 보수	100,000	100,000
		2014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명승 제64호	지리산 화엄사 일원	490,000	210,000
	국가 유산청	2016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명승 제64호	지리산 화엄사 일원	210,000	90,000
		2018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명승 제64호	지리산 화엄사 일원	336,000	144,000
		2021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명승 제64호	지리산 화엄사 일원	105,000	45,000
		2021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명승 제64호	지리산 화엄사 일원	70,000	30,000
경북-경흥사	문체부	2014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요사채 단청	40,000	40,000
	국가 유산청	2014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750호	경산 경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280,000	120,000
경북-고운사	문체부	2019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강원 외 3개동 단청	170,000	170,000
	국가 유산청	2011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246	열반당, 무설진 보수 종무소, 수월암단청	210,000	90,000
경북-광흥사	문체부	2017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음향각 개축 및 배수로 정비	100,000	100,000
	국가 유산청	2016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1645호	석축 및 배수로 정비	70,000	30,000

사찰 ID	부처	연도	사업명(종목, 문화재명)		사업내용	국비	지방비
경북-대전사	문체부	2015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회연당보수	160,000	160,000
	국가 유산청	2022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청송 대전사 보광전	21,000	9,000
경북-봉림사	문체부	2019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설법전 단청	70,000	70,000
		2013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612호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 및 복장유물	100,000	42,857
	국가 유산청	2014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612호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 및 복장유물	210,000	90,000
		2015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612호	영천 봉림사 영산회상도 및 복장유물	105,000	45,000
	경북-봉암사	문체부	2013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남훈루 번외보수, 기단 보수	100,000
국가 유산청		2019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69호	문경 봉암사 삼층석탑	304,000	130,285
경북-운문사	문체부	2019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철성각 번외보수, 오백전 단청	110,000	110,000
		2012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835호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35,000	35,000
경북-은혜사	문체부	2015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중암암 요시채 이축	120,000	120,000
		2018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790호	영천 은혜사 백흥암 극락전	168,000	72,000

사찰 ID	부처	연도	사업명(종목, 문화재명)		사업내용	국비	지방비
경북-봉암사	문체부	2013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남훈루 반와보수, 기단 보수	100,000	100,000
	국가	2019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69호	문경 봉암사 삼층석탑	304,000	130,285
	유산청	2021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69호	문경 봉암사 삼층석탑	140,000	60,000
경북-직지사	문체부	2011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사천왕문 해체보수	65,000	65,000
	국가	2012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576호	김천 직지사 대웅전	280,000	120,000
	유산청	2013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576호	김천 직지사 대웅전	297,500	127,500
경북-한천사	문체부	2011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선방 보수	70,000	70,000
	국가	2012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667호	예천 한천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28,000	12,000
	유산청	2013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667호	예천 한천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350,000	150,000
경북-흑석사	문체부	2021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마당, 석축, 배수로 정비	-	-
	국가	2021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681호	영주 흑석사 석조여래좌상	140,000	60,000
	유산청	2011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681	흑석사석조여래좌상	630,000	270,000
경남-관룡사	문체부	2016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요사채 단청	60,000	60,000
	국가	2014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212호	창녕 관룡사 대웅전	361,900	155,100

사찰 ID	부처	연도	사업명(종목, 문화재명)	사업내용	국비	지방비	
경남-대원사	문체부	2012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명부전, 청풍오, 내삼문 번외	70,000	70,000	
	국가 유산청	2014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112호	다각실 개축 대웅전 및 원통보전기단보수	313,670	134,430	
	국가 유산청	2015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112호	원통보전 지붕보수 봉상루단청보수 청풍오단청보수	49,000	21,000	
	국가 유산청	2020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112호	명부전 지붕 보수공사	98,000	42,000	
경남-미타암	문체부	2014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요사채 보수	100,000	100,000	
	문체부	2016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석굴법당 및 삼성각 단청	100,000	100,000	
	국가 유산청	2014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998호	양산 미타암 석조아미타여래입상	490,000	210,000	
	국가 유산청	2015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998호	양산 미타암 석조아미타여래입상	350,000	150,000	
경남-쌍계사	문체부	2016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도원암 심건당 해체 보수	100,000	100,000	
	문체부	2021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화장실 개보수	225,000	180,000	
	국가 유산청	2017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국보 47	하동 쌍계사 진감신사탑비	도원암 극락보전 개축	490,000	210,000
		2019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500호	하동 쌍계사 대웅전	참성각 세면장 및 화장실 개축	210,000	90,000
		2020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500호	하동 쌍계사 대웅전	주자장 화장실 건립 설계	35,000	15,000
		2021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500호	하동 쌍계사 대웅전	쌍계사 관람편의시설(주자장 화장실) 건립	350,000	150,000

사찰 ID	부처	연도	사업명(종목, 문화재명)		사업내용	국비	지방비	
경남-옥천사	문체부	2014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공양간 개축	120,000	120,000	
	국가 유산청	2017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495	고성 옥천사 청동북	910,000	390,000	
경남-표충사	문체부	2022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원통당 내부 보수	85,500	76,000	
		2016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대원암 공양간 및 요사채 개축	150,000	150,000	
		2017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대원암 공양간 및 요사채 개축	200,000	200,000	
	국가 유산청	2018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467호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원통당 및 수층루 신자 이상 해체보수	385,000	165,000
		2020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467호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공양간 및 종각 보수 설계용역	63,000	27,000
		2021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467호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공양간 및 종각 보수	700,000	300,000
경남-해인사	문체부	2018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관음암 요사채 보수	180,000	180,000	
		2015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관음암 요사채 개축	200,000	200,000	
	국가	2020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관음암 석축 정비 설계	210,000	90,000
		2016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1300호	합천 해인사 흥제암	해인사 흥제암 요사채 개축 실시설계	35,000	15,000
	유산청	2017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1300	합천 해인사 흥제암	요사채 개축	350,000	150,000
		2018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300호	합천 해인사 흥제암	흥제암 요사채 개축(추가 공사비)	105,000	45,000
		2020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300호	합천 해인사 흥제암	요사채 단정공사	140,000	60,000
		2021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요사채 단정	70,000	30,000
		2021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242호	합천 해인사 길상탑	해인사 극락전 요사채 개축 설계	63,000	27,000
		2022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명승	가야산 해인사 일원	공양간 및 요사채 개보수	511,000	219,000

사찰 ID	부처	연도	사업명(종목, 문화재명)	사업내용	국비	지방비
강원-백담사	문체부	2014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범종루 백담사관문 등 전각 지붕보수공사	80,000	80,000
		2012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민해교육관, 원허당, 무신장실 번외	90,000	90,000
		2017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법화실, 화엄실, 민해기념관 지붕보수	100,000	100,000
	2013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182호	백담사 인제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부 복장유물	245,000	105,000
	2013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182호	백담사 인제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385,000	165,000
	2014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182호	인제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490,000	210,000
	2015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182호	인제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315,000	135,000
	2016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1182호	인제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220,500	94,500
	2017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1182	인제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486,500	208,500
	2017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1182	인제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31,360	13,440
	2018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182호	인제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245,000	105,000
	2019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182호	인제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420,000	180,000
	2022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인제 백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140,000	60,000

사찰 ID	부처	연도	사업명(종목, 문화재명)		사업내용	국비	지방비
강원-수타사	문체부	2011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흥회루 보수	40,000	40,000
	국가 유산청	2012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11-3호 사인비구 제작 동종-흥천수타사동종	대적광전, 흥회루 방충방부 처리	50,000	50,000
경남-옥천사	문체부	2014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공양간 개축	120,000	120,000
	국가	2016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495호 고성 옥천사 청동부	공양간 및 연화당 건립 실시설계	92,400	39,600
	유산청	2017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495호 고성 옥천사 청동부	공양간 및 요사채 건립, 주변정비	910,000	390,000
강원-정암사	문체부	2019	전통사찰보수정비(내역)		목우당, 향각, 요사채 단청	100,000	100,000
	국가 유산청	2019	문화재 보수정비(내역)	보물 제410호 정선 정암사 수미노탑	목우당 진입로 및 일주문 보수	420,000	180,000

〈부록 5〉 안전경비원 배치 현황(2024년)

(단위: 명, 천원)

구분	시군구	종	문화재명	국비	지방비	계	인원
서울 (4)	종로구	보물	서울 창익문	84,285	84,285	168,570	5
	종로구	보물	서울 동관왕묘	84,285	84,285	168,570	5
	종로구	보물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동무·서무·삼문·명륜당〉	134,856	134,856	269,712	8
	종로구	보물	서울 흥인지문	134,856	134,856	269,712	8
부산 (4)	금정구	보물	부산 범어사 대웅전	101,142	101,142	202,284	6
	금정구	보물	부산 범어사 조계문				
	기장군	보물	기장 장안사 대웅전	67,428	67,428	134,856	4
	사상구	보물	부산 운수사 대웅전	67,428	67,428	134,856	4
대구 (8)	달성군	보물	달성 태고정	67,428	67,428	134,856	4
	달성군	보물	달성 도동서원 중정당·사당·담장	67,428	67,428	134,856	4
	달성군	보물	달성 하목정	50,571	50,571	101,142	3
	동구	보물	대구 북지장사 지장전	67,428	67,428	134,856	4
	동구	보물	대구 파계사 원통전	67,428	67,428	134,856	4
	동구	보물	대구 동화사 대웅전	50,571	50,571	101,142	3
	동구	보물	대구 동화사 극락전	50,571	50,571	101,142	3
	동구	보물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				
인천 (3)	강화군	보물	강화 정수사 법당	67,428	67,428	134,856	4
	강화군	보물	강화 전등사 대웅전	67,428	67,428	134,856	4
	강화군	보물	강화 전등사 약사전				
대전(1)	대덕구	보물	대전 회덕 동춘당	51,233	51,233	102,466	3
울산 (2)	울주군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67,428	67,428	134,856	4
	울주군	국보	울주 천전리 각석				
세종(1)	세종	보물	세종 비암사 극락보전	67,428	67,428	134,856	4
경기도 (14)	수원시	사적	수원 화성	134,856	134,856	269,712	8
	수원시	보물	수원 팔달문				
	수원시	보물	수원 화서문				
	수원시	보물	수원 방화수류정				
	수원시	보물	수원 서북공심돈				
	수원시	보물	수원 화령전 운한각 복도각 이안청				

구분	시군구	종	문화재명	국비	지방비	계	인원
	수원시	보물	수원향교 대성전	67,428	67,428	134,856	4
	안성시	보물	안성 칠장사 대웅전	252,855	252,855	505,710	3
	안성시	보물	안성 청룡사 대웅전				4
	안성시	보물	안성 석남사 영산전				4
	안성시	보물	안성향교 대성전 및 풍화루				4
	여주시	보물	여주 신륵사 조사당	67,428	67,428	134,856	4
	화성시	보물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67,428	67,428	134,856	4
	성남시	보물	성남 봉곡사 대광명전	50,571	50,571	101,142	3
강원도 (10)	강릉시	국보	강릉 임영관 삼문	269,712	269,712	539,424	4
	강릉시	보물	강릉 경포대				4
	강릉시	보물	강릉 해운정				3
	강릉시	보물	강릉향교 대성전				4
	강릉시	보물	강릉 칠사당				1
	고성군	국민	고성 왕곡마을	67,428	67,428	134,856	4
	삼척시	보물	삼척 죽서루	50,571	50,571	101,142	3
	속초시	보물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67,428	67,428	134,856	4
	양양군	사적	양양 낙산사 일원	84,285	84,285	168,570	5
	평창군	보물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	33,714	33,714	67,428	2
충북 (5)	보은군	보물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	101,142	101,142	202,284	6
	보은군	보물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보은군	국보	보은 법주사 팔상전				
	제천시	보물	제천 청풍 한백루	50,571	50,571	101,142	3
	청주시	보물	청주 안심사 대웅전	67,428	67,428	134,856	4
충남 (14)	공주시	보물	공주 갑사 대웅전	67,428	67,428	134,856	4
	공주시	보물	공주 계룡산 중약단	67,428	67,428	134,856	4
	공주시	보물	공주 마곡사 영산전	84,285	84,285	168,570	5
	공주시	보물	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공주시	보물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논산시	보물	논산 쌍계사 대웅전	67,428	67,428	134,856	4
	논산시	보물	논산 돈암서원 응도당	67,428	67,428	134,856	4
	논산시	보물	논산 노강서원 강당	67,428	67,428	134,856	4
	부여군	보물	부여 무량사 극락전	67,428	67,428	134,856	4
	서산시	보물	서산 개심사 대웅전	67,428	67,428	134,856	4

구분	시군구	종	문화재명	국비	지방비	계	인원
	예산군	국보	예산 수덕사 대웅전	101,142	101,142	202,284	6
	청양군	보물	청양 장곡사 상 대웅전	67,428	67,428	134,856	4
	청양군	보물	청양 장곡사 하 대웅전				
	홍성군	보물	홍성 고산사 대웅전	67,428	67,428	134,856	4
전북 (21)	고창군	보물	고창 선운사 참담암 대웅전	67,428	67,428	134,856	4
	고창군	보물	고창 선운사 대웅전	84,285	84,285	168,570	5
	김제시	국보	김제 금산사 미륵전	134,856	134,856	269,712	3
	김제시	보물	김제 금산사 대장전				2
	김제시	보물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3
	남원시	보물	남원 광한루	50,571	50,571	101,142	3
	부안군	보물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50,571	50,571	101,142	3
	부안군	보물	부안 개암사 대웅전	50,571	50,571	101,142	3
	완주군	보물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	67,428	67,428	134,856	4
	완주군	보물	완주 송광사 종루	33,714	33,714	67,428	2
	완주군	보물	완주 송광사 대웅전	33,714	33,714	67,428	2
	완주군	보물	완주 화암사 우화루	50,571	50,571	101,142	3
	완주군	국보	완주 화암사 극락전	50,571	50,571	101,142	2
	익산시	보물	익산 승림사 보광전	50,571	50,571	101,142	3
	장수군	보물	장수향교 대성전	67,428	67,428	134,856	4
	전주시	보물	전주 풍패지관	67,428	67,428	134,856	4
	전주시	보물	전주 경기전 정전	67,428	67,428	134,856	4
	전주시	보물	전주 풍남문	67,428	67,428	134,856	4
	정읍시	사적	정읍 무성서원	67,428	67,428	134,856	4
	정읍시	보물	정읍 피향정	50,571	50,571	101,142	3
	진안군	보물	진안 수선루	16,857	16,857	33,714	1
전남 (22)	강진군	국보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67,428	67,428	134,856	4
	고흥군	보물	고흥 능가사 대웅전	67,428	67,428	134,856	4
	구례군	국보	구례 화엄사 각황전	101,142	101,142	202,284	6
	구례군	보물	구례 화엄사 대웅전				
	구례군	보물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101,142	101,142	202,284	6
	나주시	보물	나주향교 대성전	67,428	67,428	134,856	4
	나주시	보물	나주 불회사 대웅전	67,428	67,428	134,856	4
	순천시	사적	순천 낙안읍성	67,428	67,428	134,85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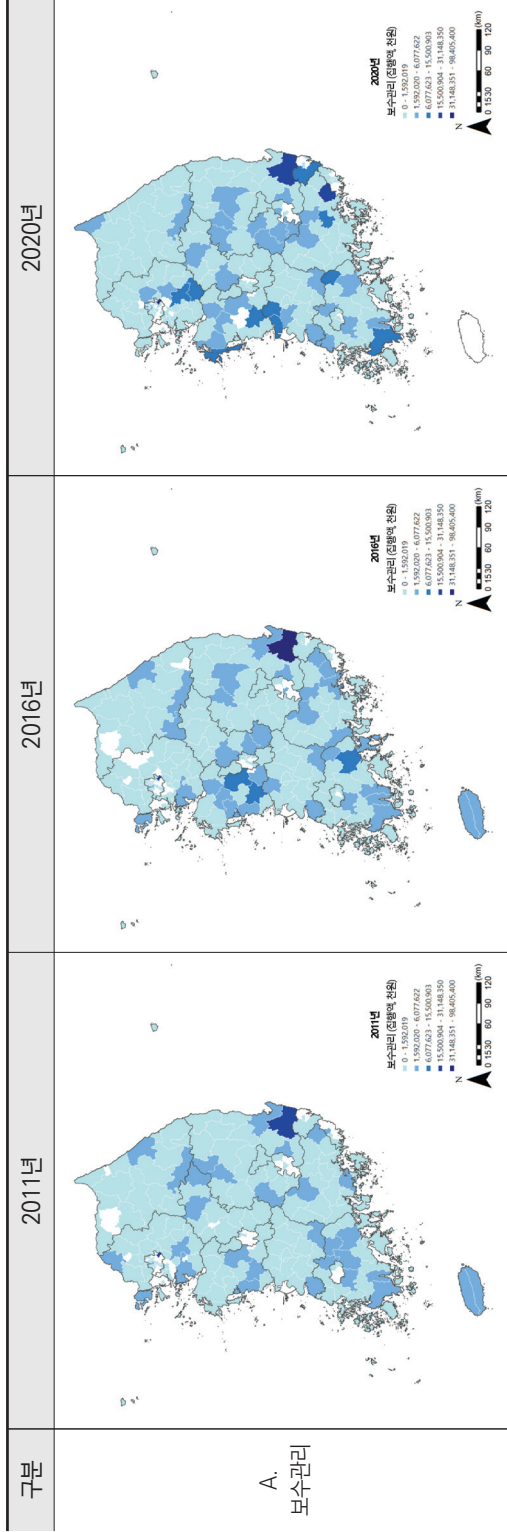
구분	시군구	종	문화재명	국비	지방비	계	인원
	순천시	보물	순천 정혜사 대웅전	67,428	67,428	134,856	4
	순천시	보물	순천 선암사 대웅전	33,714	33,714	67,428	2
	순천시	보물	순천 선암사 일주문	33,714	33,714	67,428	2
	순천시	보물	순천 송광사 하사당	16,857	16,857	33,714	1
	순천시	보물	순천 송광사 영산전	16,857	16,857	33,714	1
	순천시	보물	순천 송광사 약사전	16,857	16,857	33,714	1
	순천시	국보	순천 송광사 국사전	33,714	33,714	67,428	2
	여수시	보물	여수 흥국사 대웅전	67,428	67,428	134,856	4
	영광군	보물	영광 불갑사 대웅전	50,571	50,571	101,142	4
	영암군	국보	영암 도갑사 해탈문	67,428	67,428	134,856	4
	영암군	보물	영암 영보정	50,571	50,571	101,142	3
	해남군	보물	해남 대흥사 천불전	67,428	67,428	134,856	4
	해남군	보물	해남 미황사 응진당	33,714	33,714	67,428	2
	해남군	보물	해남 미황사 대웅전	33,714	33,714	67,428	2
	경북 (61)	경산시	보물	경산 환성사 대웅전	67,428	67,428	134,856
경주시		사적	경주 옥산서원	50,571	50,571	101,142	3
경주시		국민	경주 양동마을	151,713	151,713	303,426	9
경주시		보물	경주 양동 향단				
경주시		보물	경주 양동 관가정				
경주시		보물	경주 양동 무첨당				
경주시		보물	경주 독립당	50,571	50,571	101,142	3
경주시		보물	경주향교 대성전	50,571	50,571	101,142	3
경주시		사적	경주읍성	50,571	50,571	101,142	3
경주시		보물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50,571	50,571	101,142	3
구미시		보물	구미 대둔사 대웅전	67,428	67,428	134,856	4
구미시		보물	구미 금오서원 정학당 및 상현묘	50,571	50,571	101,142	3
김천시		보물	김천 직지사 대웅전	67,428	67,428	134,856	4
문경시		보물	문경 봉암사 극락전	67,428	67,428	134,856	4
상주시		보물	상주 양진당	67,428	67,428	134,856	4
상주시		보물	상주향교 대성전·동무·서무	67,428	67,428	134,856	4
성주군		보물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67,428	67,428	134,856	4
성주군		국민	성주 한개마을	101,142	101,142	202,284	6
안동시		국보	안동 봉정사 극락전	67,428	67,428	134,856	4

구분	시군구	종	문화재명	국비	지방비	계	인원
	안동시	국보	안동 봉정사 대웅전				
	안동시	보물	안동 봉정사 화엄강당				
	안동시	보물	안동 봉정사 고금당				
	안동시	국민	안동 하회마을				
	안동시	보물	안동 하회 양진당	202,284	202,284	404,568	12
	안동시	보물	안동 하회 충효당				
	안동시	보물	안동 소호헌	67,428	67,428	134,856	4
	안동시	보물	안동 의성김씨 종택	67,428	67,428	134,856	4
	안동시	보물	안동 개목사 원통전	67,428	67,428	134,856	4
	안동시	보물	안동 도산서원 전교당				
	안동시	보물	안동 도산서원 상덕사 및 삼문	67,428	67,428	134,856	4
	안동시	보물	안동 임청각	67,428	67,428	134,856	4
	안동시	사적	안동 병산서원	67,428	67,428	134,856	4
	안동시	보물	안동 청원루	50,571	50,571	101,142	3
	안동시	보물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67,428	67,428	134,856	4
	영주시	국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영주시	국보	영주 부석사 조사당	101,142	101,142	202,284	6
	영주시	보물	영주 성혈사 나한전	84,285	84,285	168,570	5
	영주시	보물	영주 소수서원 문성공묘				
	영주시	보물	영주 소수서원 강학당	84,285	84,285	168,570	5
	영주시	국민	영주 무섬마을	101,142	101,142	202,284	6
	영천시	국보	영천 거조사 영산전	67,428	67,428	134,856	4
	영천시	보물	영천향교 대성전	67,428	67,428	134,856	4
	영천시	보물	영천 송렬당	67,428	67,428	134,856	4
	영천시	보물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67,428	67,428	134,856	4
	예천군	보물	예천권씨 초간종택 별당	50,571	50,571	101,142	3
	예천군	국보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	50,571	50,571	101,142	3
	울릉군	국민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				
	울릉군	국민	울릉 나리 역새 투막집	67,428	67,428	134,856	4
	울진군	보물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				
	울진군	보물	울진 불영사 응진전	67,428	67,428	134,856	4
	의성군	보물	의성 만취당	67,428	67,428	134,856	4
	의성군	보물	의성 대곡사 대웅전	67,428	67,428	134,85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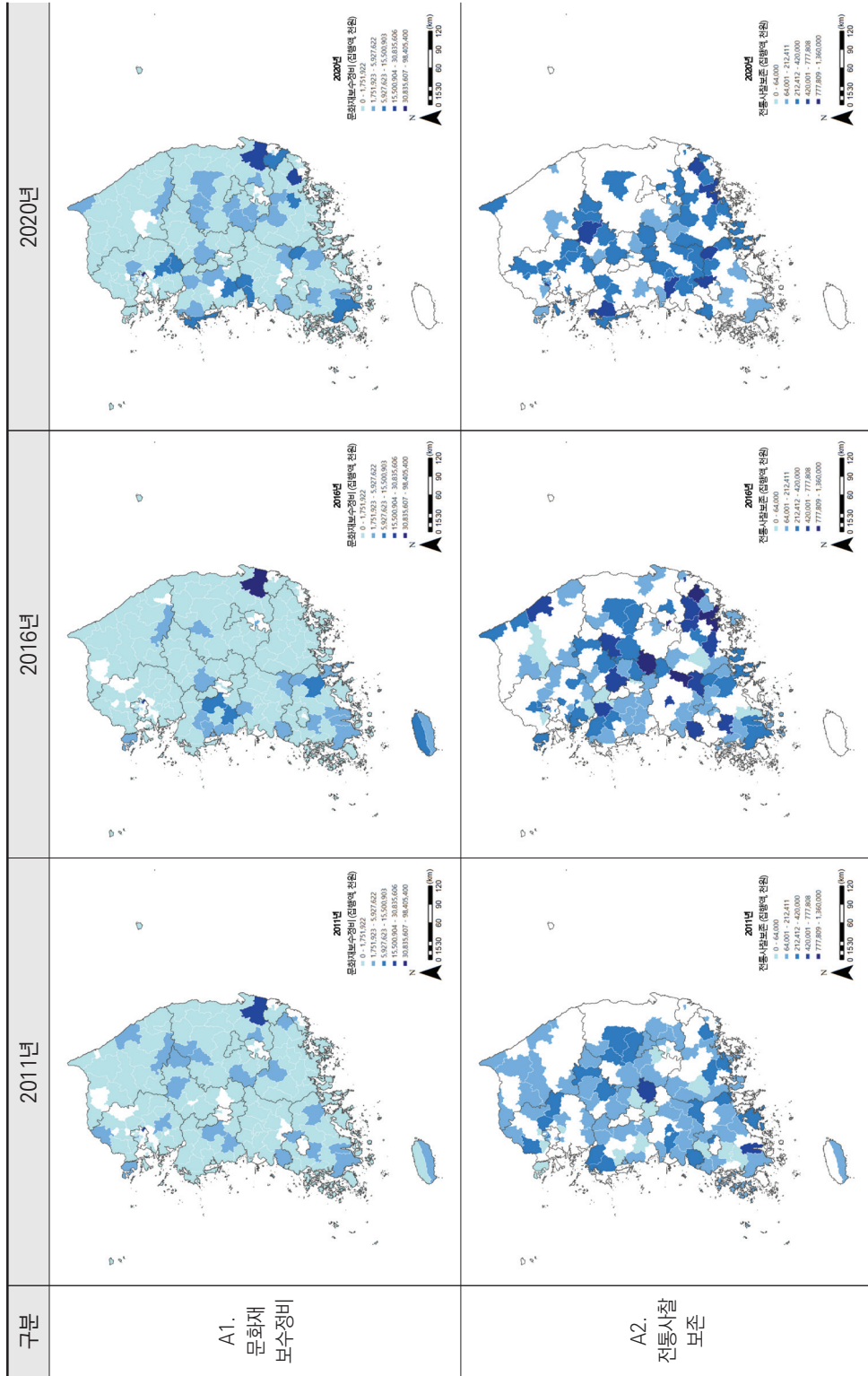
구분	시군구	종	문화재명	국비	지방비	계	인원
	청도군	보물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67,428	67,428	134,856	4
	청도군	보물	청도 대비사 대웅전	67,428	67,428	134,856	4
	청도군	보물	청도 대적사 극락전	50,571	50,571	101,142	3
	청송군	보물	청송 찬경루	50,571	50,571	101,142	3
	청송군	보물	청송 보광사 극락전	67,428	67,428	134,856	4
	청송군	보물	청송 대전사 보광전	84,285	84,285	168,570	5
	포항시	보물	포항 보경사 적광전	101,142	101,142	202,284	6
	영덕군	국민	영덕 괴시마을	67,428	67,428	134,856	4
	칠곡군	보물	칠곡 송림사 대웅전	67,428	67,428	134,856	4
경남 (16)	남해군	보물	남해 용문사 대웅전	50,571	50,571	101,142	3
	밀양시	보물	밀양 영남루	67,428	67,428	134,856	4
	밀양시	보물	밀양향교 대성전	67,428	67,428	134,856	4
	산청군	보물	산청 율곡사 대웅전	50,571	50,571	101,142	3
	산청군	보물	산청 단성향교 명륜당	50,571	50,571	101,142	3
	양산시	보물	양산 신흥사 대광전	84,285	84,285	168,570	5
	양산시	국보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101,142	101,142	202,284	6
	양산시	보물	양산 통도사 영산전	33,714	33,714	67,428	2
	양산시	보물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	33,714	33,714	67,428	2
	창녕군	보물	창녕 관룡사 약사전	84,285	84,285	168,570	5
	창녕군	보물	창녕 관룡사 대웅전				
	통영시	국보	통영 세병관	50,571	50,571	101,142	3
	하동군	보물	하동 쌍계사 대웅전	101,142	101,142	202,284	6
	합천군	국보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303,426	303,426	606,852	18
	합천군	보물	합천 해인사 홍제암	50,571	50,571	101,142	3
	고성군	보물	고성 옥천사 자방루	50,571	50,571	101,142	3
제주 (3)	제주시	보물	제주 관덕정	50,571	50,571	101,142	3
	서귀포	국민	제주 성읍마을	50,571	50,571	101,142	3
	제주시	보물	제주향교 대성전	50,571	50,571	101,142	3

〈부록 6〉 연도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액 및 예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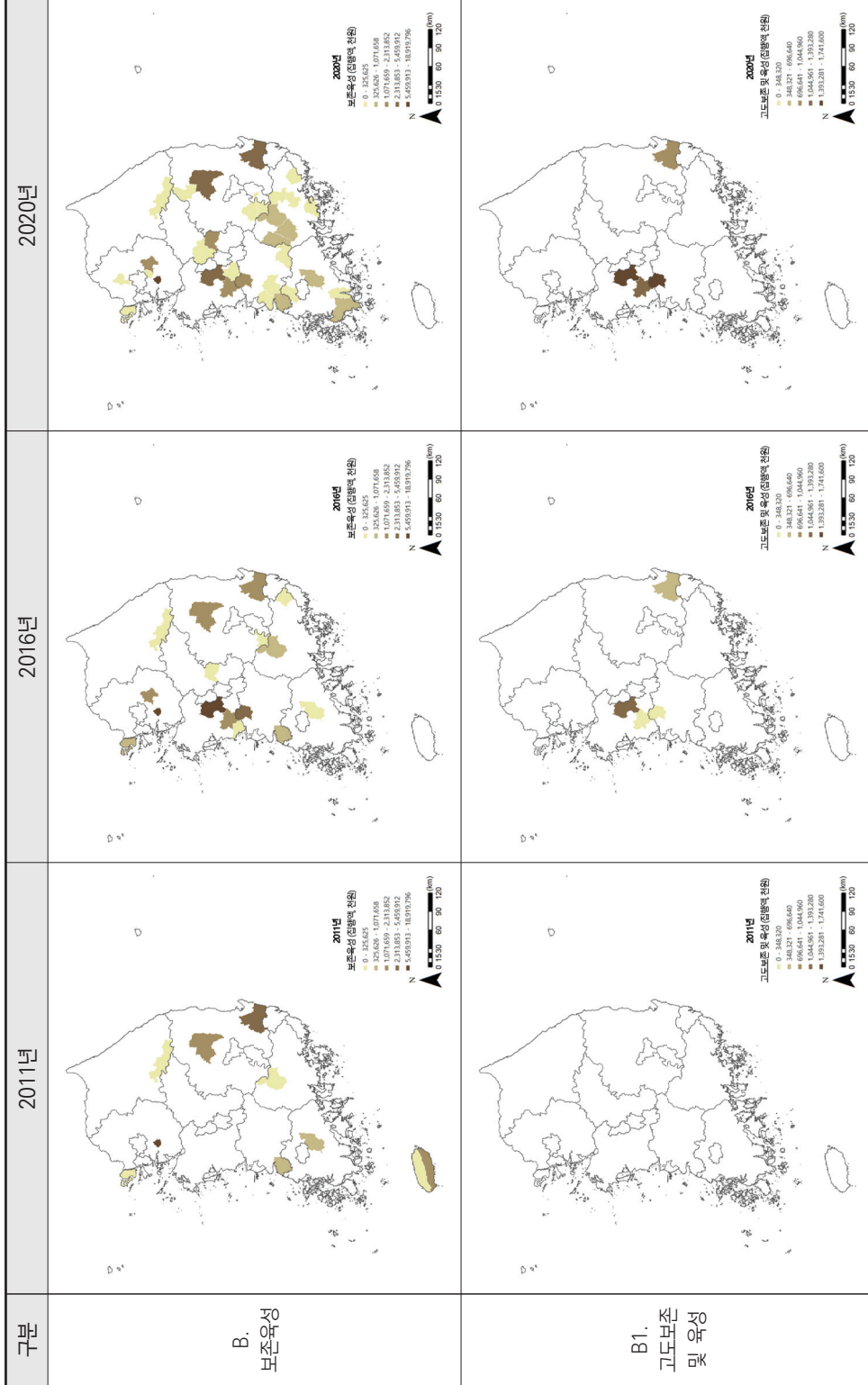
[부록 그림 1] 연도별 보수관리 집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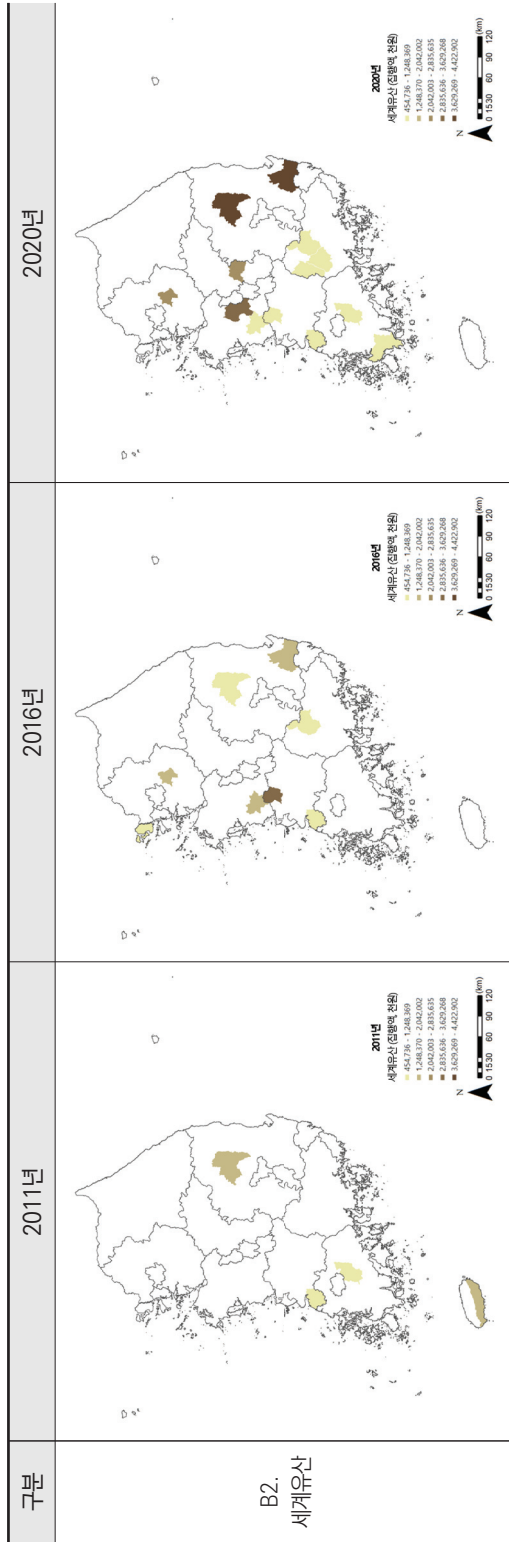
[부록 그림 1]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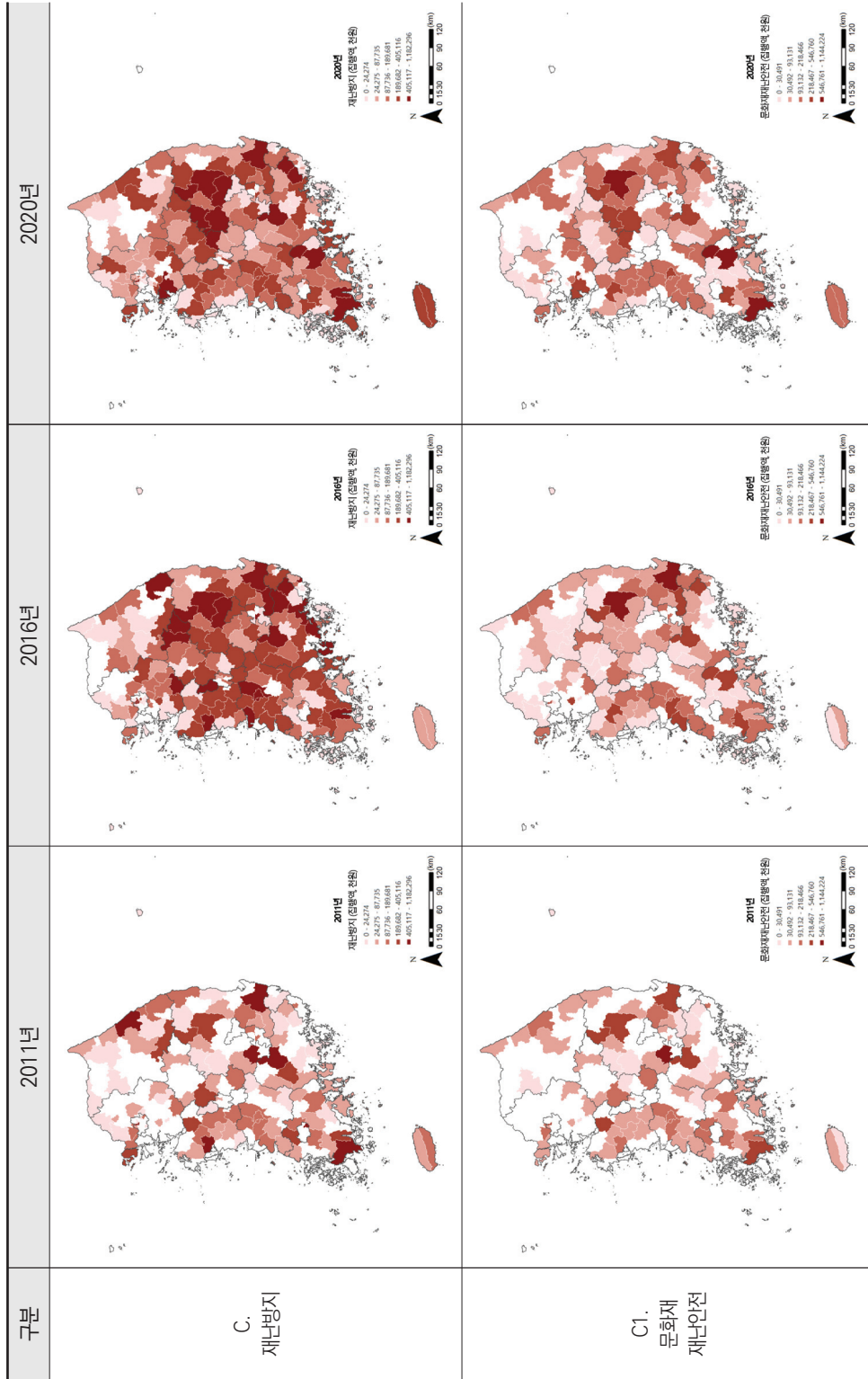
[부록 그림 2] 연도별 보존육성 집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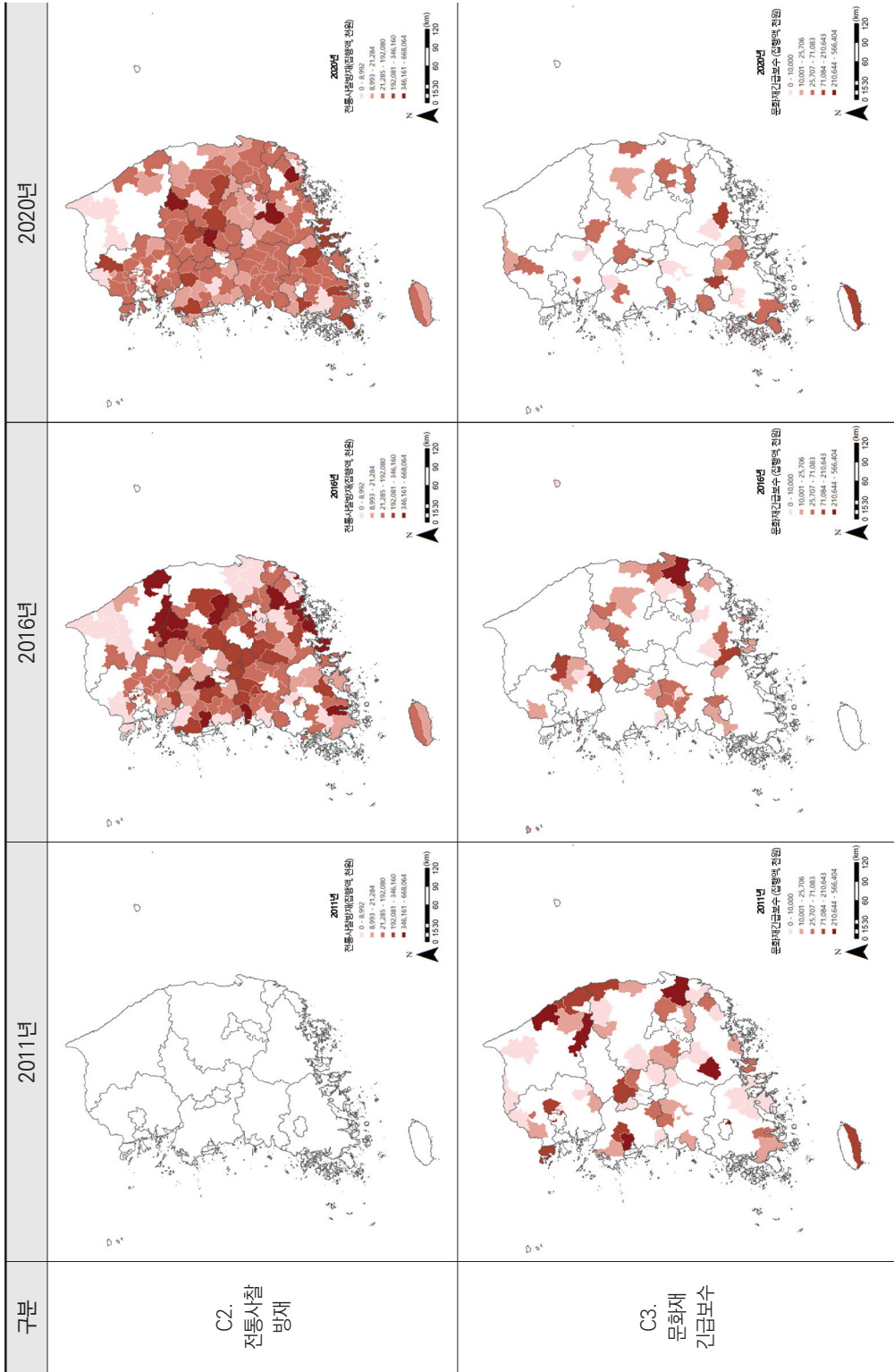
[부록 그림 2]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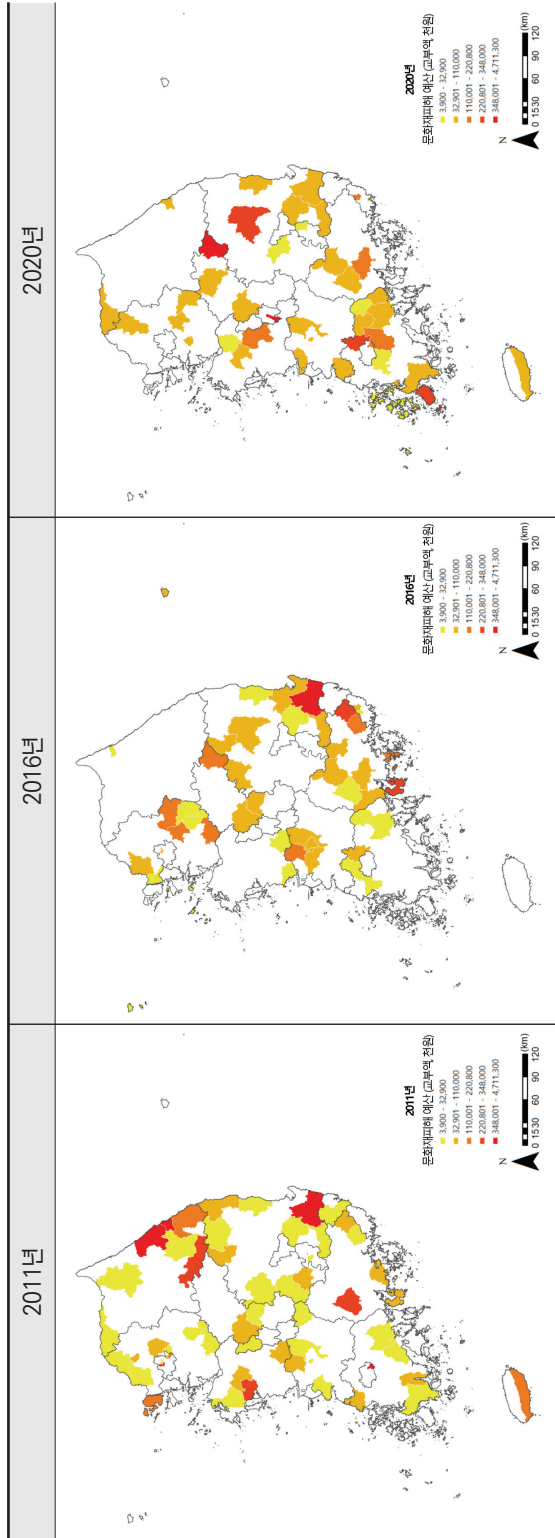
[부록 그림 3] 연도별 재난방지 집행액



[부록 그림 3]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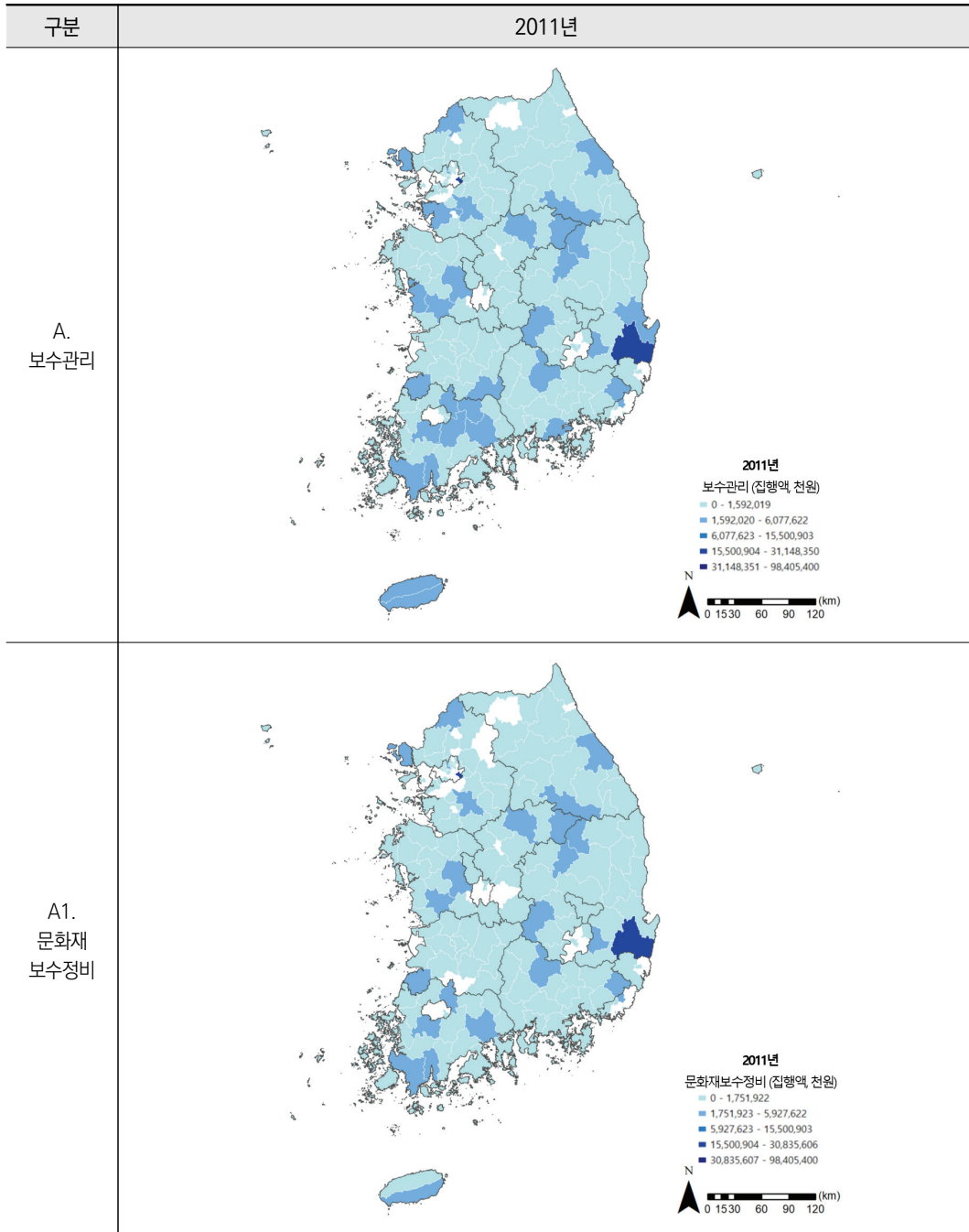


[부록 그림 4] 연도별 문화재 피해 예산 교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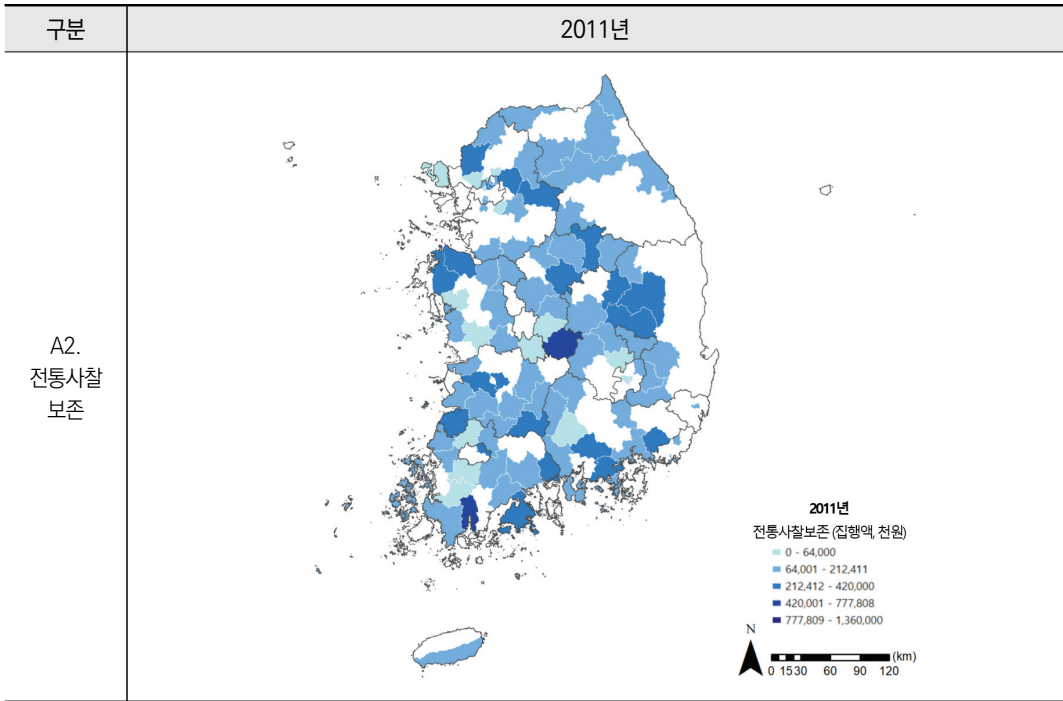


〈부록 7〉 부문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액 및 예산액 - 1) 보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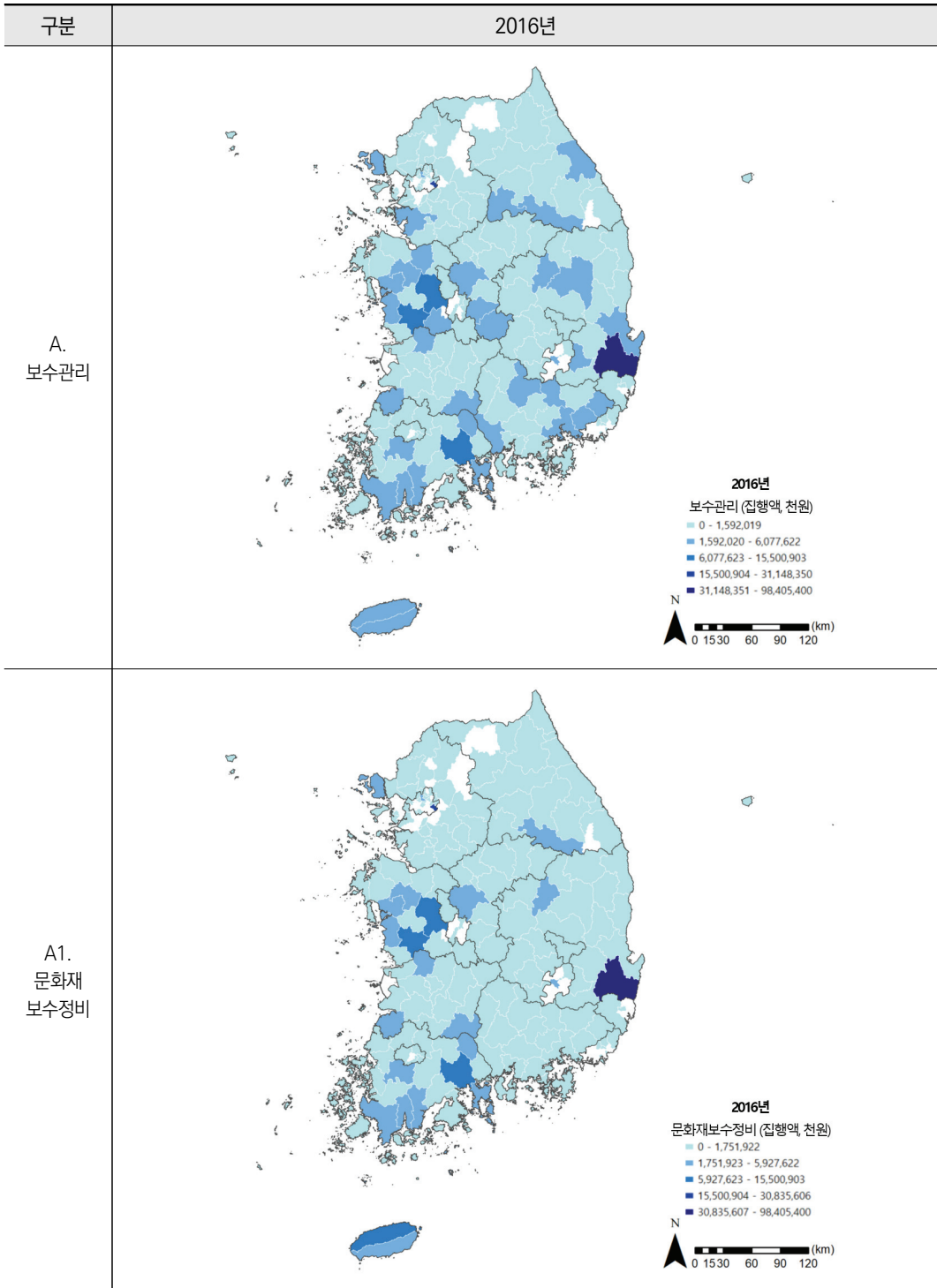
[부록 그림 5] 2011년 보수관리 집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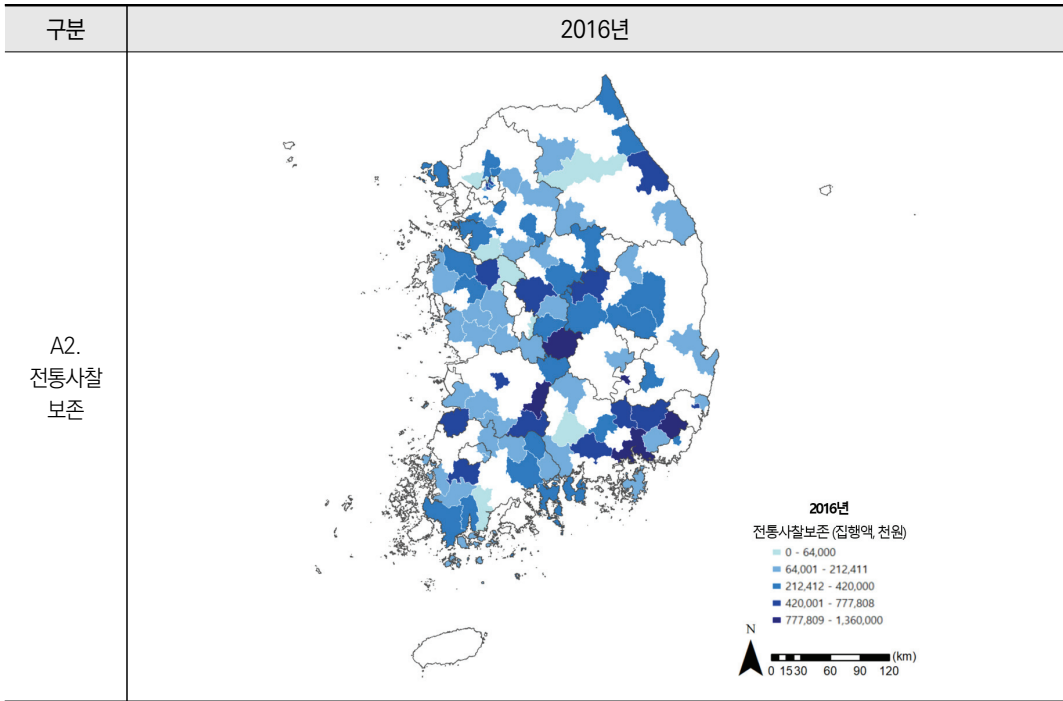
[부록 그림 5]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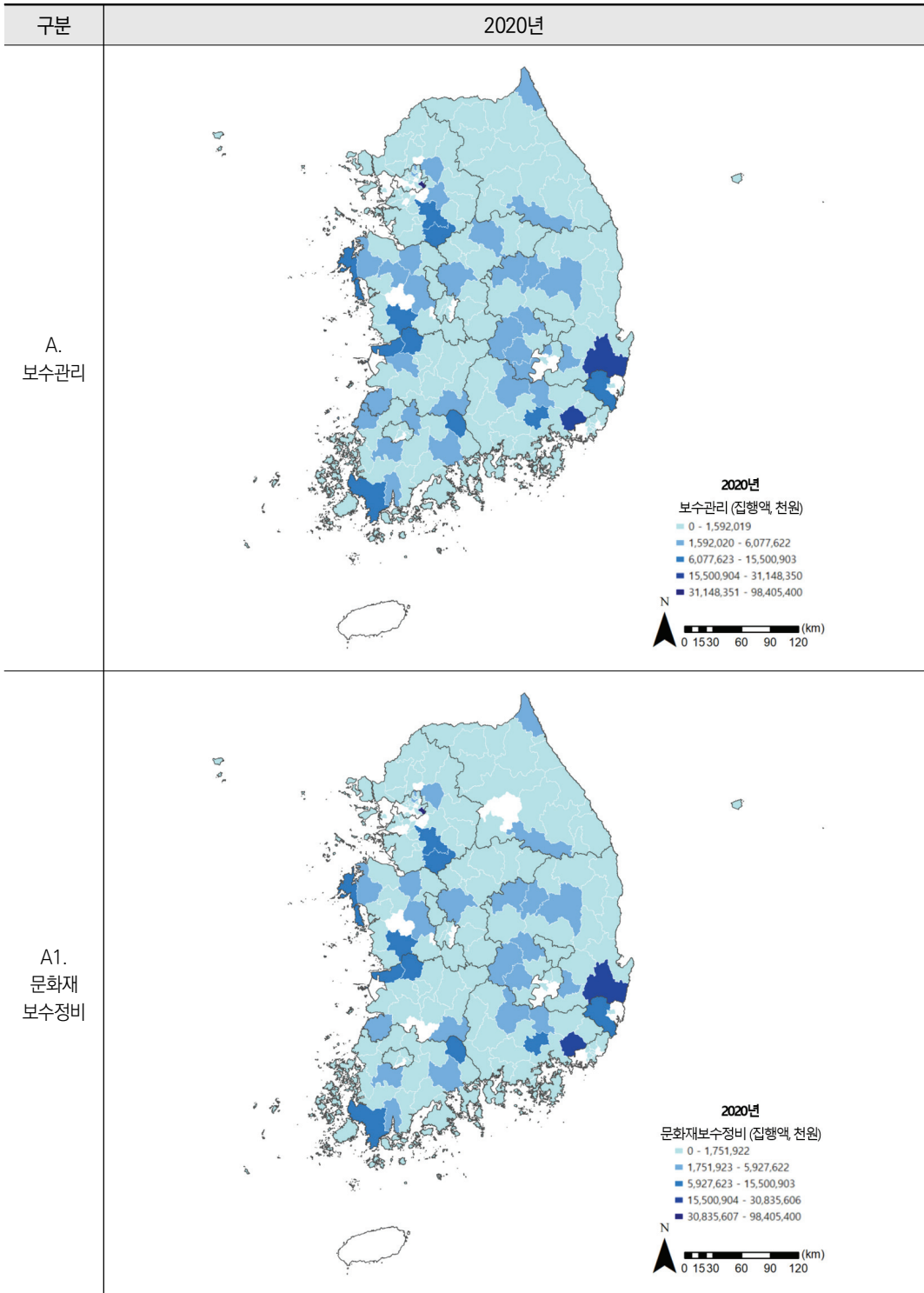
[부록 그림 6] 2016년 보수관리 집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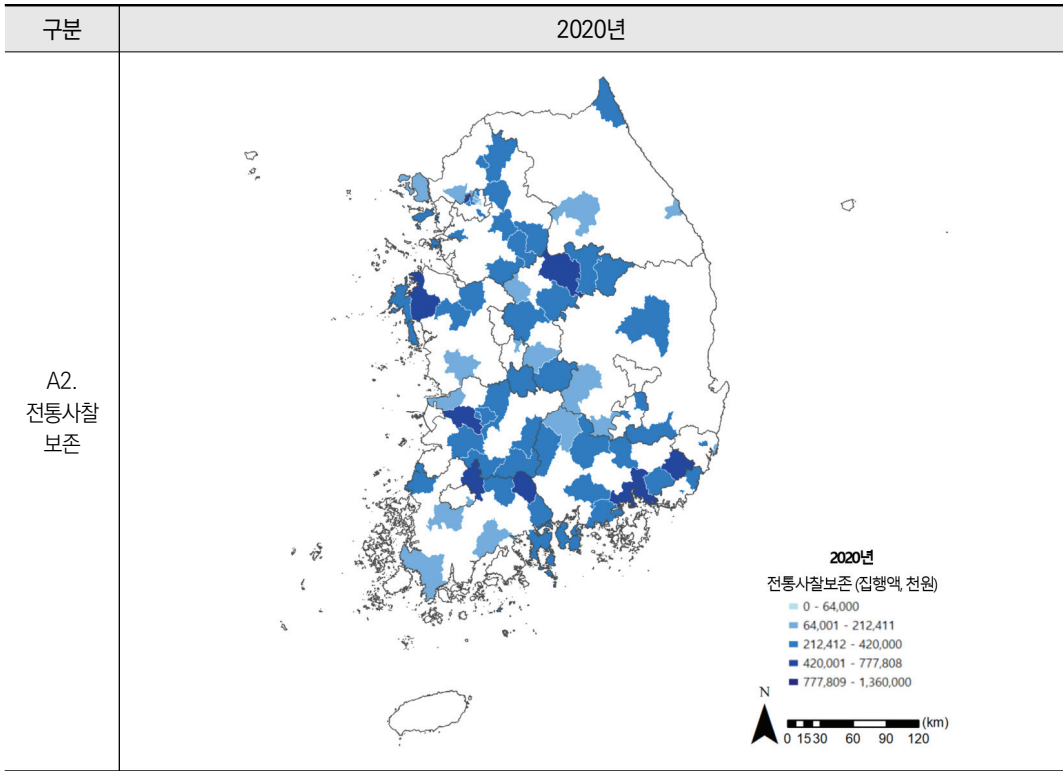
[부록 그림 6]의 계속



[부록 그림 7] 2020년 보수관리 집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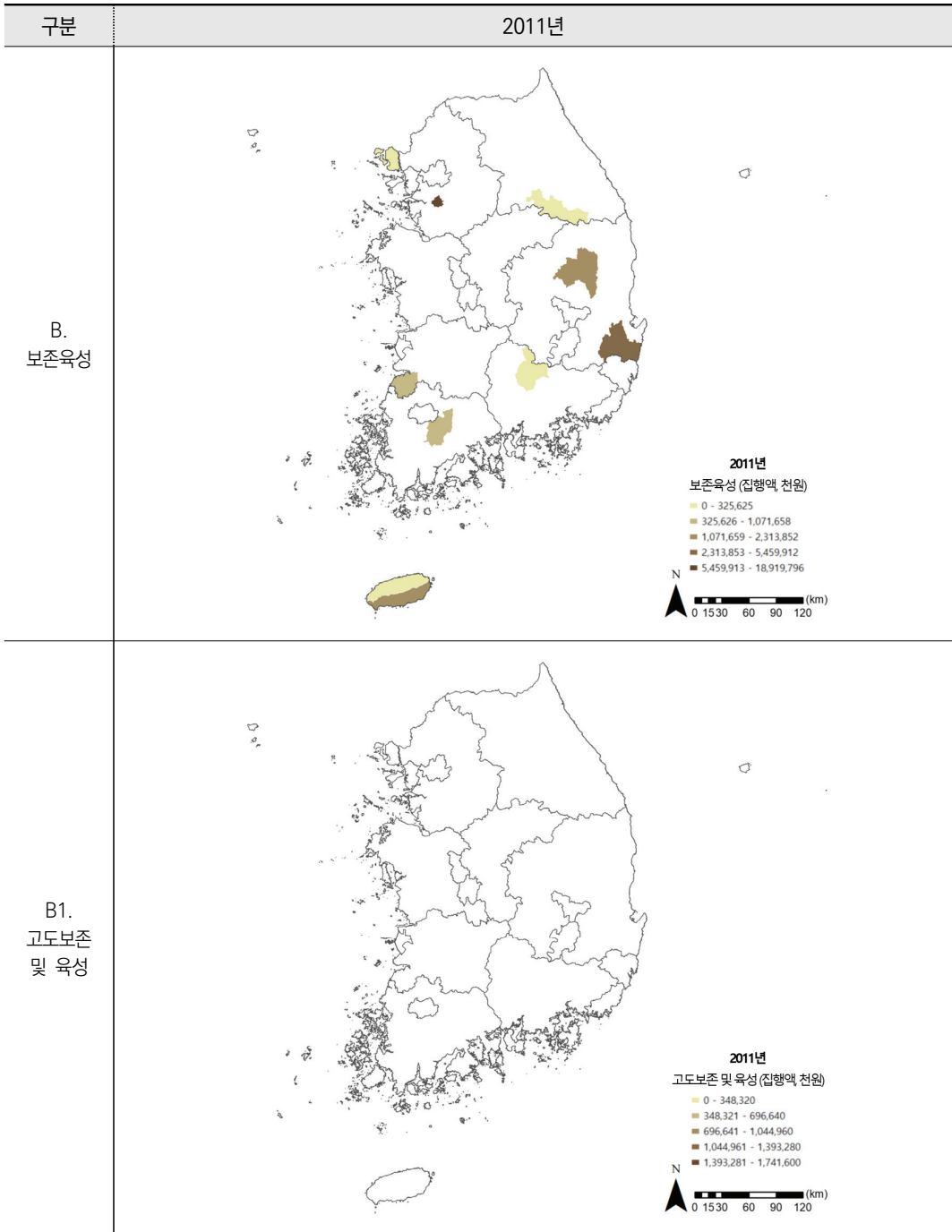


[부록 그림 기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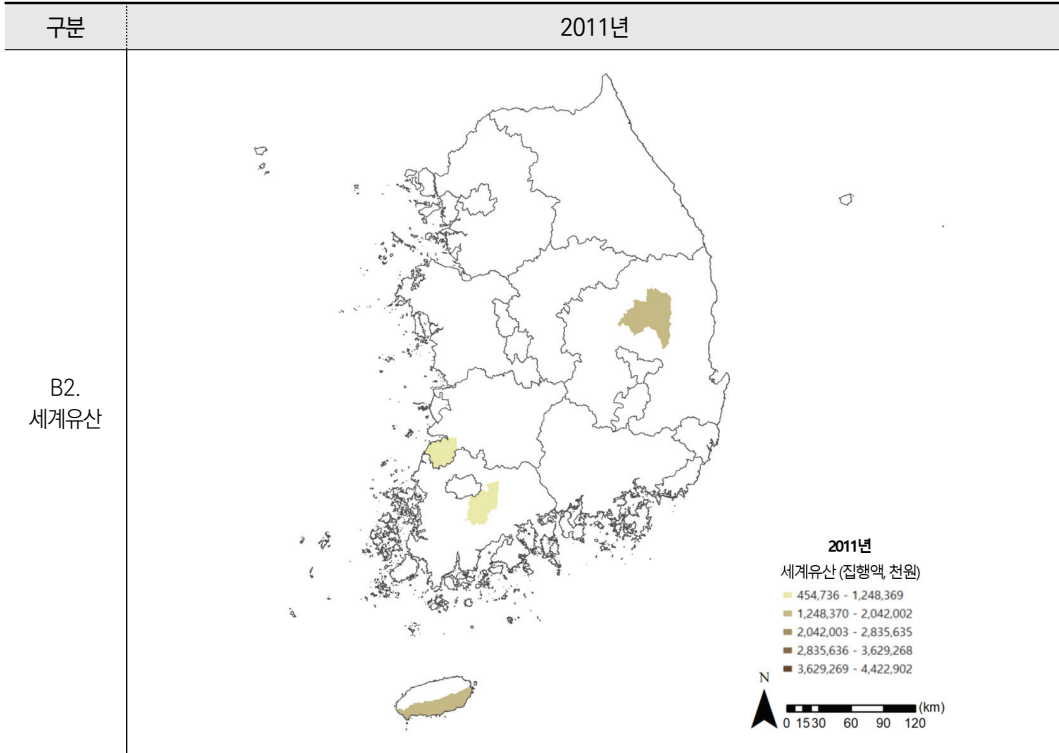


〈부록 8〉 부문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액 및 예산액 - 2) 보존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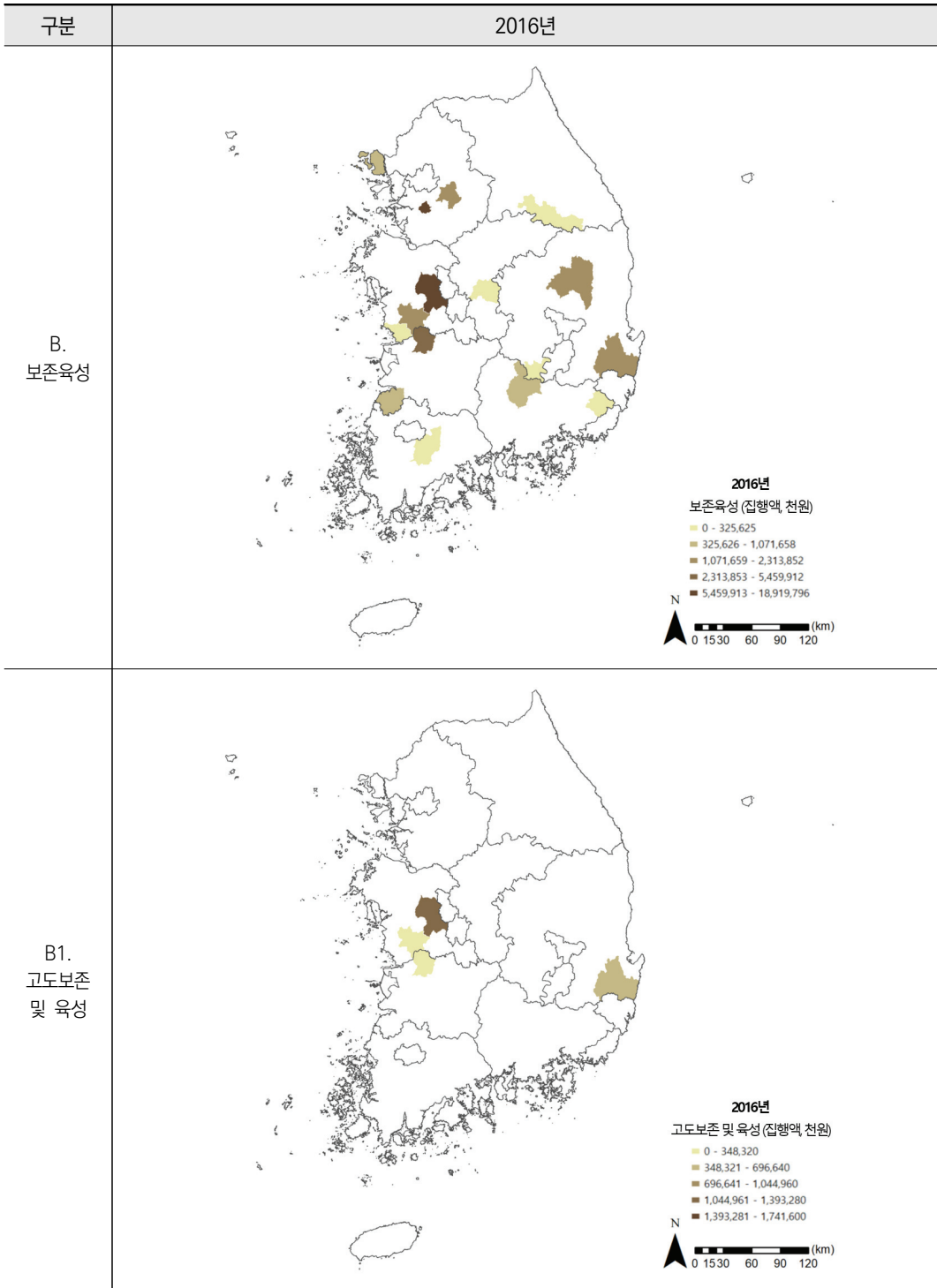
[부록 그림 8] 2011년 보존육성 집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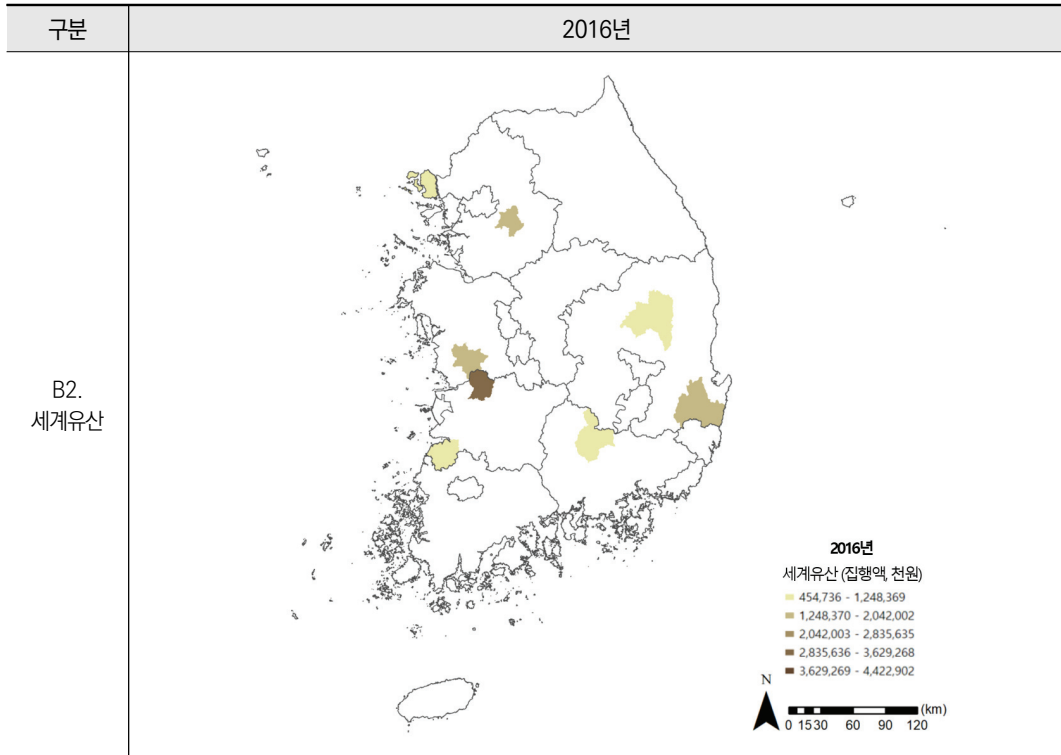
[부록 그림 8]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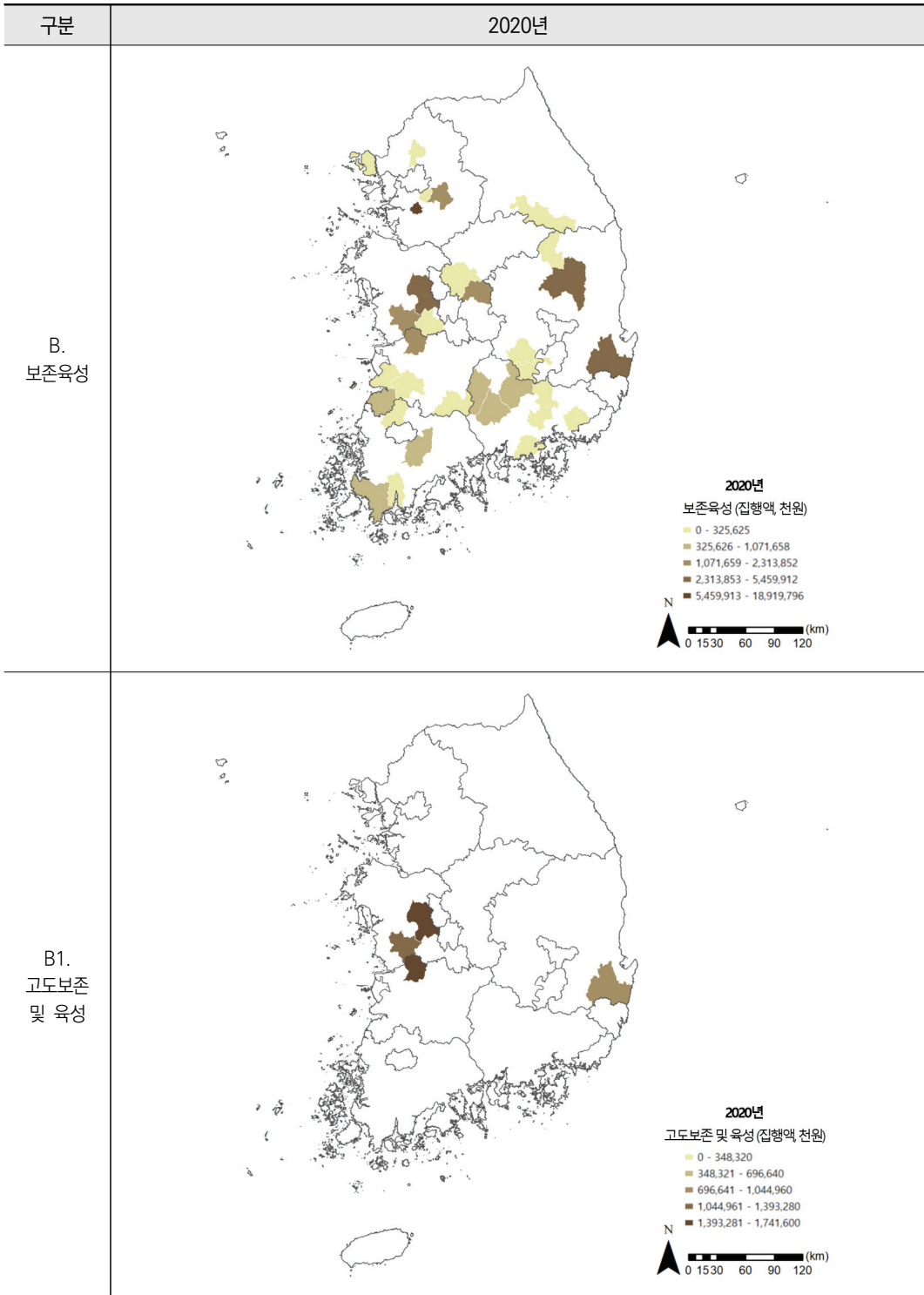
[부록 그림 9] 2016년 보존육성 집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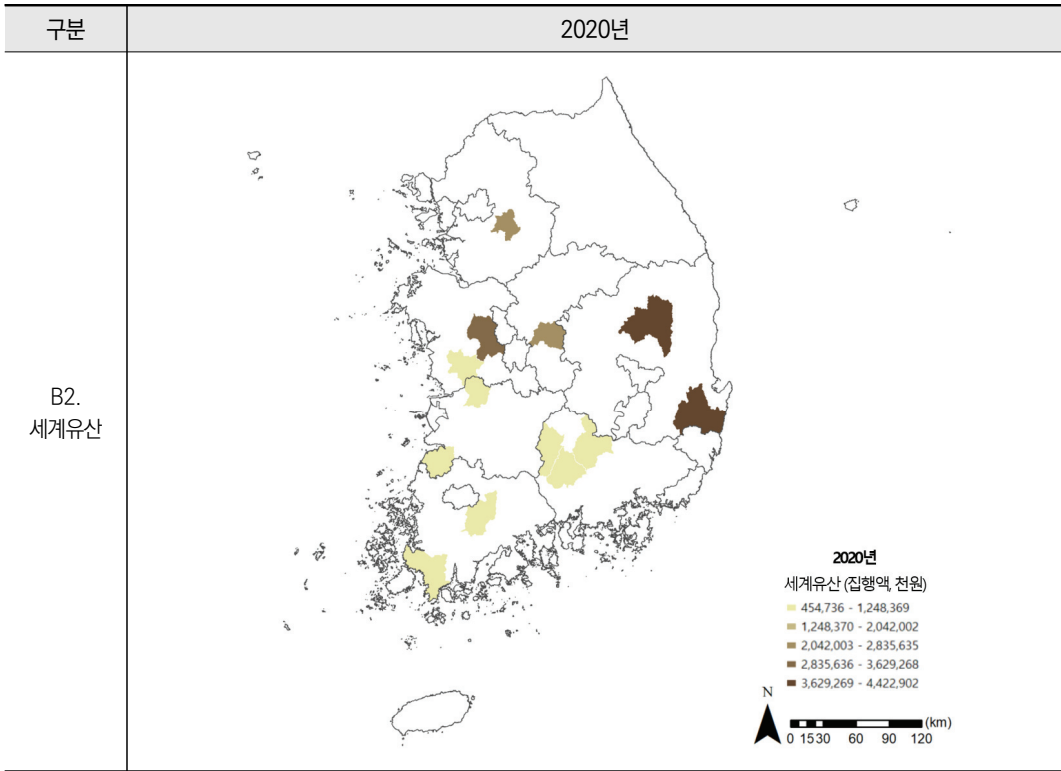
[부록 그림 9]의 계속



[부록 그림 10] 2020년 보존육성 집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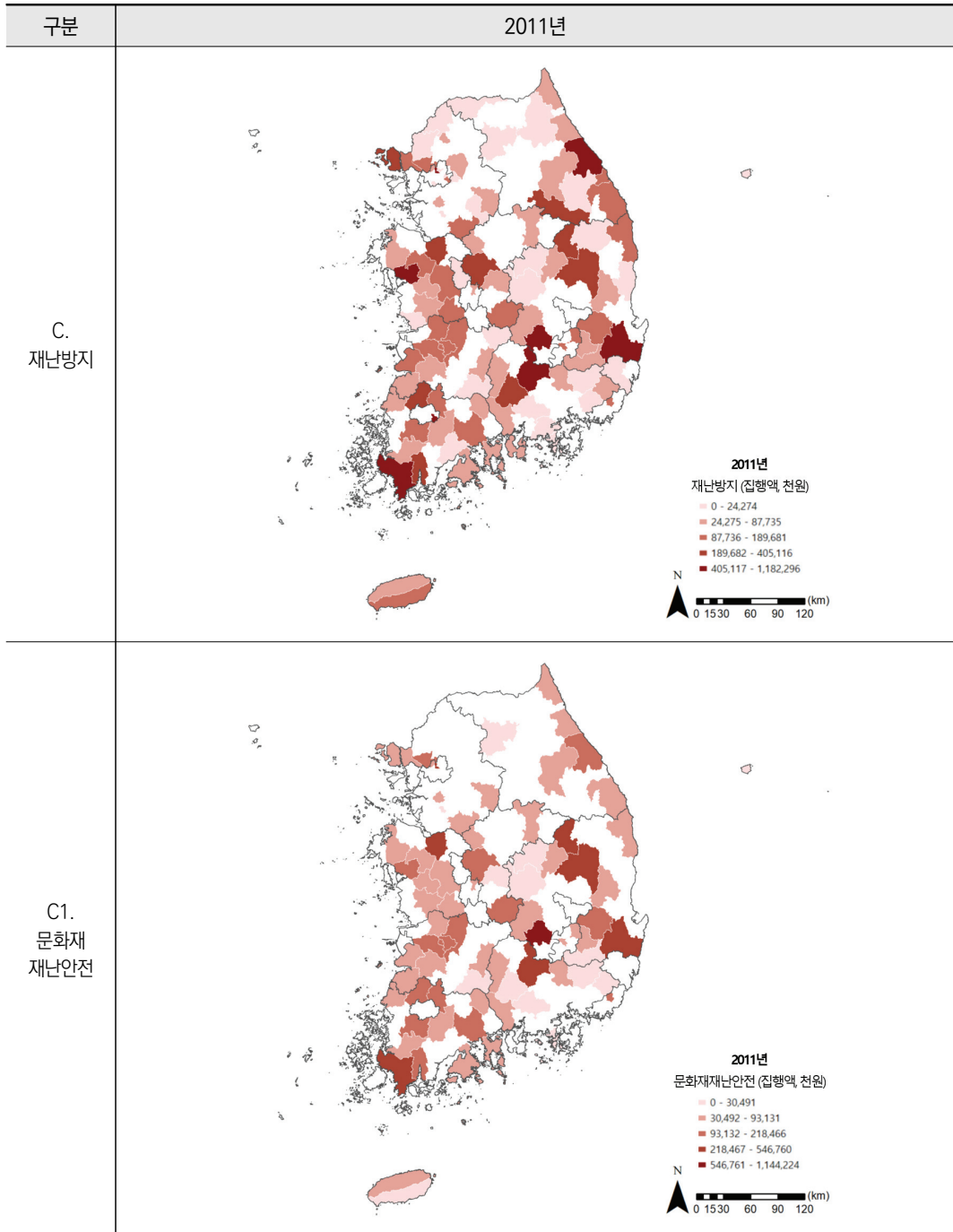


[부록 그림 10]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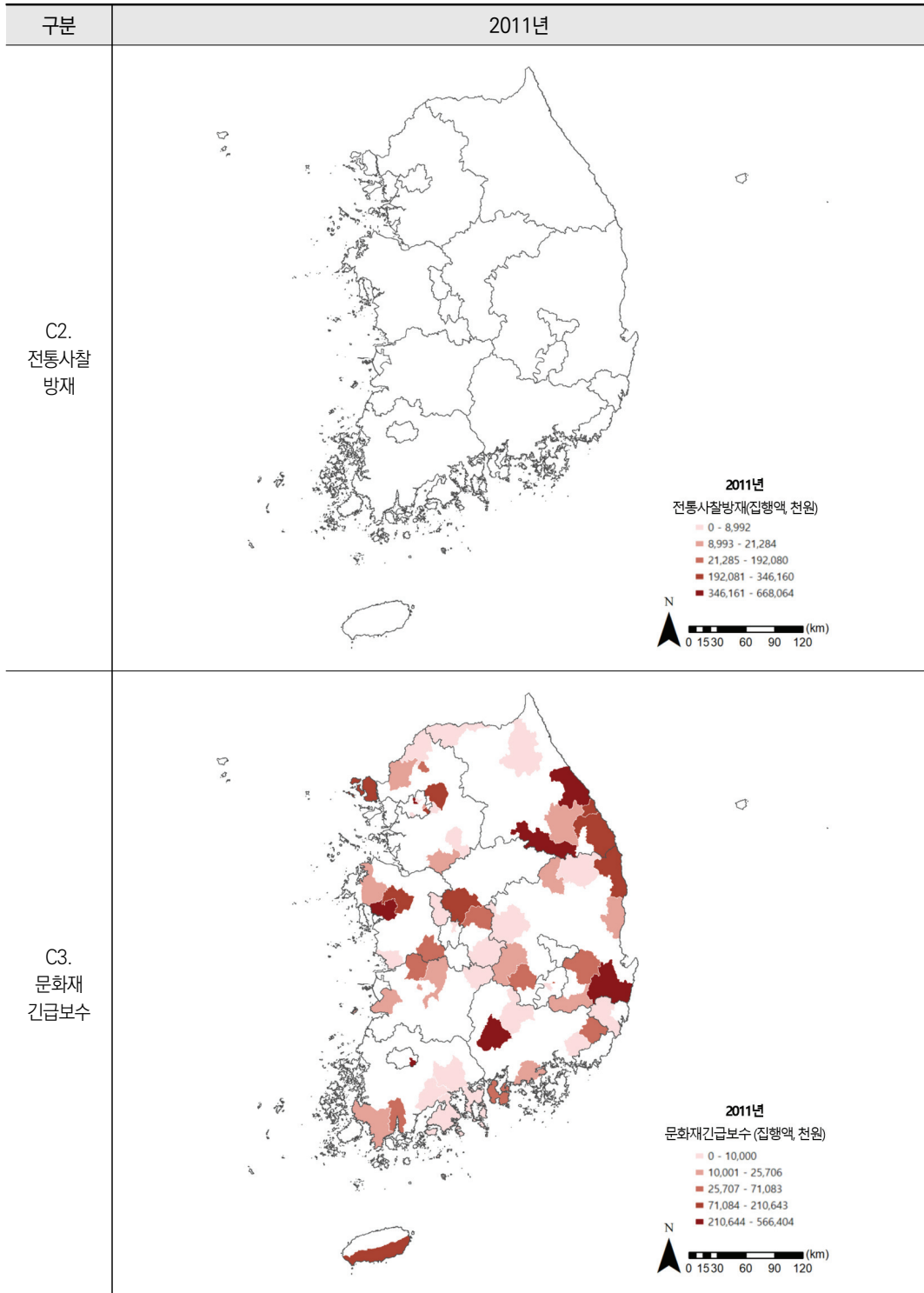


〈부록 9〉 부문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액 및 예산액 - 3) 재난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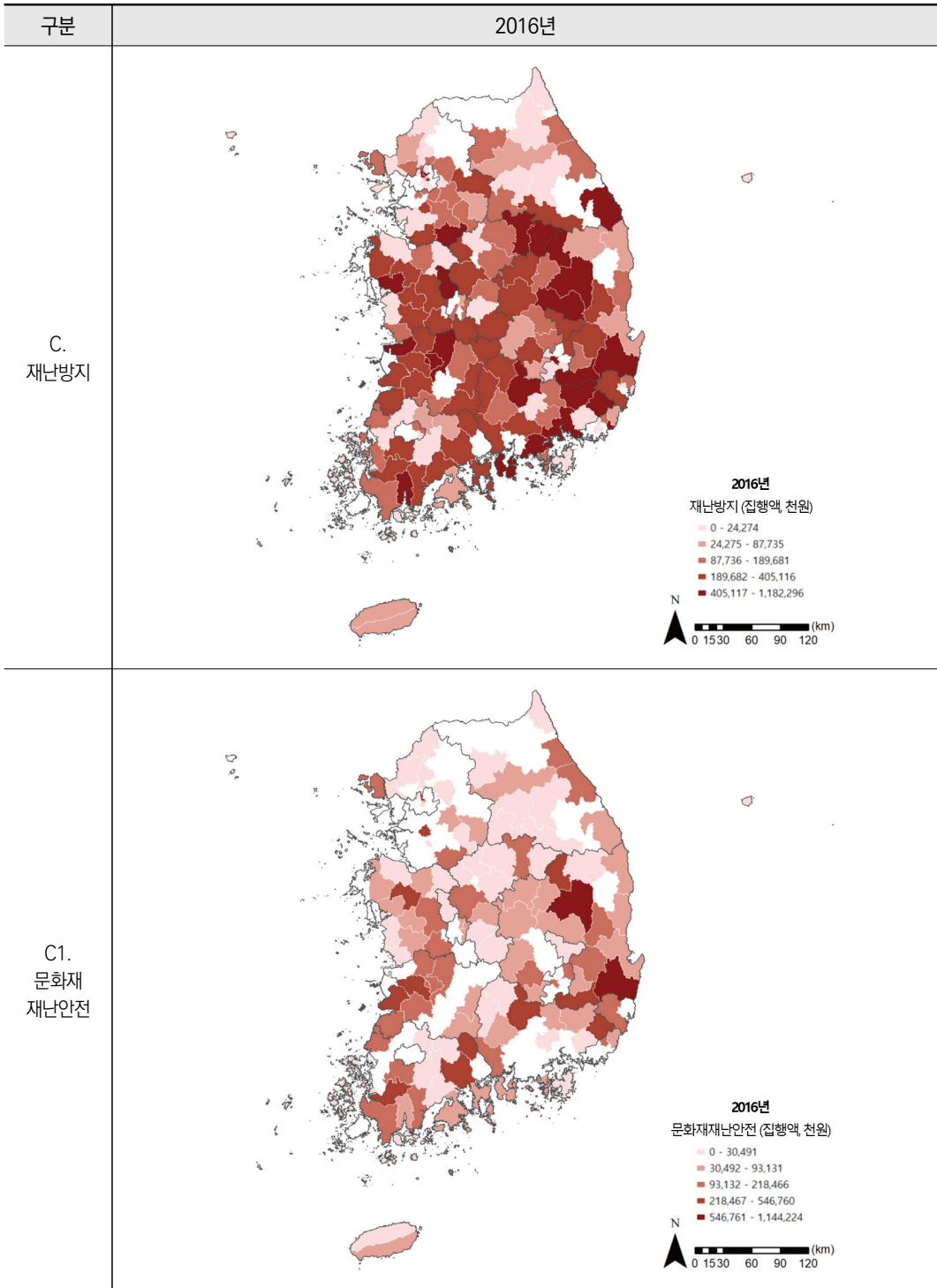
[부록 그림 11] 2011년 재난방지 집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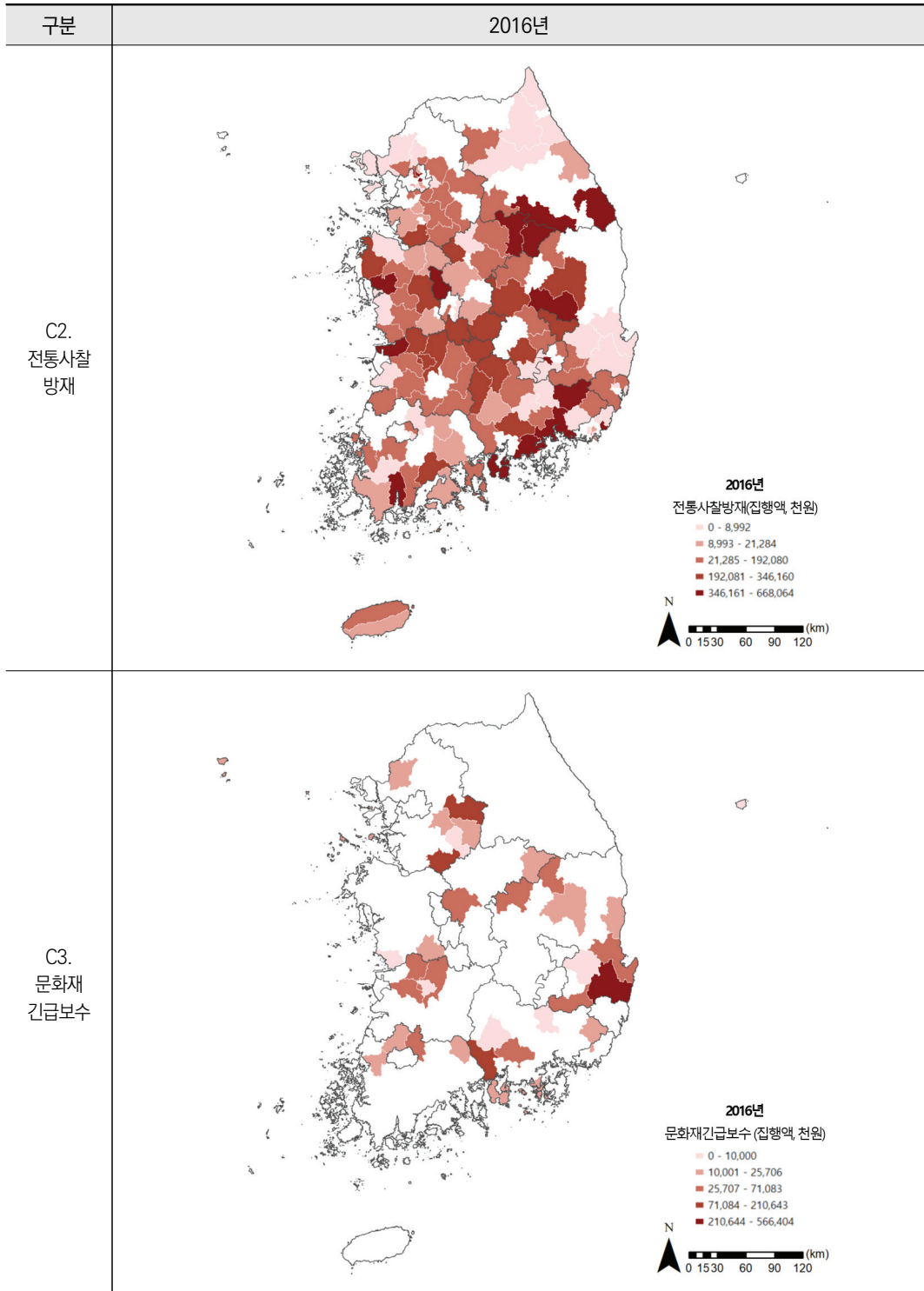
[부록 그림 11]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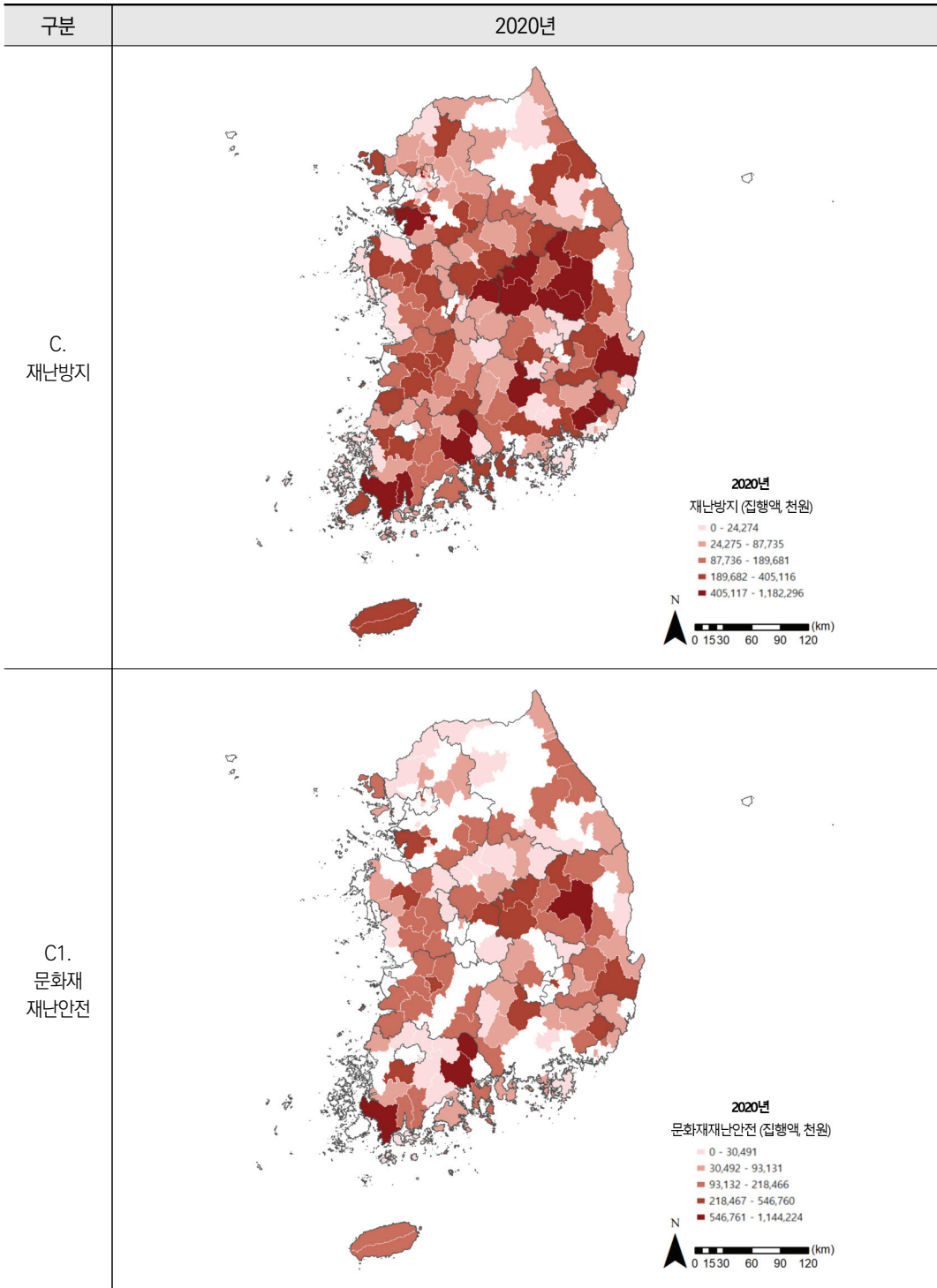
[부록 그림 12] 2016년 재난방지 집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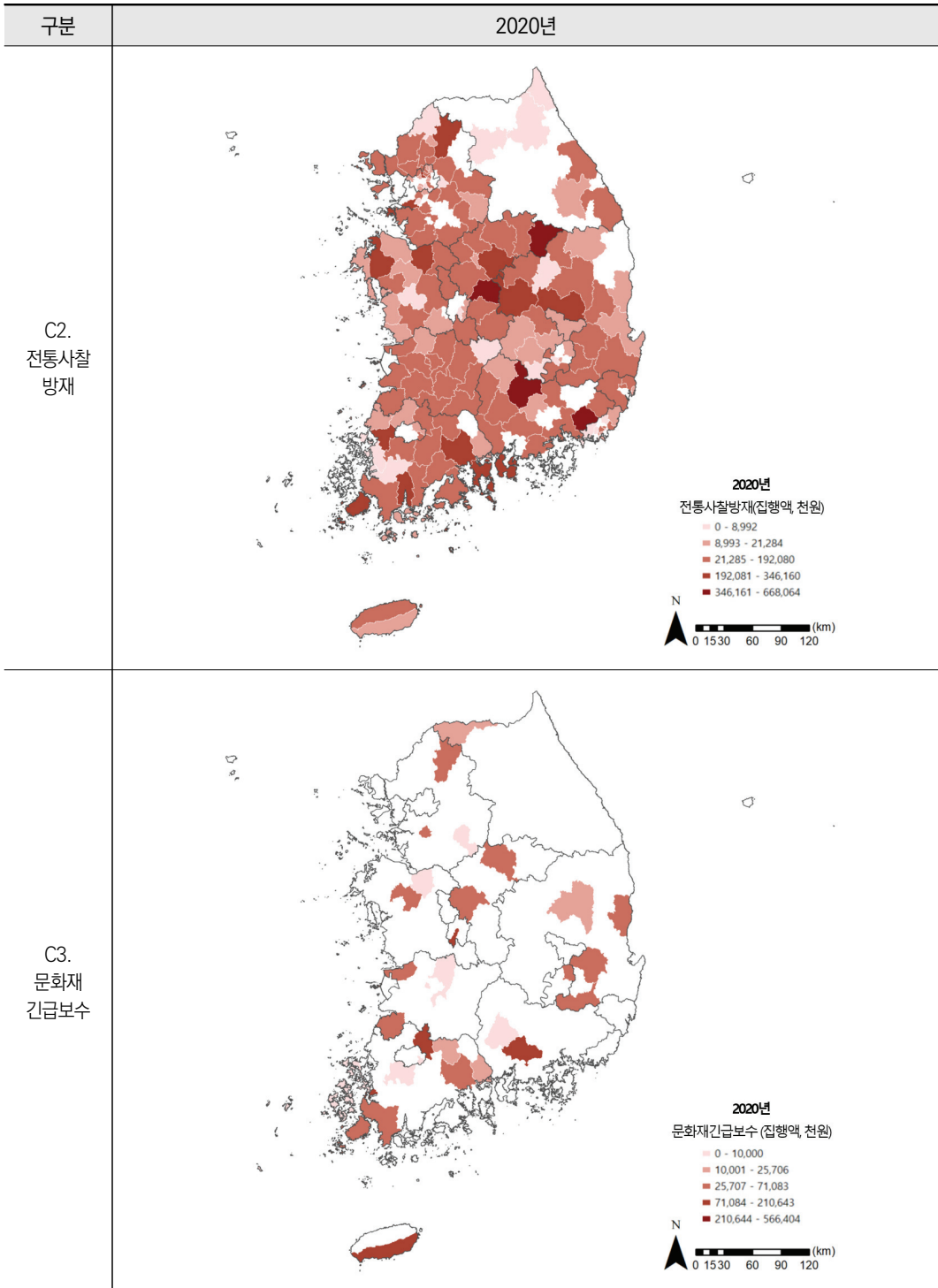
[부록 그림 12]의 계속



[부록 그림 13] 2020년 재난방지 집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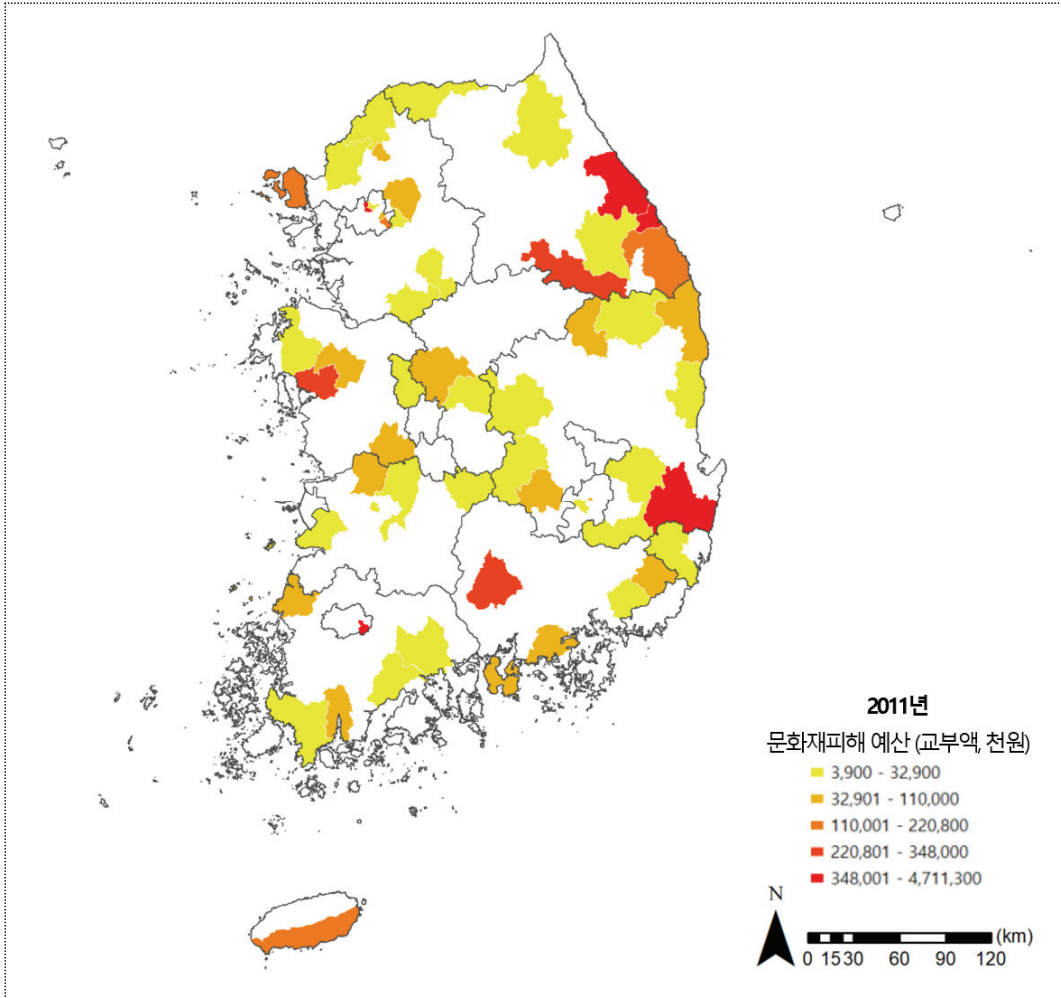


[부록 그림 13]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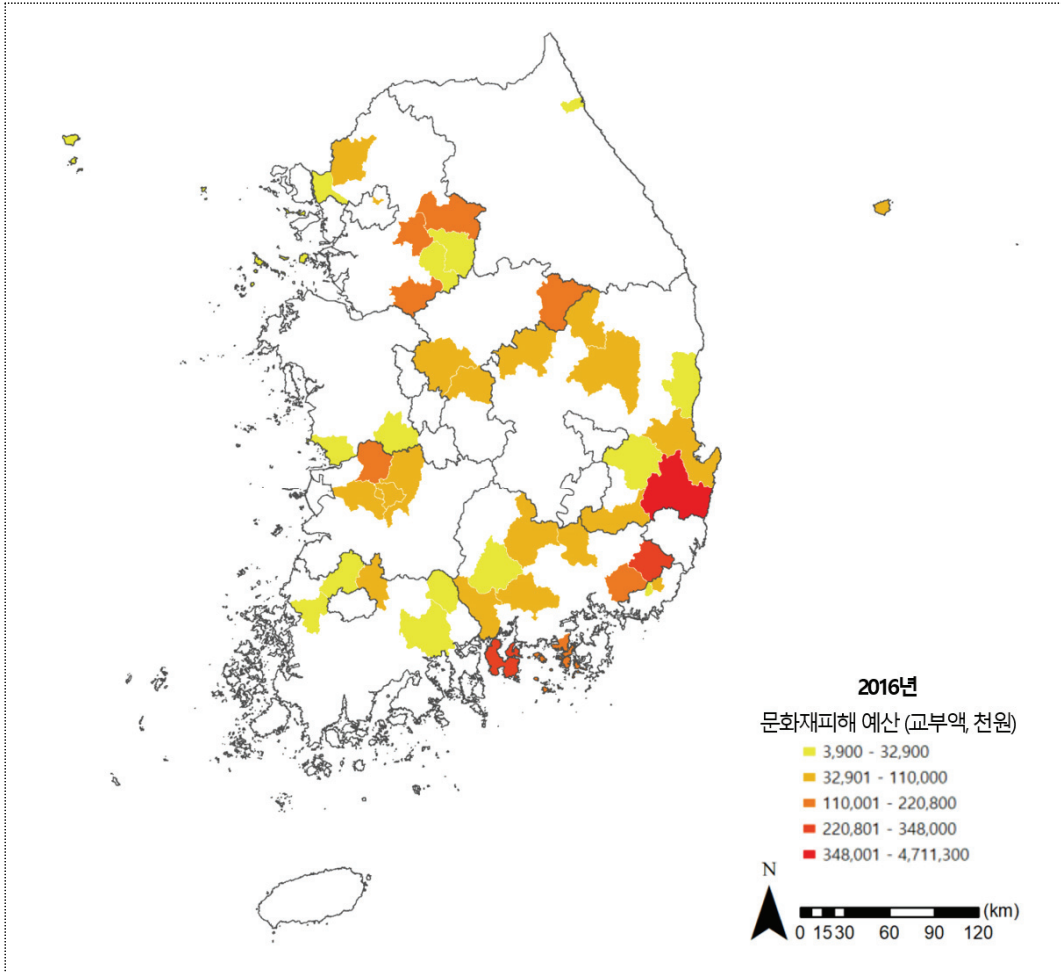


〈부록 10〉 부문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액 및 예산액 - 4) 예산 교부액

[부록 그림 14] 2011년 문화재 피해 예산 교부액



[부록 그림 15] 2016년 문화재 피해 예산 교부액



[부록 그림 16] 2020년 문화재 피해 예산 교부액

